

연구보고 2016-2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교육·보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와 생애출발선 평등을 목표로 전(全) 계층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 지원을 하는 누리과정 정책은 종전의 선별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교육·보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누리과정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2년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정책이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들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정책성과 분석이 필요했고,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틀로는 그동안 정부사업이나 교육정책 성과 분석에서 주로 사용한 BSC 모델(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였다. BSC 모델은 고객관점, 재무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의 4개 관점별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정책을 분석할 뿐 아니라, 非(비)재무 분야의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분석틀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교육·보육 정책 분야에서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BSC 모델을 적용했는데, 정부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누리과정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누리과정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원장님과 교사분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연구협력진으로 참여해 주신 김이경 교수, 나정 교수, 하봉운 교수, 황옥경 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1
4. 연구범위	23
II. 누리과정 정책 개요 및 현황	25
1. 누리과정 정책 개요	25
2. 누리과정 정책 쟁점	32
3. 누리과정 도입 전후 기관 현황 및 이용 변화(2010~2015)	38
III.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52
1. 선행연구	52
2. 정책성과 분석틀로서의 BSC 모델	65
3.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73
IV.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분석 결과	80
1. 고객 관점	80
2. 재무 관점	114
3. 내부프로세스 관점	123
4. 학습 및 성장 관점	143
5. 소결	183
V. 누리과정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187
1. 가계경제 도움 정도	187
2. 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	189
3. 누리과정 정책의 목적 달성 정도	193
4. 보편적 지원에 대한 의견	198

5. 누리과정 정책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206
6.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주체	209
7. 소결	212
VI.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정책과제	214
1.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214
2. 교사 수준 표준화	219
3.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검토	221
4. 누리과정 예산 확충	223
5.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225
6. 갈등조정 기구 설치·운영	226
7.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조건 조정	228
8.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변경	229
9. 무상교육·보육의 점진적 실현	230
참고문헌	232
Abstract	242
부록	245
부록 1. 누리과정 관련 정부 보도자료	247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누리과정 이용 부모	251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누리과정 미이용 부모	254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원장	257
부록 5. 심층면담 질문지: 교사용	261
부록 6.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지	265
부록 7. 교사 대상 설문조사지	275
부록 8.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지	283
부록 9. 학부모 및 교사 표본추출 결과	288
부록 10.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틀 도출을 위한 단계별 진행 사항	290

표 차례

〈표 I-3- 1〉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12
〈표 I-3- 2〉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해당 자녀 특성	12
〈표 I-3- 3〉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13
〈표 I-3- 4〉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해당 자녀 특성	13
〈표 I-3- 5〉 원장/원감 면담조사 대상자	13
〈표 I-3- 6〉 교사 면담조사 대상자	14
〈표 I-3- 7〉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15
〈표 I-3- 8〉 연구협력진 담당업무	15
〈표 I-3- 9〉 학부모 조사 설계 개요	16
〈표 I-3-10〉 학부모(가구) 특성	17
〈표 I-3-11〉 자녀 특성	18
〈표 I-3-12〉 교사 조사 설계 개요	19
〈표 I-3-13〉 교사 특성	20
〈표 I-3-14〉 공무원 조사 설계 개요	21
〈표 I-3-15〉 공무원 특성	21
〈표 I-3-16〉 설문 내용	22
〈표 II-1- 1〉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	26
〈표 II-1- 2〉 5세 누리과정 도입 전후 달라진 점	27
〈표 II-1- 3〉 누리과정 지원연령 및 금액(2016)	28
〈표 II-1- 4〉 누리과정 지원 제외 대상자	28
〈표 II-1- 5〉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비교(2016)	30
〈표 II-1- 6〉 교사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지원(2016)	30
〈표 II-2- 1〉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안)	33
〈표 II-2- 2〉 중앙정부 추계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교부액 비교	34
〈표 II-2-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범위반 여부 국 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2014. 10. 21)	37
〈표 II-3- 1〉 시도별·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39
〈표 II-3- 2〉 시도별·설립유형별·연령별 유치원 취원아 수	40

〈표 II-3- 3〉 시도별·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사 수	41
〈표 II-3- 4〉 시도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42
〈표 II-3- 5〉 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43
〈표 II-3- 6〉 시도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재원아 수	44
〈표 II-3- 7〉 시도별·설립유형별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아 수	45
〈표 II-3- 8〉 시도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수	47
〈표 II-3- 9〉 만 3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0~2015)	48
〈표 II-3-10〉 만 4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0~2015)	48
〈표 II-3-11〉 만 5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0~2015)	49
〈표 II-3-12〉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및 이용률(2010~2015)	50
〈표 II-3-13〉 유아수 대비 국공립유치원 취원아 및 취원율(2010~2015)	51
〈표 III-1- 1〉 한국 육아지표(장명립 외, 2007)	53
〈표 III-1- 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요 유아교육 지표(육아정책연 구소, 2010~2012)	55
〈표 III-1- 3〉 ‘2010~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과 평가 지표(유해미 외, 2015)	57
〈표 III-1- 4〉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과 평가 지표(유해미 외, 2015)	57
〈표 III-1- 5〉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최은영 외, 2013)	58
〈표 III-1- 6〉 유아교육 지표(나정·장명립, 2001)	59
〈표 III-1- 7〉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모형(권기성·강영욱, 2006)	61
〈표 III-1- 8〉 OECD 교육지표(OECD, 2015)	62
〈표 III-2-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중요요소별 비교	70
〈표 III-2- 2〉 BSC 모델을 활용한 공공부문 평가 사례	72
〈표 IV-1- 1〉 고객관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80
〈표 IV-1- 2〉 연령별 어린이집 원아 보육료 지원율(2010-2015)	82
〈표 IV-1- 3〉 연령별 유치원 원아 유아학비 지원율(2010-2015)	83
〈표 IV-1- 4〉 2014·2016년 월 평균 추가 기본비용 변화	85
〈표 IV-1- 5〉 2016년 기관종류·설립유형별 월 평균 추가 비용	87
〈표 IV-1- 6〉 2015·2016년 일주일 평균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88
〈표 IV-1- 7〉 2015년·2016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90
〈표 IV-1- 8〉 기관종류·설립유형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 및 비용 변화(2013~2016)	91

〈표 IV-1- 9〉 2015년·2016년 해당 자녀 이용 사교육 개수 변화	93
〈표 IV-1-10〉 2015년·2016년 해당 자녀 이용 사교육 비용 변화	94
〈표 IV-1-11〉 누리과정 비용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96
〈표 IV-1-12〉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부담 정도	98
〈표 IV-1-13〉 방과후 과정 인지 및 이용 여부	100
〈표 IV-1-14〉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101
〈표 IV-1-15〉 만 3~5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1~2015)	103
〈표 IV-1-16〉 누리과정 이후 교육·보육과정 개선정도: 교사응답	106
〈표 IV-1-17〉 보조교사 유무 및 역할(복수응답): 교사응답	107
〈표 IV-1-18〉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정도: 교사응답	108
〈표 IV-1-19〉 주말 근무 여부: 교사응답	109
〈표 IV-1-20〉 호봉 기준 및 현재 호봉: 교사응답	111
〈표 IV-1-21〉 현 근무 기관의 재직기간: 교사응답	112
〈표 IV-2- 1〉 재무관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14
〈표 IV-2- 2〉 2016년 2월 기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115
〈표 IV-2- 3〉 누리과정 편성(계획) 및 목적예비비 지원 현황	116
〈표 IV-2- 4〉 2016년 9월 8일 기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117
〈표 IV-2- 5〉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공무원 응답	119
〈표 IV-2- 6〉 누리과정 지원금 계획과 현황(2011~2016)	120
〈표 IV-2- 7〉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적절성	121
〈표 IV-2- 8〉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의견: 공무원응답	122
〈표 IV-3- 1〉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24
〈표 IV-3- 2〉 5세 누리과정 추진일정	125
〈표 IV-3- 3〉 누리과정 정책 수립 시간 동의정도	126
〈표 IV-3- 4〉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교육청-시·도의회 간 갈등 유무 ...	127
〈표 IV-3- 5〉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 유무	128
〈표 IV-3- 6〉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조정을 위해 협의회 개최 횟수 ...	129
〈표 IV-3- 7〉 누리과정 일일 수업시간: 교사응답	130
〈표 IV-3- 8〉 방과후 과정비 지원 추이변화(2012~2015)	132
〈표 IV-3- 9〉 방과후 과정 운영·이용률 추이(2006-2016)	133

〈표 IV-3-10〉 방과후 과정 운영여부: 교사 응답	133
〈표 IV-3-11〉 기관 일일 이용시간: 학부모 응답	134
〈표 IV-3-12〉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 학부모 응답	136
〈표 IV-3-13〉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학부모 응답	136
〈표 IV-3-14〉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교사 응답	137
〈표 IV-3-15〉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시간: 교사 응답 ·	139
〈표 IV-3-16〉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사 응답	140
〈표 IV-3-17〉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학부모 선택권 여부: 학부모 응답	141
〈표 IV-3-18〉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학부모 선택권 여부: 교사 응답	142
〈표 IV-4 1〉 학습 및 성장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핵심성과지표	143
〈표 IV-4 2〉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44
〈표 IV-4 3〉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46
〈표 IV-4 4〉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 문 대비표	147
〈표 IV-4 5〉 누리과정 구성 방향 반영도	151
〈표 IV-4 6〉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이정림 외, 2013)	152
〈표 IV-4 7〉 유치원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이정림 외, 2013)	153
〈표 IV-4 8〉 전체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이정림 외, 2013)	154
〈표 IV-4 9〉 연령별 누리과정 관찰척도 사전·사후조사 평균 점수(이정림 외, 2014)	154
〈표 IV-4-10〉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정림 외, 2014)	155
〈표 IV-4-11〉 부 학력과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이원분량분석 학교적응(장혜진 외, 2013)	156
〈표 IV-4-12〉 모 학력과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이원분량분석 학교적응(장혜진 외, 2013)	157
〈표 IV-4-13〉 부모 우울과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이원분량분석 학교적응(장혜진 외, 2013)	157
〈표 IV-4-14〉 최상위 소지 자격증(복수응답)	159
〈표 IV-4-15〉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유치원)	160
〈표 IV-4-16〉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어린이집)	161
〈표 IV-4-17〉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교사 전문성	162
〈표 IV-4-18〉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교사 급여 수준(처우 개선비 인상)	163
〈표 IV-4-19〉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행정 업무 경감	164
〈표 IV-4-20〉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교사의 안정적 고용	164

〈표 IV-4-21〉 누리과정 교사 지원에 대한 의견	165
〈표 IV-4-22〉 누리과정 연수 이수(중복응답)	167
〈표 IV-4-23〉 2016년 주최별 연수 이수(중복응답)	168
〈표 IV-4-24〉 누리과정 교사(원장) 연수 이수자 현황(어린이집)	168
〈표 IV-4-25〉 집합연수의 적절성(김은설 외, 2012)	169
〈표 IV-4-26〉 원격연수의 적절성(김은설 외, 2012)	169
〈표 IV-4-27〉 집합연수의 적절성(양미선 외, 2014)	170
〈표 IV-4-28〉 원격연수의 적절성(양미선 외, 2014)	171
〈표 IV-4-29〉 공립단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 추이	172
〈표 IV-4-30〉 공립병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 수 추이	173
〈표 IV-4-31〉 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추이	175
〈표 IV-4-32〉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학부모	176
〈표 IV-4-33〉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교사	177
〈표 IV-4-34〉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공무원	178
〈표 IV-4-35〉 부모의 기관 신뢰도 제고: 교사	178
〈표 IV-4-36〉 1순위 기관 재원 여부	179
〈표 IV-4-37〉 1순위 기관에 보내지 못한 이유	181
〈표 IV-4-38〉 현재 다니는 기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1순위)	182
〈표 V-1- 1〉 비용지원으로 인한 절약액의 주 사용처	187
〈표 V-2- 1〉 사교육 이용 개수(2016)	189
〈표 V-2- 2〉 사교육 이용 개수 변화(2014·2016)	191
〈표 V-2- 3〉 월평균 사교육 비용 변화(2014·2016)	192
〈표 V-3- 1〉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학부모	194
〈표 V-3- 2〉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교사	195
〈표 V-3- 3〉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공무원	197
〈표 V-4- 1〉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198
〈표 V-4- 2〉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200
〈표 V-4- 3〉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교사	201
〈표 V-4- 4〉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교사	202

〈표 V-4- 5〉 누리과정 정책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공무원	205
〈표 V-5- 1〉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학부모	207
〈표 V-5- 2〉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교사	207
〈표 V-5- 3〉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공무원	208
〈표 V-6- 1〉 누리과정 예산 책임 주체: 학부모	210
〈표 V-6- 2〉 누리과정 예산 책임 주체: 교사	211
〈표 VI-1- 1〉 유치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사례	217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누리과정 관련 정부 보도자료	247
〈부록 표 2〉 학부모 대상 조사 세부조사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288
〈부록 표 3〉 교사 대상 조사 최종 비례배분 현황	289

그림 차례

[그림 II-2-1]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 절차	29
[그림 II-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추이	34
[그림 II-2-3] 누리과정 재정 편성·운용에 관한 법령 체계	38
[그림 II-3-1] 만 3~5세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0~2015)	50
[그림 III-2-1] BSC 모델의 구성요소	67
[그림 III-2-2] BSC 모델의 4개 관점	68
[그림 III-3-1] BSC 모형 개발과정 및 본 연구 적용	74
[그림 III-3-2]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틀 개발 과정	77
[그림 IV-1-1]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아 수 추이변화(2010~2015)	84
[그림 IV-1-2] 2014·2016년 월 평균 추가 기본비용 변화	86
[그림 IV-1-3] 2014·2016년 기관종류·설립유형별 월 평균 추가 비용 변화 ·	87
[그림 IV-1-4] 연도별 기관 설립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수(2013~2016) ·	92
[그림 IV-1-5] 기관 설립유형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변화(2013~2016)	92
[그림 IV-3-1] 방과후 과정비 지원 추이변화(2012~2015)	132
[그림 IV-4-1]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유치원)	160
[그림 IV-4-2]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어린이집)	161
[그림 IV-4-3] 공립유치원 기관수 추이 변화(2011~2016)	173
[그림 IV-4-4] 공립유치원 학급수 추이 변화(2011~2016)	174
[그림 V-3-1]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학부모 vs 교사	196
[그림 V-3-2]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공무원	197
[그림 V-4-1]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vs 교사	203
[그림 V-4-2]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vs 교사	204
[그림 V-4-3] 누리과정 정책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공무원	206
[그림 V-5-1]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1순위): 학부모 vs 교사 vs 공무원	209
[그림 V-5-2]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1+2순위): 학부모 vs 교사 vs 공무원	209
[그림 V-6-1] 누리과정 예산 책임 주체: 학부모 vs 교사	212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든 누리과정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각 세부 항목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누리과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내용

- 누리과정 정책의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을 분석함.
- 유아교육·보육 관련해서 종전에 개발한 지표 및 누리과정 정책성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함.
- BSC 모델(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비전,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함.
- 개발한 성과지표를 기초로 질문지를 제작하여 학부모(가구), 교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현황, 만족도, 정책의 의의, 현안에 대한 의견,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조사함.
- 문헌연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누리과정 정책 목표 대비 성과지표별 달성 정도를 평가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누리과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 전(全) 과정에 거쳐 협의를 진행함.

면담조사

- 누리과정 이용 및 미이용 학부모, 원장 및 교사 대상으로 실시함.

전문가 의견조사

- 유관 지표 개발 경험이 있거나 공공정책 지표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0명(최종 18명 참여)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함.

연구협력진 구성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아동학, 교육행정, 교육재정 전문가 4명의 연구협력진을 구성하였음.

설문조사

- 가구조사: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 대상
- 기관조사: 누리과정 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총 1,000명 대상
- 공무원조사: 누리과정 담당 교육청 및 지자체 공무원 100명 대상

라.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란 공공문제의 해결, 계획된 정부활동, 권위적인 정부 결정, 정책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포함한 개념”이란 정의를 차용하여 누리과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함. 따라서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분석은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음.
- 누리과정비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 외에도 방과후 과정비와 누리과정운영지원비를 포함함.

2. 누리과정 정책 개요 및 현황

가. 누리과정 정책 개요

- 생애 출발선의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기관 이용 시 비용 경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시작으로 2013년 3~4세까지 확대하여 추진해 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함(국공립유치원 월 6만원). 방과후 과정을 신청한 모든 유아에게 월 7만원(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을 지원함.
- 누리과정 일일 운영시간은 4~5시간이며 방과후 과정은 일일 8시간 이상임.

나. 누리과정 정책 쟁점

- 현재 누리과정 정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예산'과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임. 2013년도 이후 세수 감소로 정부의 당초 재정추계가 빚나가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추계액과 실교부액이 15조8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함.
- 정부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교부했고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교부금 지원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증액되지 않았고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임.

다. 누리과정 도입 전후 기관 현황 및 이용 변화(2010~2015)

- 누리과정 도입 전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함.
- 2011년 대비 2015년 연령별 기관 이용률을 보면, 만 3세 87.0%→89.5%, 만 4세 76.8%→90.8%, 만 5세 82.7%→92.9%로 상승함.

3. 누리과정 정책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가. 정책 성과 분석틀로서의 BSC 모델

- BSC 모델의 고객 관점, 재무적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부문에서의 BSC 모델의 특징 및 적용 사례를 고찰함.

나.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 누리과정 관련해서 정부가 발행한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BSC 모델의 이론적 틀에 맞춰 비전, 4개 관점을 통틀어 7개 전략목표와 15개 성과목표, 29개 핵심성과지표(KPI)들을 도출함.
 - 누리과정 정책 비전은 '국가책무성 강화'와 '생애출발선 평등'으로 확정

4. 누리과정 정책분석 결과

가. 고객 관점

- 누리과정 정책의 고객은 '학부모'와 '유아'로 설정하고, 고객 관점의 전략목표는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 등 2개이며 성과목표 5개, 핵심성과지표 8개를 추출함.
- 고객 관점의 8개 핵심성과지표 중에서 달성 2개, 부분 달성 5개, 미달 1개로 나타남.
 - 비용 지원 가구 확대 기관 및 이용 유아 수와 이용률은 증가해서 유아교육·보육의 보편적 지원 측면은 달성함. 반면,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누리과정비(방과후 과정비 포함)의 보편적 지원은 대체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만, 다니고 있는 기관종류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음.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통과정, 기관의 환경, 교사 등 3개 부분으로 분석한 결과, 3개 모두 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나. 재무 관점

- 재무 관점의 전략목표로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으로 설정함. 성과목표로는 '재원의 충분성'과 '지원금 확대'를 정하고 각 하위의 핵심성과지표로 '재원 확보 및 편성 현황',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로 구성함.
- 재무 관점의 총 3개 핵심성과지표 중 달성한 지표가 1개도 없어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누리과정 정책의 향후 성패는 재무관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다. 내부프로세스 관점

-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는 '누리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핵심성과지표 2개),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핵심성과지표 2개),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핵심성과지표 2개)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총 6개 핵심성과지표들 중 2개 지표만 달성했고 1개 부분 달성, 나머지 3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미달성한 지표들은 누리과정 제정, 예산의 전달체계 합리성 등 예산 관련된 지표들임.
 - 달성한 핵심성과지표 2개는 '공통과정 제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과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임. 전자의 지표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소요 기간의 적절성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음.

라. 학습 및 성장 관점

-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인적자원(유아 및 교사) 역량 강화',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등 3개로 설정함. 성과목표는 '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핵심성과지표 2개), '유아의 역량 강화'(핵심성과지표 1개), '교사의 역량 강화'(핵심성과지표 4개), '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핵심성과지표 2개),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핵심성과지표 3개) 등 5개임.
- 총 12개 핵심성과지표들 중에서 5개 지표만 달성함. 나머지 7개 지표 중 2개

지표인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는 미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나머지 5개 지표들은 부분 달성함. 특히, 공통과정으로써의 누리과정이 취약계층의 유아발달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결과는 고무적이며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공립유치원의 확충 등으로 기관 선택권이 확대된 점(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유아와 학부모의 고객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누리과정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된 비용은 가족생활비(39.6%), 해당자녀 사교육비(25.0%), 해당자녀 추가지출(21.8%)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이용 현황에서는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 어린이집 유아보다 사교육 개수(유치원 유아 1.1개, 어린이집 유아 0.8개)와 사교육 월 평균 비용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유치원 유아 약 7만9천원, 어린이집 유아 5만2천원).
- 누리과정 정책이 추구한 목적의 달성 정도를 항목별로 알아봄. 학부모와 교사는 2.6점(4점 만점) 이상으로 달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공무원은 3.0점 이상으로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응답함.
-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동일한 비용지원에 대해, 학부모는 지금과 같은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반면, 교사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공무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금과 같이 동일한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방과후 과정비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 누리과정 정책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는 “국공립과 민간기관간 이용 비용 격차 완화”를, 교사와 공무원은 “누리과정 예산확충”을 가장 많이 꼽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6.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정책 방안

가.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저소득 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보전방안 강구
- 도시 지역에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나. 교사 수준 표준화

- 단기: 누리과정 영역별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연수 지원 강화 필요(누리과정 이수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 중기: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상호 교차 연수(유치원 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연수 신청 가능,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사 연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장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을 점진적으로 통합

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검토

-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무상교육·보육 범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
 -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 항목을 정함.
-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표준유아교육·보육비에 견주어서 합리적으로 재책정

라. 누리과정 예산 확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 대체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은 인상폭은 다르지만, 교부율 인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직성 경비인 교부율 인상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시적 인상”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시, '차등적 평등'으로 지원
 - 유아의 생애출발선 평등 보장이란 관점에서 가구소득별 차등적 지원이 오히려 합당함.

마.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 궁극적으로 유보 통합을 의미하므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 필요

바. 갈등조정 기구 설치·운영

- 정부, 교육청, 시도청, 시도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 설치, 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운영 시, 학부모 배석

사.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조건 조정

- 현행 '유아 1인당 일일 1개 1시간 이내 지침'을 유아 발달과 유아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연령별로 차등적 실행 제안
 - 현행 '유아 1인당 일일 1개 1시간 이내' 기준은 만 4세에 적용하고, 만 3세는 이보다 적게 만 5세는 이보다 조금 많게 조건을 조정함.

아.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변경

-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는 오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예: 맞벌이 가정, 주양육자가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아픈 경우)으로 제한하여 지원
 - 그러나 종일제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자. 무상교육·보육의 점진적 실현

-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수준까지의 "완전한" 무상교육·보육은 만 5세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시, 만 5세부터 적용하여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012년에 도입된 누리과정 정책이 5년차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그 간의 누리과정의 성과를 점검하는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 연구라 하겠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성과지표 들을 발굴하고 각 성과지표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 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측정 산식(측정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송기창·윤홍주·오범호·김중환·양희은·이승수· 김영곤·김태환, 2012: 9). 이 같은 정의를 누리과정 정책에 적용한다면,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는 “누리과정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측정 산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리과정 정책의 의의 또는 문제점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부발간 자료, 보도자료, 통계, 법령과 같은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방법 을 사용했을 뿐¹⁾, 이론적 분석틀이나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목표 달성 정도나 추진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정책이 목표달성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지표 개발과 주기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장명 립·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 2007). 종전의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선 별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비록, 사회적, 경제적 효 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없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나정, 2014: 65)— 누리과정 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를 퇴색하는 문제점들이 발 생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 문제는 누리과정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무상교육·보육이라 하지만 실체는 기관종류에 따라 학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매년 추가로 내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5), 사립유치원은 지난 5년

1) III장 1절 선행연구를 참조 바람.

동안 원아당 유치원비를 80.21% 인상하는(헤럴드, 2016. 2. 2)²⁾ 등이 그 예들이다.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5년차로 접어든 누리과정 정책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각 세부 항목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누리과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을 분석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관련 성과지표와 누리과정 정책성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였다. 공공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BSC 모델(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본 연구의 성과지표 개발의 이론적 틀로 채택하였다. 이에 BSC 모델의 이론적 특징을 분석하고 BSC 모델의 이론적 틀에 따라 누리과정 비전,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개발의 근거 자료로 누리과정 관련해서 정부가 발행한 보도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개발한 성과지표를 기초로 질문지를 제작하여 학부모(가구), 교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현황, 만족도, 정책의 의의, 현안에 대한 의견, 정책 안착을 위한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문헌연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누리과정 정책 목표 대비 지표별 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헤럴드(2016. 2. 2). 이게 무슨 '무상보육'……“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만큼 올랐다” 5년간 8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2000141>. 검색일: 2016. 11. 21.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누리과정 추진 배경, 현황 자료 및 유관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 성과 분석 방법론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셋째, 누리과정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보육사업안내 등 공식·비공식 발간자료, 법령, 통계 및 e-유치원 알리미 등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등을 협의하였으며 연구 중간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성과지표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 종료 단계에서는 정책방안을 협의하였다.

다. 면담조사

누리과정 이용 및 미이용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의 현황 및 성과, 그리고 개선점 등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성과지표 개발에 참조하였다.

1) 학부모 면담조사

현재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이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면담조사 실시하였다.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면담 조사는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I-3-1 참조). 면담에 참여한 누리과정 이용 부모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었고, 3명을 제외하고 외벌이 가정이었으며, 월 가구소득은 300만원~800만원 정도였다.

〈표 1-3-1〉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사례	거주 지역	연령	가정유형	최종학력	월 가구소득
1	서울시 강동구	35세	맞벌이	대학원졸	약 800만원
2	서울시 강동구	37세	맞벌이	대졸	약 400만원
3	경기도 용인시	39세	외벌이	대졸	약 500만원
4	경기도 용인시	33세	외벌이	대졸	약 500만원
5	경기도 성남시	43세	외벌이	전문대졸	약 400만원
6	경기도 성남시	41세	외벌이	대졸	약 350만원
7	경기도 성남시	40세	맞벌이	대졸	약 500만원
8	경기도 고양시	37세	외벌이	전문대졸	약 400만원
9	경기도 고양시	32세	외벌이	전문대졸	약 350만원
10	경기도 고양시	33세	외벌이	대졸	약 500만원
11	경기도 고양시	34세	외벌이	고졸이하	약 300만원
12	경기도 고양시	32세	외벌이	전문대졸	약 370만원

주: 연구참여자 모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연령, 학력은 어머니 기준임.

다음의 <표 1-3-2>는 면담조사에 참여한 누리과정 이용 부모 자녀의 일반적 특성이다. 해당 자녀들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유치원 등에 재원하고 있었으며 만 3세, 4세아가 주를 이루었다.

〈표 1-3-2〉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해당 자녀 특성

사례	출생년도	형제관계 (출생순위)	현재 이용기관	현재 이용기관 이용시기
1	2012	2(1)	국공립어린이집	2013
2	2012	2(1)	국공립어린이집	2012
3	2012	2(1)	국공립어린이집	2015
4	2012	3(1)	민간어린이집	2012
5	2012	1(1)	사립유치원	2016
6	2011	2(2)	사립유치원	2016
7	2011	2(2)	국공립어린이집	2015
8	2011	2(1)	사립유치원	2015
9	2011	3(1)	공립(단설)유치원	2015
10	2012	2(1)	공립(병설)유치원	2016
11	2011	2(1)	사립유치원	2015
12	2011	2(1)	사립유치원	2015

다음의 <표 1-3-3>, <표 1-3-4>는 누리과정 미이용 가구 면담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해당 자녀의 일반적 특성이다. 누리과정 미이용 면담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총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이 외벌이 가정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1,100만원~2,000만원 사이로 누리과정 이용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3-3〉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사례	거주 지역	연령	학력	가정유형	직업(배우자)	월 가구소득
1	경기도 용인시	35세	전문대졸	외벌이	자영업	약 1500만원
2	경기도 용인시	35세	대졸	외벌이	자영업	약 1500만원
3	서울시 강동구	35세	대졸	맞벌이	약사(회계사)	약 2000만원
4	서울시 강동구	37세	대졸	외벌이	요리사	약 1100만원

주: 연구참여자 모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연령, 학력은 어머니 기준임.

누리과정 미이용 부모의 자녀는 만 3세~5세하였고 3명은 영어학원, 1명은 놀이학교를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4〉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해당 자녀 특성

사례	출생년도	형제관계 (출생순위)	현재 이용기관	현재 이용기관 이용시기	월 사교육비
1	2011	2(1)	영어학교	2015	약 55만원
2	2012	1(1)	놀이학교	2015	약 15만원
3	2012	2(1)	영어학교	2016	-
4	2010	2(1)	영어학교	2015	-

주: 사교육비는 기관에서 이용하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제외한 것이며 면접조사 실시 시점의 금액임.

2) 원장 면담조사

다음 <표 1-3-5>는 면담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목록이다.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원장(원감)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 소재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이었고, 면담에 참여한 원장(원감)의 최종학력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원 졸업이었으며, 경력은 3년부터 30년까지 다양했다.

〈표 1-3-5〉 원장/원감 면담조사 대상자

사례	기관 소재 지역	연령(만)	설립유형	최종학력	원장/원감 경력
1	서울시	-	국공립어린이집	대학원 졸	9년 2개월
2	서울시	44세	국공립어린이집	대학원 졸	8년 11개월
3	서울시	52세	민간어린이집	대학원 졸	30년

(표 I-3-5 계속)

사례	기관 소재 지역	연령(만)	설립유형	최종학력	원장/원감 경력
4	경기도	54세	공립(단설유치원)	대학원 졸	10년
5	경기도	59세	공립(단설유치원)	대학원 졸	7년
6	경기도	61세	공립(단설유치원)	대학원 졸	3년
7	서울시	60세	사립법인유치원	대학원 졸	18년 5개월
8	강원도	51세	민간어린이집	대학 졸	1년 3개월
9	강원도	54세	사립사인유치원	대학원 졸	15년 9개월
10	광주광역시	53세	민간어린이집	대학원 졸	24년
11	광주광역시	48세	민간어린이집	대학원 졸	15년
12	광주광역시	56세	국공립어린이집	대학원 졸	16년 7개월

3) 교사 면담조사

다음 <표 I-3-6>은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 특성이다. 올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법인유치원 교사 4명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3-6〉 교사 면담조사 대상자

사례	설립유형	최종전공	최종학력	총 교사경력	누리과정 담당횟수
1	사립법인유치원	유아교육학	대학원졸	11년 4개월	4회
2	사립법인유치원	유아교육학	대졸	8년 5개월	5회
3	사립법인유치원	유아교육학	대졸	4년 5개월	4회
4	사립법인유치원	유아교육학	대학원졸	9년 6개월	4회
5	국공립어린이집	기타(유아특수교육)	대졸	4년 9개월	4회
6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학·아동학	대졸	11년	5회
7	국공립어린이집	유아교육학	대졸	10년 8개월	4회

라. 전문가 의견조사

유관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대상으로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연구진이 개발하고 연구협력진이 검토한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에 대해 유관 지표 개발 경험이 있거나 공공정책 지표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연구협력진과 공동 개발한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18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이며 개발한 성과지표에 대해 찬성, 반대를 표시하고 지표분류, 측정방법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표 1-3-7〉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전공별	계획	최종응답자
유아교육학	5명	5명
보육학	5명	4명
교육학	3명	3명
경영·행정학(BSC모델 연구 경험자)	7명	6명
	20명	18명

마. 연구협력진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누리과정 정책의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협력진을 구성하였다. 연구협력진은 유아교육, 보육, 교육행정, 교육재정 분야의 총 4명이며 연구진이 개발한 성과지표를 각 전공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표 1-3-8〉 연구협력진 담당업무

구분	담당업무
김이경	본 연구에 적합한 정책분석이론에 대한 자문 및 적용 이론과 개발한 성과지표(하위 지표 포함)의 적합성 검토 및 연구결과 분석에 대해 교육행정 전문가 로서 자문
나정	연구진이 개발한 성과지표(하위 지표 포함)의 적합성 검토 및 연구결과 분석에 대해 유아교육 전문가 로서 자문
하봉운	본 연구에 적합한 정책분석이론에 대한 자문 및 적용 이론과 개발한 성과지표(하위 지표 포함)의 적합성 및 연구결과 분석에 대해 교육재정 전문가 로서 자문
황옥경	연구진이 개발한 성과지표(하위 지표 포함)의 적합성 검토 및 연구결과 분석에 대해 보육 전문가 로서 자문

바. 설문조사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및 운영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준거로 해서 제작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가구조사

가) 표본설계 및 추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 대상으로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예산과 기간 내에서 최적의 조사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1,000가구, 총 1,000명을 목표 표본 수로 설정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면접원 방문에 의한 일대일 타계식 면접 조사를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 가구의 응답 여건을 고려하여 타계식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구의 부모 중 1명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가구 당 해당 연령층의 자녀가 1명씩 있다는 가정 하에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학부모 조사의 모 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이다.

각 시도 세부 층별 표본 배분은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만 3~5세 연령 인구 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지역 내 배분에 있어서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출단위인 조사대상 읍면동의 추출은 층화단위 내의 읍면동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본 표본설계에서 표본 읍면동의 추출은 층화된 14개 각 층 내의 동 또는 읍면을 만 5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에 따라 정렬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표 1-3-9〉 학부모 조사 설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
조사 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 방법	가구 방문 조사(Target Sampling 병행)
표본 수	1,000명
표본추출 방법	비례배분 및 확률비례계통추출법
조사 기간	2016년 9월~2016년 10월

3) 부록 9 〈부록 표 2〉 참조

나) 가구조사 응답자 특성

(1) 학부모(가구)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학부모 1,000사례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84.9%),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8.3%로 가장 많고, 300만원~399만원이 24.1%로 다음을 차지했다. 본 조사에는 맞벌이 가구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월 평균 가구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겠다. 해당 자녀의 주양육자는 96.8%가 모라고 응답해서 모의 일반적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모의 연령은 35세~40세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서 가장 많고 30세~35세 미만이 다음을 차지했다. 모의 학력은 4년제졸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4.2%로 1명(37.4%), 3명이상(8.45%)보다 많았다.

〈표 1-3-10〉 학부모(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1,000)	전체	100.0(1,000)
지역규모	42.7(427)	모 연령	4.3(43)
대도시	42.2(422)	30세 미만	28.2(282)
중소도시	15.1(151)	30세~35세미만	49.1(491)
읍면지역		35세~40세미만	16.5(165)
월 평균 가구소득		40세~45세미만	1.9(19)
250만원 미만	8.2(82)	45세 이상	
250만원~299만원	15.0(159)	모 학력	
300만원~399만원	24.1(241)	고졸이하	10.9(109)
400만원~499만원	23.5(235)	전문대졸	25.4(254)
500만원 이상	28.3(283)	4년제대졸	55.1(551)
주 양육자		대학원 이상	86(86)
부	3.2(32)	자녀수	
모	96.8(968)	1명	37.4(374)
모 취업여부		2명	54.2(542)
취업모	52.4(524)	3명 이상	8.4(84)
비취업모	47.6(476)		

(2) 자녀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1,000사례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많고, 형제관계는 첫째아의 경우가 대부분이며(70.7%) 누리과정을 시작한 연령은 만 3세

부터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많았다. 만 4세, 만 5세에 누리과정을 처음 시작한다는 응답이 각각 14.2%, 2.5%로, 만 3세에 누리과정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약 20%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종류는 유치원 50.2%, 어린이집 49.8%로 엇비슷했으며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36.0%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 28.1%, 국공립유치원 14.2%, 국공립어린이집 12.8%, 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포함) 8.9%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64.1%로서 민간영역의 기관을 다수 유아가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11〉 자녀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1,000)	전체	100.0(1,000)
성별		이용기관 설립유형	
남아	51.5(515)	국공립유치원	14.2(142)
여아	48.5(485)	사립유치원	36.0(360)
연령		국공립어린이집	12.8(128)
만 3세	32.3(323)	법인어린이집	8.9(89)
만 4세	33.6(336)	민간어린이집	28.1(281)
만 5세	34.1(341)	누리과정 수혜 횟수	
형제관계		1회	41.1(411)
첫째아	70.7(707)	2회	35.3(353)
둘째아	25.2(252)	3회	23.6(236)
셋째아 이상	4.1(41)	누리과정 수혜 횟수(유치원)	
누리과정 시작 연령		1회	49.2(245)
만 3세	83.3(833)	2회	33.0(164)
만 4세	14.2(142)	3회	17.8(89)
만 5세	2.5(25)	누리과정 수혜 횟수(어린이집)	
이용기관 종류		1회	41.1(411)
유치원	50.2(502)	2회	35.3(353)
어린이집	49.8(498)	3회	23.6(236)

2) 기관조사

가) 표본설계 및 추출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 655명, 유치원 교사 345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관종류별, 설립유형,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조사

단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개인이며,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역시 이와 동일하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보건복지부의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현황자료와 교육부의 누리과정 운영 유치원 현황자료이다. 응답자는 기관별로 누리과정 운영 현황을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예: 누리과정 담당 경험이 많은 교사) 교사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 비율에 따라 목표 표본 수인 1,000표본을 기준으로, 비례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국립유치원 및 공립단설 유치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여 기관 유형을 국공립(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최종 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 전체 1,000표본 중 유치원은 345개(명), 어린이집은 655개(명)가 배분되었다.⁴⁾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000개소, 기관별 교사 1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표본크기 역시 1,000표본이다. 따라서 교사 조사의 모 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이다.

<표 I-3-12> 교사 조사 설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 대상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담당교사
조사 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Fax 조사 및 기관방문조사 병행)
표본 수	1,000명
표본추출 방법	할당추출법
조사 기간	2016년 9월~2016년 10월

나)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000사례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I-3-13>과 같다. 설립유형은 민간어린이집이 32.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에서는 공립병설유치원이 16.2%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9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사 최종학력은 대졸이 44.5%로 가장 많았고, 62.5%의 교사가 유아교육을 최종전공으로 응답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리과정을 담당했던 횟수도 5회라고 응답한 비율

4) 부록 9 <부록 표 3> 참조

이 36.3%로 가장 많았다. 담당학급의 연령은 혼합연령 학급이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1-3-13〉 교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1,000)	전체	100.0(1,000)
기관종류		경력	
유치원	34.5(345)	4년 미만	14.6(146)
어린이집	65.5(655)	4-7년 미만	19.0(190)
설립유형		7-10년 미만	19.1(191)
공립단설유치원	1.9(19)	10-15년 미만	22.3(223)
공립병설유치원	16.2(162)	15년 이상	25.1(251)
사립법인유치원	3.1(31)	최종전공	
사립사인유치원	13.3(133)	보육·아동·아동복지	20.2(202)
국공립 어린이집	11.0(110)	유아교육	62.5(625)
법인어린이집	22.0(220)	초·중등교육	0.6(6)
민간어린이집	32.5(325)	사회복지	8.0(80)
성별		기타	8.6(86)
남성	0.9(9)	누리과정담당횟수	
여성	99.1(991)	1회	17.7(177)
연령		2회	15.2(152)
20대	25.0(250)	3회	16.1(161)
30대	37.7(377)	4회	14.7(147)
40대	26.0(260)	5회	36.3(363)
50대 이상	11.3(113)	담당학급 연령	
최종학력		만3세	27.3(273)
고졸	3.4(34)	만4세	12.3(123)
전문대졸	37.1(371)	만5세	26.1(261)
대졸	44.5(445)	혼합연령학급	34.2(342)
대학원졸	15.1(151)	지역유형	
		대도시	41.3(413)
		중소도시	41.1(411)
		읍면지역	17.6(176)

3) 담당 공무원 조사

가) 표본설계 및 추출

누리과정 담당 교육청 및 지자체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점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 조사는 누리과정 행

정 전달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표집하였다. 표본추출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의 교육통계연보에 근거하여 192개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균등 배분하였으며 교육청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동일한 지역 조건 하에서 대상을 표집하였다.

〈표 1-3-14〉 공무원 조사 설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 대상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누리과정 담당 공무원
조사 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Fax 조사 병행)
표본 수	100명
표본추출 방법	임의추출법(균등할당)
조사 기간	2016년 9월~2016년 10월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합하여 전체 100표본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표본추출방식 적용 없이 교육청과 시도청을 각각 50표본씩 동수 배분 하였으며 특정 지역에서의 표집 편중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17개 시도별로도 균등 배분하였다.

나) 공무원 조사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0사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3-15>과 같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또한 각 50명씩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직위에 따른 분류로는 일반직, 담당업무로는 누리과정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조금 더 많았으나 이 역시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누리과정 업무를 담당 한 기간은 1년 미만인 공무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2년 이상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로 가장 적었다.

〈표 1-3-15〉 공무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100)	전체	100.0(100)
지역규모		직위	
대도시	36.0 (36)	별정직	42.0(42)

(표 I-3-15 계속)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대도시	36.0 (36)	별정직	42.0(42)
중소도시	32.0(32)	일반직	58.0(58)
읍면도시	32.0(32)	누리과정 업무 담당 기간	
소속		1년 미만	57.0(57)
교육청	50.0(50)	1~2년 미만	23.0(23)
지자체	50.0(50)	2년 이상	20.0(20)
담당 업무			
누리과정 예산 집행			57.0(57)
누리과정 운영 및 관리 업무			23.0 (23)
기타			20.0(20)

4) 설문 내용

학부모(가구), 교사, 공무원 대상 설문 내용은 다음 <표 I-3-16>과 같다.

<표 I-3-16> 설문 내용

구분	설문내용	자료수집 도구
학부모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특성: 학부모 및 자녀 -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 현황: 기관유형, 1순위 기관, 등원 및 하원 시간(일일 이용시간) 등 -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추가 지불 비용 유무, 월평균 액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종류, 개수, 금액 등), 비용 부담,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경제적 도움 정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절감액 사용처, 사교육 현황 -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의견 -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구조화된 설문지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특성: 성별, 학력, 교사경력, 담당 학급, 누리과정담당 횟수 등 - 근무 환경: 평균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 급여, 호봉 등 - 누리과정 운영 현황: 누리과정 운영 시간, 연수 이수, 보조인력 등 -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누리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의견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및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표 I-3-16 계속)

구분	설문내용	자료수집 도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특성: 연령, 소속, 직위, 주요 업무, 재직 기관 등 -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 누리과정 정책 수립 시 소요시간에 대한 의견 - 누리과정 교사 지원에 대한 의견 -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구조화된 설문지
<p>※ 가구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대면 조사로, 교사 및 공무원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음.</p>		

4. 연구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란 공공문제의 해결, 계획된 정부 활동, 권위적인 정부의 결정, 정책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포함한 개념”(류지성, 2010: 40) 정의를 차용하여, 누리과정 정책을 정부가 발표할 때 표방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 공통과정 담당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재정확보,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지속”(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1. 5. 2),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연차적 인상, 학부모 부담의 실질적 경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 및 사실상의 의무교육 10년, 생애출발선 보장, 기관의 교육·보육 격차 완화,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유초 연계 강화,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종일제 운영”(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5. 2)을 공공문제의 해결, 계획된 정부활동, 권위적인 정부 결정, 정책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이를 누리과정 정책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의 내용 분석은 제외하였다. 참고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누리과정의 내용 분석은 올해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누리과정 실행 평가」,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연구에서 다루었다.

둘째, 누리과정비5)에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도 포함하였다. 방과후 과정

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누리과정운영지원비’와 금액과 성격이 유사하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과 같은 정부 발행 문건에서도 누리과정(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같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에서 누리과정 성과지표를 추출할 때, 방과후 과정 관련 보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과지표에 포함하였다.

셋째, 누리과정 관련 보도자료에서 무상교육·보육을 다루면서 0~2세 양육수당 정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2. 1. 18)을 같이 다룬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3~5세 누리과정에 한정하므로 보도자료에 실렸다 하더라도 양육수당 내용은 제외하였다.

5) 유치원은 유아학비, 어린이집은 보육료라 칭함.

II. 누리과정 정책 개요 및 현황

이 장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의 개요를 추진 배경과 과정, 지원 대상과 금액, 누리과정 지원금 외의 추가로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와 누리과정 운영비, 교사지원,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서 중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정리하고, 현재 누리과정 정책의 최대 쟁점인 예산과 법제도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누리과정 도입 전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통계 수치 변화를 알아보았다.

1. 누리과정 정책 개요

누리과정은 1)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이란 커리큘럼으로서의 의미와 2)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무상교육·보육 정책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2)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 1)은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으로만 소개하고자 한다⁶⁾.

가. 추진 목적 및 과정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기관 이용 시 비용 경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2016a: 1)을 목적위해 누리과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정을 보면, 2011년 누리과정 정책 도입을 확정(만 5세는 2011년, 만 3~4세는 2012년에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 2013년 3월부터 만 3~4세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253). 누리과정 추진 과정은 다음 <표 II-1-1>와 같다.

6) I 장 4절 연구범위에 기술함.

〈표 II-1-1〉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

추진일자	추진내용
2011. 9.	<input type="checkbox"/> 만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고시 및 법령 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2012. 1.	<input type="checkbox"/>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발표 ◦ 관계부처 합동(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2012. 3.	<input type="checkbox"/> 만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5세아 전계층 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비관할인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 어린이집 만5세 보육료 및 방과후 과정비 100% 부담
↓	
2013. 3.	<input type="checkbox"/> 만3~4세 누리과정(공통과정) 확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3~5세아 전계층 지원 ◦ 공립유치원 입학금·수업료 면제 후 유아학비 지원 시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 증가 ◦ 어린이집 만5세 보육료 100%, 만3~4세 30% 부담 만3~5세 방과후 과정비 100% 부담 (12년 대비 만3~4세 부담분 추가)
↓	
2014. 3.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 증가 ◦ 어린이집 만4~5세 보육료 100%, 만3세 30% 부담 만3~5세 방과후 과정비 100% 부담 (13년 대비 만4세 보육료 부담분 70% 추가)
↓	
2015. 1.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통합 카드 “아이행복카드” 시행
↓	
2015. 3.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교육비 항목 간소화 및 산정방법 개선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 증가 ◦ 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및 방과후 과정비 100% 부담 (14년 대비 만3세 보육료 부담분 70% 추가)
↓	
2015. 9.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도입 및 사용

자료: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2016). 2016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계획. p. 3.

다음 <표 II-1-2>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향후 달라지는 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1-2> 5세 누리과정 도입 전후 달라진 점

구분	현행	향후
교육과정	유아교육, 보육 -유치원: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공통과정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기본소양과 인성내용 강화 -초등 1, 2학년군과 연계 강화
담당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 유치원 -보육: 어린이집	현행 유지
교사자격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유치원 정교원 1·2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3급	현행 유지 -유치원: 유치원 교원 1·2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2급 (일부 지역 3급교사)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유아학비(유치원): 소득하위 70% -보육료(어린이집): 소득하위 70%	순 계층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전 계층
지원단가	월 17.7만원	월 30만원으로 인상 -'12년 20만원 → '14년 24만원 → '16년 30만원
재원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비-지방비 -유아학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육료: 국비-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리체계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지자체)	현행 유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Q/A, p. 2.

나. 지원 대상 및 금액

2016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아의 기준과 지원액은 다음 <표 II-1-3>와 같다. 취학대상 아동(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때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 2).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표 II-1-4>와 같다.

<표 II-1-3> 누리과정 지원연령 및 금액(2016)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2010.1.1.~2010.12.31	60,000	220,000	220,000
	만 4세	2011.1.1.~2011.12.31			
	만 3세	2012.1.1.~2013.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0.1.1.~2013.2.28	50,000	70,000	70,000
누리과정 유아 1인당 지원금액			110,000	290,000	290,000

주: 누리과정 유아 1인당 지원 금액은 추가한 내용임.

자료: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6a).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3.

<표 II-1-4> 누리과정 지원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외 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별도 검토 후 추후 지원제외 여부 재안내 예정)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자료: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6a).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2.

다. 지원 절차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을 할 수 있다. 2015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자의 출생년도, 월, 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이 생성된다.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웁카드(현금카드 제외),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를 인증하고 지원 금액을 신청한다. 지원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며(그림 II-2-1 참조) 학부모는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a: 6).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과정 지원금 절차. <http://www.moe.go.kr/2016nuri/sub01.jsp>.
 검색일: 2016. 6. 20.

[그림 II-2-1]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 절차

라.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 항목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국공립유치원 월 7만원)의 명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특성화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a: 5).

마.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국공립유치원 월 7만원) 외에도 정부는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일일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을 한다는 증빙서류는 방과후 과정 출석부, 방과후 과정 신청서 등이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a: 6).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유아 1인당 월 7만원이지만 유아 1인당 지원할당 금액은 월별 누리과정 자격 아동 수에 따라 계산함에 따라 매월 지원금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방과후 과정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의 지원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후 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는 지침은 양 기관이 공통적이거나,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의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표 II-1-5 참조).

〈표 II-1-5〉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비교(2016)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공립	사립	
만 3~5세	월 5만원	월 7만원	월 7만원 ¹⁾
대상	누리과정 지원대상 중 '유아교육법' 제2조 누리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이용자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참여유아)에게 지원		어린이집은 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하므로 누리과정 유아 수만큼 지원
지원 항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2016년 입력항목: 1개(방과후 과정비) ※ 2015년 입력과목: 3개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활용),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주: 유아 1인당 지원 할당 금액=(시도별 자격아동 수 × 7만원) - (시도별 처우개선비)/자격아동 수, 어린이집별 누리과정 자격아동 수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 유아 1인당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

자료: 어린이집; 보건복지부(2016b). 보육사업 안내. p. 256.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6a).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7, 11을 재구성함.

바. 교사 지원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로 1인당 51만원, 비담임교사 40만원이 지원되며, 담임교사 수당(월 11만원)을 제외한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은 각 시·도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39).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만 3~5세반(독립반 또는 혼합반) 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만 2~3세 혼합반 또는 만 2세-유아 혼합반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 교사에 한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자체로부터 해당 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보건복지부, 2016b: 255).

〈표 II-1-6〉 교사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지원(2016)

공립	유치원 ¹⁾	어린이집 ²⁾
	사립	
-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 - 담임교사: 월 51만원 ※ 담임수당(11만원),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포함 - 원장, 원감, 비담임: 월 40만원(담임수당 제외) ※ 2학급 이하인 경우, 원장 또는 원감이 학급담임을 할 경우 담임수당 지원 가능	<누리과정 담당교사 인건비> - 만 3~5세반: 월 30만원 - 만 2~3세 혼합반, 만 2세-유아 혼합반: 월 20만원
-	-	<보조교사 인건비> - 월 70만원(4시간 기준) 이상

자료: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39.

사.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내실화 운영

누리과정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 범교육과정적 주제 통합 운영 및 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1일 4~5시간의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편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누리과정 운영 시간 내에 특성화 활동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장학·평가를 내실화를 위해 시도별 컨설팅장학지원단의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통한 수업컨설팅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고 수업연구회, 상설연구학교 운영, 안전교육관련 연구학교 등 연령별 교육과정 시범연구기관 지원에 따른 다양한 수업모델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실태의 수시 점검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b: 3-4).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수도 신규교사와 경력교원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유치원 단위의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지원한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b: 4).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 교사도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아동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1·2급 보육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1급 교사가 우선)이며 유아 장애아반을 담당할 교사는 특수교사 또는 장애아 특별직무 교육을 이수한 1·2급 보육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257).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보건복지부, 2016b: 257).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연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연수를 계획·관리하고, 연수운영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6b: 258).

2. 누리과정 정책 쟁점

현재 누리과정 정책을 둘러싼 최대 현안은 '예산'과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산 편성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가. 예산 부담 주체

1) 정부의 입장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2012년부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253). 아울러 지원단가도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5. 2).

정부는 2015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정산으로 교부금이 감소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에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수 회복과 정부의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 내국세가 증가하고 담배값 인상, 학교신설비나 교원명예퇴직비 감소 등으로 2016년에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내국세의 20.27%에⁷⁾ 해당하는 41조 2,284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고, 2016년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 원아 수만큼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하여 유치원에 약 1.9조원, 어린이집에 약 2.1조원으로 4조원 전액을 교부금에 반영하여 교부했으므로 이를 누리과정에 편성,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게다가 4조원의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정(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였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2015년 교육청 평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은 2005년 내국세 19.4%, 2008년 내국세 20.0%, 2010년 이후 내국세 20.27%로 증액되어 음.

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1억원, 지방액 승인액 3조 9천억원과 이월·불용액(약 3.6조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v.kr/2016nuri/sub02.jsp> 검색일 2016. 6. 20).

교부율 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 학생수의 변화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면서도 초·중등 교육의 투자는 계속 증대하였다. 2010년 이후에 누리과정 실시로 유치원 원아수가 증가하였지만,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여 2015년까지 전체 학생수가 100만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학생수 변화 속에서 누리과정 재정 수요에 대해 한번 올려놓으면 되돌리기 힘든, 매우 장기적인 정책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교육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16. 4. 21⁸⁾).

2) 시도 교육청의 입장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빚나간 재정 예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2012년 1조 6,352억원에서 2015년 4조 4,549억원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다(표 II-2-1 참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하는 2015년 지방재정교육금 49조 4천억원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내국세 262조 3천억원의 1.7%에 달하는 규모이다(하봉운, 2016: 40).

〈표 II-2-1〉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세	교육	교부금	2,482	2,586	5,392	5,482	5,611	6,509
	보육	국고	1,316	1,012	-	-	-	-
		지방비	1,375	1,036	-	-	-	-
		교부금	-	-	5,996	6,087	6,218	7,204
교부금계		2,482	2,586	11,388	11,569	11,829	13,713	
총계		5,173	4,636	11,388	11,569	11,829	13,713	

8) 한국일보(2016. 4. 21) [기고] 누리과정 재원 누가 부담해야 하나. <http://www.hankookilbo.com/v/6e01bdf77514e798334d49ed5503ac6>. 검색일: 2016. 11. 21.

(표 II-2-1 계속)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4 세	국비+지방비			7,747	7,747	4,510	-
	교부금	-	-	4,964	16,781	22,930	30,836
	총계			12,711	24,528	27,440	30,836
교부금 총부담액		2,482	2,586	16,352	28,850	34,759	44,549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p. 8.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2. 1. 18), 「3-4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 p. 7.
 3) 하봉운(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쟁점과 해법. 20대 총선 교육공약 쟁점과 해법은? 제1차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4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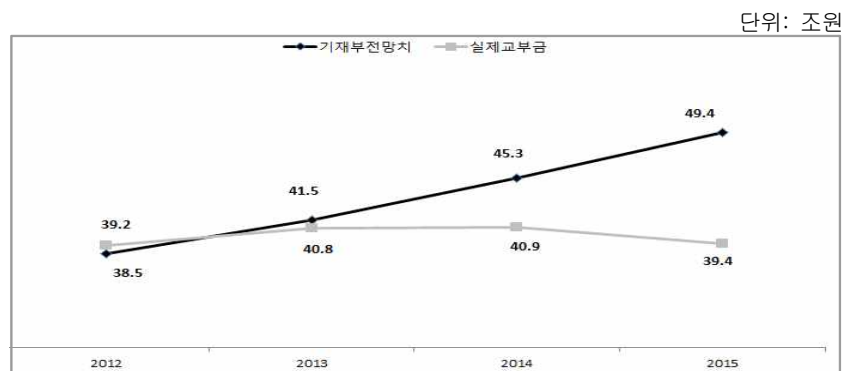
누리과정 도입 당시,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3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었으나, 2013년도 이후 세수 감소로 재정추계가 빗나갔고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정부추계액과 실교부액이 15조 8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한해에만 약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표 II-2-2, 그림 II-2-1 참조).

<표 II-2-2> 중앙정부 추계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교부액 비교

단위: 억원

연도	정부 추계액(A)	실교부액(B)	차액(C=A-B)	교부금증가액
2013	421,163	410,619	△10,544	26,146
2014	456,340	408,681	△47,659	△1,938
2015	493,954	394,056	△99,898	△14,625
합계	1,371,457	1,213,356	△158,101	

자료: 이정만(2016a). 누리과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규명과 해법 찾기.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p. 87.



자료: <표 II-2-2>를 도식화함.

[그림 II-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추이

따라서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려고 했던 정부의 계획은 세수 감소에 따라 교부액이 줄어들었고, 교부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전액을 교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반영하였다는 의미이지 별도 재원을 추가로 교부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4조원을 전액 교부했다면 교부금이 그 만큼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또, 2016년 교부금이 2015년에 비해 1.8조원 증가하여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이 교부금은 2013년 수준에 불과하여 그동안 증가한 인건비 상승분 충당도 어렵다는 것(이정만, 2016a: 91)이 시도 교육청의 주장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교육재정은 감소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하봉운, 2016: 56).

나. 법령

1) 정부의 입장

일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비를 부담할 경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실제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2016nui/sub02.jsp> 검색일 2016. 6. 20).

또한, 누리과정비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출의무와 규모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의무지출경비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지방재정법 제33조),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지방재정법 제36조)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또한, 유아교육법과 동령 시행령 등 무상교육·보육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2016nui/sub02.jsp> 검색일 2016. 6. 20)

2) 시·도 교육청의 입장

먼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나에 대한 논란에서 시·도교육청은 '정부조직법' 제3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라 '보육'은 시·도 교육감의 사무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할이며 누리과정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법령을 개정할 때,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다(하봉운, 2016: 48).

두 번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문제로 악화되자, 중앙정부는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수정, 변경하였다. 이러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변경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소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하봉운, 2016: 50).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편성 및 지출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정부는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세부 항목별 사용처를 지정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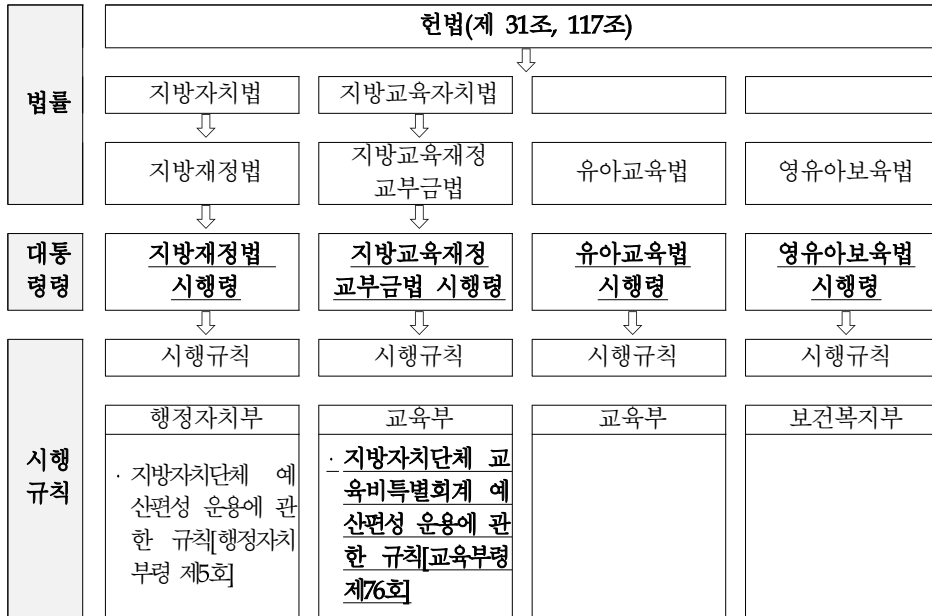
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한 결과이다(이정만, 2016b: 89). 1명을 제외하고 3명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표 II-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범위만 여부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2014. 10. 21)

A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재정보호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시행령 수준으로 그 재정보호를 다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B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1항은 무상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은 「유아교육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동법 제24조 제1항이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C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6. 유아교육비"의 범위에 "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명시하고, 공통 보육과정을 포함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된다고 할 수 있음.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해당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육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보육료 지원이 입법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음.

자료: 이정만(2016b).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 규명과 해법』 자료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pp. 89-90.

따라서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매년 급증하는 누리과정 수요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다.



자료: 하봉운(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쟁점과 해법. 20대 총선 교육공약 쟁점과 해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차 교육정책포럼. p. 50.

[그림 II-2-3] 누리과정 재정 편성·운용에 관한 법령 체계

3. 누리과정 도입 전후 기관 현황 및 이용 변화(2010~2015)

가. 유치원 현황

1) 기관수

2015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 수는 8,930개소이며, 국공립 유치원이 4,678개소, 사립유치원이 4,252개소로 국공립유치원이 426개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설립유형별로 유치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1>과 같다.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사립유치원 보다 국공립유치원이 더 많았으며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사립유

치원 수가 더 많았다.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은 시·도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광역시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 시도별·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서울특별시	197	691	888
부산광역시	80	323	403
대구광역시	126	266	392
인천광역시	156	262	418
광주광역시	126	189	315
대전광역시	95	173	268
울산광역시	78	116	194
세종시	40	3	43
경기도	1,117	1,071	2,188
강원도	275	111	386
충청북도	251	92	343
충청남도	368	135	503
전라북도	361	169	530
전라남도	435	117	552
경상북도	463	248	711
경상남도	415	264	679
제주도	95	22	117
계	4,678	4,252	8,930

자료: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5. 26.

2) 원아 수

2015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 취원아 수는 총 682,553 명이며, 연령별로는 만 3세아 172,114명, 만 4세아 249,197명, 만 5세아 261,242 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원아 수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지역별·설립유형 별 유치원 취원아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2>와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1,293명으로 유치원 취원아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91,394명, 경상남도 50,580명, 부산광역시 45,175명, 인천광역시 42,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유치원 수(4,678개소)가 사립유치원(4,252개 소)보다 약간 많았지만, 유치원 취원아 수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이 약 3.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수는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의 약 23.6%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76.4%는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시도별·설립유형별·연령별 유치원 취원아 수

단위: 명

구분	설립유형		연령			전체
	국공립	사립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15,107	76,287	24,009	33,524	33,861	91,394
부산광역시	5,272	39,903	11,253	17,106	16,816	45,175
대구광역시	4,897	32,054	7,455	14,645	14,851	36,951
인천광역시	8,879	33,510	10,345	15,685	16,359	42,389
광주광역시	4,484	19,257	6,111	8,615	9,015	23,741
대전광역시	4,829	20,831	6,470	9,369	9,821	25,660
울산광역시	3,420	15,757	4,502	7,232	7,443	19,177
세종시	3,894	214	991	1,521	1,596	4,108
경기도	42,447	148,846	50,816	68,792	71,685	191,293
강원도	6,598	10,789	4,290	6,074	7,023	17,387
충청북도	8,765	9,540	4,947	6,509	6,849	18,305
충청남도	9,699	17,442	6,640	9,611	10,890	27,141
전라북도	8,128	16,931	7,290	8,752	9,017	25,059
전라남도	9,869	10,114	5,305	6,995	7,683	19,983
경상북도	10,889	27,774	9,199	14,298	15,166	38,663
경상남도	11,646	38,934	12,024	18,706	19,850	50,580
제주도	2,516	3,031	467	1,763	3,317	5,547
계	161,339	521,214	172,114	249,197	261,242	682,553

주: 3세는 3세 이하, 5세는 6세 이상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5. 26.

3) 교사 수

2015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는 12,619명, 사립유치원은 38,376명으로 전국 유치원 교사 수는 50,995명이다. 지역별·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사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3-3>과 같다.

유치원 취원아 수와 마찬가지로 교사 수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약 3배 정도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교사가 많았다. 한편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가 월등하게 많은 반면, 시·도는 지역적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에 따라 비슷하거나(충

청북도),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가 더 많은 지역(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세종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 시도별·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사 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서울특별시	901	6,002	6,903
부산광역시	327	3,151	3,478
대구광역시	379	2,566	2,945
인천광역시	512	2,389	2,901
광주광역시	374	1,535	1,909
대전광역시	289	1,615	1,904
울산광역시	201	1,024	1,225
세종시	304	16	320
경기도	2,989	10,213	13,202
강원도	624	833	1,457
충청북도	739	715	1,454
충청남도	892	1,227	2,119
전라북도	802	1,323	2,125
전라남도	951	796	1,747
경상북도	885	2,067	2,952
경상남도	1,180	2,700	3,880
제주도	270	204	474
계	12,619	38,376	50,995

주: 교사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가 포함
 자료: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5 교육통계 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5. 26.

나. 어린이집 현황

1) 시설 수

201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42,517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2,629개소, 사회복지법인 1,414개소, 법인 및 단체 834개소, 민간 14,626개소, 가정 22,074개소, 부모협동 155개소, 직장 785개소였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기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 34.4%, 약 51.9%로 두 기관수를 합치면 전체의 약 86%로 압도적으로 다수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3-4>와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689개소, 서울시 6,598개소, 경상남도 3,349개소, 인천광역시 2,278개소 순으로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 시도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서울특별시	922	35	141	2,174	3,105	27	194	6,598
부산광역시	161	84	38	824	820	12	32	1,971
대구광역시	46	121	33	715	599	6	19	1,539
인천광역시	140	11	20	814	1,236	6	51	2,278
광주광역시	32	108	24	422	646	10	22	1,264
대전광역시	30	41	14	443	1,097	6	38	1,669
울산광역시	33	13	5	476	377	5	25	934
세종시	10	8	4	67	115	-	12	216
경기도	595	68	139	4,005	7,646	66	170	12,689
강원도	87	113	45	402	545	4	31	1,227
충청북도	58	107	34	445	551	7	28	1,230
충청남도	72	125	58	640	1,059	1	33	1,988
전라북도	55	144	96	502	807	-	19	1,623
전라남도	91	174	54	406	488	2	23	1,238
경상북도	134	84	39	891	944	-	38	2,130
경상남도	137	101	50	1,140	1,880	3	38	3,349
제주도	26	77	40	260	159	-	12	574
계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주: 본 자료는 2015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전체 어린이집 42,517개소 중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7,145개소로 약 40.2%가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5 참조).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진 외(2014: 48)의 연구에 따르면 누리과정 운영율이 2012년에는 27.6%, 2014년에는 39.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2년의 경우에는 만5세 누리과정만 해당하였으므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표 II-3-5〉 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설 ¹⁾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²⁾								누리과정 운영율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42,517	17,145	2,377 (90.4)	1,287 (91.0)	729 (87.4)	11,085 (75.8)	742 (3.4)	134 (86.5)	791 (-)	40.2
서울	6,598	2,870	831	26	78	1,646	81	22	186	43.50
부산	1,971	905	144	67	37	587	25	13	32	45.92
대구	1,539	807	40	121	32	536	54	5	19	52.44
인천	2,278	898	122	11	18	667	25	5	50	39.42
광주	1,264	477	27	99	19	294	7	6	25	37.74
대전	1,669	583	28	39	12	379	76	5	44	34.93
울산	934	421	26	13	5	339	10	3	25	45.07
세종	216	100	10	8	4	66	0	0	12	46.30
경기	12,689	4,392	562	65	128	3,178	216	63	180	34.61
강원	1,227	590	80	106	44	295	27	4	34	48.08
충북	1,230	543	51	101	32	318	13	3	25	44.15
충남	1,988	806	68	108	53	532	12	1	32	40.54
전북	1,623	588	41	126	93	302	9	0	17	36.23
전남	1,238	617	78	161	51	288	13	2	24	49.84
경북	2,130	946	115	79	37	642	36	1	36	44.41
경남	3,349	1,268	127	84	47	834	137	1	38	37.86
제주	574	334	27	73	39	182	1	0	12	58.19

주: 1)은 2015년 12월말 기준, 2)는 2016년 8월 기준 시점 자료임.

- 괄호 안의 수치는 같은 설립유형 내에서의 누리과정 운영율을 의미함.

- 2015년 12월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의 전체 기관수는 777로 2016년 8월말 기준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기관수(791개소)를 넘어섰기 때문에 비율 산출을 제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c).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2) 원아 수

201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 재원아 수는 1,452,813 명으로 이는 누리과정 대상 연령인 만 3, 4, 5세 유아뿐만 아니라 만 0, 1, 2세 영아도 포함된 수치이다. 지역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재원아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3-6>과 같다. 기관수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재원아 수는 각각 747,598명, 344,007명으로 전체 재원아 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 시도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재원아 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서울특별시	62,556	2,088	6,327	105,478	50,061	752	10,841	238,103
부산광역시	10,841	5,697	2,477	9,627	13,582	231	1,548	74,003
대구광역시	2,254	10,778	1,803	34,675	8,852	122	965	59,449
인천광역시	8,202	903	1,203	48,400	19,836	181	2,628	81,353
광주광역시	2,274	8,519	1,493	25,223	9,572	385	1,063	48,529
대전광역시	1,547	2,977	677	19,994	16,649	248	2,599	44,691
울산광역시	2,059	859	444	23,786	6,229	141	1,158	34,676
세종시	835	706	350	3,149	1,998	-	1,685	8,723
경기도	39,052	4,724	8,526	205,330	19,663	1,547	10,556	389,398
강원도	5,424	6,594	2,050	18,339	8,277	81	1,473	42,238
충청북도	3,629	7,783	2,267	25,908	8,509	194	1,497	49,787
충청남도	3,611	7,856	2,657	36,440	16,256	28	1,902	68,750
전라북도	2,986	9,019	5,303	25,525	11,674	-	719	55,226
전라남도	4,617	12,546	3,361	24,990	7,709	86	1,338	54,647
경상북도	5,662	5,659	2,109	41,717	13,836	-	1,877	70,860
경상남도	8,571	6,736	3,043	55,749	28,719	131	2,322	105,271
제주도	1,623	6,271	2,768	3,268	2,585	-	594	27,109
계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주: 본 자료는 2015년 12월말 기준 시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다음의 <표 II-3-7>은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 중 누리과정 대상 연령인 만 3세, 4세, 5세아 재원아 수를 정리한 것으로 총 588,217명 중 만 3세아는 253,294명, 만 4세아는 180,249명, 만 5세아는 154,674명이었다. 지역별·설립유형별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아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원아 수도 증가하는 유치원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세아가 253,294명으로 가장 많고, 5세아 154,67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만 3세를 기점으로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민간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4세, 5세 유아가 367,685명으로 전체의 약 6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7〉 시도별·설립유형별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아 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작장	전체
서울 특별시	만3세	13,351	459	1,154	23,474	265	159	2,397	41,259
	만4세	12,922	506	950	15,224	63	129	1,813	31,607
	만5세	12,805	589	2,195	12,778	30	113	1,389	29,899
부산 광역시	만3세	2,691	1,371	610	8,248	77	48	340	13,385
	만4세	2,185	840	484	3,849	13	42	264	7,677
	만5세	1,907	836	366	3,076	14	28	214	6,441
대구 광역시	만3세	573	3,061	443	7,476	180	36	226	11,995
	만4세	344	1,347	327	2,885	26	24	149	5,102
	만5세	319	1,415	294	2,089	19	30	141	4,307
인천 광역시	만3세	1,969	203	301	11,481	101	25	638	14,718
	만4세	1,508	210	205	7,190	5	33	429	9,580
	만5세	1,276	181	222	5,976	8	27	297	7,987
광주 광역시	만3세	493	1,846	291	5,022	19	56	217	7,944
	만4세	421	1,380	286	3,434	10	55	203	5,789
	만5세	425	1,433	269	2,855	3	36	163	5,184
대전 광역시	만3세	332	827	193	5,032	253	31	597	7,265
	만4세	264	461	115	3,018	18	28	519	4,423
	만5세	276	526	82	2,324	13	21	404	3,646
울산 광역시	만3세	424	213	114	5,291	33	27	282	6,384
	만4세	326	92	102	2,910	2	11	164	3,607
	만5세	317	165	85	2,247	0	7	105	2,926
세종시	만3세	250	171	92	696	3	0	354	1,566
	만4세	208	144	83	370	0	0	294	1,099
	만5세	140	103	74	227	0	0	204	748
경기도	만3세	8,821	1,124	2,187	48,564	821	383	2,390	64,290
	만4세	8,669	1,018	1,940	34,208	259	389	1,878	48,361
	만5세	7,729	1,081	1,760	28,562	215	354	1,423	41,124
강원도	만3세	1,283	1,472	513	3,894	73	12	351	7,598
	만4세	1,164	1,386	445	2,746	25	18	291	6,075
	만5세	913	1,139	349	2,306	15	15	224	4,961
충청 북도	만3세	821	1,799	562	5,473	30	15	348	9,048
	만4세	747	1,569	493	4,475	29	17	311	7,641
	만5세	642	1,416	468	3,732	18	5	241	6,522
충청 남도	만3세	896	1,758	614	9,066	44	9	412	12,799
	만4세	738	1,511	566	6,631	5	5	342	9,798
	만5세	597	1,319	466	5,209	13	2	261	7,867

(표 II-3-7 계속)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전라 북도	만3세	603	1,925	1,128	4,641	28	0	163	8,488
	만4세	503	1,749	1,062	3,745	14	0	127	7,200
	만5세	445	1,796	1,020	3,504	7	0	74	6,846
전라 남도	만3세	969	2,721	733	5,080	27	20	303	9,853
	만4세	943	2,350	658	4,198	13	23	233	8,418
	만5세	764	2,089	588	3,583	10	15	159	7,208
경상 북도	만3세	1,331	1,289	577	8,706	105	0	430	12,438
	만4세	1,087	917	366	4,607	23	0	292	7,292
	만5세	915	1,071	231	3,799	9	0	148	6,173
경상 남도	만3세	2,176	1,593	745	13,066	479	16	601	18,676
	만4세	1,796	1,187	676	8,029	84	16	472	12,260
	만5세	1,541	1,100	557	6,465	61	3	357	10,084
제주도	만3세	409	1,437	613	2,991	2	0	136	5,588
	만4세	309	1,201	565	2,141	0	0	104	4,320
	만5세	207	972	449	1,092	0	0	31	2,751
계	만3세	37,392	23,269	10,870	168,201	2,540	837	10,185	253,294
	만4세	34,134	17,868	9,323	109,660	589	790	7,885	180,249
	만5세	31,218	17,231	9,475	89,824	435	656	5,835	154,674
총계		102,744	58,368	29,668	367,685	3,564	2,283	23,905	588,217

주: 1) 본 자료는 2015년 12월말 기준임.

2) 만5세 수치는 만6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3) 교사 수

201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교사 수는 273,435명으로 집계되었다.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5,309명, 사회복지법인 14,761명, 법인·단체 등 6,627명, 민간 121,384명, 가정 95,785명, 부모협동 797명, 직장 8,772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3-8>과 같다. 기관수와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수는 전체 교사 수 대비 약 7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75,469명, 서울시 46,074명, 경상남도 19,588명, 경상북도 13,876명, 인천광역시 15,096명 순으로 교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 시도별·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서울특별시	9,891	278	927	18,212	14,266	167	2,333	46,074
부산광역시	1,527	921	346	6,936	3,583	47	287	13,647
대구광역시	359	1,696	296	6,447	2,598	22	180	11,598
인천광역시	1,362	126	185	7,364	5,535	39	485	15,096
광주광역시	341	1,311	221	4,190	2,703	69	206	9,041
대전광역시	303	453	108	3,333	4,567	50	484	9,298
울산광역시	349	174	57	3,819	1,678	27	228	6,332
세종시	100	88	38	503	493	-	290	1,512
경기도	5,855	668	1,142	32,016	33,427	278	2,083	75,469
강원도	710	924	301	3,001	2,282	17	278	7,513
충청북도	521	1,075	315	3,953	2,372	40	280	8,556
충청남도	543	1,068	367	5,046	4,346	5	343	11,718
전라북도	487	1,380	781	4,323	3,435	-	148	10,554
전라남도	688	1,787	454	3,795	2,060	13	244	9,041
경상북도	835	953	309	7,388	4,023	-	368	13,876
경상남도	1,188	983	404	8,908	7,671	23	411	19,588
제주도	250	876	376	2,150	746	-	124	4,522
계	25,309	14,761	6,627	121,384	95,785	797	8,772	273,435

주: 교사에는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1) 만 3세아

누리과정 도입을 전후로 만 3~5세 유아의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만 3세의 경우 2010년 이후로 유치원 이용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률은 초반에는 급증하였다가 이후에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II-3-9 참조).

유치원의 경우 만 3세아의 이용률이 2010년 22.6%에서 2015년 36.2%로 지난 6년 동안 13.6%가 상승하였다. 어린이집도 2010년 49.3%에서 2011년 58.3%로 일 년 만에 약 10%에 가까이 이용률이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53.3%로 나타났다. 한편, 만 3세아의 전체 기관 이용률은 2013년

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지난 6년 동안 증가 추이를 보여 2015년 전체 기관 이용률은 89.5%로 집계되었다(표 II-3-9 참조).

〈표 II-3-9〉 만 3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0~2015)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만 3세아 수	493,452	466,807	446,256	472,047	474,932	475,519
유치원이용아수	111,482	133,986	130,986	143,069	156,089	172,114
유치원 이용률	(22.6)	(28.7)	(29.3)	(30.3)	(32.9)	(36.2)
어린이집이용아수	243,264	272,034	259,112	255,786	265,338	253,294
어린이집 이용률	(49.3)	(58.3)	(58.1)	(54.2)	(55.9)	(53.3)
전체기관이용아수	354,746	406,020	390,098	398,855	421,417	425,408
전체 이용률	(71.9)	(87.0)	(87.4)	(84.5)	(88.7)	(89.5)

자료: 2010년 수치;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18.
 2011년 수치;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2년 수치;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5.
 2013년 수치;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4년 수치;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49.
 2015년 수치;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2) 만 4세아

만 4세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이용률이 감소하였지만, 2010년 80.8%에서 2015년에는 90.8%로 지난 6년 동안 약 10%가 상승하였다. 기관종류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 모두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3-10 참조).

〈표 II-3-10〉 만 4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0~2015)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만 4세아 수	448,200	494,388	467,432	447,055	472,731	473,120
유치원이용아수	181,441	196,602	229,911	233,926	228,129	249,197
유치원 이용률	(40.5)	(39.8)	(49.2)	(52.3)	(48.3)	(52.7)
어린이집이용아수	180,542	182,999	194,413	184,513	177,014	180,249
어린이집 이용률	(49.3)	(37.0)	(41.6)	(41.3)	(37.4)	(38.1)
전체기관이용아수	361,983	379,601	424,324	418,439	405,143	429,446
전체 이용률	(80.8)	(76.8)	(90.8)	(93.6)	(85.7)	(90.8)

자료: 2010년 수치;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18.

2011년 수치;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2년 수치;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5.
 2013년 수치;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4년 수치; 유혜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49.
 2015년 수치;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3) 만 5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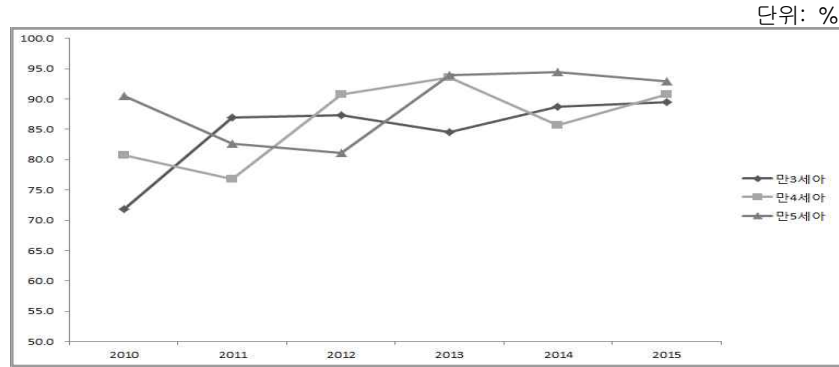
만 5세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0년 90.5%에서 2012년 81.1%까지 감소했다가 201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92.9%로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는 지난 6년 동안 만 5세아의 기관 이용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1 참조).

〈표 II-3-11〉 만 5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0~2015)

구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만 5세아 수	435,281	448,774	494,810	467,935	447,531	447,817
유치원이용아수	244,654	233,724	251,897	277,826	267,576	261,242
유치원 이용률	(56.2)	(52.1)	(50.9)	(59.4)	(59.8)	(58.3)
어린이집이용아수	149,278	137,349	149,522	161,877	155,510	154,674
어린이집 이용률	(34.3)	(30.6)	(30.2)	(34.6)	(34.7)	(34.5)
전체 기관이용아수	393,932	371,073	401,419	439,703	423,086	415,916
전체 이용률	(90.5)	(82.7)	(81.1)	(94.0)	(94.5)	(92.9)

자료: 2010년 수치;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18.
 2011년 수치;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2년 수치;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5.
 2013년 수치;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4년 수치; 유혜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49.
 2015년 수치;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누리과정 도입을 기점으로 만 3세, 4세, 5세아의 기관 이용률은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만 3세는 어린이집 취원율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만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유치원 취원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만 4세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시점인 2013년부터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료: <표 II-3-9>, <표 II-3-10>, <표 II-3-11> 의 전체 기관 이용률

[그림 II-3-1] 만 3~5세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0~2015)

라. 국공립 기관 이용 유아수 변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할 때,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정책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급률 및 이용률을 알아보았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12>와 같다. 2015년 만 0~5세 인구수는 2,739,901명으로 2010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처음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2011년에는 공급율 5.7%, 이용률 5.2%이었으나 2012년에는 각각 5.8%, 5.3%로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는 6.9%, 6.0%로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2010년 89.5%에서 2012년 91.9%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87.9%로 나타났다.

<표 II-3-12>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및 이용률(2010~2015)

구분	0~5세 인구수(a)	정원(b)	현원(c)	단위: 명, %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 충족률 (c/b)
2015	2,739,901	188,661	165,743	6.9	6.0	87.9
2014	2,741,835	179,939	159,241	6.6	5.8	88.5

(표 II-3-12 계속)

구분	0~5세 인구수(a)	정원(b)	현원(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 충족률 (c/b)
2013	2,769,255	170,050	154,465	6.1	5.6	90.8
2012	2,816,103	162,926	149,677	5.8	5.3	91.9
2011	2,777,209	157,478	143,035	5.7	5.2	90.8
2010	2,734,976	153,792	137,604	5.6	5.0	89.5

자료: 2010년 수치;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17.
 2011년 수치;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9.
 2012년 수치;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4.
 2013년 수치;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6.
 2014년 수치;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49.
 2015년 수치;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2015년 만 3~5세 유아 수는 1,437,355명으로 2010년 대비 60,422명 증가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수는 2010년 126,577명에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61,33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취원율도 증가하였지만, 2010년 9.2%에서 2015년 11.2%로 증가폭은 크지 않다(표 II-3-13 참조).

〈표 II-3-13〉 유아수 대비 국공립유치원 취원아 및 취원율(2010~2015)

단위: 명, %

구분	3~5세 인구수	취원아	취원율
2015	1,437,355	161,339	11.2
2014	1,395,194	148,269	10.6
2013	1,387,037	142,052	10.2
2012	1,408,498	127,347	9.0
2011	1,409,969	126,095	8.9
2010	1,376,933	126,577	9.2

자료: 2010년 수치;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30.
 2011년 수치;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34.
 2012년 수치;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013년 수치;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30.
 2014년 수치;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5.
 2015년 수치;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chedu.ac.kr/index>, 검색일 2016. 5. 26.

Ⅲ.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본 장에서는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유관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육아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고,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의 BSC 균형적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정책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도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누리과정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으므로 그동안 유아교육·보육 학계에서 수행한 지표 개발 연구와 누리과정 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가. 지표 개발 선행연구

1) 육아정책 연구소

가) 한국 육아지표(장명림 외, 2007)

장명림 외(2007)는 우리나라의 육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아동의 복지 측면과 유아 교육·보육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육아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지표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 및 통합적 유아교육·보육지표를 마련하며,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장명림 외, 2007: 72). 또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 제시하고, 규범적 성격과 기술적인 성격의 지표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양적인 지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지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장명림 외, 2007: 72)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장명림 외, 2007: 73)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 개발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기초, 유아교육·보육, 영유아복지·자녀양육 분야로 구성된 총 110개의 육아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각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식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보육과 관련된 기초 지표, 유아교육 및 보육 지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한국 육아지표(장명림 외, 2007)

영역	항목	지표
기초 지표	영유아 인구 및 양육현황	합계출산율, 0·5세 영유아 인구 비율,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의 형태별 비율, 영유아의 양육형태, 0·5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기관 현황	유치원·보육시설 취원율, 설립유형별 기관 비율, 국가수준의 기관평가(인증) 수임 기관 비율, 종일반 운영 기관 비율, 종일반 참여 유아 비율
	교직원 및 종사자	교원(종사자)의 연령·성별·학력·자격·경력별 구성 비율, 교사 1인당 영유아수, 연간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 연간 연수시간, 최저 임금 대비 교사의 급여 수준,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관 비율, 교직원 보험(연금) 가입 기관 비율, 퇴직금 지급 기관 비율
	물리적 환경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실외 놀이터 보유 기관 비율
	교육·보육 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 활용 기관 비율, 교육·보육 계획안 작성 비율,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체평가 실시 기관 비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비율,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보육 실시 기관 비율
	건강·안전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횟수,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영유아 상해 보험 가입 기관 비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질 높은 급·간식을 제공하는 기관 비율
	부모교육	부모교육·참여 실시 기관 비율,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비율
	교육·보육의 효과	영유아 신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언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인지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정서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사회성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도

(표 III-1-1계속)

영역	항목		지표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교육·보육의 효과	교직원	근무에 만족하는 교사 비율,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교사 비율
		가정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교사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기관장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육아비용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보육 비용		중앙정부 교육·여성가족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교육·보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개발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무상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차등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가정의 연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료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연간 유아교육·보육료 지출 비율 , 유아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모 분담 비율, 영유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자료: 장명립 외(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pp. 81-83.

나)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의 유아교육 지표(육아정책연구소, 2010~2012)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속과제로 수행된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지원 정책을 평가·분석하고, 당해 연도에 이슈가 된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지방교육청의 특수시책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유아교육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2)는 유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위해 교육재정, 교육환경, 교육인프라, 정책성 4개의 요소와 이에 따른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유아교육 지표를 구성하였다. 4개의 요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첫째 국가 수준에서 대표성이 있는 유아교육의 핵심 지표, 둘째 16개 시·도별 특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셋째 유아교육 정책 평가 및 개선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지표, 넷째 유아교육의 현황과 변화를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다섯째 유아교육 질적 수준의 제고를 지향하는 지표로 선정되었다(김은설 외, 2010: 22).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지표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표별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유아교육 현황을 제시하고, 전국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김은설 외,

2010: 21).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14)는 유아교육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교육비 지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평가, 교사 근무환경, 기타 인프라의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정책 지표를 선별·정리하고, 각 지표에 대한 통계치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지표 수치와 우리나라 수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김은영 외, 2011: 18).

권미경·김문정(2012)은 2010년, 2011년 ‘유아교육정책 성과와 과제’에서 설정한 지표를 일부 보완하여 마련한 유아교육 지표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유아교육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유아교육정책 성과와 과제’의(김은영 외, 2011)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운영으로, 기타 인프라를 유아교육지원체제로 지표 영역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각 영역의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지표 값을 산출하였다(권미경·김문정, 2012: 25).

〈표 III-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요 유아교육 지표(육아정책연구소, 2010~2012)

구분	지표 영역	세부 지표
김은설 외(2010)	교육재정	유아 1인당 교육예산, 5세 무상교육비 지원율, 차등교육비 지원율, 사립유치원당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분야 지원액, 종일반지원액 비율
	교육환경	교사 1인당 아동수, 학급당 유아수, 종일반 운영비율, 교사 1인당 연수지원액, 연구 및 자료개발 예산,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 4년제 대학졸업 교사 비율, 유아교육 전담장학사 수, 장학사당 담당 유치원 수
	교육인프라	유아교육진흥원 수,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수, 협력네트워크 운영현황, 유치원 정원 충족률
	정책성과	유치원 취원을 증가율,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종일반 이용률, 교육비 학부모 부담률
김은영 외(2011)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치원 학비 정부 부담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표 III-1-2 계속)

구분	지표 영역	세부 지표
김은영 외(2011)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 비율
	종일제 운영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종일제 교육 유아 비율,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비율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참여 비율
	교사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사 비율
	기타 인프라	유아교육 진흥원 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비율,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권미경 외(2012)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만3, 4, 5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 수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 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사 급여(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교사 비율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방과후 과정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유아교육지원 체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교육원 수,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유치원 비율

자료: 1) 김은설 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 22.

2) 김은영 외(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4.

3) 권미경 외(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5.

다)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과 평가 지표(육아정책연구소, 2010~2015)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는 2010년 이후부터의 보육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2013년도에 수립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6대 추진 과제’ 성과를 중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수행되어 온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의 성과 평가 지표를 정리하고,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고안하였다(유해미 외, 2015: 18). 새롭게 고안한 지표에 따라 보육정책의 추진 현황과 수요자 만족도 및 도움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정책 성과 평가 지표를 정리한 표는 <표 III-1-3>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새롭게 제

시한 2015년도 보육정책 성과 지표는 <표 III-1-4>와 같다.

<표 III-1-3> '2010~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과 평가 지표(유해미 외, 2015)

평가영역	평가지표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율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수당 지급 교사비율, 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근무환경개선비(0-4세), 누리과정 수당(5세)

자료: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

<표 III-1-4>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과 평가 지표(유해미 외, 2015)

평가영역	평가지표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 아동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 투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아동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 투입, 공급·이용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부모 양육비 부담 인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자녀 양육시 도움 정도
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 평가인증 유지율
	부모모니터링단	
	정보공시제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부모 인지도/도움 정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양성 관리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보육 교사 배치 현황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대비 대체인력 비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준	

(표 III-14 계속)

평가영역	평가지표	
부모 선택권 보장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 기관수, 부모인지도/도움정도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 보육 기관수/아동수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다문화 영유아 기관수/아동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기타	가정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 수준,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자료: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1.

라)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최은영 외, 2013)

최은영·최윤경·이경진·신은경(2013: 15)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모형을 제안하고, 공통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모형을 기존의 행정·관리 조직과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양 부처의 공통 업무 추진하는 방안인 '질 관리 체계 협력'과 공동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평가, 컨설팅, 연수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인 '질 관리 통합 체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최은영 외, 2013: 161). 또한 이러한 협력/통합 체계 모형을 통한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유치원 평가지표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요소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누리과정 영역과 운영관리 영역으로 구성된 공통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최은영 외, 2013: 163).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최은영 외, 2013)

영역	지표	평가항목
누리과정 영역	목표 설정	발달의 적합성, 유아·학부모·지역사회 요구 반영
	계획 수립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 연계, 다양한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
	활동 구성	자유선택활동 시간, 실외활동 시간
	일과의 통합적 운영	생활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적 운영, 활동 간의 균형
	교사의 상호작용	* 상호작용-관찰 자료
	교수법	활동에 적합한 방법과 매체 사용, 동기유발과 호기심 유도

(표 III-1-5 계속)

영역	지표	평가항목
운영관리 영역	교직원의 인사·복지	인사(근로계약서) 규정 준수, 보수·복지(복무)규정 준수
	교직원의 교육	연수 기회 제공, 연수비용 및 시간 지원
	원장의 리더십	교직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및 공유, 자체 평가 내실화, 운영 개선 노력
	교사대 유아 비율	법정기준 또는 시·도별 허용 비율 준수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예결산서 작성 및 공개, 예산 편성 및 지출 타당성, 기타 경비 관련 규정 준수
	가정 연계	가정과의 의사소통,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기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자료: 최은영 외(2013).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179-180.

2) 육아정책연구소 외

가) 유아교육 지표(나정·장명림, 2001)

나정·장명림(2001: 123-127)의 연구는 유아교육 관련 지표에 대한 초기 연구로 투입, 과정, 산출, 배경 영역의 교육체제 접근 모형을 적용하여 유아교육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유아교육 지표는 4개 영역, 14개 요소의 8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나정·장명림, 2001: 123-127), 측정 기준 및 지표는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유아교육 지표(나정·장명림, 2001)

모형	영역	요소	지표
투입	인적 자원	유아	연령별 유아수, 성별 유아수, 유아교육 시작 연령, 장애아 비율
		교직원	유아교육 교원의 자격·경력·학력별 구성비율, 유아교육 기관장의 자격증 소지 기관 비율, 유아교육 교원 1인당 유아수, 주당 근무시간, 연간 근무일수, 연평균 연수 시간
	물리적 환경	기관/학급	유아교육 기관 당 학급수 및 유아 수, 유아교육 기관의 학급당 유아수
		공간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 1인당 교지 면적, 교사 면적 및 교실 면적

(표 III-1-6 계속)

모형	영역	요소	지표
투입	재정	공교육비	정부 교육·복지 예산 대비 유아교육 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 예산 대비 유아교육 예산 비율, 초등교육비 대비 유아 공교육비 비율, 유아 1인당 공교육비, 무상교육 수혜 유아비율, 유아교육비 연말 소득공제액 증가율, 법인 유아교육기관 지원 예산 증가율
		사교육비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 납입금액, 가구당 연평균 유아교육비 지출율
과정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	국가 교육과정 활용 유아교육 기관 비율, 교사용 지침서 활용 유아교육 기관 비율, 교육계획안 활용 유아교육 기관 비율, 주제중심 통합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기관 비율, 장애아 통합 교육 실시 유아교육 기관 비율
		교육방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는 유아교육 기관 비율, 교육활동을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 기관 비율, 교사가 유아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아교육 기관 비율
	기관운영	유아교육 기관의 연간 실제 운영 일수, 유아교육 기관의 주당 수업/운영 시간, 기관 자체 평가 실시 유아교육 기관 비율, 교원 인사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교원 비율, 예결산 공개 유아교육 기관 비율, 정기적으로 시설·설비 점검을 하는 유아교육 기관 비율, 학부모가 유아교육 기관의 학습 보조교사로서 참여하는 유아교육 기관 비율	
	행정지도	장학지도 수혜 유아교육 기관 비율, 유아교육 행정 담당자 중 전공자 비율	
산출	유아에 대한 효과	교육기회	유아교육 수혜율, 초등1년생의 유아교육 경험자 비율 , 유아의 평균 교육 연수
		발달	유아의 신체,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 정도
		안전·적응	유아교육 기관의 연간 평균 안전사고 발생 건수, 초등학교 적응도,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교직원에 대한 효과	재직	유아교육 교사의 유아교육 기관 당 평균 재직 연수, 유아교육 교사의 이직률
		급여	GNP 대비 교원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비율, 공립교원 대비 사립교원의 연평균 급여액 비율
	만족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유아교육 교사 비율, 근무 부담 원인이 잡무라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교사 비율	

(표 III-1-6 계속)

모형	영역	요소	지표
산출	가정에 대한 효과		유아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학부모 비율, 유아교육 기관의 운영시간·운영 일수에 대하여 만족하는 학부모 비율,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교육 관련 정보 제공 기능에 만족하는 학부모 비율, 가계지출 중 유아 1인당 사교육비 비율
	사회에 대한 효과		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취업 증가율, 비행 청소년 발생률
배경	가족배경		유아의 가족 형태별 구성비, 가족 평균 소득, 부모 평균 교육 연수, 저소득층 가구 비율, 1일 평균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 1일 평균 부모와 유아의 놀이 시간
	인구구조		0-5세 유아 인구 비율, 장애아 출현율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 희망률, 국민의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 정도, 자녀를 유아교육 기관에 취원시키는 목적, 유아교육 기관 선택 이유
	국가배경		1인당 국민 총 생산, 국민 평균 교육 연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자료: 나정·장명림(2001). 유아교육 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pp. 124-127.

나) 영유아 보육정책 지표(권기성·강영욱, 2006)

권기성·강영욱(2006: 28)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대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현행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의 기준에 입각한 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는데(권기성·강영욱, 2006: 29, 39),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측정 기준 및 지표는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모형(권기성·강영욱, 2006)

평가기준	측정기준	측정치표
능률성	투입재원 대비 수혜대상자의 범위	취원 아동수비/공공(중앙, 지방정부) 보육예산, 취원 아동수비/보호자부담액
	투입인원 대비 취원 영유아의 수	취원 아동수비/교사수, 취원 아동수비/시설종사자수
효과성	취원 대상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 증가	취원아동 확대 정도, 교사대 적정 아동수의 질적 향상도

(표 III-1-7 계속)

평가기준	측정기준	측정치표
효과성	보호자의 활동 원활성	보호자 경제활동 참가율, 보호자 사회활동 참여율
형평성	지역별, 계층별 수혜대상자의 범위	지역별 취원율, 계층별 취원율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실직 혜택정도	취원자수 대비 소득증가률, 취원자수 대비 보육부담 경감율
대응성	수혜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정부의 재정 대응성, 보호자 재정 대응성
	지역별, 계층별 차별화 대응성	지역별 서비스 차별화, 소득계층별 재원차별화

자료: 권기성·강영욱(2006).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3(1), 57-53. p. 40.

다) OECD 교육지표(OECD, 201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는 국가간 교육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국제교육통계 자료로 1992년부터 교육지표사업(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INES)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김관복 외, 2015: 17).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이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도 OECD 교육지표는 다음 <표 III-1-8>과 같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연령별 유아 및 초등교육 취학률, 교사 대 유아 비율,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등이 있다.

<표 III-1-8> OECD 교육지표(OECD, 2015)

구분	측정치표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성인의 교육 이수, 후기중등교육 이수, 고등교육 이수, 부모의 학력이 고등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학력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투자에 대한 동기, 교육의 사회적 성과, 노동과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노동에서의 성장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공교육비, 총 정부부담 공교육비, 고등교육단계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교육 서비스와 재원별 교육비 지출, 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III-1-8 계속)

구분	측정지표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와 발달	교육 참여자, 유아교육 체제, 고등교육 입학, 해외 유학생과 체류 국가,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15-29세), 성인의 교육 및 학습 참여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학생의 수업시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급여, 교사의 수업시간, 교사, 학습 환경에 대한 평가, 교사 평가, 교과과정에서의 정보 및 기술

자료: OEDD 홈페이지(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5_ea-g-2015-en#page7. 검색일: 2016. 3. 15.

나. 누리과정 정책 분석 선행연구

박은혜·신은수(2012)는 누리과정의 재정구조를 재정지원 주체, 대상, 단가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이 유아교육의 공교육제도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정지원 주체, 의무성)을 가지고,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며(재정지원 대상, 공공성)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12년 월 20만원에서 2016년에 30만원까지(재정지원 단가, 무상성)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공교육의 기본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아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상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산출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본과정이라는 누리과정의 성격규명에 따른 표준교육비 산출(누리과정 지원액의 적정성), 유치원 교원의 자격관리 강화와 인건비 체계 개선, 사립유치원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추후과제로 제시하였다.

나정(2014)은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유아무상교육·보육)을 사회정의,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정의는 공교육화, 공보육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과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며 규범적 차원은 선별적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 가치추구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구조적 특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했다는 것이며, 구성적 특징은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통과정 적용시간과 교사 학력, 표준교육비와 보육료에 미치는 못하는 누리과정 지원액, 지방재정교부금의 사용문제, 공

공재정이 투입 증가에 따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누리과정은 기회균등이란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과정에서의 균등 실현과 안정적 재원확보 및 법적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나정, 2014: 49).

김아름(2015)은 보육정책 관련 입법체계와 함께,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중 누리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유아의 보육료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교육감에게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으며(김아름, 2015: 146),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무상교육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시행령에서 그 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이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김아름, 2015: 148). 끝으로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 경비를 지정한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자율권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았다(김아름, 2015: 149).

이윤진·이규립·조아라(2015) 연구는 앞서 박은혜·신은수(2012) 연구와 나정(2014)의 주장과 달리,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기관에 내는 비용이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규명하면서 누리과정 정책이 무상교육·보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추가 비용이 가장 많고 2013년 대비 2014년의 비용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연구결과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박은혜·신은수(2012)와 나정(2014)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최은영(2016)은 선행연구와 교육부의 내부자료 및 국제 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시행 이후의 유아교육재정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누리과정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재정 지원 주체 설정, 재정 배분방식 검토, 비용지원 체계의 재설정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누리과정 정책 시행은 생애출발선을 보장하고 공교육·보육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누리과정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액의 적절성, 기본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적용시간,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공공재정이 투입 증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강화, 교사학력과 처우개선 등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알 수 있다.

2. 정책성과 분석틀로서의 BSC 모델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을 위한 분석틀로 BSC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의 특징과 적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가. BSC 모델의 특징

누리과정 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분석틀로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를 이용하고자 한다. BSC 모델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성과측정의 도구이자 전략관리의 도구이다(김용훈·오영균, 2006: 262).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재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고객(customer), 내부프로세스(internal process), 학습 및 성장(learning and growth)을 포함한 비재무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균형있게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윤수재·김길수·장은숙, 2005: 3, Kaplan & Norton, 1996: 39).

BSC 모델은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 조직을 하나의 성과 단위로 보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주로 쓰이지만, 이 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틀로서 응용하고자 한다. BSC 모델은 다차원적인 관점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일 수 있는 기업의 임무와 비전을 측정 가능한 단계들 즉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 지표들로 구체화시키고,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으로 파악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노화준, 2008: 179). 다시 말하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BSC 모형의 사용으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성과를 단기적 결과로만 파악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까지도 성과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 미션과 전략을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Kaplan & Norton, 1996: 37). 다음에서는 BSC 모델의 개발 과정, BSC 모델의 기본적인 네 가지 관점, 그리고 BSC 모델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 BSC 모델 개발과정

BSC 모델을 조직의 운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BSC 모델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BSC 모델을 이용할 때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하위 목표들을 설정하는 지에 대한 조직차원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것이다.

BSC 모델에 장기적인 미션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BSC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다. 비전은 BSC 모델 가장 상위 단계에 위치하며,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조직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전체 조직을 조직이 지향하는 상태로 이끌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Olve, Roy, & Wetter, 1999: 41).

BSC 모델에서 비전은 대개 4개의 관점으로 나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점은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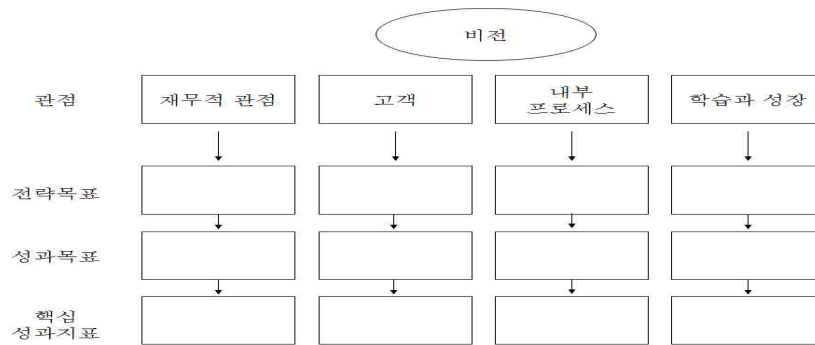
관점의 하위에는 전략적 목표가 존재한다. 전략적 목표는 조직이 다른 조직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각 관점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를 말하며, 이는 정책의 궁극적 비전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송기창 외, 2012: 3). 그 하위의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목표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하며, 이를 통해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송기창 외, 2012: 4). 앞서 설명한 단계적 목표 설정의 개념을 [그림 III-2-1]에 나타내었다.

다. BSC 모델의 4개 관점

1) 재무적 관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무적 관점은 전통적인 기업 성과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관점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수익, 판매 성장률 등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석재·이유태, 2001: 7). 수익 창출에 존재 목적이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BSC 모델에서는 다른 관점들의 결과가 재무적

인 성과와도 상호적으로 연관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적인 관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자료: 1) Kaplan, R. S., & Norton, D. P.(1993). Putting the balnaced scorecard to ork. Harvard Business Review 71,(5), 134-147, p. 140.
 2) Olve, N., Roy, J., & Wetter, M.(1999). A practical guide to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performance drivers. John Willey. p. 42.

[그림 III-2-1] BSC 모델의 구성요소

2) 고객 관점

고객의 관점은 기업이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다가갈 것이며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고객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이므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내고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Kaplan & Norton, 199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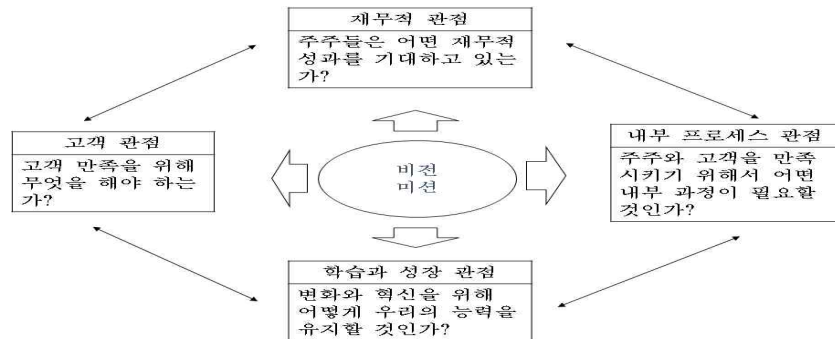
3) 내부프로세스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어떤 과정이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 및 구성원의 역량을 규명하는 것이 이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객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우 정책 내용의 수행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어떤 고객들의 요구가 필요한지를 분석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예로는 경우, 정부정책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내부 노력, 정책 전달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등이 해당된다(윤수재 외, 2005: 28-29).

4) 학습과 성장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은 현재에 성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포함한다. 이 관점에서는 민간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만족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유지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유지시키는지를 포함한다. 이는 기업이 어떤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을 미래 발전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Olve, Roy, & Wetter, 1999: 65). 즉,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역량, 정보시스템의 역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석재·이유탉, 2001).

다음 [그림 III-2-2]에서는 Kaplan과 Norton(1996: 39)에서 BSC 모델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비전에서 전략으로 옮길 때 각 관점에 대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을 질문으로 나타내었다.



- 자료: 1) Kaplan, R. S., & Norton, D. P.(1996).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74(1), 75-85, p.77.
 2) 윤수재 외(2005). 정부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BSC 모델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p. 23.

[그림 III-2-2] BSC 모델의 4개 관점

라. 공공부문에서의 BSC의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적 성과 이외의 비재무적 성과 부분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처음 도입되어 사용되

었다. 그러나 재무적 성과가 불분명하며, 고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 재무적 성과 이외에 조직의 내부 과정, 직원들의 지식 역량, 고객 만족도 등의 비재무적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에, 공공부문에서의 BSC의 활용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BSC 도입율은 점차 높아져 공공분야의 BSC 도입률이 민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행정자치부 외, 2005; 윤수재 외,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BSC 모델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BSC 모델을 이용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는 조직의 목표, 고객의 정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책 성과분석의 틀로 BS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관점에서의 공공부문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재무적 관점

공공부문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성과 결과로서의 재무적인 관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재무적 관점은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김용훈·오영균, 2006: 251). 정책 수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영에 따라 정책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처의 효율성,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포함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윤수재 외, 2005: 29).

2) 고객 관점

BSC는 민간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다르게 작용하여, 고객의 중요성이 재무적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공공부문에서의 고객은 기관의 정책, 서비스를 직접 받는 국민이며, 민간기업과는 달리 고객, 즉 국민이 수혜자이자인 동시에 평가자이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특정 정책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정책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정책을 어떻게 알리고, 이해시키는지, 정책을 유지시키려는 노력 등이 공공부문에서의 고객관점이 지녀야 할 부분이다(한국생산성본부, 1999; 윤수재 외, 2005: 29에서 재인용).

3) 내부프로세스 관점

공공부문의 내부프로세스는 업무 수행 및 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행정과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 공공부문의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을 정책 운영에 적용하면,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노력, 국민 입장에서의 정책 실행을 위한 서비스 구축, 주요 정책 업무 수행시간 등이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내부프로세스 관점에 해당하겠다(윤수재 외, 2005: 28).

4) 학습과 성장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는 구성원의 역량, 정보 시스템의 역량이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정책 유지를 위한 노력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음 <표 III-2-1>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표 III-2-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중요요소별 비교

구분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목적	단기적 이윤 극대화 추구	복잡하고 불명확한 공익 추구 목표가 장기적이고 다원적임	
관점	재무	수익이 조직의 최종적 성과 높은 투자 이익 추구	재무적 요소가 비용으로 작용 효율적 자원 활용 추구
	고객	고객욕구 충족 중시	고객목표 성취 중시
	내부 프로세스	업무처리 최적화 지속적인 업무향상	업무처리의 효율성 행정업무의 향상
	학습과 성장	정보기술 · 생산성 향상 정보기술 활용	

자료: Eickelman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alanced Scorecard as Applied in Government and Industry Organ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John Wiley & Sons. Inc. 2001, pp. 253-268; 배경화 · 김성일(2007). BSC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연구. p. 20에서 재인용.

마. 공공부문에서의 BSC 모델

BSC 모델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들은 정부조직 및 비영리조직 등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BSC 모델은 민간기업에서의 적용되는 BSC와는 관점의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BSC를 처음 제안하였던 Kaplan & Norton(2003)은 그들의 저서에서, 민간부문 조직과 공공부문 조직의 경우 각 관점의 역할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Kaplan & Norton(2003)이 제시하는 민간부문 조직과 공공부문 조

직에서 가장 다르게 적용되는 관점은 재무관점인데, 이 모델에서는 재무관점을 ‘수탁자관점’이라 칭하고, 기업의 주주가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닌 납세자들 또는 재정기부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한다(김용훈·오영균, 2006: 252 재인용).

Olve, Roy, & Wetter(1999)는 BSC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네 가지 관점이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게 더욱 적절하게 변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Olve et al(1999)는 관점별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았다. 즉, 재무적인 관점을 과거 지향적인 관점, 고객관점과 내부프로세스 관점을 현재의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규정하고, BSC 모델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네 관점 즉,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및 학습 및 성장 관점을 각각 성과 관점(performance focus), 관계 관점(relationship focus), 활동 관점(activity focus), 미래 관점(future focus)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Olve et al., 1999: 305).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최종적인 목표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서비스를 공공을 위한 공익이므로, 실제 성과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국민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서 관계적 초점을 중시하였다. 셋째, 내부프로세스를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미래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미래초점으로 해석하였다.

바. 공공부문에서의 BSC 모델 적용사례

정책 및 공공사업 분석하기 위한 성과관리방법으로서 BSC 모델을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마다 적용되는 관점이 다르며, 분석 대상의 상황에 맞게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석재·이유탉(2001)은 사례 분석에서 BSC 모델을 이용한 특허넷 시스템 구축사업 평가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재무적 관점을 행정성과 기여 관점으로 이해하였다. 공공부문에서도 재무적 성공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무적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하므로(이석재·이유탉, 2001: 46), 행정성과 기여관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고객관점은 그대로,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정보시스템 관점으로, 학습과 성장 관점은 정보화 역량강화 관점으로 변경하

여, 관점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천무영(2010)은 학교 정보화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BSC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도출된 BSC 모델은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을 각각 결과 관점, 고객 관점, 과정 관점, 기반 관점으로 정하고 평가하였다. 천무영(2010: 50-54)은 학교정보화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관리 모형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영역 및 관점을 정리하고 그 중 결과, 고객, 과정, 기반의 영역을 선택, 적용하여, 델파이 조사를 통해 관점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받은 후 관점을 설정하였다.

배경화·김성일(2007)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관점을 성과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혁신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관점에 대한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별 중요도, 성과지표별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적으로 지표를 평가할 때 가중치를 반영하였다(배경화·김성일, 2007: 72).

이처럼 BSC 모델은 공공부문의 사업평가 및 정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공공부문의 BSC 모델에서는 재무적 관점이 성과 위주의 관점으로 대체되기도 하며(Olve et al., 1999),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재무적 관점을 성과 위주의 관점으로 적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 및 정책에 맞는 융통성 있는 관점의 설정이 가능하다.

〈표 III-2-2〉 BSC 모델을 활용한 공공부문 평가 사례

연구자	평가 사업	수정된 BSC 모델의 관점	각 관점의 전략목표
이석재·이유태(2001)	특허넷 시스템 구축사업	행정과 기여 관점	-임무수행의 효과성 제고 -특허행정의 능률성 -비용의 절감
		고객 관점	-고객의 만족 -고객 요구사항 수렴
		정보시스템 관점	-개발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품질 향상 -표준화된 정보기술기반 유지
		정보역량 강화 관점	-시스템 활용의 확산
천무영(2010)	학교 정보화사업	결과	-e-교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e-교육행정지원체제 고도화

(표 III-2-2 계속)

연구자	평가 사업	수정된 BSC 모델의 관점	각 관점의 전략목표
천무영 (2010)	학교 정보화사업	고객	-고객만족도 제고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과정	-학교정보화 품질 향상
		기반	-효율적 학교정보화 환경구축 -인적자원의 전문성 신장
배성화· 김성일 (2007)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화 시범사업	성과	-시범사업의 성과지수 향상 -시범사업 지원실적 강화
		고객	-입주기업경쟁력지수제고 -시범사업 만족도 제고 -시범사업목표 달성도 제고 -국민경제 발전 기여
		프로세스 혁신	-시범사업의 홍보역량 강화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고 -사업진행 역량강화 -세부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학습과 성장	-관계기관간의 협의능력 향상 -정책수립의 적정성 강화 -자원배분의 적정성 확보 -재원확보의 안정성 강화

자료: 1) 배성화·김성일(2007).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p. 66.
 2) 이석재·이유태(2001).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평가를 위한 BSC 모형. 서울: 한국전산원. p. 56.
 3) 천무영(2010). 학교정보화사업의 BSC 평가모형 개발과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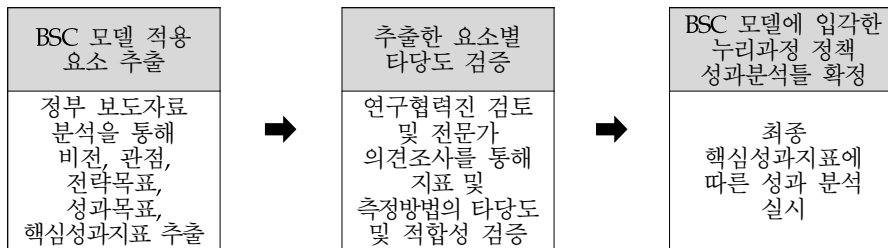
3.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본 절에서는 누리과정 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BSC 모델에 입각하여 비전, 4개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KPI) 등의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가.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과정

일반적으로 BSC 모델을 활용한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과정은 다음 [그림 III-3-1]과 같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누리과정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진은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비전, 관점,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를 추출하였다. 이를 연구협력진의 검토를 거친 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지표의 타당도 및 적합성을 검증하고, 연구진이 검증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을 다시 연구협력진이 검토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성과지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나온 양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연구협력진과 검토한 후, 최종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주: 보도자료가 요소 추출에 주된 원천이지만 기타 자료(신문기사, 사설 등)를 활용함.
 자료: 천무영(2010). 학교정보화사업의 BSC 평가모형 개발과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p. 53 그림을 변용함.

[그림 III-3-1] BSC 모형 개발과정 및 본 연구 적용

나. 누리과정 정책의 비전 추출

누리과정 정책은 「5세 누리과정」(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1. 5. 2)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2. 1. 18)으로 두 차례 나누어 도입이 공표되었다. 이에 각각에서 정책의 비전을 도출하였다. 비전의 정의에 따라 누리과정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분석한 결과, 「5세 누리과정」에서는 '국가 책무성 강화'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생애 출발선 평등 보장'을 비전으로 추출하였다.

당시 이들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1. 5. 2)이며, 추진계획 자료에서 도입 배경으로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1. 5. 2)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처음 보도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만 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이며 부제로 ‘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 비·보육료 지원’이 붙어 있다. 그러면서 5세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추진계획 자료에 도입배경 및 필요성으로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유아교육·보육 기회 보장 필요’(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2. 1. 18)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정책의 비전으로 ‘국가 책무성 강화’와 ‘생애 출발선 평등 보장’을 추출하였다.

다. 누리과정 관점 추출

BSC 모델의 4가지 관점인 고객, 재무,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을 용어를 변경하지 않고 누리과정 정책의 관점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고객 관점은 누리과정 정책의 수요자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학부모(가구)와 해당 유아로 설정한다. 재무적 관점은 누리과정의 예산(재정) 확보가 이에 해당된다.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누리과정 정책을 집행하는 제반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제정, 관련 법령 개정, 해설서 및 지침서 등 자료 발간, 교사연수 등 일련의 과정을 이 관점에서 다룬다.

학습과 성장 관점은 중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정책이 안착, 발전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기반 조성 및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가 해당된다.

라. 누리과정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추출

4개의 관점에 따라 중장기적인 전략목표와 단기적인 성과목표의 키워드를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표 III-3-1 참조). 최종 7개의 전략목표가 선정되었다. 관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 관점의 전략목표는 학부모와 유아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유아 입장에서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을 전략목표로 추출하였다.

학부모 입장의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는 ①지원대상 확대(종전의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 ②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③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보편적 지원을 도출하였다. 유아의 입장의 전략목표에 따른 ④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와 ⑤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도출하였다. 정리하면, 고객 관점의 전략목표는 2개, 성과지표는 5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둘째, 재무적 관점의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정 확보’이며 성과목표로는 ⑥재원의 충분성과 ⑦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등 2개를 추출하였다.

셋째,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 적절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는 ⑧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⑨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⑩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출하였다.

끝으로 학습과 성장 관점의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등 3개를 설정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의 성과목표로 ⑪법령 및 제정의 안정화를 도출하였다.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목표는 ⑫유아의 역량 강화와 ⑬교사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는 ⑭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능력 확보 ⑮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를 성과목표로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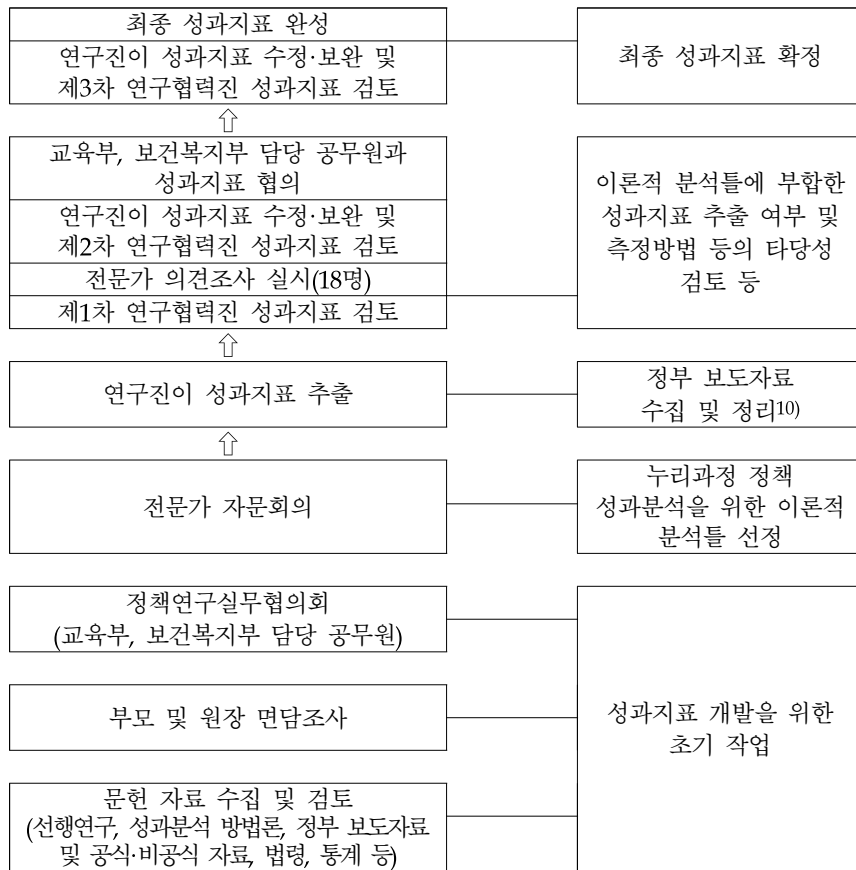
이로써 총 7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로 최종 선정되었다.

마. 누리과정 핵심성과지표 추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와 그 핵심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측정방법은 다음 <표 III-3-1>와 같다. 성과목표에 입각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연구진이 개발하고 연구협력진이 이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총 3회 거치면서 최종 29개의 핵심성과지표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18명)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유아교육, 보육, 교육행정, 교육재정,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전공자로 구성하였다. BSC 모델에 맞게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목표가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성과지표에서 추가 또는 삭제할 핵심성과목표는 무엇인지, 제시한 측정방법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질문을 구하였다. 결과, <표 III-3-1>에서처럼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적합보다 부적합이 높게 나온 일부 핵심성과지표는 삭제하였다. 단, 핵심성

과지표 중 “지원금 지불 방법의 간소화(카드 일원화)” 적합 비율이 부적합 보다 높게는 나왔으나 부적합으로 평가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최종 삭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29개 핵심성과지표를 최종 도출, 확정하였다. 다음 [그림 III-3-2] 은 본 연구에서 추진한 성과지표 개발, 협의절차, 최종 성과지표 확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9)



[그림 III-3-2]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들 개발 과정

9)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들 도출을 위한 단계별 과정은 부록 10 참조
10) 부록 1 참조

〈표 III-3-1〉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18인 전문가의 견조사 결과 반영

관점	비전	누리과정무성 강화, 생애출발선 평등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적합	부적합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기구 확대 (소득하위 70%→전계층)	연도별 누리과정 지원 수혜 유아수 비율 변화	83%	17%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감도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삭제) 기반에 지목하는 추가 비용 변화	89%	11%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운영지원비) 보편적 지원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삭제) 학부모 만족도	44%	56%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삭제)	61%	33%
세무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 보육 제공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정부 계획에 따른 유아 연령별 확대 현황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담당 교사의 자각·흡수 변화 (삭제) * 학습 및 성장 관점 교사의 역량강화/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과 충족된다는 의견 수용 삭제함	56%	44%
		재원의 증반성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67%	33%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누리과정 지원 단위 적절성	72%	22%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대비 제정 시행 여부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100%	0%
내부 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 의 적절성	누리과정 전담체계의 합리성	자원급·자불·방법의 간소화(카드·일원화) (삭제) * 부적합은 의견은 낮으나 연구협력진 회의에서 성과지표로 부적절하다고 최종 판단 삭제함 지방교육재정교무금으로 어림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의를 위한 상설기구(운영위) 설치 유무	61%	39%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지방교육재정교무금으로 어림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실적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다른 지표로서 연구협력진과 협의하여 추가함	39%

(표 III-3-1 계속)

비전		국가회무성 강화, 장애돌발신 대응				
관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적합	부적합	측정방법
내부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 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89%	11%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교사)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어린이집) 사용 지침 준수	72%	22%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학부모 교사), 면담조사(원장)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화 제도와	범형 및 재정의 안정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78%	22%	문헌(법령)
			누리과정 재정 일원화의 적절성	67%	28%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공무원)
	인사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이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78%	22%	문헌(실행연구)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78%	22%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교사, 공무원)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	89%	6%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교사, 공무원)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 정도	89%	11%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교사)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공립 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내용, 방법, 대상범주)	94%	6%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교사)
			공립단점유치원 신설 및 확충 증진	72%	22%	문헌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공립법정유치원 신설 및 확충 증진	67%	28%	문헌(통계자료)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72%	22%	문헌(실행연구) 및 설문조사(학부모, 교사, 공무원)	

자료: 1)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민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2)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29). '민5세 공동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3)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8. 13). 5세 누리과정 체정(안) 마련·민5세 누리과정 공청회 개최
 4)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
 5)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30).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6)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12. 14). 5세 누리과정 민4세, 민3세 확대·이 대동령 2012년도 교과부 업무보고서 지시
 7)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민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공동과정 적용
 8)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민3~4세에도 누리과정(공동과정) 도입 및 0~2세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9)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2. 2. 27).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IV.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BSC 모델의 고객, 재무,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4개 관점별로 누리과정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1. 고객 관점

이 절에서는 고객관점에서 누리과정 정책성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의 고객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자녀(유아)로 설정하고, 학부모와 유아의 입장에서 누리과정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정책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고객관점의 전략목표는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이며,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은 다음 <표 IV-1-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측정방법에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는 2016년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를 의미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 연구보고서는 문헌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매년 조사한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 연구보고서에서 비교 가능한 항목은 표에 제시하였으나 표집규모, 표집방법, 설문문항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1-1> 고객관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설문조사	문헌조사	면담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가구 확대 (소득하위 70%→전계층)	연도별 누리과정 지원 수혜 유아수 비율 변화	-	○	-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	학	○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학	○	-
	방과후 과정비 보편적 지원	학부모 만족도	학	○	학	

(표 IV-1-1 계속)

관점	전략 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설문 조사	문헌 조사	면담
고객	보편적이고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률 확대 현황	-	○	-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동과정의 질 향상	교	-	학, 교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교	○	-
			교사의 처우 현황(재직기간, 호봉, 근무시간 등)	교	-	-

주: 측정방법에서 학: 학부모, 공: 공무원, 교: 교사, 원: 원장을 뜻함.

가.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1) 지원 가구 확대

누리과정 정책 시행이전 2011년까지는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였다. 2012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만 5세 유아의 모든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만 3, 4세 유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음 <표 IV-1-2>에서는 누리과정 시행 전후 지원 유아수 확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시행이전), 누리과정 지원금(누리과정 시행이후)의 확대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연도별 누리과정 지원 유아수 비율

연도별 누리과정 지원 유아수 비율을 알아본 결과, 2012년 이전에는 소득 분위별로 지원하던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2012년 이후에는 전 소득층으로 확대된 현황을 확인하였다. 2012년(5세), 2013년(3, 4세) 연도별로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 되었으므로 연령별 변화와 함께 살펴보았다. 누리과정 정책 시행 2년 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의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 이용유아 수 대비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는 유아의 비율로 알아보았다. 다음 <표 IV-1-2>는 어린이

집 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 5세아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80% 초반의 지원율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는 100%(이상)로 확대되었다. 만 3, 4세아는 2012년까지는 60% 후반~70% 초반의 지원율에서 2013년 이후 99%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누리과정 도입 후 보육료 지원이 전체 원아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1-2> 연령별 어린이집 원아 보육료 지원율(2010-2015)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만3세	현원수	243,264	272,034	259,112	255,786	265,338	253,294
	지원수	162,554	196,531	185,173	254,383	263,520	251,154
	지원율	66.82	72.25	71.46	99.45	99.31	99.16
만4세	현원수	180,542	182,999	194,413	184,513	177,014	180,249
	지원수	124,337	133,908	142,523	183,494	175,742	178,733
	지원율	68.87	73.17	73.31	99.45	99.28	99.16
만5세* (만5세 이상)	현원수	149,278	137,349	149,522	161,877	155,510	147,278
	지원수	121,421	115,271	156,772	167,504	159,882	150,772
	지원율	81.34	83.93	104.85	103.48	102.81	102.37
총합	현원수	573,084	592,382	603,047	602,176	597,862	580,821
	지원수	408,312	445,710	484,468	605,381	599,144	580,659
	지원율	71.25	75.24	80.34	100.53	100.21	99.97

*주: 현원수는 만 5세, 지원수는 만 5세 이상(유급 등의 이유로 만 5세 이상의 아동이 지원을 받는 경우 포함)을 계산하였음.

- 자료: 1)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2). 2011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3). 2012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14). 2013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15). 2014 보육통계.
 6)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마찬가지로 다음 <표 IV-1-3>에서는 유치원 원아 유아학비 지원율을 나타내었는데, 만 5세는 2010년과 2011년에는 50% 후반의 유아학비 지원율을 보였으나, 2012년부터는 100%의 지원율로 나타났다. 만 3, 4세는 2012년까지는 40% 후반~60% 초반의 지원율을 나타내다가 2013년 이후부터는 99% 이상의 지원율을 보였다. 누리과정 정책 시행에 따라 연도별 누리과정비 수혜 유아의 비율은 만 5세는 2012년에, 만 3세, 4세는 2013년에 99% 이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원 가구 확대라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리과정 도입 전에는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비율(2011년 5세 기준 56.6%)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비율(2011년 5세 기준 83.9%)에 비해 17%정도 낮았기 때문에, 누리과정비를 지원받는 유아는 유치원 원아에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표 IV-1-2>와 <표 IV-1-3>에서 지원유아 비율이 100%가 초과한 이유는 자료 측정 시 현원 수는 만 5세 기준, 지원아동 수는 만 5세 이상의 지원유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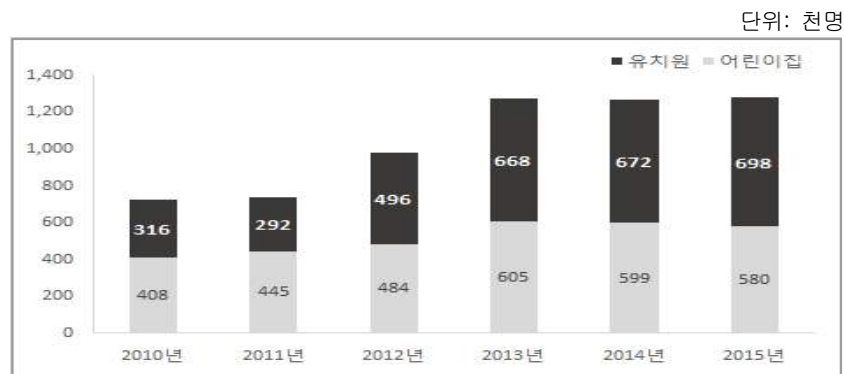
<표 IV-1-3> 연령별 유치원 원아 유아학비 지원율(2010-2015)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만3세	현원수	111,482	133,986	130,986	143,069	155,856
	지원수	68,972	63,565	77,164	142,154	157,224
	지원율	61.87	47.44	58.91	99.36	100.88
만4세	현원수	181,441	196,602	229,911	233,926	228,129
	지원수	107,210	96,939	125,675	239,084	237,250
	지원율	59.09	49.31	54.66	102.20	104.00
만5세	현원수	244,654	233,724	251,897	277,826	267,576
	지원수	140,254	132,363	293,557	287,057	277,777
	지원율	57.33	56.63	116.54	103.32	103.81
총합	현원수	537,577	564,312	612,794	654,821	651,561
	지원수	316,436	292,867	496,396	668,295	672,251
	지원율	58.86	51.90	81.01	102.06	103.18

- 자료: 1)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0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0&menuSeq=3894&publSeq=2&menuCd=33359&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 2)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1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1&menuSeq=3894&publSeq=2&menuCd=33910&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 3)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2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2&menuSeq=3894&publSeq=2&menuCd=34616&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 4)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3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3&menuSeq=3894&publSeq=2&menuCd=58970&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 5)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4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4&menuSeq=3894&publSeq=2&menuCd=62352&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 6)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5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menuCd=65932&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 7) 교육통계연구센터 내부자료(2016a). 연도별 만 3세 현원수.
- 8) 교육부 내부자료(2016a). 연도별 연령별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현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012년 이전과 이후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유아수의 증가를 도식화하였다(그림 IV-1-1 참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유아수가 2012년 이후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의 지원 원아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1]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아 수 추이변화(2010~2015)

2)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가) 유아 학부모의 기관 추가 지불 비용

2016년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니고 있는 기관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누리과정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들은 동일한 금액의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보편적 지원이란 정책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차이가 적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니고 있는 기관에 추가로 내는 기본비용,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방과후 과정비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기본비용

다음 <표 IV-1-4>에서 따르면, 2016년 현재 학부모들이 기관에 내는 추가 비

용은 월 평균은 약 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추가 수업료가 월 평균 약 3만원, 행사비 약 1만 1천원, 급·간식비 약 1만 6천원, 차량 운행비 약 1만원, 교재교구비가 약 1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4>와 [그림 IV-1-2]은 2014년과 2016년의 기관에 지불하는 월 평균 추가비용을 동일 항목에 대해 비교한 결과이다.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기본비용은 총액은 2014년 대비 2016년이 약 3천 8백원 정도 증가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장학습비 및 교재교구비가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도의 기관에 지불한 추가 기본비용 총계와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111,800원이었던 추가 기본비용이(만 5세만을 대상으로 조사) 2013년에는 62,984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66,447원, 2016년에 70,229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추가 기본비용은 약 4천원 정도 증가하였다. 누리과정 지원비가 2013년 이후 월 22만원으로 동결되었는데 기관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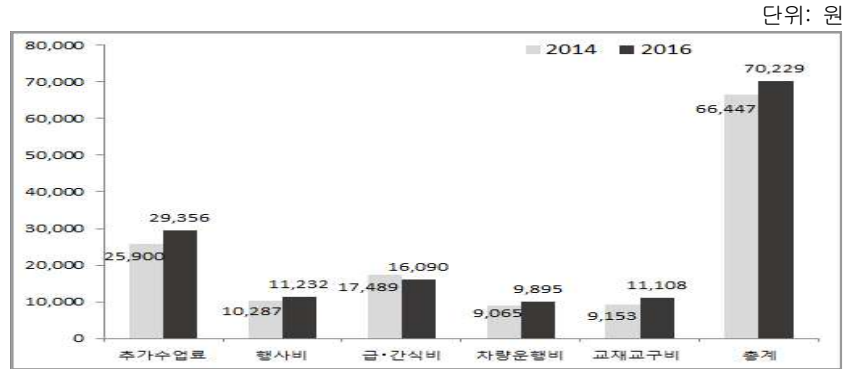
<표 IV-1-4> 2014·2016년 월 평균 추가 기본비용 변화

단위: 원(명)

구분	2014년 지불비용			2016년 지불비용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추가수업료	25,900	38,840	(1,924)	29,356	30,519	(927)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10,287	9,199	(1,886)	11,232	9,005	(914)
급·간식비	-	-	-	16,090	27,634	(860)
급식비	12,221	18,544	(1,619)	-	-	-
간식비	5,268	9,395	(1,567)	-	-	-
차량운행비	9,065	12,349	(1,707)	9,895	20,249	(831)
교재교구비	9,153	14,733	(1,648)	11,108	15,557	(834)
월평균 총계	66,447	58,653	(1,924)	70,229	62,466	(980)
2012년 총계				111,800	90,000	(1,605)
2013년 총계				62,984	59,915	(1,441)

- 주: 1) 추가수업료는 누리과정 지원 금액인 월 22만원(공립유치원 6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2) 위 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평균 수치는 각 세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례수에 대한 값으로 각 세부항목의 평균의 합과 월평균 총계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힘.
 3) 이용하지 않은 항목은 비해당, 무상 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85.



자료: <표 IV-14>를 도식화한 것임.

[그림 IV-1-2] 2014·2016년 월 평균 추가 기본비용 변화

기관에 내는 추가 기본비용은 기관종류 및 설립유형별로 격차가 컸다. 다음 <표 IV-1-5>에 따르면, 기관종류별로는 유치원이 월 평균 약 9만원, 어린이집이 약 5만원으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약 4만원 정도 월 추가비용이 많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월 평균 3만원 가량으로 가장 적었고, 국공립유치원,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순으로 추가비용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추가 기본비용은 기관종류보다는 설립유형별에 따른 차이가 더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국공립이나 사립이나에 따라 추가 비용 격차가 약 8만원 이상 났다(월 평균 추가비용 국공립유치원 약 3만 5천, 사립유치원은 약 11만원).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행사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3배 정도의 추가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간식비의 추가비용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린이집도 설립유형별 추가비용의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순으로 추가 비용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추가수업료와 급간식비에서 2~3배의 추가비용을 나타냈다.

정리해 보면, 동일한 비용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더라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내는 비용이 다르고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정책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IV-1-3]은 2014년과 2016년의 설립유형별 월 평균 추가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립유형별에 상관없이 추가로 내는 기본비용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동일), 설립유형별로 추가 비용의 액수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5〉 2016년 기관종류·설립유형별 월 평균 추가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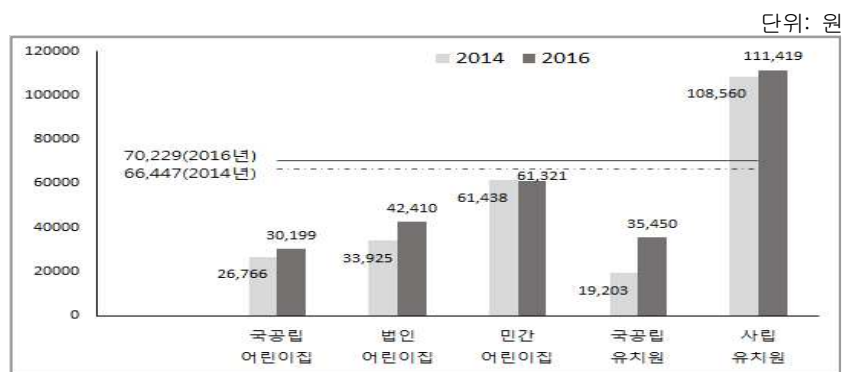
단위: 원(명)

구분	기관종류/설립유형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법인	민간	국공립	사립	
전체	70,229(2,466)					(980)
기관종류	50,229(39,425)			90,291(73,888)		(980)
<i>t/F</i>	112.11***					
추가수업료	8008(12,120)	17,248(22,624)	24,040(21,176)	13,634(20,751)	49,609(33,982)	(927)
행사비	10,968(6,715)	10,578(9,657)	12,107(9,038)	10,262(10,288)	11,166(8,954)	(914)
급간식비	5,051(9,137)	8,058(12,952)	13,866(23,713)	6,077(9,880)	26,916(36,261)	(860)
차량운행비	4,952(7,912)	6,114(8,891)	9,514(15,253)	3,208(6,219)	15,348(28,981)	(831)
교재교구비	4,290(6,078)	4,858(7,471)	8,468(10,145)	6,290(10,252)	18,500(20,348)	(834)
월평균 총계	30,199(21,277)	42,410(33,153)	61,321(43,170)	35,450(36,596)	111,419(73,793)	(980)
<i>t/F</i>	92.15***					
2014년	26,766	33,925	61,438	19,203	108,560	
월평균 총계	(27,832)	(36,885)	(42,187)	(30,334)	(61,305)	(1,924)

- 주: 1) 추가수업료는 누리과정지원 금액인 월 22만원(국립유치원 6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2)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평균 수치는 각 세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례수에 대한 값으로 각 세부항목의 평균의 합과 월평균 총계와는 차이가 있음.
 3) 이용하지 않은 항목은 비해당, 무상 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p. 86-87.

*** $p < .001$



자료: <표 IV-1-5>를 도식화한 것임.

[그림 IV-1-3] 2014·2016년 기관종류·설립유형별 월 평균 추가 비용 변화

(2)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이란 '외부 강사가 기관에 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원칙적으로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일주일 평균 이용 개수 및 비용을 살펴보았다.

2016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이용하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평균 개수는 2015년에 4.0개, 2016년에 4.1개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는 2015년, 2016년 모두 유치원 원아가 어린이집 원아보다 평균 0.5~0.6개 정도 더 많이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이 2015년 4.3개, 2016년 4.5개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년도 3.3개, 3.6개로 가장 적었다.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순으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연령별에 따라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의 차이를 보였다. 만 4, 5세 유아들이 만 3세 유아들보다 2015년에는 0.7~0.8개, 2016년에는 0.6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관종류별, 설립유형별, 자녀연령별에 따라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6〉 2015·2016년 일주일 평균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단위: 개, %(명)

구분	2015년				2016년			
	평균 개수	표준 편차	t/F	계	평균 개수	표준 편차	t/F	계
전체	4.0	2.3		100.0(514)	4.1	2.4		100.0(678)
기관종류								
유치원	4.3	2.3	1.00	100.0(271)	4.4	2.7	5.08*	100.0(344)
어린이집	3.7	2.1		100.0(243)	3.9	2.0		100.0(334)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1	2.2		100.0(81)	4.2	2.7		100.0(97)
사립유치원	4.3	2.4		100.0(190)	4.5	2.7		100.0(247)
국공립어린이집	3.3	1.6	3.11*	100.0(77)	3.6	1.6	2.68*	100.0(87)
법인어린이집	3.6	1.5		100.0(51)	4.0	1.7		100.0(59)
민간어린이집	4.0	2.6		100.0(115)	4.0	2.3		100.0(187)
자녀연령								
만 3세	3.4	1.6		100.0(113)	3.7	1.8		100.0(254)
만 4세	4.1	2.6	5.08**	100.0(182)	4.3	2.7	5.09**	100.0(244)
만 5세 이상	4.2	2.2		100.0(219)	4.3	2.5		100.0(229)

(표 IV-1-6 계속)

구분	2015년				2016년			
	평균 개수	표준 편차	<i>t/F</i>	계	평균 개수	표준 편차	<i>t/F</i>	계
2013년	2.64개(1,219)							
2014년	3.01개(1,794)							

주: 2015년의 결과는 2016년 조사 대상 학부모가 작년을 기준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개수와 비용을 기입한 것으로, 현재 이용기관과 나이에 차이가 있음.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3년,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89.

* $p < .05$, ** $p < .01$

다음 <표 IV-1-7>은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월 평균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평균은 2015년에 약 7만 3천원, 2016년에 약 7만 6천원으로 집계되어 약 3천원이 상승하였다.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은 기관종류별, 설립유형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자녀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관종류별로는 2015년, 2016년 모두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약 1만 1천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2015년 93,442원, 2016년 96,130원)이 가장 비싸고 민간어린이집(2015년 81,604원, 2016년 80,887원)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순으로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는 연령에 비례하여 비용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역시, 기본비용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상승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비용은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약 5.7%가 증가하였는데,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동일 기간 동안 약 33.6%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2014년 56,378원에서 2016년 75,545원).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유아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2015년 514명/1,000명, 2016년 678명/1,000명)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의 높은 상승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V-1-7〉 2015년·2016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원, %(명)

구분	2015년				2016년			
	평균 비용	표준 편차	t/F	계	평균 비용	표준 편차	t/F	계
전체	72,673	(65,085)		100.0(514)	75,545	(69,130)		100.0(678)
기관종류								
유치원	78,196	(74,288)	4.14*	100.0(271)	80,953	(83,694)	4.29*	100.0(344)
어린이집	66,530	(52,482)		100.0(243)	69,967	(49,348)		100.0(334)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2,598	(90,158)		100.0(81)	42,427	(106,120)		100.0(97)
사립유치원	93,442	(60,489)		100.0(190)	96,130	(67,440)		100.0(247)
국공립어린이집	55,295	(36,978)	13.96***	100.0(77)	57,835	(44,964)	15.51***	100.0(87)
법인어린이집	49,562	(54,016)		100.0(51)	53,287	(37,141)		100.0(59)
민간어린이집	81,604	(56,722)		100.0(115)	80,887	(52,015)		100.0(187)
자녀연령								
만 3세	69,253	(49,935)		100.0(113)	70,904	(47,554)		100.0(205)
만 4세	72,373	(61,505)	0.29	100.0(182)	77,816	(63,234)	0.68	100.0(244)
만 5세	74,665	(74,311)		100.0(219)	77,248	(88,4700)		100.0(229)
2013년	48,662원(1,219)							
2014년	56,378원(1,794)							

주: 1) 2015년의 결과는 2016년 조사 대상 학부모가 작년을 기준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개수와 비용을 기입한 것으로, 현재 이용기관과 나이에 차이가 있음.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89.

* $p < .05$, *** $p < .001$

다음 <표 IV-1-8>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관종류별, 설립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수 및 비용을 비교하였다.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 2013년, 2014년에는 법인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각 년도 3.1개, 3.3개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2.6개(2013년), 국공립유치원 2.6개(2013년)로 가장 적었다. 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사립유치원이 각 년도 4.3개, 4.5개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이 3.3개, 3.6개로 가장 적다. 그러나 2014년과 2016년도의 조사 표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의 한계는 있다.

또한 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기관들에서 비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도에는 국공립유치원 32,152원 사립유치원 54,290원으로 약 2만 2천원의 차이가 나던 특성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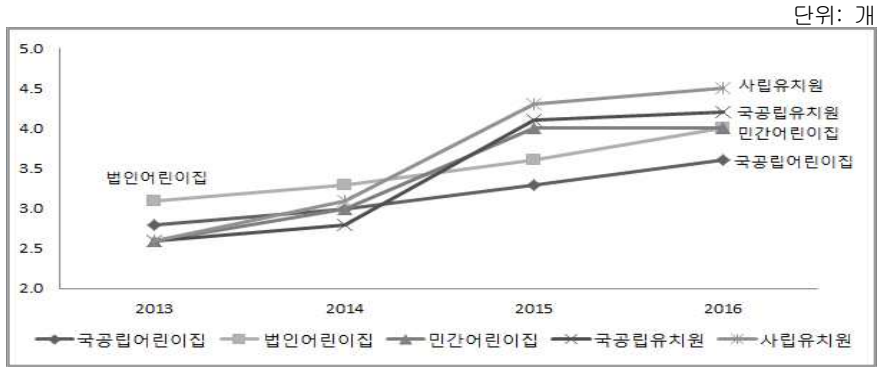
램 비용이, 2016년도에는 약 5만 4천원의 차이가 났다.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운영지원비가 유아 1인당 동일한 비용이 되고 있으나, 학부모가 추가로 지불하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이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면, 보편적 지원을 하더라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정부지원금(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할 것을(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b: 5) 권고하고 있으나, 개수와 비용 모두 증가하는 추이여서 누리과정 정책의 보편적 지원, 무상교육·보육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1-8〉 기관종류·설립유형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 및 비용 변화(2013~2016)
단위: 개, 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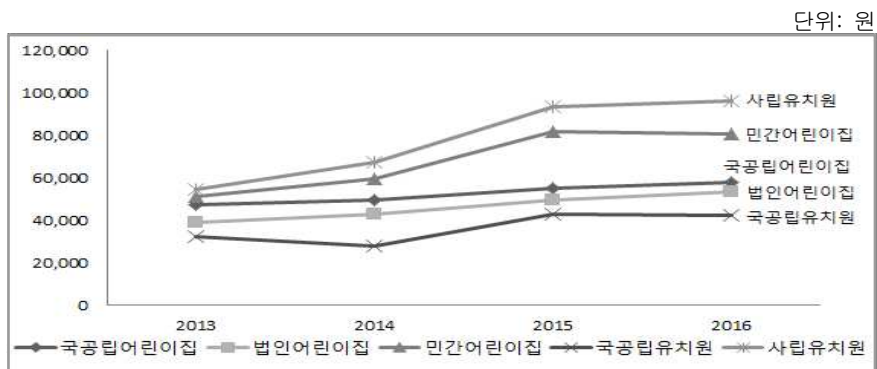
구분	기관종류/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표준원차)	법인 (표준원차)	민간 (표준원차)	사립수	국공립 (표준원차)	사립 (표준원차)	사립수	
2013	평균 개수	2.8(1.50)	3.1(1.30)	2.6(1.68)	(582)	2.6(1.63)	2.6(1.58)	(637)
	월평균 비용	47,061 (25,072)	38,729 (22,317)	51,361 (51,851)		32,152 (32,424)	54,290 (36,406)	
2014	평균 개수	3.0(1.39)	3.3(1.22)	3.0(1.43)	(927)	2.8(1.68)	3.1(1.61)	(867)
	월평균 비용	49,487 (24,232)	42,704 (22,536)	59,453 (30,120)		27,665 (34,761)	67,337 (37,683)	
2015	평균 개수	3.3(1.6)	3.6(1.5)	4.0(2.6)	(243)	4.1(2.2)	4.3(2.4)	(271)
	월평균 비용	55,295 (36,978)	49,562 (54,016)	81,604 (56,722)		42,598 (90,158)	93,442 (60,489)	
2016	평균 개수	3.6(1.6)	4.0(1.7)	4.0(2.3)	(334)	4.2(2.7)	4.5(2.7)	(344)
	월평균 비용	57,835 (20,768)	53,287 (30,204)	80,887 (42,115)		42,427 (36,346)	96,130 (72,081)	

주: 2013년, 2014년 평균 개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3년,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89.



자료: <표 IV-1-8>에서 평균 개수를 도식화한 것임.

[그림 IV-1-4] 연도별 기관 설립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수(2013~2016)



자료: <표 IV-1-8>에서 월 평균 비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IV-1-5] 기관 설립유형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변화(2013~2016)

(3) 사교육 개수와 비용 변화

한편, 기관에서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증가 현상은 만 3-5세 유아의 사교육 개수와 비용과 연관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지금은 방과후 과정비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 범위에 포함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누리과정과는 달리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교육과 연동해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대비 2016년의 사교육 개수는 0.4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변인

별로도 큰 차이 없이 0.3~0.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 사교육비 개수가 0.6개 증가한 것에 비해 감소된 수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표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IV-1-9〉 2015년·2016년 해당 자녀 이용 사교육 개수 변화

단위: 개(명)

구분	2015년			2016년			B-A
	평균 (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B)	표준 편차	사례수	
전체	0.6	0.9	(1,000)	1.0	1.1	(1,000)	0.4
기관종류							
유치원	0.7	1.0	(502)	1.1	1.1	(502)	0.4
어린이집	0.5	0.8	(498)	0.8	1.0	(498)	0.3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0.9	1.1	(142)	1.2	1.3	(142)	0.3
사립유치원	0.7	0.9	(360)	1.0	1.0	(360)	0.3
국공립어린이집	0.5	0.7	(128)	0.9	0.9	(128)	0.4
법인어린이집	0.6	0.8	(89)	0.9	0.9	(89)	0.3
민간어린이집	0.5	0.9	(281)	0.8	1.0	(281)	0.3
자녀연령							
만3세	0.4	0.8	(323)	0.7	0.7	(323)	0.3
만4세	0.6	0.9	(336)	1.0	1.0	(336)	0.4
만5세	0.9	1.0	(341)	1.2	1.2	(341)	0.3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0.3	0.6	(82)	0.6	0.9	(82)	0.3
250~300만원 미만	0.4	0.7	(159)	0.7	0.9	(159)	0.3
300~400만원 미만	0.6	0.9	(241)	1.0	1.0	(241)	0.4
400~500만원 미만	0.6	0.9	(235)	0.9	1.1	(235)	0.3
500만원 이상	0.9	1.1	(283)	1.2	1.2	(283)	0.3
지역규모							
대도시	0.7	1.0	(427)	1.0	1.1	(427)	0.4
중소도시	0.6	0.9	(422)	1.0	1.1	(422)	0.4
군지역	0.4	0.7	(151)	0.7	0.8	(151)	0.3
2013년 대비 2014년	0.5	0.8	(1,924)	1.1	1.0	(1,924)	0.6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4년: 이운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97.

사교육 개수 증가와 더불어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2만 6천원 가량 증가하였다. 증가폭은 2013년 대비 2014년과 비교해서 보면, 감소된 수치이지만 표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변인별로 보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유치원 중에서는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자녀연령별로는 만 4세가, 월 가구소득에서는 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가구에서 사교육비 증가폭이 컸다.

〈표 IV-1-10〉 2015년·2016년 해당 자녀 이용 사교육 비용 변화

단위: 원(명)

구분	2015년			2016년			B-A
	평균 (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B)	표준 편차	사례수	
전체	39,636	63,723	(1,000)	66,082	83,560	(1,000)	26,446
기관종류							
유치원	47,425	72,178	(502)	79,143	95,751	(502)	31,718
어린이집	31,798	52,819	(498)	52,939	66,720	(498)	21,141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4,563	80,691	(142)	82,575	100,977	(142)	28,012
사립유치원	44,610	68,447	(360)	77,790	93,721	(360)	33,180
국공립어린이집	34,023	54,163	(128)	59,391	71,862	(128)	25,368
법인어린이집	32,702	48,375	(89)	61,931	74,976	(89)	29,229
민간어린이집	30,497	53,683	(281)	47,148	60,939	(281)	16,651
자녀연령							
만 3세	24,373	49,151	(323)	41,414	61,454	(323)	17,040
만 4세	35,126	53,118	(336)	67,528	79,253	(336)	32,402
만 5세	58,536	79,141	(341)	88,023	98,423	(341)	29,487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18,555	41,375	(82)	39,707	62,262	(82)	21,152
250~300만원 미만	22,446	47,571	(159)	44,689	64,132	(159)	22,243
300~400만원 미만	37,103	54,896	(241)	66,529	77,801	(241)	29,426
400~500만원 미만	37,028	61,457	(235)	60,521	85,698	(235)	23,492
500만원 이상	59,716	78,820	(283)	89,974	94,931	(283)	30,257
지역규모							
대도시	44,202	62,017	(427)	70,476	85,841	(427)	26,275
중소도시	38,798	67,584	(422)	67,565	85,276	(422)	28,767
군지역	29,064	55,921	(151)	49,509	69,477	(151)	20,445
2013년 대비 2014년	27,834	52,675	(1,924)	63,812	67,446	(1,924)	35,979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99.

이처럼 연도별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올해 조사가 이전 조사에 비 사교육 개수와 비용이 감소한 사실을 해석해 보면, 유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사교육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본 연구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학원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자녀의 안전 면이나 비용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 요새는 한 4시에 (사교육을 위한)학원 차들이 와서 아이들을 픽업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는 하는데 뭐 저는 그래도 원에서 차타고 이동하는 게 불안해서 원에서 다 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있으면 기관 안에서 안심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싶은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이제 마음이 사고도 많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원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기관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추가로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누리과정 이용 부모 사례 7).

저는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5살 때도 영어 국악 체육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선생님이 6세도 똑같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다 하나씩 할 수 없잖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사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조금은 다양하게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누리과정 이용 부모 사례 6).

나) 유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1)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정도

본 연구에서는 BSC 모델에 따라 누리과정 정책의 고객으로 학부모와 유아로 설정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실제 이들 가구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이 가계에 도움 정도'라는 주관적 체감도로 알아보았다. 결과, 응답자의 48.1%가 '조금 도움된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매우 도움된다' 39.4%,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10.5%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5%가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도움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해당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경제적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25점보다 낮은 변인으로 는 유치원(3.19점), 사립유치원(3.15점),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13점), 대도시 (3.16점) 등이다. 가계 경제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보면, 평균 3.25점으로 2014년 3.24점보다 약간 올랐고(점수가 높을수록 가계 도움이 크다는 것임),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비율로 2014년 33.6%에 비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표본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응답자의 87.5%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2014년 2015년 거의 비슷한 점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면에서 유아 학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종류, 설립유형,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의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요컨대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누리과정 비용지원의 경제적 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도시에 사느냐 읍면에 사느냐, 도시에 살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느냐 어린이 집을 이용하느냐,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저소득이나 고소득이나에 따라 월 22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제적 도움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IV-1-11〉 누리과정 비용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별로	조금	매우	계	평균 (표준편차)	F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됨	도움 됨			
전체	2.0	10.5	48.1	39.4	100.0(1,000)	3.25(0.72)	
기관종류							
유치원	2.2	12.3	49.7	35.9	100.0(502)	3.19(0.73)	6.16*
어린이집	1.8	8.8	46.6	42.9	100.0(498)	3.31(0.7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1	7.6	50.9	40.3	100.0(142)	3.30(0.66)	4.22**
사립유치원	2.6	14.1	49.2	34.1	100.0(360)	3.15(0.75)	
국공립어린이집	2.3	6.2	43.7	47.7	100.0(128)	3.37(0.71)	
법인어린이집	0.0	7.4	42.8	49.7	100.0(89)	3.42(0.63)	
민간어린이집	2.1	10.3	49.1	38.5	100.0(281)	3.24(0.72)	

(표 IV-1-11 계속)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평균 (표준 편차)	F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0.0	8.7	47.4	43.9	100.0(82)	3.35(0.64)	3.29*
250~299만원	1.3	10.4	44.6	43.8	100.0(159)	3.31(0.71)	
300~399만원	1.1	7.7	49.7	41.5	100.0(241)	3.32(0.66)	
400~499만원	1.2	11.7	47.9	39.2	100.0(235)	3.25(0.71)	
500만원 이상	4.4	12.5	49.2	33.9	100.0(283)	3.13(0.79)	
지역규모							
대도시	3.0	12.5	50.4	34.2	100.0(427)	3.16(0.75)	9.64***
중소도시	1.5	11.1	46.4	41.0	100.0(422)	3.27(0.71)	
읍면지역	0.6	3.3	46.5	49.6	100.0(151)	3.45(0.60)	
전체	0.4	9.3	56.7	33.6	100.0(1,924)	3.24(0.63)	-0.97
2014 유치원	0.4	9.6	57.4	32.6	100.0(940)	3.22(0.62)	
어린이집	0.4	8.9	56.0	34.7	100.0(984)	3.25(0.63)	

주: 평균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에 도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101.

* $p < .05$, ** $p < .01$, *** $p < .001$

(2)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경제적 부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다. 앞서 고찰했듯이 기본과정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보다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하면서 내는 비용이 많았다. 이는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의 48.4%가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시 내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매우 부담+다소 부담), 51.6%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변인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비용 부담 정도가 2.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사례에서도 2.5점으로 다른 설립유형보다 높게 나왔다(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스럽다는 의미임). 이는 앞서 분석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비용이 가장 높기(표 IV-1-8, 그림 IV-1-5 참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지역보다는 도시 거주 가구에서 누리과정 수혜횟수가 적을수록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하면, 부담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2.7점→2.4점),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담스럽다는 응답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37.1%→49.6%)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4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표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증액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비용증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1-12〉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없음	별로 부담 없음	다소 부담	매우 부담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8.0	33.6	40.6	7.8	100.0(678)	2.4(0.9)	
기관종류							
유치원	14.5	31.3	44.4	9.8	100.0(344)	2.5(0.9)	11.79**
어린이집	21.5	36.0	36.8	5.7	100.0(334)	2.3(0.9)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2.0	43.9	22.1	2.1	100.0(97)	1.9(0.8)	26.08***
사립유치원	7.7	26.4	53.1	12.8	100.0(247)	2.7(0.8)	
국공립어린이집	31.2	39.9	27.7	1.1	100.0(87)	2.0(0.8)	
법인어린이집	33.3	36.6	25.1	5.1	100.0(59)	2.0(0.9)	
민간어린이집	13.3	34.0	44.7	8.0	100.0(187)	2.5(0.8)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15.6	36.1	36.9	11.5	100.0(44)	2.4(0.9)	0.67
250~299만원	19.7	31.8	39.7	8.8	100.0(112)	2.4(0.9)	
300~399만원	16.7	35.0	38.9	9.5	100.0(172)	2.4(0.9)	
400~499만원	18.9	39.0	36.3	5.8	100.0(162)	2.3(0.8)	
500만원 이상	17.9	28.3	47.4	6.4	100.0(188)	2.4(0.9)	
자녀연령							
만 3세	14.8	30.8	43.5	10.8	100.0(204)	2.5(0.9)	3.11*

(표 IV-1-12 계속)

구분	전혀 부담 없음	별로 부담 없음	다소 부담	매우 부담	계	평균 (표준편차)	t/F
만 4세	20.1	30.3	43.6	6.0	100.0(243)	2.4(0.9)	3.11*
만 5세 이상	18.5	39.6	35.0	6.9	100.0(231)	2.3(0.9)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15.0	30.0	45.2	9.8	100.0(256)	2.5(0.9)	4.58*
2회	19.8	30.6	43.7	5.9	100.0(253)	2.4(0.9)	
3회	19.7	43.7	29.0	7.5	100.0(169)	2.2(0.9)	
지역규모							
대도시	11.9	32.2	47.5	8.5	100.0(275)	2.5(0.8)	8.58***
중소도시	23.0	36.7	34.3	5.9	100.0(295)	2.2(0.9)	
읍면지역	19.7	29.0	40.5	10.8	100.0(109)	2.4(0.9)	
2015년	17.4	33.0	42.0	7.6	100.0(514)	2.4(0.9)	-
2014년	9.3	41.6	31.1	6.0	100.0(1,924)	2.7(1.1)	

주: 1) 평균 수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의미임.

2) 2014년 수치는 이윤진 외(2014: 90)에 나타난 비해당 비율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임.

자료: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90.

* $p < .05$, ** $p < .01$, *** $p < .001$

3) 방과후 과정비 보편적 지원

가)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방과후 과정비는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만 응답하였다(총 502사례). 이 중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203사례), 미이용은 59.5%(298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후술하겠지만(3절 내부프로세스 관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이용률 67.7%(2016년 기준)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방과후 과정비 지원을 모른다는 응답이 37.2%로 나온 점과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지 몰라서 미이용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 방과후 과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용한다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방과후 과정은 취업모, 자녀연령이 4, 5세,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3〉 방과후 과정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계
	알고 있음	모름	이용	미이용	
전체	62.8	37.2	40.5	59.5	100.0(502)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2.4	37.6	43.7	56.3	100.0(142)
사립유치원	63.0	37.0	39.3	60.7	100.0(360)
$\chi^2(df)$	0.01(1)		0.81(1)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54.2	45.8	31.0	69.0	100.0(31)
250만원~299만원	60.7	39.3	39.9	60.1	100.0(73)
300만원~399만원	66.3	33.7	36.4	63.6	100.0(122)
400만원~499만원	71.8	28.2	46.1	53.9	100.0(127)
500만원 이상	55.1	44.9	41.5	58.5	100.0(148)
$\chi^2(df)$	9.75(4)*		3.83(4)		
모 취업여부					
취업모	61.2	38.8	49.7	50.3	100.0(252)
비취업모	64.5	35.5	31.3	68.7	100.0(249)
$\chi^2(df)$	0.68(1)		17.36(1)**		
자녀연령					
만 3세	55.2	44.8	34.7	65.3	100.0(127)
만 4세	71.6	28.4	44.8	55.2	100.0(166)
만 5세 이상	60.5	39.5	40.7	59.3	100.0(209)
$\chi^2(df)$	9.38(2)**		2.96(2)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58.6	41.4	36.0	64.0	100.0(166)
2회	68.9	31.1	46.2	53.8	100.0(188)
3회	59.8	40.2	38.3	61.7	100.0(147)
$\chi^2(df)$	4.79(2)		4.26(2)		
지역규모					
대도시	59.2	40.8	42.4	57.6	100.0(244)
중소도시	65.4	34.6	39.0	61.0	100.0(183)
읍면지역	68.2	31.8	38.2	61.8	100.0(75)
$\chi^2(df)$	2.69(2)		0.63(2)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방과후 과정비 지원 만족도: 경제적 도움 정도

다음 <표 IV-1-14>는 2016년 학부모 조사에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203사례 중에서,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180사례(88.6%)

의 응답 결과이다.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는 사례에 한해 가계의 도움 정도를 알아본 결과, '조금 도움이 된다' 53.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된다' 31.7%,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인 85.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가계 도움 정도가 87.5%로 나온 결과에 비교해 보면(표 IV-1-11 참조), 다소 낮으나, 10명 중 8명 이상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한 사실에서 가계 도움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변인별로 보면, 사립유치원(3.1점)을 다니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3.3점)에 비해 가계 도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지원금이 더 많지만, 전반적인 기관 이용 비용이 사립유치원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체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구소득이 높은 월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도움 정도가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점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사례수도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4〉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지원 받음	지원받은 경우					평균 (표준 편차)	t/F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전체	88.6	3.2	11.7	53.3	31.7	100.0(180)	3.0(0.7)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6.9	0.0	4.2	58.2	37.6	100.0(54)	3.3(0.6)	5.68*
사립유치원	89.4	4.6	15.0	51.2	29.2	100.0(126)	3.1(0.8)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92.6	0.0	0.0	88.9	11.1	100.0(9)	3.1(0.3)	0.07
250만원~299만원	87.5	0.0	13.8	57.6	28.6	100.0(26)	3.1(0.6)	
300만원~399만원	99.2	0.0	19.9	47.0	33.1	100.0(44)	3.1(0.7)	
400만원~499만원	89.5	3.5	13.1	53.3	30.1	100.0(52)	3.1(0.8)	
500만원 이상	80.1	8.1	4.1	50.2	37.7	100.0(49)	3.2(0.9)	
지역규모								
대도시	88.2	3.4	10.3	54.3	32.0	100.0(91)	3.1(0.7)	0.15
중소도시	89.8	4.3	10.4	51.9	33.4	100.0(64)	3.1(0.8)	
읍면지역	87.6	0.0	20.5	53.0	26.5	100.0(25)	3.1(0.7)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지금까지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전략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가구 확대,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방과후 과정비 보편적 지원 등 3개 측면의 성과목표 하에 4개의 핵심성과지표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핵심성과지표인 연도별 누리과정 지원 수혜 유아 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수업을 위한 기본비용과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모두, 연도에 따라 설립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체감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7.5%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비용 지원정책은 정책 수혜자에게는 만족도가 높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누리과정 지원 정책’을 가장 잘한 정책 1순위로 꼽혔다(김은설 외, 2016: 395).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발견된다. 64% 이상의 유아들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IV-1-11 참조). 이에 따라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은 부분 달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방과후 과정비 지원에 대해 학부모의 85%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사립유치원 간의 차이가 나타나서 부분 달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학부모의 고객 입장에서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계경제 도움 정도, 만족도 등 주관적 체감도는 높게 나와서 표면적으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관종류, 설립유형별로 체감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나.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

1) 누리과정 대상 유아확대

가) 정부 계획에 따른 유아 연령별 확대 현황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 정책을 처음 도입하면서 만 5세아 대상으로 “사실상의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만 5세의 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에 만 5세 기관 이용률이 82.7%였던 것에 비해 2015

년에는 92.9%에 이르러 약 10%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체 만 5세 유아의 약 7% 정도는 누리과정 미이용 유아임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약 7%의 누리과정 미이용 유아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 정부가 목표로 했던 “사실상의 취학 1년 전 의무교육 효과”는 미달성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지금의 90% 이상의 이용률은 절대 다수의 유아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 3, 4세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관 이용률이 각각 87.4%, 90.8%였는데,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된 후, 증감 현상을 보이다가 2015년 현재 89.5%, 90.8%로 보고되었다. 두 연령 모두, 누리과정 정책으로 기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아 10당 9명 정도가 기관을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높은 기관 이용률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만 3, 4, 5세 모두 2015년 기준 90% 전후의 기관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누리과정 대상 확대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1-15〉 만 3~5세아 기관 이용률 변화(2011~2015)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만 3~5세아 수	1,409,969	1,408,498	1,387,037	1,395,194	1,396,456
만 3세아 수	466,807	446,256	472,047	474,932	475,519
만 4세아 수	494,388	467,432	447,055	472,731	473,120
만 5세아 수	448,774	494,810	467,935	447,531	447,817
유치원이용아수	564,312	612,794	654,821	651,794	682,553
만 3세 유치원이용아수 (이용률)	133,986 (28.7)	130,986 (29.3)	143,069 (30.3)	156,089 (32.9)	172,114 (36.2)
만 4세 유치원이용아수 (이용률)	196,602 (39.8)	229,911 (49.2)	233,926 (52.3)	228,129 (48.3)	249,197 (52.7)
만 5세 유치원이용아수 (이용률)	233,724 (52.1)	251,897 (50.9)	277,826 (59.4)	267,576 (59.8)	261,242 (58.3)
어린이집이용아수	592,382	603,047	602,176	597,862	588,217
만 3세 어린이집이용아수 (이용률)	272,034 (58.3)	259,112 (58.1)	255,786 (54.2)	265,338 (55.9)	253,294 (53.3)
만 4세 어린이집이용아수 (이용률)	182,999 (37.0)	194,413 (41.6)	184,513 (41.3)	177,014 (37.4)	180,249 (38.1)
만 5세 어린이집이용아수 (이용률)	137,349 (30.6)	149,522 (30.2)	161,877 (34.6)	155,510 (34.7)	154,674 (34.5)
전체기관 이용아수	1,156,694	1,215,841	1,256,997	1,249,646	1,270,770

(표 IV-1-15 계속)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만 3세 기관이용아수 (이용률)	406,020 (87.0)	390,098 (87.4)	398,855 (84.5)	421,417 (88.7)	425,408 (89.5)
만 4세 기관이용아수 (이용률)	379,601 (76.8)	424,324 (90.8)	418,439 (93.6)	405,143 (85.7)	429,446 (90.8)
만 5세 기관이용아수 (이용률)	371,073 (82.7)	401,419 (81.1)	439,703 (94.0)	423,086 (94.5)	415,916 (92.9)

자료: 1) 2011년 수치;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2) 2012년 수치;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5.
 3) 2013년 수치;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7.
 4) 2014년 수치;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49.
 5) 2015년 수치;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의무교육은 아니다 하더라도 누리과정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누리과정 정책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지금 연령별로 약 7~11%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한 이들 사례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않는 대신, 유아대상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학원을 선택하면 월 22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을 배우지 못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아대상 학원을 선택하고 있었다.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미이용하게 된 이유를 요약해보면, 1)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부정적인 경험 2)누리과정 정책 및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부족과 무관심 3)영어교육의 중요성 4)잘 짜여진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특별활동 프로그램 포함)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저는 어린이집을 잠깐 보냈었는데 너무 좁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마당 건물 안에 있는 놀이학교보다는 (건물) 독채를 사용해서 마당도 있는 그런 데를 알아봐서 보냈어요(누리과정 미이용 부모 사례 2).

지인의 자녀가 조기 유학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그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영어에 귀를 띄우고 리스닝, 스피킹 안 되는 게 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망설일 것 없이 그냥 보냈어요(누리과정 미이용 부모 사례 1).

(누리과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나)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는 알겠는데 뭘 지칭해서 말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누리과정 미이용 부모 사례 3).

2)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2012년 5세 누리과정 정책의 시행(3, 4세는 2013년에 누리과정 시행)으로 2012년 이전 이원화 되어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들이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3, 4세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령별 누리과정을 시행하였다. 누리과정 정책 시행 이후 '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평가하기 위해 1)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2) 기관의 물리적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3) 유아들의 기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근무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누리과정 공통과정에 대해 교사가 응답한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7%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 응답(70.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개선되었다'라는 응답이 81.2%(민간어린이집)에서 91.9%(국공립어린이집) 사이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적게는 52.4%(공립유치원), 많게는 75.1%(사립사인유치원)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23.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사인유치원(17.4%), 법인어린이집(16.4%)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법인 유치원 근무 교사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0%로, 교육·보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이 설립유형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이후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근무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표 IV-1-16〉 누리과정 이후 교육·보육과정 개선정도: 교사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음	많이 개선 되었음	계	평균	$\chi^2(df)$
전체	2.2	17.6	64.3	15.9	100.0(1,000)	2.9(0.6)	
기관종류							
유치원	4.8	25.2	55.4	14.6	100.0(345)	2.8(0.7)	42.92(3)***
어린이집	0.8	13.5	69.0	16.7	100.0(655)	3.0(0.6)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5.5	42.1	37.1	15.3	100.0(19)	2.6(0.8)	69.73(18)***
공립병설유치원	7.0	23.5	54.5	15.0	100.0(162)	2.8(0.8)	
사립법인유치원	2.7	36.2	61.1	0.0	100.0(31)	2.6(0.6)	
사립사인유치원	2.5	22.4	57.7	17.4	100.0(133)	2.9(0.7)	
국공립어린이집	0.7	7.4	68.7	23.2	100.0(110)	3.1(0.6)	
법인어린이집	0.4	10.4	72.9	16.4	100.0(220)	3.1(0.5)	
민간어린이집	1.2	17.7	66.5	14.7	100.0(325)	2.9(0.7)	
지역규모							
대도시	0.5	19.0	64.0	16.6	100.0(413)	3.0(0.6)	11.93(6)
중소도시	3.2	16.3	65.8	14.6	100.0(411)	2.9(0.6)	
읍면지역	4.0	17.1	61.5	17.5	100.0(176)	2.9(10.7)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01$

나)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1) 보조교사 지원 여부 및 역할

교사들을 대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있는지와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다. 결과, 전체 교사의 34.2%가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유치원 내에서는 공립보다는 사립에 보조교사 배치가 많았다.

보조교사의 역할은 기관종류에 관계없이 교육/보육 활동 보조 역할이 가장 많은 가운데, 유치원은 급간식지도(50.8%), 차량지도(40.0%), 수업자료준비(36.7%) 순으로 나온 반면, 어린이집은 급간식지도(54.9%), 수업자료 준비(45.3%), 교재교구 준비(31.9%) 순으로 보조교사 역할이 다소 달랐다.

담당학급 연령별로 보면, 교사 혼자서 수업하기가 쉽지 않은 혼합연령학급에 보조교사 배치가 26.1%로 가장 낮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이 도시지역보다 보조교사 배치가 적었다.

〈표 IV-1-17〉 보조교사 유무 및 역할(복수응답): 교사응답

단위: %(명)

구분	보조 교사 있음	보조 교사의 역할								
		교육· 보육 활동 보조	차량 지도	청소	행정 업무	수업 자료 준비	급/ 간식 지도	교재 교구 준비	기 타	사례수
전체	34.2	90.3	19.4	30.2	7.0	43.0	53.8	31.9	3.0	(342)
기관종류										
유치원	26.1	88.2	40.0	34.5	9.7	36.7	50.8	32.1	3.0	(90)
어린이집	38.4	91.1	12.0	28.6	6.0	45.3	54.9	31.9	2.9	(252)
$\chi^2(df)$		15.41(1)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21.1	100.0	22.9	72.9	45.8	50.0	50.0	50.0	0.0	(4)
공립병설유치원	14.6	74.8	12.9	49.1	4.3	41.9	58.3	37.2	8.1	(24)
사립법인유치원	41.9	93.7	26.8	14.1	0.0	20.4	26.8	14.1	0.0	(13)
사립사인유치원	37.3	92.1	57.9	29.9	12.1	37.5	53.7	33.0	1.7	(49)
국공립어린이집	49.5	88.4	14.8	34.7	13.4	43.7	52.7	30.3	1.5	(54)
법인어린이집	44.8	94.3	9.7	28.3	1.1	46.6	49.1	37.5	2.0	(99)
민간어린이집	30.3	89.4	12.7	25.6	6.9	44.9	61.9	27.2	4.7	(99)
$\chi^2(df)$		54.52(6) ^{***}								
담당학급 연령										
만3세	41.3	93.2	21.3	32.1	9.0	44.2	52.8	32.3	2.6	(113)
만4세	39.0	80.5	28.1	37.8	10.8	57.3	67.7	36.0	0.0	(48)
만5세	34.9	93.2	21.2	30.5	7.3	40.1	49.3	29.3	1.1	(91)
혼합연령학급	26.1	89.1	10.5	23.3	2.2	36.9	52.2	32.0	7.0	(89)
$\chi^2(df)$		17.78(3) ^{***}								
지역규모										
대도시	37.7	92.4	18.9	35.4	6.4	46.5	47.2	36.3	1.2	(156)
중소도시	34.9	91.5	19.7	28.0	8.3	43.1	60.5	29.2	3.2	(143)
읍면지역	24.2	78.7	20.2	18.2	4.9	30.1	55.4	25.4	8.6	(43)
$\chi^2(df)$		9.87(2) ^{**}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01$

(2)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노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정책 시행 이후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기관의 시설 환경', '낡고 오래된 교재·교구

교체'의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개선되지 않음 1점,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 2점, 대체로 개선되었음 3점, 많이 개선되었음 4점)로 개선 정도를 질문한 결과, 각각 약 3.0점으로 양호한 점수가 나온 것으로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이 개선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관의 시설 환경'이나 '낡고 오래된 교재·교구 교체'의 경우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교사가 평가한 개선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1-20 참고).

〈표 IV-1-18〉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정도: 교사응답

단위: 점(4점), (명)

	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기관의 시설 환경	낡고 오래된 교재·교구 교체	사례수
전체	3.0	3.0	3.1	(1,000)
기관종류				
유치원	3.0	2.9	3.0	(345)
어린이집	3.1	3.0	3.2	(655)
<i>t</i>	0.86	4.90*	16.11***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2.8	2.9	3.2	(19)
공립병설유치원	3.0	2.7	2.9	(162)
사립법인유치원	3.0	2.9	2.8	(31)
사립사인유치원	3.1	3.0	3.1	(133)
국공립어린이집	3.1	3.2	3.3	(110)
법인어린이집	3.0	3.0	3.2	(220)
민간어린이집	3.1	2.9	3.1	(325)
$\chi^2(df)$	0.67	3.38**	6.41***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정도가 높은 것임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교사 면담을 통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보육환경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지원받기 전에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좋았던 곳이라서. 지금도 좋고. 예전에도 좋고(교사 사례 2).

가장 달라진 점은 교재교구가 많아진 거예요. 누리과정 후에 그거에 맞춰서 교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원장님이 구매해주셔서...(교사 사례 7).

누리과정 정책 시행 이후 교육·보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보육 환경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의 개선 변화가 유치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교사의 처우 현황

교사의 근무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주말 근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주말근무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말근무 비율이 공립단설유치원이 22.8%, 공립병설유치원은 4.7%임에 반해 사립법인 및 사립사인 유치원은 각각 46.6%, 48.8%로 국공립어린이집(54.0%), 법인어린이집(49.7%), 민간어린이집(40.7%)과 함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사의 연령에 따른 차이로는, 20대, 30대의 교사가 40대, 50대의 교사보다 주말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들은 경력 15년 이하 교사들에 비해 주말 근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학급 연령으로는 만 3세 담당 교사가 만 4, 5세와 혼합연령학급의 교사보다 주말 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9 참고).

〈표 IV-1-19〉 주말 근무 여부: 교사응답

구분	한다	안한다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39.2	60.8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26.4	73.6	100.0(345)	36.34(1)***
어린이집	45.9	54.1	100.0(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22.8	77.2	100.0(19)	108.42(6)***
공립병설유치원	4.7	95.3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46.6	53.4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48.8	51.2	100.0(133)	
국공립어린이집	54.0	46.0	100.0(110)	
법인어린이집	49.7	50.3	100.0(220)	
민간어린이집	40.7	59.3	100.0(325)	
연령				
20대	47.5	52.5	100.0(250)	23.09(3)***

(표 IV-1-19 계속)

구분	한다	안한다	계	$\chi^2(df)$
30대	42.2	57.8	100.0(377)	23.09(3) ^{***}
40대	33.4	66.6	100.0(260)	
50대 이상	24.2	75.8	100.0(113)	
최종학력				18.16(3) ^{***}
고졸	27.7	72.3	100.0(34)	
전문대졸	43.8	56.2	100.0(371)	
대졸	41.0	59.0	100.0(445)	
대학원졸	25.2	74.8	100.0(151)	
총 교사 경력				11.09(4) [*]
4년 미만	43.3	56.7	100.0(146)	
4-7년 미만	44.0	56.0	100.0(190)	
7-10년 미만	39.3	60.7	100.0(191)	
10-15년 미만	42.0	58.0	100.0(223)	
15년 이상	30.7	69.3	100.0(251)	
담당학급 연령				10.88(3) [*]
만3세	47.0	53.0	100.0(273)	
만4세	37.7	62.3	100.0(123)	
만5세	38.4	61.6	100.0(261)	
혼합연령학급	34.1	65.9	100.0(342)	
지역규모				4.92(2)
대도시	40.4	59.6	100.0(413)	
중소도시	41.2	58.8	100.0(411)	
읍면지역	31.8	68.2	100.0(176)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 <표 IV-1-20>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호봉기준을 살펴보았는데,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기관에 따라 공립단설·병설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대부분 국가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사립법인유치원과 사립사인유치원은 국가호봉제와 사립호봉제를 혼합하여 적용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어린이집교사는 과반수 이상인 50.5%가 적용기준이 없다고 응답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호봉수에 있어서는 유치원(평균 22.2호봉)과 어린이집(평균 8.4호봉)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 병설 유치원 > 사립법인, 사립사인유치원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높은 호봉수를 나타내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호봉이 높게 나타났으나, 읍면지역 교사의 호봉이 대도시·중소

도시 교사의 호봉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읍면지역에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IV-1-20 참조).

유치원교사의 호봉은 2년제 졸업자는 6호봉, 3년제 졸업자는 7호봉, 4년제 일 반대 졸업자는 8호봉, 4년제 사범대 졸업자는 9호봉으로 시작하며, 보육교사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하고,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또 국가 호봉제와 사립 호봉제 사이에 호봉급별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김길숙·문무경·이민경, 2015: 39), 호봉과 교사 월급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IV-1-20〉 호봉 기준 및 현재 호봉: 교사응답

단위: %(명), 호봉

구분	국가 호봉제 적용	사립 호봉제 적용	호봉 기준 없음	잘 모름	계	호봉수 (평균)	t/F
전체	53.0	13.5	18.5	15.1	100.0(1,000)	13.3(9.9)	
기관종류							
유치원	54.4	27.9	3.2	14.5	100.0(345)	22.2(10.0)	414.65***
어린이집	52.2	5.9	26.5	15.4	100.0(655)	8.4(5.4)	
$\chi^2(df)$							
							148.90(3)***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88.6	0.0	5.7	5.7	100.0(19)	22.7(10.7)	81.74***
공립병설유치원	84.0	0.6	0.7	14.8	100.0(162)	23.9(10.0)	
사립법인유치원	34.0	49.1	3.2	13.8	100.0(31)	14.7(6.6)	
사립사인유치원	18.2	60.4	5.9	15.6	100.0(133)	15.7(6.6)	
국공립어린이집	94.2	0.0	1.3	4.4	100.0(110)	8.9(5.4)	
법인어린이집	85.8	1.7	3.7	8.8	100.0(220)	8.8(4.8)	
민간어린이집	15.3	10.7	50.5	23.6	100.0(325)	6.0(7.2)	
$\chi^2(df)$							
							838.02(18)***
최종학력							
고졸	24.5	15.1	54.9	5.6	100.0(34)	7.1(2.6)	31.78***
전문대졸	39.8	16.9	24.9	18.4	100.0(371)	9.9(6.7)	
대졸	59.0	12.0	14.1	14.9	100.0(445)	12.4(9.4)	
대학원졸	73.9	9.1	7.4	9.6	100.0(151)	20.5(11.4)	
$\chi^2(df)$							
							92.35(9)**
총 교사 경력							
4년 미만	50.0	16.6	12.0	21.3	100.0(146)	6.2(4.0)	124.22
4-7년 미만	48.4	16.2	15.9	19.4	100.0(190)	7.1(4.0)	
7-10년 미만	51.5	13.7	23.1	11.6	100.0(191)	9.0(4.1)	
10-15년 미만	51.8	14.5	21.6	12.2	100.0(223)	12.9(5.4)	
15년 이상	60.3	8.5	17.8	13.5	100.0(251)	23.8(11.3)	
$\chi^2(df)$							
							27.89(12)**

(표 IV-1-20 계속)

구분	국가 호봉제 적용	사립 호봉제 적용	호봉 기준 없음	잘 모름	계	호봉수 (평균)	t/F
지역규모							
대도시	51.1	12.9	20.9	15.1	100.0(413)	11.3(7.2)	
중소도시	49.3	15.7	18.2	16.8	100.0(411)	13.4(10.1)	12.24***
읍면지역	65.8	9.5	13.6	11.1	100.0(176)	16.9(12.5)	
$\chi^2(df)$					16.93(6)*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관별 현 근무기관의 재직기간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교사보다 현 근무기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유치원(3.3년)과 병설유치원(4.5년)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현 기관 평균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고, 사립법인유치원(6.7년)의 재직 중인 교사들의 현 기관 평균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이는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으로써 근무지를 순환하는 근무패턴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누리과정 담당횟수와 교사의 현 기관 재직기간을 보았을 때, 교사의 현 기관 재직기간이 긴 교사가 더 많은 횟수의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 기관의 재직기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같은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쌓은 경험을 누리과정 교육을 통해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표 IV-1-21〉 현 근무 기관의 재직기간: 교사응답

구분	단위: %(명), 년						평균 (표준편차)	t/F
	4년 미만	4~6년	7~9년	10~14 년	15년 이상	계		
전체	51.3	23.6	9.8	8.5	6.8	100.0(1,000)	5.1(5.5)	
기관종류								
유치원	61.4	18.3	6.7	4.9	8.7	100.0(345)	4.8(6.4)	
어린이집	46.0	26.4	11.5	10.4	5.8	100.0(655)	5.2(4.9)	7.57**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78.9	15.8	0.0	0.0	5.3	100.0(19)	3.3(5.9)	
공립병설유치원	75.3	11.7	1.9	0.6	10.5	100.0(162)	4.5(7.7)	
사립법인유치원	40.6	18.8	15.6	12.5	12.5	100.0(31)	6.7(5.8)	4.15***
사립사인유치원	47.4	25.6	12.0	9.0	6.0	100.0(133)	5.1(4.6)	
국공립어린이집	43.6	28.2	15.5	7.3	5.5	100.0(110)	5.1(4.8)	

(표 IV-1-21 계속)

구분	4년 미만	4~6년	7~9년	10~14 년	15년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t/F
법인어린이집	46.4	24.5	10.5	11.8	6.8	100.0(220)	5.4(4.9)	4.15***
민간어린이집	46.5	27.1	10.8	10.5	5.2	100.0(325)	5.1(4.9)	
누리과정 담당횟수								
1회	68.5	18.0	5.6	3.4	4.5	100.0(177)	3.3(4.6)	11.33***
2회	58.8	19.0	9.2	8.5	4.6	100.0(152)	4.3(4.6)	
3회	52.2	26.1	11.8	7.5	2.5	100.0(161)	4.4(4.0)	
4회	44.2	32.7	9.5	8.2	5.4	100.0(147)	5.3(5.2)	
5회	42.1	23.4	11.6	11.3	11.6	100.0(363)	6.4(6.5)	
지역규모								
대도시	51.3	26.2	8.2	8.2	6.1	100.0(413)	4.9(4.8)	1.28
중소도시	51.6	23.1	10.7	8.5	6.1	100.0(411)	4.9(5.4)	
읍면지역	50.6	18.8	11.4	9.7	9.7	100.0(176)	5.9(7.1)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01$

지금까지 누리과정 정책의 주요 고객인 유아에게 누리과정 정책이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계획대로 연령별로 누리과정 정책 수혜 대상은 확대되었다. 확대율이 크지 않지만, 이 시기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연령 모두 약 90% 전후의 기관 이용률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의 이원화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과 비교해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질적으로 향상 정도 지표에서 80.2%(2.9점)가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2.8점, 어린이집 3.0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표는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끝으로 현재 교사의 처우 정도를 재직기간, 호봉, 근무시간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 절반 이상의 교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가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현 기관의 재직 기간이 평균 5.5년으로 보고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표들도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종류,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부분 달성이므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유아 고객을 위해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의 성과목표는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무 관점

이 절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을 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어떠한 정책이든 지 적절한 예산 수반은 필요조건이다. 예산 수반이 없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을 뿐더러 지속되기 어렵다.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목표로 '재원의 충분성'과 '지원금 확대'를 설정하고 각 하위의 핵심성과지표로 '재원 확보 및 편성 현황',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틀을 토대로 누리과정 정책의 재무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측정 방법은 2016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문헌조사이다.

〈표 IV-2-1〉 재무관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설문조사	문헌조사	면담
재무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재원의 충분성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	○	-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	○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공	○	-

주: 측정방법에서 공: 공무원 을 뜻함.

가.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1) 재원의 충분성: 재원확보 및 편성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II장에서 고찰했듯이 국가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부터 감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3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2013년도 이후 세수 감소로 재정 추계가 빗나갔고 2014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정부추계액과 실교부액의 차이는 15조 8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한해에만 약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표 II-2-2, 그림 II-2-1 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부금에서 편성, 운영하게 되면서 2015년,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갈등이 촉발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 편성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다음 <표 IV-2-2>는 2016년 2월 22일 기준의 전국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현황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 울산 등 2개 교육청만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광주광역시, 세종,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부 또는 전액 편성했다. 당초에는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미편성하였으나(대구, 울산, 경북 3개 교육청 제외), 시·도 의회에서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증액, 유치원 편성 삭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치원의 전액 편성이 조정되었다.

<표 IV-2-2> 2016년 2월 기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구분	시·도교육청 당초 예산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2016.2.22 기준)		비고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서울	미편성	전액	4.8개월	4.8개월	시의회 1회 추경심의 시 변경 (교육감 부동의)
부산	미편성	전액	6개월분	7.6개월분	시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증액 (교육청 동의)
대구	6개월분	6개월분	전액	전액	시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증액 (1회 추경 추가 확보)
인천	미편성	전액	6개월분	6개월분	시의회 어린이집 증액 유치원 삭감 (교육감 재의요구) 자치구어린이집 약 3개월 지원
광주	미편성	전액	미편성	3개월분	1회추경 유치원 3개월분 편성 지자체 어린이집 3개월 지원
대전	미편성	전액	6개월분	6개월분	시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증액 (교육감 동의)
울산	9개월분	전액	전액	전액	1회 추경 추가 확보
세종	미편성	전액	미편성	전액	교육청 예비비로 어린이집 2개월 지원
경기	미편성	전액	미편성	4개월분 (8개월 삭감)	도의회 유치원 누리과정비 삭감 (지자체 어린이집 2개월분 지원)
강원	미편성	전액	미편성	6개월분 (6개월 삭감)	도의회 유치원 6개월 삭감 (지자체 어린이집 방과후비 2개월 지원)

(표 IV-2-2 계속)

구분	시·도교육청 당초 예산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2016.2.22 기준)		비고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충북	미편성	전액	6개월	6개월	도의회 유치원 삭감, 어린이집 증액 (교육감 재의요구)
충남	미편성	전액	약6개월분	전액	도의회 어린이집 증액 (교육감 재의요구)
전북	미편성	전액	미편성	전액	지사체 어린이집 방과후비 3개월분 지원
전남	미편성	전액	5개월분	5개월분	1회 추경 변경
경북	6개월분	전액	6개월분	전액	시도의회 본회의 심의완료
경남	미편성	전액	2개월분	전액	도의회 어린이집 증액
제주	미편성	전액	2개월분	전액	도의회 어린이집 증액

자료: 허봉운(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쟁점과 해법.. 20대 총선 교육공약, 쟁점과 해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차 교육정책포럼 p. 46.

이어서 정부는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2. 5).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거나,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교육청(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하고,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의 50%를 우선 지원하되, 편성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2. 5: 1-2).

〈표 IV-2-3〉 누리과정 편성(계획) 및 목적예비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월

시도	2016년 소요액			편성액계 (계획 제출 포함)				편성월수		목적 예비비 배분액*	금회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편성율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비율	지원액
대구	1,153	765	1,918	1,153	765	1,918	100.0	12	12	146	100	146
대전	734	550	1,284	734	550	1,284	100.0	12	12	85	100	85
울산	569	465	1,034	569	465	1,034	100.0	12	12	63	100	63
세종	86	172	258	86	172	258	100.0	12	12	22	100	22
충남	671	1,073	1,744	671	1,073	1,744	100.0	12	12	144	100	144

(표 IV-2-3 계속)

시도	2016년 소요액			편성액계 (계획 제출 포함)				편성월수		목적 예비비 배분액*	금회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편성월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비율	지원액
경북	1,167	986	2,153	1,167	986	2,153	100.0	12	12	191	100	191
부산	1,330	977	2,307	841	488	1,329	57.6	8	6	215	50	108
인천	1,156	1,232	2,388	594	562	1,156	48.4	6	5	132	50	66
충북	459	824	1,283	459	412	871	67.9	12	6	110	50	55
전남	483	951	1,434	311	400	711	49.6	8	5	172	50	86
경남	1,454	1,444	2,898	1,454	241	1,695	58.5	12	2	212	50	106
제주	166	458	624	166	76	242	38.8	12	2	45	50	23
서울	2,521	3,807	6,328	0	0	0	0.0	0	0	496	미지원	0
광주	706	670	1,376	706	0	706	51.3	12	0	79	미지원	0
경기	5,100	5,459	10,559	1,646	0	1,646	15.6	4	0	614	미지원	0
강원	454	659	1,113	454	0	454	40.8	12	0	129	미지원	0
전북	691	833	1,524	691	0	691	45.3	12	0	145	미지원	0
합계	18,900	21,325	40,225	11,702	6,190	17,892	44.5			3,000		1,095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15).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1,095억원 지원통보. p. 3.

그리고 2016년 9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받은 결과,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전액 편성 교육청은 14개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9. 8). 강원 교육청은 어린이집 일부 편성을 했고, 어린이집 전액 미편성 교육청은 경기, 전북 2곳이다. 강원 및 전북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9. 8: 4).

〈표 IV-2-4〉 2016년 9월 8일 기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월, 억원

지역	교육청 편성 개월 수(계획)		지자체 (계획)	주요 동향변동 (교: 교육청, 지: 지자체)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대구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5)

(표 IV-24 계속)

지역	교육청 편성 개월 수(계획)		지자체 (계획)	주요 동향변동 (교: 교육청, 지: 지자체)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울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6)
경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4)
충남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19)
대전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27)
부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6.30)
충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7.20) (교) 전액편성 완료(5.31)
세종	12	10(12)	12	※ 어린이집 잔여 2개월분 예비비로 집행 예정 (지) 정상집행
서울	7.4(12)	7.4(12)	12	(교) 유치원(911억원), 어린이집(1,333억원) 부족분 전액 편성 예정(9.5. 의회제출) (지) 정상집행
경남	12	8(12)	12	(교) 어린이집 부족분(481억원) 전액 편성 예정(9.20. 의회제출) (지) 정상 집행
전남	12	5(12)	12	(교) 어린이집 부족분(508억원) 전액 편성 예정(9.13. 의회제출) (지) 정상집행
인천	11(12)	11(12)	12	(교) 유치원(107억원), 어린이집(95억원) 부족분 전액 편성 예정(9.30. 의회제출) (지) 정상 집행
광주	9(12)	0(12)	12	(교) 유치원(185억원)(9.28. 의회제출), 어린이집(670) 부족분 전액 편성 예정(정리추경) (지) 9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선집행 예정
제주	12	9(12)	12	(교) 어린이집 부족분(108억원) 전액 편성 예정(10월 추경 검토) (지) 정상 집행
강원	9(12)	2.3(0)	12(-)	(교) 유치원 부족분(138억원) 전액 편성 예정(9.27. 의회제출) * 방과후 과정비 9개월분(어린이집 전체 예산 환산 시 2.3개월) (지) 12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선집행
전북	12	0(0)	12	(교) 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1~3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선집행
경기	8(12)	0(0)	12	(교) 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12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선집행 예정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 9. 8). 14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본 조사는 누리과정 예산이 대부분이 편성된 9월 이후에 실시되었다. 조사 시점인 9월 말~10월 초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알아보았다. 올 초에 일부 편성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액 편성으로 변경되었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다. 앞서 살펴본 누리과정 예산 편성 흐름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은 일부에서 전액 편성으로 변경이 46.0%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는 올

초부터 전액 편성이 36.0%로 가장 많았다. 앞서 살펴본 <표 IV-2-2>를 보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시도 의회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 증액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 IV-2-5>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공무원 응답

단위: %(명)

구분	올초부터 전액 편성	일부에서 전액 편성으로 변경	올초부터 일부 편성	계	$\chi^2(df)$
전체	32.0	38.0	30.0	100.0(100)	
소속					
교육청	28.0	46.0	26.0	100.0(50)	2.71(2)
지자체	36.0	30.0	34.0	100.0(50)	
직위					
별정직	35.0	32.5	32.5	100.0(40)	0.86(2)
일반직	30.0	41.7	28.3	100.0(60)	
담당업무					
누리과정 예산집행	35.0	32.5	32.5	100.0(40)	0.86(2)
누리과정 운영·관리	30.0	41.7	28.3	100.0(60)	

주: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무 관점에서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전략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 핵심성과지표인 “재원 확보 및 편성 현황”도 2016년 9월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비를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 교육청이란 점에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 14개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¹¹⁾, 국고 목적예비비 예산으로 누리과정비를 매년 편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은 누리과정 정책 안착을 위한 최대 당면 과제라 하겠다.

2) 지원금 확대

가) 정부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11)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정부는 교육감의 의지 부족의 문제로 인식하였고(교육부 보도자료, 2016. 2. 18), 박원순 서울시장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국무회의에서 발언, 이에 대한 교육부 반박 보도자료(교육부 보도자료, 2016. 2.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근본 대책 마련 촉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16. 8. 18) 등의 갈등사례라 하겠다.

2011년 5세 누리과정을 발표할 때,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해마다 증액한다고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이전인 2011년 월 17만 7천원(소득기준 전체 70%까지)에서 2012년부터 월 20만원, 2014년 월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5. 2)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올해는 월 3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2만원으로, 2013년 이후로 증액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핵심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2-6〉 누리과정 지원금 계획과 현황(2011~2016)

년도	단위: 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17.7	20	22	24	27	30
현황	17.7	20	22	22	22	22

자료: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p. 2.

나)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적절성

2016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2만원이다. 이 지원금의 적절성을 표준유아교육비에 견주어서 살펴보겠다. 2015년 표준유아교육비는 원아 1인당 555만 7천원(공립유치원 5,648천원; 사립유치원 5,524천원), 월평균 46만3천원으로(최은영 외, 2015: 7) 보고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동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누리과정 지원금을 책정한 근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월 22만원의 사용 항목 또는 사용 범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정 내지는 지침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를 “기본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비용에 한함”으로 규정하면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해당 원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원(예: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2016: 9)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은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프로그램)에는 사용 불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 교육청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산출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표준유아교육비에 견주어서 지원 단가의 적절성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법 제4장제24조

(무상교육) ③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무상교육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기준이 ‘표준유아교육비’이다.

수치로만 단순 비교하면, 2015년도 표준유아교육비에 의하면, 유아 1인당 월 평균 46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누리과정 지원금은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금이 앞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 “원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항목”을 위한 비용이라면, “표준교육 활동경비”와 “표준 공통운영경비”의 일부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두 경비를 합친 금액은 유아 1인당 196,000원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보다 적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재 월 22만원 누리과정 지원금은 입장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유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항목으로 사용처를 한정한다면, 현재 금액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한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월 30만원까지의 증액 내지는 현재 22만원 이상의 증액을 한다면, 표준유아교육비에 근거한 산출 및 적용 범위를 정부는 제시해야 하겠다.

〈표 IV-2-7〉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적절성

표준유아교육비(2015년) ¹⁾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 내용 ²⁾ (교육청 기준)
유아 1인당 월 평균 46만 3천원		유아 1인당 월 22만원
표준인건비 (교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	원아 1인당 연 평균 319만원 월 평균 26만 7천원	기본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비용에 한함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해당 원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원(현장학습비, 우유비 등)
표준교육 활동 경비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구·설비, 재료비)	원아 1인당 연 평균 735천원 월 평균 61천원	
표준공통 운영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학생복리비)	원아 1인당 연 평균 162만 3천원 월 평균 135천원	

자료: 1) 최은영 외(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pp. 5-7.

2)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16). 2016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계획. p. 6.

본 조사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의 적정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70.0%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따라서 원래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월 30만원까지 증액에 대해서는 53.0%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누리과정 운영·관리 담당 공무원에서 현재 지원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또한, 방과후 과정비(월 7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73.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적정성보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평균 점수는 낮게 나왔는데, 이는 전혀 적정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누리과정 지원금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월 22만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비에 의하면 낮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금이 “원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항목”을 위한 비용이라면 월 22만원은 표준유아교육비보다 많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산출근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항에 따르면,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당초 누리과정 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공무원은 누리과정 재정의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증액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재정 상황에서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고, 누리과정 사용범위(무상교육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증액할 근거도 없다.

〈표 IV-2-8〉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의견: 공무원응답

단위: 점, %(명)

구분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원래 계획대로 유아 1인당 월 30만원까지 증액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재 방과후 과정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함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전체	2.8	70.0	2.6	53.0	2.8	73.0	(100)
소속							
교육청	2.8	68.0	2.4	42.0	2.6	68.0	(50)
지자체	2.8	72.0	2.7	64.0	2.9	78.0	(50)
<i>t</i>	0.28		3.03		2.06		

(표 IV-2-8 계속)

구분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원래 계획대로 유아 1인당 월 30만원까지 증액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재 방과후 과정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함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직위							
별정직	2.7	66.7	2.4	42.9	2.6	69.0	(42)
일반직	2.8	72.4	2.7	60.3	2.8	75.9	(58)
<i>t</i>	0.49		1.49		1.41		
담당업무							
누리과정 예산집행	2.8	65.0	2.7	65.0	2.9	80.0	(40)
누리과정 운영·관리	2.8	73.7	2.5	45.6	2.7	68.3	(60)
<i>t</i>	0.00		1.65		3.53		

주: 1) 동의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것임.

2)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걱정 또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지금까지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전략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개의 핵심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재무 관점에서 본 누리과정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향후 3년 동안의 누리과정 재정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당초계획대로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점,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 외에도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기관마다 다르고, 사용항목도 다르다는 점에서 재무 관점에서의 누리과정 정책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내부프로세스 관점

이 절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의 추진과정에 해당하는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전략목표는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는 누리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으로 구분, 각각의 핵심성과지표를 분석 기준으로 해서, 고찰하였다. 측정방법은 2016년에 교사와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문헌자료를 주로 사용했으며 교사 면담조사를 일부 지표에서 사용하였다.

〈표 IV-3-1〉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설문	문헌	면담
내부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 여부	-	○	-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교, 공	-	-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상설기구(운영위) 설치 여부	공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실적	공	-	-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교	○	-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등 정부 지침 준수	학, 교	○	

주: 측정방법에서 학: 학부모, 공: 공무원, 교: 교사를 뜻함.

가.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1)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의 적절성

가) 계획 대비 시행

다음은 2011년 5월 2일 정부 보도자료에 실린 누리과정 향후 일정이다.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 시행을 목표로 해서 2012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공통과정의 이름 공모, 공통과정 제정 및 관련 자료집을 개발해서 담당교사 연수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하나의 공통과정으로 제정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로 2개월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은 제정되었고, 2011년 8월 12일 (금) 「5세 누리과정」 공청회를 개최하고(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8. 13: 1), 9월 5일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9. 5: 1). 정부 계획대로라면 8월에 고시해야 하나, 9월 초에 고시함에 따라 빠듯

한 일정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 집합연수도 계획대로 2012년 2월까지 진행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 22), 계획대로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을 현장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표 IV-3-2〉 5세 누리과정 추진일정

추진시기	내용
2011. 5월 중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 양 부처 공동으로 밝고 친근한 명칭 공모
2011. 5~8	제도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 교과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 5 ~ 2012. 2	‘만5세 공통과정’ 고시 및 교사 연수
2011. 5~7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공통과정 마련
2011. 8	양 부처 공동으로 공통과정 제정 고시
2011. 9~2012. 2	해설서 개발·보급 및 담당교사 연수 실시 - 공통과정 이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2012. 3	‘12학년도 공통과정 적용을 통한 정책 전면 시행
~2013. 2월 말*	3월부터 시행하는 3~5세 누리과정 관련 교사용 자료 총 26권의 발간·보급과 담당 교원 연수를 완료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1. 5. 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p. 9 내용을 표로 구성함.
2) * : 교육과학기술부(2012. 2. 20).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 p. 1 내용을 추가함.

나) 누리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5세 누리과정 제정에 소요된 기간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공통과정과 예산의 일원화 2개 항목에 대해 알아본 결과, 두 개 모두 소요시간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기까지 소요 시간은 부족했다는 의견에 81.0%가 동의했다. 누리과정 제정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은 95.0%가 동의했다. 역으로 말하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먼저, 공통과정의 제정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청, 별정직, 누리과정 운영·관리 담당 공무원에서 부족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교육청의 별정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통과정의 누리과정 운영·업무를 담당하므로 시간 부

족의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재정일원화를 위한 협의 시간 부족은 지자체, 일반직, 누리과정 예산집행 담당 공무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협의 과정의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누리과정 정책 수립 시간 동의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전체	3.0	81.0	3.4	95.0	(100)
소속					
교육청	3.3	90.0	3.5	94.0	(50)
지자체	2.8	72.0	3.3	96.0	(50)
<i>t</i>	12.81***		2.12		
직위					
별정직	3.3	88.1	3.5	92.9	(42)
일반직	2.9	75.9	3.3	96.6	(58)
<i>t</i>	9.42**		1.53		
담당업무					
누리과정 예산집행	2.8	72.5	3.4	97.5	(40)
누리과정 운영·관리	3.2	86.0	3.5	93.3	(57)
<i>F</i>	8.18**		0.62		

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적정 또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0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부 일정대로 공통과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까지의 계획은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보육과정의 일원화 과정, 교부금과 국·지방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소요 시간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누리과정 지원금 전달체계의 합리성

앞서 고찰한 “누리과정 재정 안정성” 전략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전달체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도 “지금도 갈등이 계속됨”이 33.0%로 해결되었다는 29.0%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청, 별정직 공무원이 갈등이 계속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올 초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증액한 지자체의 경우, 갈등구조가 없었다고 응답했을 것이다(표 IV-2-4 참조).

〈표 IV-3-4〉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교육청-시·도의회 간 갈등 유무

단위: %(명)

구분	갈등 없이 순조로움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됨	지금도 갈등이 계속됨	계	$\chi^2(df)$
전체	38.0	29.0	33.0	100.0(100)	
소속					
교육청	30.0	30.0	40.0	100.0(50)	3.20(2)
지자체	46.0	28.0	26.0	100.0(50)	
직위					
별정직	28.6	31.0	40.5	100.0(42)	3.02(2)
일반직	44.8	27.6	27.6	100.0(58)	
담당업무					
누리과정 예산집행	47.5	25.0	27.5	100.0(40)	2.56(2)
누리과정 운영관리	31.7	31.7	36.7	100.0(60)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만으로 볼 수 없다. 시·도청, 시·도의회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를 증액한 경우는 교육청하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부산,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의 협의 절차도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선출직인 교육감과 시장, 도지사가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다를 경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 도지사와 경남 교육감의 대립 상황이다. 경남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를 시도청이 직

접 편성하고, 대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연합뉴스, 2015. 11. 9)고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촉발하였다.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 운영 여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등을 조정하는 협의기구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없다는 응답이 90.0%, 있다는 응답이 10.0%로 대부분은 협의기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5〉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 유무

구분	있음	없음	계	단위: %(명)	
				χ^2	(df)
전체	10.0	90.0	100.0(100)		
소속					
교육청	16.0	84.0	100.0(50)	4.00(1)*	
지자체	4.0	96.0	100.0(50)		
직위					
별정직	16.7	83.3	100.0(42)	3.58(1)	
일반직	5.2	94.8	100.0(58)		
담당업무					
누리과정 예산집행	7.5	92.5	100.0(40)	0.94(2)	
누리과정 운영·관리	11.7	88.3	100.0(60)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올 초부터 전액 편성	9.4	90.6	100.0(32)	0.27(2)	
일부에서 전액 편성으로 바뀜	10.5	89.5	100.0(38)		
올 초부터 일부 편성	10.0	90.0	100.0(30)		
누리과정 편성 관련 갈등					
갈등 없이 순조로움	7.9	92.1	100.0(38)	0.36(2)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됨	10.3	89.7	100.0(29)		
지금도 갈등이 계속됨	12.1	87.9	100.0(33)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협의회 개최 실적

갈등 조정 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10사례 대상으로 올해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을 알아본 결과, 10사례 모두 1회라고 응답했다. 협의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갈등조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IV-3-6〉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조정을 위해 협의회 개최 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1회	평균	계
전체	100.0	1.0	100.0(10)
소속			
교육청	100.0	1.0	100.0(8)
지자체	100.0	1.0	100.0(2)
직위			
별정직	100.0	1.0	100.0(7)
일반직	100.0	1.0	100.0(3)
담당업무			
누리과정 예산집행	100.0	1.0	100.0(3)
누리과정 운영·관리	100.0	1.0	100.0(7)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누리과정 예산의 전달체계의 합리성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장, 도지사가 다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는 상설기구(운영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에 그쳤다. 울초부터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조정기구가 있다는 지자체에서 회의 개최 횟수는 1회로 나타났다. 상설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정책의 최대 당면과제라 하겠다.

3)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가) 누리과정 운영 시간 여부

정부는 누리과정을 일일 4~5시간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일일 5.15시간으로 집계되어, 대체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조사뿐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도 누리과정 일일 수업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보

고되었다.

기관종류별로는 유치원 293.7분(약 4.9시간)으로 어린이집 317.3분(약 5.3시간)보다 짧았다. 설립유형별로는 단설유치원이 271.8분(4.5시간)으로 가장 짧고, 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333분(5.6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수업시간의 차이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기본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면서, 누리과정은 기본과정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하므로 누리과정 운영시간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로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까지 걸쳐서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보다 운영시간이 길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당학급 연령별로 만 5세가 313.7분(5.23시간)으로 3, 4세 보다 길며 연령혼합학급은 308.7분(5.15시간)으로 단일연령학급에 비해 수업시간이 짧았다.

〈표 IV-3-7〉 누리과정 일일 수업시간: 교사응답

단위: %(명), 분

구분	3시간 이하	3~5 시간	5~8 시간	8시간 초과	계	평균 (표준편차)	<i>t</i> / <i>F</i>
전체	16.2	44.1	30.4	9.3	100.0(1,000)	309.2(132.3)	
기관종류							
유치원	5.1	73.9	19.2	1.7	100.0(345)	293.7(72.7)	7.25**
어린이집	22.1	28.4	36.2	13.2	100.0(655)	317.3(154.1)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88.8	11.2	0.0	100.0(19)	271.8(29.6)	3.24**
공립병설유치원	3.1	80.8	14.2	1.9	100.0(162)	296.1(67.3)	
사립법인유치원	6.5	67.8	25.6	0.0	100.0(31)	295.4(76.4)	
사립사인유치원	7.8	65.0	25.1	2.2	100.0(133)	293.4(82.0)	
국공립어린이집	18.4	31.7	34.7	15.2	100.0(110)	333.1(157.8)	
법인어린이집	18.7	27.2	38.5	15.5	100.0(220)	335.4(155.0)	
민간어린이집	25.7	28.1	35.2	11.0	100.0(325)	299.7(150.7)	
담당학급 연령							
만3세	21.2	33.7	35.1	10.0	100.0(273)	308.4(143.9)	0.21
만4세	14.9	53.9	21.9	9.3	100.0(123)	302.4(125.1)	
만5세	11.4	51.0	29.1	8.5	100.0(261)	313.7(121.5)	
혼합연령학급	16.5	43.6	30.7	9.2	100.0(342)	308.7(133.4)	

(표 IV-3-7 계속)

구분	3시간 이하	3~5 시간	5~8 시간	8시간 초과	계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규모							
대도시	18.3	40.9	30.8	10.0	100.0(413)	310.0(142.4)	
중소도시	14.5	44.8	30.6	10.1	100.0(411)	313.3(126.2)	0.90
읍면지역	15.5	50.1	28.7	5.7	100.0(176)	297.5(121.1)	
2015년							
유치원		4.86시간			100.0(987)	-	-
어린이집		4.75시간			100.0(979)	-	-
2014년							
전체		6.1시간			100.0(2,145)	-	-
유치원		5.4시간			100.0(942)	-	-
어린이집		6.6시간			100.0(1,203)	-	-
2013년							
유치원		4.8시간			100.0(1,209)	-	-
어린이집		4.2시간			100.0(1,384)	-	-
2012년							
전체		4.0시간			100.0(3,911)	-	-
유치원		3.95시간			100.0(1,685)	-	-
어린이집		4.06시간			100.0(2,226)	-	-

자료: 1) 2016년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5년;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06, p. 109.
 3)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68.
 4) 2013년;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41
 5) 2012년;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94.

** $p < .01$

나)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운영지원(비) 지출 준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에 대한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은 전년대비 다른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지원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숙·이윤진·조예운, 2016: 54).

〈표 IV-3-8〉 방과후 과정비 지원 추이변화(201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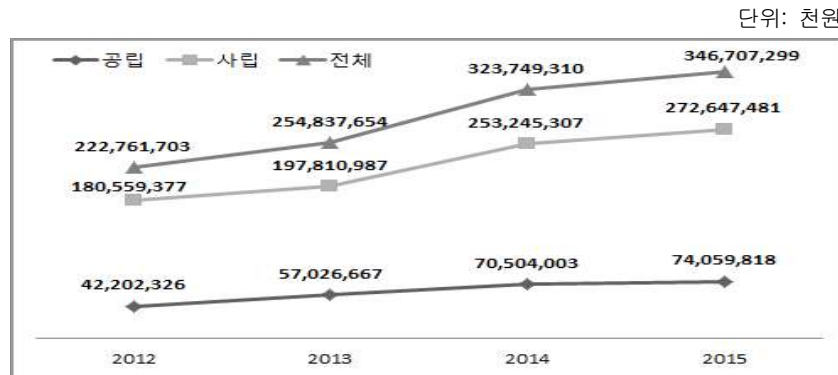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공립	42,202,326	57,026,667	70,504,003	74,059,818
사립	180,559,377	197,810,987	253,245,307	272,647,481
전체	222,761,703	254,837,654	323,749,310	346,707,299

주: 1) 2012년 자료는 일부 시도의 결산자료 제출 미비로 예산자료가 포함된 수치임.

2) 2015년 자료는 교육청 결산자료 제출(2016. 5) 결과로 15년 최종 결산 후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6). 2012-20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예결산 현황. 이상, 김정숙·이운진·조예운(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54에서 재인용.



자료: 본 연구 <표 IV-3-8>의 내용을 도식함.

[그림 IV-3-1] 방과후 과정비 지원 추이변화(2012~2015)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99.6%에 달한다. 이용률은 67.7%이다. 방과후 과정은 신청한 유아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영율과 이용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4년에 방과후 과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용률은 67.5%에서 67.7%로 0.2%만 상승하였다. 이용률의 상승폭은 적은데 비용 지원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방과후 과정비 지원 근거는 일일 8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용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을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원장 및 교사 면담결과) 이 자료가 누리과정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표 IV-3-9〉 방과후 과정 운영·이용률 추이(2006-2016)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방과후 과정 운영율	73.3	82.6	90.9	95.5	98.1	97.6	98.1	98.0	97.2	99.6
방과후 과정 이용률	25.4	28.3	36.1	44.8	52.6	47.4	62.0	62.8	67.5	67.7

주: 2015년은 자료 부재로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률 수치가 제외됨.
 자료: 1)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47.
 2) 교육부(2016a). 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현황. 이상, 김정숙·이윤진·조예운(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52에서 재인용

본 조사에서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왔다. 본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의 91.2%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병설유치원이 92.6%, 사립사인유치원이 91.2%로 공립단설과 사립법인에 비해 운영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유치원이 운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읍면,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10〉 방과후 과정 운영여부: 교사 응답

단위: %(명)

구분	운영	미운영	계	$\chi^2(df)$
전체	91.2	8.8	100.0(34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89.5	10.5	100.0(19)	2.28(3)
공립병설유치원	92.6	7.4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85.6	14.4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91.2	8.8	100.0(133)	
지역규모				
대도시	88.1	11.9	100.0(131)	2.96(2)
중소도시	94.0	6.0	100.0(143)	
읍면지역	91.4	8.6	100.0(71)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이 일일 8시간 이상이므로 먼저, 유아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유아 일일 기관이용 시간은 평균 435.9분으로 약 7.3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기관종류, 설립유형, 모 취업여부에 따른 기관 일일 이용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치원의 일일 이용시간이 어린이집보다 적으며 유치

원 중에서도 사립보다 공립의 일일 이용시간이 적었다. 국공립유치원은 일일 이용시간이 417.7분(약 7.0시간)으로 가장 적고, 법인어린이집이 462.7분(약 7.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취업모의 일일 이용시간이 길며,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읍면지역의 일일 이용시간이 도시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집의 차이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연도별 일일 이용시간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적은 것은 일관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IV-3-11〉 기관 일일 이용시간: 학부모 응답

단위: %(명), 분

구분	6시간 미만	6시간 ~ 8시간 미만	8시간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18.6	44.4	30.9	6.1	100.0(1,000)	435.9(94.7)	
기관종류							
유치원	24.5	40.2	31.8	3.5	100.0(502)	425.2(94.8)	13.06***
어린이집	12.8	48.6	29.9	8.8	100.0(498)	446.7(93.4)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7.2	35.7	35.0	2.1	100.0(142)	417.7(98.0)	4.63**
사립유치원	23.4	41.9	30.6	4.1	100.0(360)	428.1(93.5)	
국공립어린이집	12.2	50.6	27.0	10.2	100.0(128)	450.2(96.5)	
법인어린이집	9.1	42.6	33.0	15.4	100.0(89)	462.7(97.9)	
민간어린이집	14.2	49.5	30.3	6.0	100.0(281)	440.0(90.2)	
모 취업여부							
취업모	10.2	39.7	40.0	10.1	100.0(524)	466.9(95.1)	133.22***
비취업모	28.0	49.5	20.9	1.7	100.0(476)	401.8(81.6)	
자녀연령							
만 3세	16.5	47.0	29.9	6.6	100.0(323)	437.0(95.7)	0.64
만 4세	16.8	44.0	34.3	4.8	100.0(336)	439.5(88.5)	
만 5세 이상	22.5	42.2	28.4	7.0	100.0(341)	431.4(99.6)	
지역규모							
대도시	18.4	44.8	28.5	8.3	100.0(427)	435.6(97.9)	2.50
중소도시	20.6	45.6	28.4	5.5	100.0(422)	430.9(95.2)	
읍면지역	13.9	39.7	44.6	1.9	100.0(151)	450.9(82.2)	
2014년							
전체		451.8분(90.4)			-	-	-
유치원		431.2분(88.0)			-	-	-
어린이집		471.5분(88.4)			-	-	-

(표 IV-3-11 계속)

구분	6시간 미만	6시간 ~ 8시간 미만	8시간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F
2013년							
유치원		432분			-	-	-
어린이집		444분			-	-	-
2012년		427분			-	-	-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4년~2012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70.

** $p < .01$, *** $p < .001$

본 조사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502사례 중에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5%(203사례)로 절반이 채 안되며, 사립유치원의 이용 비율(39.3%)이 공립(43.7%)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비 증가 폭이 공립유치원보다 큰 것과(그림 IV-3-1 참조) 상치되는 결과이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공립보다 많아야 하는 데 본 조사에서는 다르게 나왔다.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상(203명)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일일 이용시간은 평균 478.3분(약 7.97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유치원의 일일 평균 이용시간 425.2분보다 53.1분 길고, 대략 일일 8시간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이 7.97시간이란 것은 일일 8시간이 아닌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립유치원이 평균 468.54분(약 7.80시간)으로 일일 8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은 평균 482.54분(약 8.02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일일 이용시간에서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짧았는데(표 IV-3-11 참조)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의 일일 이용 시간 결과도 이와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과정 지원비에 대해 정부 및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며, 일일 이용시간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일일 이용시간이 아니라 어린이집처럼 방과후 과정의 종료시간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표 IV-3-12〉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 학부모 응답

단위: %(명), 분

구분	이용여부		계	이용 유아의 기관 일일 평균 이용시간 (표준편차)	
	이용	미이용		계	
전체	40.5	59.5	100.0(502)	478.3분(82.2)	(203)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3.7	56.3	100.0(142)	468.5분(86.8)	(62)
사립유치원	39.3	60.7	100.0(360)	482.5분(79.6)	(141)
$\chi^2(df)$	0.81(1)			1.25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한편, 교육부는 방과후 과정 시간에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반드시 방과후 과정 시간에서만 운영”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 9)방침을 유치원에 시달하였다. 이에 대해 현장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알아보았다.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오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오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5.6%에 그쳐 교육부의 지침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오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6.9%로 나왔다.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전에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와서 이에 대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지침 준수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오후에 실시했다는 응답이 15.7%였지만, 2016년에는 10.1%로 감소하였다.

〈표 IV-3-13〉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학부모 응답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10.1	54.0	27.5	8.4	100.0(678)	
기관종류						
유치원	5.6	63.1	23.8	7.5	100.0(344)	28.74(3)***
어린이집	14.7	44.7	31.3	9.3	100.0(334)	

(표 IV-3-13 계속)

구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잘 모름	계	$\chi^2(df)$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4	64.9	25.6	7.1	100.0(97)	50.87(12)***
사립유치원	6.9	62.3	23.0	7.7	100.0(247)	
국공립어린이집	18.9	44.5	28.4	8.2	100.0(87)	
법인어린이집	26.6	45.1	21.9	6.5	100.0(59)	
민간어린이집	9.1	44.6	35.6	10.7	100.0(187)	
자녀연령						
만 3세	13.9	51.4	29.2	5.5	100.0(204)	9.14(6)
만 4세	8.3	57.9	24.6	9.2	100.0(243)	
만 5세 이상	8.7	52.2	29.0	10.1	100.0(231)	
2015년						
전체	15.7	51.8	23.5	9.0	100.0(514)	27.24(3)***
유치원	10.8	62.3	20.4	6.5	100.0(271)	
어린이집	21.2	40.2	27.0	11.7	100.0(243)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01$

그러나 교사 대상의 동일 질문에서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오후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94.2%로 높게 나왔다. 유치원은 오전에 실시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공립병설유치원은 오전에 실시한다는 응답은 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공립단설유치원에서 오전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5.7%가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학부모와 교사의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오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향성은 동일하였다.

〈표 IV-3-14〉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교사 응답

	오전	오후	오전/오후	계	$\chi^2(df)$
전체	3.3	94.2	2.5	100.0(1,000)	
단위: %(명)					
기관종류					
유치원	1.9	96.5	1.6	100.0(345)	4.43(2)
어린이집	4.1	92.9	3.0	100.0(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5.7	94.3	0.0	100.0(19)	20.43(12)
공립병설유치원	0.0	98.9	1.1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3.3	96.7	0.0	100.0(31)	

(표 IV-3-14 계속)

	오전	오후	오전/오후	계	$\chi^2(df)$
사립사인유치원	3.4	93.8	2.8	100.0(133)	20.43(12)
국공립어린이집	5.9	91.9	2.2	100.0(110)	
법인어린이집	1.3	96.6	2.0	100.0(220)	
민간어린이집	5.3	90.8	3.9	100.0(325)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이에 제일 많이 나온 오후에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94.2%(942 사례)를 대상으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알아보았다.

시작시간은 ③ 13:01~14:00가 36.0%로 가장 많았고 ② 12:01~13:00, ④ 14:01~15:00 순으로 나왔다. 종료시간은 ⑧ 14:01~15:00이 37.0%로 가장 많았고, ⑦ 13:01~14:00 ⑨ 15:01~16:00 순으로 나왔다. 그런데 기관종류와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의 시작 시간은 ③ 13:01~14:00이 62.3%로 다수를 차지했다면, 어린이집은 이보다 1시간 빠른 ② 12:01~13:00이 42.7%로 가장 많았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사인유치원이 ② 12:01~13:00에 시작한다는 응답이 20.3%로 유치원 내에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료시간에서도 ⑨ 15:01~16:00이 32.8%로 공립단설유치원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공립단설유치원의 시작시간은 ③ 13:01~14:00 ④ 14:01~15:00에 집중되어 있으며 ④ 14:01~15:00에 시작하는 비율이 설립유형 중에서 가장 많았다.

정리하자면, 어린이집의 90% 정도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작시간은 대체로 12시 이후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대체로 준수하고 하겠다. 유치원은 특성화프로그램을 반드시 방과후 과정 시간대에만 실시해야 하므로 누리과정이 끝나는 이후에 시작해야 하고 이 시간이 대체로 ③ 13:01~14:00, ④ 14:01~15:00 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치원도 특성화 프로그램의 시간을 준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사인유치원은 공립, 법인유치원에 비해 시작시간이 빠르고, 종료시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작시간이 12시 이전이 경우가 10%이상으로 나와서 설립유형별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15〉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시간: 교사 응답

단위: %(명)

구분	시작시간					종료시간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5	32.4	36.0	17.4	6.8	6.5	25.7	37.0	21.2	9.6	100.0(942)
기관종류											
유치원	1.1	13.5	62.3	20.2	2.8	0.6	14.4	46.4	25.6	13.0	100.0(333)
어린이집	10.9	42.7	21.6	15.8	9.0	9.7	32.0	31.8	18.9	7.7	100.0(609)
$\chi^2(df)$	198.42(4) ^{***}					76.45(4)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11.2	59.5	29.3	0.0	0.0	10.9	43.7	34.2	11.2	100.0(18)
공립병설유치원	0.0	9.3	69.1	19.2	2.4	0.0	16.7	57.7	18.4	7.2	100.0(161)
사립법인유치원	3.4	9.4	70.1	11.6	5.5	3.4	12.8	37.2	29.2	17.6	100.0(30)
사립사인유치원	2.2	20.3	52.1	22.4	3.0	0.8	12.3	34.5	32.8	19.6	100.0(124)
국공립어린이집	8.6	40.7	26.2	21.9	2.5	4.6	38.3	30.8	23.0	3.4	100.0(101)
법인어린이집	10.0	35.1	19.9	18.2	16.8	8.7	22.4	32.9	21.6	14.4	100.0(213)
민간어린이집	12.4	48.8	21.2	11.9	5.6	12.2	36.7	31.4	15.5	4.3	100.0(295)
$\chi^2(df)$	253.24(24) ^{***}					145.50(24) ^{***}					

주: ① 11:31~12:00 ② 12:01~13:00 ③ 13:01~14:00 ④ 14:01~15:00 ⑤ 15:00~ ⑥ 12:01~13:00 (종료) ⑦ 13:01~14:00(종료) ⑧ 14:01~15:00(종료) ⑨ 15:01~16:00(종료) ⑩ 16:00~(종료)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01$

교육부가 현장에 하달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b: 9) 방침의 준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누리과정 담당 교사 대상으로 담당 학급 중의 유아 중에서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하는 유아 1명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므로 평균적으로는 이보다 수치가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사 결과, 주당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수는 3.7개(주 5일 기관 이용), 일일 이용 개수는 1과목이라는 응답이 86.9%, 개당 최대 수업시간은 31.9분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기관종류, 설립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이용 개수가 0.1개 많았다면, 일일 이용 프로그램 개수는 2과목 이상 응답은 어린이집이 17.1%로 유치원 5.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1회 최대 수업시간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5.5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이 주당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4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2과목 이상 하는 유아의 비율은 사립법인이 유치원 중에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았다. 주당 평균 이용 개수가 3.3개로 가장 적은 것은

로 나온 공립단설유치원은 대신, 1회 최대 수업시간은 37.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대체로 프로그램을 적게 하면 시간이 길고, 많이 하면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담당학급 유아 연령별로는 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당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수가 증가하며 2과목 이상 하는 경우도 5세가 가장 많았다.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짧아지기 경향이 있으므로 5세의 최대 수업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표 IV-3-16〉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사 응답

단위: 개, %(명), 분

구분	주당 평균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개수			일일 특성화 프로그램 개수 여부			특별활동 프로그램 회당 최대 수업시간			계
	평균	표준 편차	t/F	1과목	2과목 이상	$\chi^2(d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7	1.6		86.9	13.1		31.9	9.5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3.8	1.7	0.95	94.6	5.4	26.53(1)	35.5	11.1	81.42	100.0(345)
어린이집	3.7	1.5		82.9	17.1		30.1	7.9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3.3	1.8	3.92**	94.3	5.7	37.46(6)	37.6	9.6	15.57	100.0(19)
공립병설유치원	3.4	1.4		98.3	1.7		36.2	7.5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4.3	2.2		80.9	19.1		31.9	9.7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4.1	1.7		93.3	6.7		35.3	14.7		100.0(133)
국공립어린이집	3.7	1.3		79.5	20.5		30.3	10.6		100.0(110)
법인어린이집	3.8	1.5		81.5	18.5		29.0	5.7		100.0(220)
민간어린이집	3.7	1.6		85.0	15.0		30.7	8.1		100.0(325)
담당학급연령										
만 3세	3.7	1.5	3.91**	85.6	14.4	5.69(3)	30.5	7.4	3.57*	100.0(274)
만 4세	3.9	1.4		86.0	14.0		33.4	12.4		100.0(123)
만 5세	4.0	1.6		84.2	15.8		32.6	8.4		100.0(261)
혼합연령학급	3.5	1.7		90.5	9.5		32.1	10.4		100.0(342)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1$, *** $p < .001$

“특성화 프로그램은 누리과정 참여 유아 중 특성화 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6: 9)가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가 신청(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녀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어린이집도 동일하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심화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학부모 응답결과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개설한 모든 특성화(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으나, 부분적으로 선택 가능함이 29.7%, 선택권이 없음 21.3%, 선택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15.9%로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이들이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한다면, 우리 아이만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기관에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종류별로는 유치원이(모두 선택+부분 선택, 66.8%) 어린이집보다(58.8%) 선택권이 크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선택권이 크고(72.0%), 민간어린이집이(52.1%)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7〉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학부모 선택권 여부: 학부모 응답

단위: %(명)

구분	모두 선택 가능	부분적 선택 가능	선택권 없음	선택 가능하나 어려움	계	$\chi^2 (df)$
전체	33.1	29.7	21.3	15.9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38.1	28.7	20.0	13.1	100.0(502)	13.51(3)**
어린이집	28.1	30.7	22.6	18.6	100.0(49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5.7	31.3	20.3	12.7	100.0(142)	36.17(12)***
사립유치원	39.1	27.7	19.9	13.3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33.0	39.0	12.4	15.6	100.0(128)	
법인어린이집	32.9	27.6	16.7	22.8	100.0(89)	
민간어린이집	24.2	27.9	29.1	18.7	100.0(281)	
자녀연령						
만 3세	33.1	29.3	20.6	16.9	100.0(323)	2.52(6)
만 4세	31.2	31.6	20.7	16.6	100.0(336)	
만 5세 이상	35.0	28.2	22.6	14.3	100.0(341)	
지역규모						
대도시	35.7	30.2	17.7	16.3	100.0(427)	7.13(6)
중소도시	31.7	28.3	23.7	16.2	100.0(422)	
읍면지역	29.6	32.1	24.6	13.6	100.0(151)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01$

교사 결과는 학부모에 비해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부모 선택권이 훨씬 많다고 응답하였다. 모두 선택가능하다는 응답이 75.7%로 다수를 차지하면, 선

택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12.1%로 2순위를 차지하고 부분적 선택 기능이 7.3%, 선택권 없음 4.9%로 나타나, 학부모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표 IV-3-18〉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학부모 선택권 여부: 교사 응답

단위: %(명)

구분	모두 선택 가능	부분적 선택 가능	선택권 없음	선택 가능 하나 어려움	계	$\chi^2(df)$
전체	75.7	7.3	4.9	12.1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65.3	7.1	10.5	17.2	100.0(345)	51.46(3)**
어린이집	81.1	7.4	2.0	9.4	100.0(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66.9	5.7	10.5	16.9	100.0(19)	86.41(18)**
공립병설유치원	63.3	5.9	7.2	23.6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53.4	11.8	20.8	13.9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70.4	7.5	12.0	10.1	100.0(133)	
국공립어린이집	79.5	7.0	1.2	12.4	100.0(110)	
법인어린이집	85.2	4.3	2.7	7.8	100.0(220)	
민간어린이집	78.9	9.7	1.9	9.5	100.0(325)	
담당학년 연령						
만 3세	80.8	7.0	1.6	10.6	100.0(273)	25.42(9)**
만 4세	73.6	7.2	3.1	16.1	100.0(123)	
만 5세	76.2	5.0	9.0	9.8	100.0(261)	
혼합연령학급	71.9	9.4	5.1	13.6	100.0(342)	
지역규모						
대도시	84.7	4.9	4.7	5.7	100.0(413)	40.54(6)**
중소도시	70.9	8.1	4.6	16.3	100.0(411)	
읍면지역	65.6	10.9	6.1	17.4	100.0(176)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01$

지금까지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의 전략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고찰하였다. 결과, 공통과정 제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과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과후 과정(비) 정부 지침 준수는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이란 성과목표에 해당되는 2개의 핵심성과지표는 미달성으로 평가되었고, 공통과정이 정부 계획대로 제정되어 달성하였으나, 제정 소요 시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나와서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4. 학습 및 성장 관점

이 절에서는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누리과정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BSC 모델에서 학습과 성장 관점에는 중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정책이 안착,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등이 속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한 기반으로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인적자원(유아 및 교사) 역량 강화,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은 아래의 <표 IV-4-1>과 같다.

<표 IV-4-1> 학습 및 성장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핵심성과지표

관점	전략 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설문 조사	문헌 조사	면담
학습 및 성장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	○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	교, 공	-	-
	인적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의 유아 발달 도움 정도	교	○	-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	○	-
		교사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교	○	-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교, 공	-	-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교	○	-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내용, 방법, 대상범주)	-	○	-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	○	-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	○	-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	○	-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학, 교, 공	-	-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학	-	-

주: 측정방법에서 학: 학부모, 공: 공무원, 교: 교사, 원: 원장을 뜻함.

가.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1)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을 2011년에 개정하였다.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정부는 후속조치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9. 30).

먼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V-4-2〉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p>② 제1항 각 호 외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p>

(표 IV-4-2 계속)

현행	개정안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29조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의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1. 9. 30).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pp. 46.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 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정·공포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할 것(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9. 30: 2)을 발표하였다.

〈표 IV-4-3〉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p>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장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p> <p>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1. 9. 30).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pp. 10-11.

이듬해인 2012년에는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운영시간에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삭제하고 “방과후 과정”이란 용어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아 무상교육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고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 2. 27: 1-2). 또한,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기준 재정수요액의 추정항목·추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정하였다(하봉운, 2016: 50).

〈표 IV-4-4〉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조(정의) _____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2조(학년도 등) ① (생략)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학년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_____ 방과후 과정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 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법 또는 상위 법률과 상충 내지는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 지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세 누리과정 발표, 공통과정 제정, 시행의 기간이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 검토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

누리과정 예산 편성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예산 편성의 안정화는 누리과정 정책 안정화를 의미한다. 올해 초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누리과정 교사 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기도 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으로 시끄러울 때 3개월 동안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30만원을 받지 못했어요. 3개월 뒤에 한꺼번에 받았어요. 내년에도 이러한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아 솔직히 불안하죠(교사면담 사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16. 10. 6)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쟁점으로 남아있다.¹²⁾ 본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누리과정 정책 개선사안으로 교사와 공무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1순위로 꼽았다.¹³⁾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는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대 당면과제로 남아있다.

나. 인적자원 역량 강화

1) 유아의 역량 강화

가) 누리과정의 유아 발달 도움 정도

정부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할 당시, 누리과정의 목적으로 ‘3~5세

12) 국회는 지난 12월 2일에 향후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비율의 78%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켰다(대한민국국회 보도자료, 2016. 12.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16. 12. 6). 즉, 2017년부터 3년 동안은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78:22로 분담하게 되었다.

13)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V장 5절에서 다룬다.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누리과정 구성 방향을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7. 6).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이러한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사들은 창의인성 교육과 우리문화 이해교육, 유아 연령별 발달 특성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누리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의 연계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1.94점으로 나타나 누리과정과 0~2세 표준보육의 연계성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우리문화 이해교육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 보다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외의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의인성 교육은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잘 반영되고 있었으며, 우리문화 이해교육에서는 공립병설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은 창의인성 교육, 우리문화 이해교육, 유아 연령별 발달 특성은 대체로 잘 반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측면에서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반영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취학전 유아의 교육·보육이 향후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6. 12) 달성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리과정이 0-2세의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5〉 누리과정 구성 방향 반영도

단위: 점(4점)

구분	창의인성 교육	우리문화 이해교육	유아 연령별 발달 특성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의 연계	0-2세 표준보육과 정과의 연계
전체	3.24	3.25	3.30	3.07	1.94
기관종류					
유치원	3.29	3.31	3.29	3.08	-
어린이집	3.21	3.22	3.31	3.07	1.94
<i>t</i>	3.44	4.15*	0.16	0.02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3.28	3.10	3.31	2.83	-
공립병설유치원	3.37	3.35	3.27	3.04	-
사립법인유치원	3.08	3.27	3.19	3.10	-
사립사인유치원	3.25	3.29	3.33	3.15	-
국공립어린이집	3.30	3.39	3.46	3.08	1.97
법인어린이집	3.14	3.21	3.31	3.04	2.14
민간어린이집	3.23	3.17	3.26	3.08	1.80
<i>F</i>	2.23*	2.68*	1.22	0.64	0.97
누리과정 담당횟수					
1회	3.18	3.19	3.24	2.90	1.87
2회	3.23	3.20	3.33	3.02	2.33
3회	3.19	3.24	3.33	3.13	1.97
4회	3.15	3.30	3.36	3.09	2.10
5회	3.33	3.28	3.29	3.14	1.61
<i>F</i>	2.50*	1.12	0.74	3.12*	1.61
총 교사 경력					
4년 미만	3.19	3.25	3.29	3.05	2.27
4-7년 미만	3.19	3.21	3.21	2.96	1.87
7-10년 미만	3.24	3.23	3.29	3.08	1.75
10-15년 미만	3.28	3.28	3.37	3.12	1.96
15년 이상	3.27	3.27	3.33	3.12	1.99
<i>F</i>	0.74	0.36	1.23	1.44	0.88

주: 1)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는 어린이집 교사(n=644)만 응답하였음.

2)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이 잘 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선행연구를 통해 누리과정이 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림·이미화·오유정의 연구(2013)에서는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이미화 외, 201

2)14)를 활용하여 유아 변인, 기관 및 교사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포함하여 5세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유아 발달의 효과성을 사전(4월), 사후조사(10월) 점수를 반복 측정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 기관, 교사 변인에 따라 누리과정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 가정의 5세 유아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유아보다 누리과정을 통해 더 많은 성취 및 발달적인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7). 아래의 <표 IV-4-6>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시기(사전, 사후)와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에 따른 주효과 뿐만 아니라 측정시기와 저소득 가정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와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누리과정 적용 후에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저소득 가정의 유아보다 그렇지 않은 유아의 점수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사전조사에서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에 따라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사후조사에서는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누리과정을 배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과의 성취 및 발달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누리과정의 목표인 '생애출발선 평등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4-6>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이정림 외, 2013)
단위: 점(3점)

저소득 가정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6	0.37	2.56	0.35
비해당	2.37	0.37	2.56	0.34
해당	2.25	0.45	2.53	0.39
<i>F</i>	측정시기 169.04***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 8.19***	
	측정시기 × 저소득 가정 6.06*			

주: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함.

자료: 이정림 외(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p. 44.

* $p < .05$, *** $p < .001$

14)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하며,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정림 외, 2013: 24).

<표 IV-4-8> 전체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이정림 외, 2013)
단위: 점(3점)

전체 설립유형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6	0.38	2.56	0.35	
유치원	공립	2.30	0.38	2.60	0.32
	사립	2.42	0.35	2.60	0.32
어린이집	국공립	2.41	0.42	2.57	0.38
	민간	2.29	0.39	2.48	0.38
	사회복지법인	2.22	0.43	2.43	0.42
	법인·단체등	2.10	0.26	2.50	0.39
<i>F</i>	측정시기 280.84***		전체 설립유형 15.22***		
	측정시기 × 전체 설립유형 3.76**				

자료: 이정림 외(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p. 86.
** $p < .01$, *** $p < .001$

이정림·최효미·정주영·오유정·이정아(2014)는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15)」(이미화 외, 2013)를 활용하여 누리과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1차분 모형(16)을 통해 사전(4월), 사후(10월) 누리과정 관찰척도 점수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누리과정의 효과를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연령별 사전·사후조사 누리과정 관찰척도 점수는 아래의 <표 IV-4-9>과 같다. 3~5세 모든 연령에서 누리과정을 배우기 전(4월) 보다 누리과정을 배운 후(10월)의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9> 연령별 누리과정 관찰척도 사전·사후조사 평균 점수(이정림 외, 2014)
단위: 점(3점)

구분	전체	영역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3세	사전조사	2.26	2.35	2.28	2.25	2.13	2.29
	사후조사	2.46	2.54	2.46	2.45	2.34	2.51
4세	사전조사	2.26	2.37	2.37	2.28	2.06	2.22
	사후조사	2.46	2.54	2.55	2.47	2.30	2.46

15)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하는 척도임(이정림 외, 2014: 25). 3세의 경우 63문항, 4세의 경우 67문항, 5세의 경우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정림 외, 2014: 25).

16) “동일한 개인에 대하여 두 개의 시점에 걸친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두 시점 사이의 변화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는 모형”임(이정림 외, 2014: 42).

(표 IV-4-9 계속)

구분	전체	영역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세	사전조사	2.30	2.51	2.40	2.31	2.08	2.18
	사후조사	2.53	2.67	2.59	2.52	2.38	2.48

자료: 이정림 외(2014).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분석 연구. pp. 60-61, 91-92, 120의 표를 재구성함.

이이서 동일 연구에서 사전, 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만 3~5세 모든 연령에서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수 효능감 점수 변화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이 사전, 사후 누리과정 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전 조사에서 남아들은 여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사후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점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사전, 사후 점수의 증가폭이 높았으며, 특히 5세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4세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3세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의 점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향상도 유아들의 사전, 사후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유아의 누리과정 관찰척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0>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정림 외, 2014)

영역		5세 (<i>n</i> =1,056)	4세 (<i>n</i> =850)	3세 (<i>n</i> =1,029)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0620***	0.0736***	0.0690***
기관유형	국공립유치원	0.2217***	0.2116***	0.1976***
	사립유치원	0.1972***	0.1656***	0.1674***
	국공립어린이집	0.2048***	0.1030***	0.166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0.1482***	0.1801***	0.1682***
	법인·단체등어린이집	0.1360***	0.0894	0.2286***
	직장어린이집	0.1934***	0.2004***	0.1515***
교사 특성	교수효능감D	0.0521***	0.0704***	0.0396
	교사-유아상호작용D	0.0705***	0.0520***	0.0404*

주: 1) 패널 1차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임.
 2)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3) 각각의 변수들 뒤에 D가 붙은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로, 변화량의 효과를 나타냄.

자료: 이정립 외(2014).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분석 연구. p. 80, 110, 137의 표를 재구성함.

* $p < .05$, *** $p < .001$

나)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장혜진·김은설·상경아·송신영(2013)은 만 5세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기초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5세 누리과정 이용 유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기초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누리과정 이용 집단 유아의 학교 적응 점수는 3.87점, 누리과정 미이용 집단 유아의 점수는 3.91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장혜진 외, 2013: 68). 그러나 누리과정 이용 여부에 따른 학교 적응 정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개인 변인별, 지역규모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혜진 외의 연구(2013)에서는 유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부모의 학력과 누리과정 이용 여부의 주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누리과정 이용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4-11>과 <표 IV-4-12>에서 볼 수 있듯이 5세 누리과정 이용 집단의 경우, 부모 학력에 따른 누리과정 점수 차이가 누리과정 미이용 집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유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누리과정의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IV-4-11> 부 학력과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이원분량분석: 학교적응(장혜진 외, 2013)

단위: 점

부 학력	누리과정 유		누리과정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졸이하	3.69	0.75	3.14	1.04
전문대졸	3.85	0.69	3.44	1.06
4년제대졸이상	4.02	0.68	4.10	0.70
<i>F</i>	부 학력 4.35*		누리과정 여부 12.62***	
	부 학력 × 누리과정 여부 3.39*			

자료: 장혜진 외(2013). 5세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 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94.

* $p < .05$, *** $p < .001$

〈표 IV-4-12〉 모 학력과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이원분량분석: 학교적응(장혜진 외, 2013)
단위: 점

모 학력	누리과정 유		누리과정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졸이하	3.70	0.76	3.14	1.04
전문대졸	3.84	0.67	3.68	0.78
4년제대졸이상	4.05	0.67	4.12	0.73
<i>F</i>	모 학력 3.22 ⁺		누리과정 여부 12.83 ^{***}	
	모 학력 × 누리과정 여부 2.64 ⁺			

자료: 장혜진 외(2013). 5세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 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96.
* $p < .05$, *** $p < .001$

다음으로는 유아의 학교적응에 대해 부모 우울의 주효과와 부모 우울과 누리과정 이용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누리과정 이용 여부와 부모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의 우울이 유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누리과정의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누리과정 이용 집단 유아의 경우 부모의 우울에 따른 학교 적응의 점수 차이가 누리과정 미이용 집단의 유아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IV-4-13〉 부모 우울과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이원분량분석: 학교적응(장혜진 외, 2013)
단위: 점

부모 우울	누리과정 유		누리과정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상	3.90	0.71	4.00	0.73
경도/중증도	3.79	0.72	4.29	0.64
중도	3.52	0.78	2.52	0.74
<i>F</i>	부모 우울 14.68 [*]		누리과정 여부 0.86	
	부모 우울 × 누리과정 여부 6.42 ^{**}			

자료: 장혜진 외(2013). 5세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 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101.
* $p < .05$, ** $p < .01$

이 외에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주 효과와 지역규모와 누리과정 이용 유무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읍면지역인 경우 누리과정 이용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 점수 차이가 대도시 지역의 거주하는 유아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진 외, 2013: 9). 종합해보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우울 정도, 거주 지역규모가 유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누리과정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학력이 낮을 경우,

부모의 우울 수준이 높을 경우,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이른바 취약 계층에게서 누리과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낮은 학력과 높은 우울 수준, 작은 지역규모가 유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누리과정이 중재함으로서 누리과정이 생애출발점 평등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장혜진 외(2013)의 조사참여자 1,744명 중 96.5%가 누리과정에 참여하였고, 3.5%가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표본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가 상이하고, 단기간의 사전·사후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효과성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누리과정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의 역량 강화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정도, 누리과정 교사 연수 이수 및 연수의 적절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1. 18)에 따르면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급 대책으로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2급, 특수교육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며, 1·2급 자격 소지자가 없는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에게 최상위 소지 자격증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 1급이 44.4%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정교사 1급이 24.7%, 유치원 정교사 2급이 27.1%, 어린이집 원장이 2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진 외(2014: 160)의 연구에서 나타난 최상위 소지 자격증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표본 대상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부처에 연도별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수준을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415>, <표 IV416>와 같다.

〈표 IV-4-14〉 최상위 소지 자격증(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수석 교사	유치원 정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 1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3급	사례 수
전체	1.9	2.5	0.6	24.7	27.1	26.3	44.4	13.9	0.3	(1,000)
기관종류										
유치원	2.6	5.4	0.8	59.8	29.9	19.9	18.4	18.2	0.8	(345)
어린이집	1.5	1.0	0.4	6.2	25.6	29.6	58.0	11.7	0.0	(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4.8	0.0	61.8	33.4	21.5	30.7	33.4	0.0	(19)
공립병설유치원	0.6	0.0	0.0	77.5	21.4	17.4	21.4	13.1	1.1	(162)
사립법인유치원	5.8	18.3	0.0	43.8	28.8	32.7	18.2	28.7	0.0	(31)
사립사인유치원	4.7	9.0	2.2	41.7	40.1	19.7	13.1	19.8	0.8	(133)
국공립어린이집	2.3	0.0	1.4	6.7	39.8	35.5	54.5	7.0	0.0	(110)
법인어린이집	0.4	0.4	0.5	7.8	32.0	29.6	57.3	13.1	0.0	(220)
민간어린이집	2.0	1.8	0.0	4.9	16.5	27.6	59.7	12.3	0.0	(325)
2014										
전체	0.7	1.0	0.7	29.4	34.4	17.1	33.6	27.4	0.1	(2,145)

자료: 1)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2014년: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160.

교육부 내부자료(2016)에 의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 변화는 아래와 같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정교사 1급과 정교사 2급이 약 90%이상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정교사 1급(약 56~69%)이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정교사 2급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자격의 비율은 약 0.3% 정도로 극소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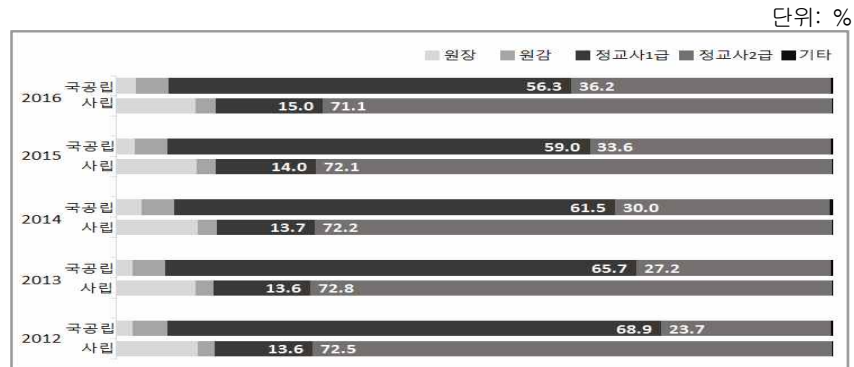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정교사 1급과 정교사 2급이 약 85% 이상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과 다르게 사립유치원에서는 정교사 2급(약 70% 이상)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타 자격의 비율은 0.1% 미만으로 매우 근소하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15>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유치원)

단위: 명(%)

구분	전체	원장	원감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기타	
2016	국공립	13,412	370(2.76)	600(4.47)	7,550(56.29)	4,854(36.19)	38(0.28)
	사립	39,511	4,367(11.05)	1,127(2.85)	5,908(14.95)	28,091(71.10)	18(0.05)
2015	국공립	12,619	327(2.59)	574(4.55)	7,439(58.95)	4,244(33.63)	35(0.28)
	사립	38,379	4,291(11.18)	1,035(2.70)	5,378(14.01)	27,652(72.05)	23(0.06)
2014	국공립	11,931	411(3.44)	560(4.69)	7,340(61.52)	3,578(29.99)	42(0.35)
	사립	36,599	4,160(11.37)	957(2.61)	5,023(13.72)	26,430(72.22)	29(0.08)
2013	국공립	10,997	245(2.23)	510(4.64)	7,228(65.73)	2,990(27.19)	24(0.22)
	사립	35,129	3,871(11.02)	877(2.50)	4,774(13.59)	25,576(72.81)	31(0.09)
2012	국공립	9,969	221(2.22)	492(4.94)	6,868(68.89)	2,358(23.65)	30(0.30)
	사립	32,266	3,643(11.29)	797(2.47)	4,385(13.59)	23,399(72.52)	42(0.13)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6b). 유치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변화.



자료: 본 연구 <표 IV-4-15>의 내용을 도식함.

[그림 IV-4-1]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이후 보육교사 3급 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보육교사 3급의 비율이 2.01%였지만, 2016년 현재는 0.02%로 극소수로 나타났다. 또한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2급의 비율보다 보육교사 1급의 비율이 대략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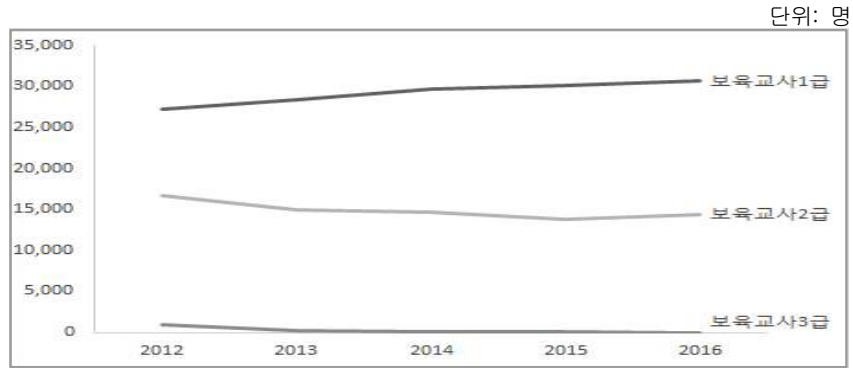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사 자격 강화 수준을 정리해보면, 부처가 제시한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의 자격 수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급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V-4-16〉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어린이집)

구분	단위: 명(%)				
	전체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기타
2016	45,419	30,651(67.48)	14,396(31.70)	7(0.02)	365(0.80)
2015	44,218	30,066(67.99)	13,779(31.16)	23(0.05)	350(0.79)
2014	44,807	29,689(66.26)	14,711(32.83)	40(0.09)	367(0.82)
2013	43,922	28,397(64.65)	14,887(33.89)	285(0.65)	353(0.80)
2012	44,846	27,174(60.59)	16,627(37.08)	900(2.01)	145(0.32)

주: 기타에는 누리장애아반 특수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d).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변화.



자료: 본 연구 <표 IV-4-16>의 내용을 도식함.

[그림 IV-4-2]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급수) 변화(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개선되었음'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의 비율도 24.1%로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보다 '대체로 개선되었음'에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평균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공립단설유치원 교사의 경우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의 응답 비율이 다른 설립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법인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교사는 '대체로 개선되었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누리과정 정책 도입으로 교사의 전

문성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립병설유치원 교사의 평균 점수는 2.7점으로 낮은 수준의 개선 정도를 응답하였다.

〈표 IV-4-17〉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교사 전문성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었음	많이 개선되었음	사례수	$\chi^2(df)$	평균	t/F
전체	2.7	24.1	59.0	14.1	(1,000)		28	
기관종류								
유치원	4.7	25.2	56.0	14.2	(345)	8.39(3)*	28	2.65
어린이집	1.7	23.6	60.6	14.1	(655)		29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37.3	41.7	21.1	(19)	36.78(18)*	28	2.12*
공립병설유치원	7.8	24.0	54.5	13.7	(162)		27	
사립법인유치원	0.0	24.6	69.5	5.8	(31)		28	
사립사인유치원	2.7	25.0	56.6	15.8	(133)		29	
국공립어린이집	0.0	16.5	65.4	18.1	(110)		3.0	
법인어린이집	1.6	21.1	64.0	13.3	(220)		29	
민간어린이집	2.4	27.7	56.7	13.2	(325)		28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나)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3~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 급여 수준(처우 개선비 인상), 행정 업무 경감, 교사의 안정적 고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교사들에게 급여 수준에 대한 개선 정도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개선되었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의 비율도 31.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급여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음'의 응답 비율(18.6%)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 '대체로 개선되었음'의 응답 비율(50.1%)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평균 점수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2.9점으로 교사 급여 수준의 개선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에 반해 공립단설유치원교사들은 급여 수준의 개선 정도를 2.3점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혀 개선되지 않음'의 응답 비율(31.4%)이 다른 설립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급여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8〉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교사 급여 수준(처우 개선비 인상)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었음	많이 개선되었음	사례수	$\chi^2(df)$	평균	tF
전체	11.6	31.1	48.1	9.2	(1,000)		26	
기관종류								
유치원	18.6	28.7	44.3	8.4	(345)	25.64(3) ^{***}	24	12.52 ^{***}
어린이집	7.9	32.3	50.1	9.7	(655)		26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31.4	15.3	48.5	4.8	(19)	53.62(18) ^{***}	23	4.83 ^{***}
공립병설유치원	18.7	28.9	44.5	7.9	(162)		24	
사립법인유치원	13.8	30.3	55.9	0.0	(31)		24	
사립사인유치원	17.9	29.9	40.7	11.5	(133)		25	
국공립어린이집	1.9	26.5	54.3	17.3	(110)		29	
법인어린이집	6.0	33.6	52.0	8.4	(220)		26	
민간어린이집	11.1	33.5	47.5	7.9	(325)		25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01$

행정 업무 경감 측면에서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1.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혀 개선되지 않음'과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의 응답 비율이 약 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설립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행정 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히 공립단설유치원, 공립병설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행정 업무 경감의 개선도를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4-19〉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행정 업무 경감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음	많이 개선 되었음	사례수	$\chi^2(df)$	평균	t/F
전체	40.5	39.9	16.5	3.0	(1,000)		1.8	
기관종류								
유치원	41.4	38.8	16.2	3.5	(345)	0.67(3)	1.8	0.00
어린이집	40.1	40.5	16.7	2.7	(655)		1.8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52.4	26.8	16.0	4.8	(19)	36.30(18)**	1.7	3.12**
공립병설유치원	48.5	37.3	9.5	4.8	(162)		1.7	
사립법인유치원	26.7	44.5	28.8	0.0	(31)		2.0	
사립사인유치원	34.7	41.1	21.5	2.7	(133)		1.9	
국공립어린이집	34.8	35.5	25.3	4.3	(110)		2.0	
법인어린이집	36.7	41.5	18.7	3.1	(220)		1.9	
민간어린이집	44.1	41.5	12.4	1.9	(325)		1.7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다음으로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사의 안정적 고용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교사의 안정적 고용 측면에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안정적 고용 측면에서 기관종류 및 설립 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20〉 누리과정 도입 이후 개선 정도_교사의 안정적 고용

단위: %, (명), 점(4점)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음	많이 개선 되었음	사례 수	$\chi^2(df)$	평균	t/F
전체	7.0	27.1	48.8	17.0	(1,000)		2.8	
기관종류								
유치원	9.0	23.8	47.3	19.9	(345)	7.65(3)	2.8	0.41
어린이집	6.0	28.8	49.6	15.5	(655)		2.7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15.1	21.9	31.6	31.4	(19)	27.82(18)	2.8	1.87
공립병설유치원	11.3	21.5	47.6	19.6	(162)		2.8	

(표 IV-4-20 계속)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음	많이 개선 되었음	사례 수	$\chi^2(df)$	평균	<i>tF</i>
사립법인유치원	8.6	31.5	51.3	8.6	(31)	27.82(18)	2.6	1.87
사립사인유치원	5.3	25.1	48.2	21.4	(133)		2.9	
국공립어린이집	4.1	22.8	52.2	20.9	(110)		2.9	
법인어린이집	5.9	26.5	49.9	17.6	(220)		2.8	
민간어린이집	6.8	32.4	48.5	12.3	(325)		2.7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교사뿐 아니라 누리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사 지원 변화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2.54점)와 누리과정 실시 이후 교사의 처우 향상(2.51점)에 대해 2점 '별로 그렇지 않다'와 3점 '대체로 그렇다'의 중간 점수로 나타났다. 다양한 교사 연수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 2.70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지역규모, 소속,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21〉 누리과정 교사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점(4점)

구분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의 적정성	다양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처우 향상
전체	2.5	2.7	2.5
지역 규모			
대도시	2.4	2.6	2.5
중소도시	2.9	2.9	2.7
읍면도시	2.2	2.6	2.4
<i>F</i>	0.15	1.27	0.04
소속			
교육청	2.5	3.1	2.40
지자체	-	2.3	2.60
<i>F</i>	-	0.23	1.44
직위			
별정직	2.4	3.1	2.4
일반직	3.1	2.4	2.6
<i>F</i>	0.64	0.00	3.20

(표 IV-421 계속)

구분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의 적정성	다양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처우 향상
담당 업무			
누리과정 예산 집행	3.6	2.5	2.7
누리과정(공통과정 운영 및 관리 업무)	2.4	2.9	2.3
기타	2.5	2.0	3.3
<i>F</i>	1.42	0.80	1.50
누리과정 업무 담당 기간			
1년 미만	2.2	2.5	2.4
1~2년 미만	2.9	2.8	2.7
2년 이상	2.8	3.2	2.5
<i>F</i>	1.89	0.09	1.4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은 시·도청 소속 공무원만 응답하였고,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의 적정성'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응답하였음.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정도에 대한 교사와 공무원 조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사 급여 수준(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 교사의 안정적 고용, 교사 처우 향상, 다양한 연수 실시 등이 대체로 개선 및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역량 강화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업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누리과정 교사의 역량 강화는 다양한 교사 연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에게 현재까지 참여한 누리과정 연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86.9%가 집합연수를 이수하였고, 65.4%가 원격연수에 참여하였으며, 16.9%가 추가연수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비율은 1.7%로 이윤진 외(2015: 163)의 연구에서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의 비율(1.5%)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윤진 외(2015)의 연구와 본 연구의 표본 대상과 크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의 한계가 있다.

〈표 IV-4-22〉 누리과정 연수 이수(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집합연수	원격연수	추가연수	이수하지 않음	사례수
전체	86.9	65.4	16.9	1.7	(1,000)
기관종류					
유치원	81.5	70.2	22.4	1.0	(345)
어린이집	89.8	62.9	14.0	2.1	(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73.7	57.4	35.9	0.0	(19)
공립병설유치원	80.7	70.9	24.2	0.6	(162)
사립법인유치원	83.0	66.0	23.5	8.5	(31)
사립사인유치원	83.2	72.2	18.0	0.0	(133)
국공립어린이집	87.5	61.3	20.8	1.9	(110)
법인어린이집	88.3	64.8	17.4	2.7	(220)
민간어린이집	91.6	62.2	9.5	1.7	(325)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016년도에 이수한 누리과정 연수를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 시·도교육청 주최 연수(17.7%)가 가장 많았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11.5%),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주최(7.3%), 지자체 주최 연수(3.6%)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도에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누리과정 교사 연수 이수자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표 IV-4-24>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 2013년에는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집합연수가 실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3. 2. 20)에 따르면 중앙연수 이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집합연수와 원격연수가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신규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한해서만 원격연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연수 이수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 주최 교육을 많이 이수하였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연수를 많이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연수가 이원화 체계하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23〉 2016년 주최별 연수 이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자체	기타	이수하지 않음	사례수
전체	7.3	17.7	11.5	3.6	1.3	65.1	(983)
기관종류							
유치원	7.3	34.8	1.9	5.2	1.2	56.6	(341)
어린이집	7.3	8.5	16.6	2.8	1.3	69.6	(641)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4.8	26.3	0.0	5.5	5.7	68.0	(19)
공립병설유치원	9.2	42.6	1.8	7.1	0.6	48.2	(162)
사립법인유치원	9.8	32.8	2.9	9.3	0.0	52.1	(29)
사립사인유치원	4.8	27.0	2.2	2.0	1.4	66.1	(133)
국공립어린이집	11.0	12.0	24.5	3.8	1.5	62.1	(108)
법인어린이집	5.0	9.0	16.7	3.3	1.9	69.3	(214)
민간어린이집	7.5	7.1	13.9	2.1	0.9	72.3	(319)

주: 현재까지 누리과정 연수를 한번이라도 이수한 교사(n=983)를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표 IV-4-24〉 누리과정 교사(원장) 연수 이수자 현황(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수 이수자	36,991	52,427	23,154	22,262	16,554

주: 2012년은 11~12월에 이루어진 연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e).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원장) 연수 이수자 현황.

라)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

누리과정 연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의 적절성도 매우 중요하다.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설 외(2012)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적절성을 연수 내용, 시간, 방법, 장소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연수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되었으며 특히, 연수 내용에 대한 적절성(7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의 수준(65.5%)과 실제 적용에의 도움(64.7%)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연수 시기의 적절성은 4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4-25〉 집합연수의 적절성(김은설 외, 2012)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연수 내용이 적절하였음	7.5	64.7	26.2	1.5	0.1	100.0(3,873)
연수 시간이 적절하였음	12.5	46.5	36.6	3.4	1.0	100.0(3,873)
연수 시기가 적절하였음	13.4	32.9	45.1	7.0	1.7	100.0(3,873)
연수 방법이 적절하였음	13.1	48.6	35.3	2.3	0.7	100.0(3,873)
강의 수준이 적절하였음	14.5	51.0	31.9	1.9	0.6	100.0(3,873)
교육 장소가 적절하였음	16.1	44.8	34.0	3.8	1.3	100.0(3,873)
실제적용에 도움이 되었음	13.9	50.8	31.8	2.1	1.4	100.0(3,873)

자료: 김은설 외(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p. 84.

원격연수도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실시된 것으로 응답되었다. 집합연수와 마찬가지로 원격연수 시기의 적절성이 45.8%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연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이 61.2%, 연수 방법에 대한 적절성이 6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4-26〉 원격연수의 적절성(김은설 외, 2012)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연수 내용이 적절하였음	9.2	52.0	37.7	1.0	0.1	100.0(3,899)
연수 시간이 적절하였음	12.7	40.4	44.6	2.1	0.3	100.0(3,899)
연수 시기가 적절하였음	9.7	36.1	44.8	8.6	0.8	100.0(3,899)
연수 방법이 적절하였음	13.3	47.7	36.0	2.7	0.3	100.0(3,899)
강의 수준이 적절하였음	11.6	45.0	40.2	2.8	0.4	100.0(3,899)
교육 장소가 적절하였음	13.3	41.5	42.8	2.1	0.3	100.0(3,899)
실제적용에 도움이 되었음	14.1	40.7	43.2	1.5	0.4	100.0(3,899)

자료: 김은설 외(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p. 84.

양미선·이규림·윤지연(2014)의 연구에서도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이수한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집합연수 기간, 강의시간 배정 및 운영, 강의과목 및 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집합연수의 적절성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집합연수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균 점수를 4점 척도로 환산했

을 때, '이론과 실제 구성'이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강사의 전문성', '강의과목 선정',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이 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유치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집합연수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이론과 실제 구성'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강사의 전문성' 및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모두 집합연수에서 '이론과 실제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27〉 집합연수의 적절성(양미선 외, 2014)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유치원						
교육내용 및 교육 양 고려한 연수기간	0.8	12.9	78.8	7.5	100.0(915)	2.9
영역별 강의시간 배정 및 운영	0.2	12.3	78.7	8.8	100.0(915)	3.0
강의과목 선정	-	5.8	82.0	12.2	100.0(915)	3.1
이론과 실제 구성	0.6	28.7	63.0	7.8	100.0(915)	2.8
교재구성의 충분성	0.3	18.7	73.0	7.9	100.0(915)	2.9
강의용 PPT와 강의내용의 충실성	0.2	8.7	78.5	12.7	100.0(915)	3.0
강사의 전문성	0.2	6.2	80.2	13.5	100.0(915)	3.1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	-	3.9	79.2	16.9	100.0(915)	3.1
어린이집						
교육내용 및 교육 양 고려한 연수기간	1.9	13.8	76.9	7.3	100.0(993)	2.9
영역별 강의시간 배정 및 운영	1.0	17.1	76.5	5.4	100.0(993)	2.9
강의과목 선정	0.1	4.5	89.1	6.3	100.0(993)	3.0
이론과 실제 구성	2.4	28.9	63.9	4.8	100.0(993)	2.7
교재구성의 충분성	1.0	19.9	73.6	5.5	100.0(993)	2.8
강의용 PPT와 강의내용의 충실성	0.7	8.5	83.1	7.7	100.0(993)	3.0
강사의 전문성	0.2	4.4	84.0	11.4	100.0(993)	3.1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	0.1	3.0	84.2	12.6	100.0(993)	3.1

자료: 양미선·이규림·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84.

양미선 외(2014)의 연구에서 원격연수의 적절성을 강의시간, 강의 내용, 강사의 전문성,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정성, 자료의 일치성, 시스템의 편리성 등으로 살펴보았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의 적절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

성'과 '과목별 목적에 맞는 강의내용 구성'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과목별 강의시간 배정'과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전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의 전문성'과 '자료의 일치성'의 적절성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많았다.

〈표 IV-4-28〉 원격연수의 적절성(양미선 외, 2014)

단위: %(명), 점(4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유치원						
과목별 강의시간 배정	0.4	9.4	80.4	9.8	100.0(797)	3.0
과목별 목적에 맞는 강의내용 구성	0.2	3.5	84.6	11.7	100.0(797)	3.1
강사의 전문성	-	4.2	78.8	17.0	100.0(797)	3.1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전성	0.7	10.5	70.3	18.5	100.0(797)	3.1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성	-	2.6	77.8	19.5	100.0(797)	3.2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	1.2	12.1	72.1	14.6	100.0(797)	3.0
어린이집						
과목별 강의시간 배정	0.5	13.6	80.3	5.6	100.0(702)	2.9
과목별 목적에 맞는 강의내용 구성	0.6	2.4	88.9	8.1	100.0(702)	3.0
강사의 전문성	0.1	1.9	86.8	11.2	100.0(702)	3.1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전성	1.4	14.3	73.0	11.3	100.0(702)	2.9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성	0.2	1.7	86.3	11.8	100.0(702)	3.1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	0.2	8.3	81.9	9.5	100.0(702)	3.0

자료: 양미선 외(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91.

김은설 외(2012)와 양미선 외(2014)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은 집합연수의 강의 수준, 강사의 전문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은설 외(2012)의 연구에서는 집합연수가 실제 적용에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양미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제 구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원격연수의 경우 김은설 외(2012), 양미선 외(2014)의 연구 모두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 내용의 적절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김은설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연수 방법에 대한 적절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양미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안전성,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 등의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의 적절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볼 때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모두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2012년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유치원 취원아 수 증가에 대비하여 유치원 수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학급당 정원 조성, 병설 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신설 등을 통해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 22).

1) 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가)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누리과정 도입 전후로 공립단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4-29>와 같다. 공립단설유치원의 기관수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급 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유치원 수 대비 공립단설유치원 수의 비율은 2011년 1.73%에서 2016년 현재 3.39%까지 증가하였다. 공립단설유치원 학급 수도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치원 학급 수 대비 공립단설유치원 학급 수의 비율도 2011년 3.30%에서 6.43%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당시 계획하였던 26개 단설유치원 신설 및 163학급 증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 22)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29> 공립단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 추이

단위: 개원, 학급수, %

구분	기관수			학급 수		
	전체	공립단설 유치원	비율	전체	공립단설 유치원	비율
2016	8,987	305	3.39	35,790	2,303	6.43
2015	8,930	272	3.05	34,075	1,921	5.64
2014	8,826	228	2.58	33,041	1,536	4.65
2013	8,678	184	2.12	30,597	1,216	3.97
2012	8,538	167	1.96	28,386	1,046	3.68
2011	8,424	146	1.73	26,990	891	3.30

자료: 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1~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2) 교육통계연구센터 내부자료(2016b). 연도별 공립단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

나)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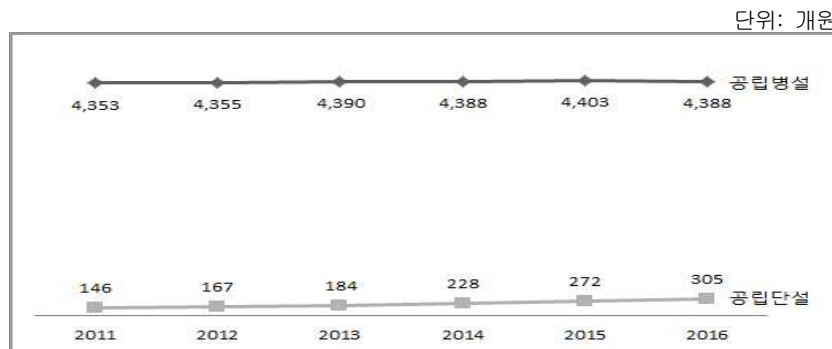
공립병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4-30>과 같다. 2011년 이후 전체 유치원 수 대비 공립병설유치원 기관수의 비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립병설유치원의 기관수는 2011년에 비해 2016년 현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도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 전체 유치원의 학급수 대비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는 2011년 23.67%에서 2016년 20.93%으로 감소되었지만, 절대적인 학급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당시 교육부가 계획하였던 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244학급)(교육과학기술부, 2012. 2. 22일자 보도자료)은 달성함에 따라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30> 공립병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 수 추이

단위: 개원, 학급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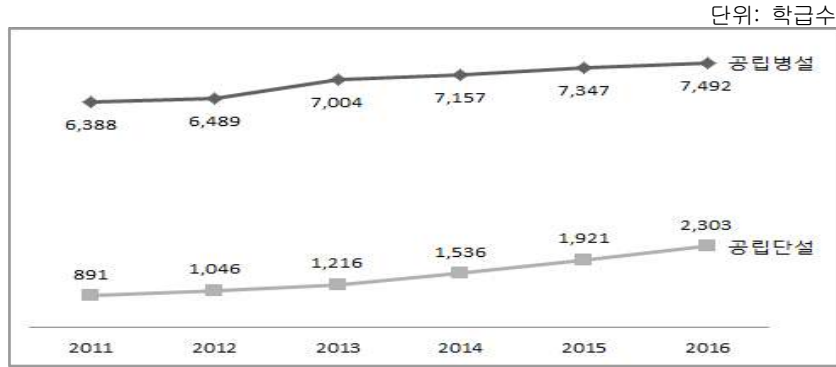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학급 수		
	전체	공립병설 유치원	비율	전체	공립병설 유치원	비율
2016	8,987	4,388	48.83	35,790	7,492	20.93
2015	8,930	4,403	49.31	34,075	7,347	21.56
2014	8,826	4,388	49.72	33,041	7,157	21.66
2013	8,678	4,390	50.59	30,597	7,004	22.89
2012	8,538	4,355	51.01	28,386	6,489	22.86
2011	8,424	4,353	51.67	26,990	6,388	23.67

자료: 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1~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2) 교육통계연구센터 내부자료(2016c). 연도별 공립병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



자료: <표 IV-4-29>와 <표 IV-4-30>의 기관수 수치를 도식화함.

[그림 IV-4-3] 공립유치원 기관수 추이 변화(2011~2016)



자료: <표 IV-42>와 <표 IV-43>의 학급수 수치를 도식화함.

[그림 IV-4-4] 공립유치원 학급수 추이 변화(2011~2016)

2)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가)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가 확대될수록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수가 증가할수록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431>과 같다.

2016년에는 전체 어린이집 42,571개소 중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7,145개소로 40.2%에 해당한다. 전체 어린이집의 약 86정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75.8%)과 가정어린이집(3.4%)의 누리과정 운영비율이 낮고, 국공립과 사회법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율은 90%를 상회한다(표 II-3-5 참조). 누리과정 운영율은 2012년 27.6%, 2014년 39.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이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기관수(2015년 12월말 기준)와 누리과정 운영 기관수(2016년 11월 기준)의 조사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V-4-31〉 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시설 ¹⁾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²⁾								누리과정 운영율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6	42,571	17,145	2,377 (90.4)	1,287 (91.0)	729 (87.4)	11,085 (75.8)	742 (3.4)	134 (86.5)	791 (-)	40.2
2014	43,770	17,223	2,066	1,294	761	11,482	960	106	554	39.3
2012	40,709	11,231	1,590	1,100	670	7,356	186	75	254	27.6

주: 1)은 2015년 12월말 기준, 2)는 2016년 11월 기준 자료임.

괄호안 수치는 같은 설립유형 내에서 누리과정 운영율을 의미함.

자료: 2012년 수치; 김은설 외(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p. 38.

2014년 수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48.

2016년 수치; 보건복지부(2016b). 내부자료.

나)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면서 학부모들의 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적인 기관 선택권 확대가 실제로도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 교사, 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대체로 동의함’의 비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의 비율도 3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비율이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경우 대체로 누리과정을 통해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보다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4점 만점에 3.0점으로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평균 점수는 2.6점으로 기관선택권 확대에 대한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평균 점수가 2.5점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학부모에 비해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 비해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표 IV-4-32 참조).

〈표 IV-4-32〉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학부모

단위: %, (명), 점(4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사례수	평균	F
전체	7.7	31.8	47.5	13.1	(1,000)	2.7	
기관종류							
유치원	7.0	35.7	47.2	10.2	(502)	2.6	4.87*
어린이집	8.2	27.9	47.8	16.1	(498)	2.7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5	31.0	57.7	7.7	(142)	2.7	6.06***
사립유치원	8.6	37.5	43.1	10.8	(360)	2.6	
국공립어린이집	7.0	28.1	50.8	14.1	(128)	2.7	
법인어린이집	3.4	14.8	59.1	22.7	(88)	3.0	
민간어린이집	10.3	32.0	43.1	14.6	(281)	2.6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9.5	28.6	47.6	14.3	(21)	2.7	2.63*
250만원~299만원	6.8	28.1	50.2	14.9	(221)	2.7	
300만원~399만원	7.1	30.7	46.1	16.2	(241)	2.7	
400만원~499만원	6.4	34.5	43.8	15.3	(235)	2.7	
500만원 이상	10.2	33.6	49.1	7.1	(283)	2.5	
지역규모							
대도시	8.2	35.5	50.7	5.6	(428)	2.5	32.73***
중소도시	9.0	35.1	41.5	14.5	(422)	2.6	
읍면지역	2.6	12.6	54.3	30.5	(150)	3.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01$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의함'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동의함'의 비율까지 합하면 59.7%로 학부모(60.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립유형별 차이는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2.9점으로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단설유치원 교사의 평균 점수는 2.4으로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V-4-33〉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교사

단위: %, (명), 점(4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사례수	평균	t/F
전체	5.6	34.7	46.5	13.2	(1,000)	2.7	
기관종류							
유치원	7.2	35.0	40.6	14.2	(345)	2.6	2.79
어린이집	4.7	33.0	49.6	12.7	(655)	2.7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5.3	52.6	36.8	5.3	(19)	2.4	2.67*
공립병설유치원	8.1	36.0	38.5	17.4	(161)	2.7	
사립법인유치원	9.4	37.5	46.9	6.2	(32)	2.5	
사립사인유치원	5.3	38.3	42.9	13.5	(133)	2.6	
국공립어린이집	0.9	26.4	55.5	17.3	(110)	2.9	
법인어린이집	5.5	30.1	49.8	14.6	(219)	2.7	
민간어린이집	5.5	37.1	47.5	9.8	(326)	2.6	
지역규모							
대도시	4.1	36.8	49.4	9.7	(413)	2.7	0.50
중소도시	6.1	33.3	45.5	15.1	(411)	2.7	
읍면지역	8.0	33.5	42.0	16.5	(176)	2.7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한편, 공무원의 기관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학부모와 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동의함의 비율이 58.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의 비율도 3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7점이었다. 지역규모, 소속, 담당업무에 따른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학부모, 교사, 공무원의 인식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종류, 설립유형, 지역규모 등에 따라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기관종류, 설립유형,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기관종류, 설립유형에 따라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4-34〉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공무원

단위: %, (명), 점(4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사례 수	평균	t/F
전체	6.0	36.0	44.0	14.0	(100)	2.7	
지역규모							
대도시	2.8	36.1	41.7	19.4	(36)	2.8	
중소도시	9.4	31.2	53.1	6.2	(32)	2.6	0.66
읍면도시	6.2	40.6	37.5	15.6	(32)	2.6	
소속							
교육청	6.0	34.0	46.0	14.0	(50)	2.7	
지자체	6.0	38.0	42.0	14.0	(50)	2.6	0.06
담당 업무							
누리과정 예산 집행	7.5	35.0	45.0	12.5	(40)	2.6	
공통과정 운영 및 관리 업무	3.5	35.1	45.6	15.8	(57)	2.7	2.75
기타	33.3	66.7	0.0	0.0	(3)	1.7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한편, 부모의 기관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도입 이후 부모의 기관 신뢰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대체로 개선되었음'의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51.3%)을 차지하였다. 기관종류별로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교사들이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 부모의 기관 신뢰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4-35〉 부모의 기관 신뢰도 제고: 교사

단위: %, (명), 점(4점)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음	많이 개선 되었음	사례 수	$\chi^2(df)$	평균	t/F
전체	4.7	28.3	51.3	15.7	(1,000)		2.8	
기관종류								
유치원	5.8	24.7	50.2	19.3	(345)	8.36(3)*	2.8	2.25
어린이집	4.1	30.2	51.9	13.8	(655)		2.8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27.7	46.5	25.9	(19)	18.78(18)	3.0	1.10

(표 IV-4-35 계속)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 되었 음	많이 개선 되었 음	사례수	$\chi^2(df)$	평균	t/F
공립병설유치원	7.2	24.0	49.7	19.1	(162)	18.78(18)	2.8	1.10
사립법인유치원	3.3	26.1	62.7	8.0	(31)		2.8	
사립사인유치원	5.5	24.8	48.3	21.4	(133)		2.9	
국공립어린이집	1.9	28.0	54.5	15.6	(110)		2.8	
법인어린이집	3.4	29.3	52.5	14.7	(220)		2.8	
민간어린이집	5.3	31.5	50.7	12.6	(325)		2.7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다)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누리과정 도입 이후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1순위 지원 기관에 재원하는 비율이 높아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현재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1순위 지원 기관이었는지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학부모의 75.5%가 1순위로 지원했던 기관에 현재 자녀가 재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기관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립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사립유치원(28.8%)과 민간어린이집(31.4%)의 경우, 1순위 지원 기관이 아니라는 응답이 다른 설립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별로도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읍면지역(89.4%)에 비해 대도시(68.7%)와 중소도시(77.3%)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1순위 지원 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전히 기관 설립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라 기관 선택권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36〉 1순위 기관 재원 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75.5	24.5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76.3	23.7	100.0(502)	0.41(1)
어린이집	74.6	25.4	100.0(498)	

(표 IV-4-36 계속)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chi^2(df)$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89.2	10.8	100.0(142)	31.86(4)***
사립유치원	71.2	28.8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80.3	19.7	100.0(128)	
법인어린이집	85.3	14.7	100.0(89)	
민간어린이집	68.6	31.4	100.0(281)	
지역규모				
대도시	68.7	31.3	100.0(427)	27.33(2)***
중소도시	77.3	22.7	100.0(422)	
읍면지역	89.4	10.6	100.0(151)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01$

자녀를 1순위 기관에 보내지 못한 응답자(n=245)를 대상으로 1순위 기관에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V-4-37>과 같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자가 많아서'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첨에 떨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비용이 비싸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추첨에 떨어져서'가 4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아서'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성이 떨어져서'의 응답 비율이 유치원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대기자가 많아서'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추첨에 떨어져서'가 48.7%로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서'의 응답이 5.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별로는 1순위 기관에 보내지 못한 이유의 차이가 없었다.

앞서 1순위 기관 재원 여부에서 사립유치원(71.2%)과 민간어린이집(68.6%) 이용 학부모의 경우, 현재 1순위 기관에 재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설립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추첨에 떨어지거나 대기자가 많아서 원하는 기관에 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한 학부모들에게 1순위 기관유형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국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었지만,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대기자가 많아서 다른 설립유형의 기관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국공립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다행히 병설 유치원 추첨이 됐어요. 일단, 사립유치원과 금액 적으로 거의 10배차이나 나니까.. 저는 집도 가깝고 남들은 다 못 가서 그런 데를 저는 합격을 했어요. 제가 추첨할 당시 경쟁률이 저희가 8명을 뽑았는데 12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누리과정 이용 부모 사례 9).

저도 처음에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이사가 먼저 결정이 되어있었어요. 거기는 공립 단설 유치원 두 군데랑 병설유치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사립 유치원보다는 금액 적으로 부담이 적으니까 다 넣어봤었는데 추첨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래 다니는 데를 다닐 수 밖에 없었어요(누리과정 이용 부모 사례 11).

〈표 IV-4-37〉 1순위 기관에 보내지 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chi^2(df)$
전체	31.2	39.0	17.5	5.0	2.4	4.1	0.8	100.0(245)	
기관종류									
유치원	45.0	30.9	14.2	4.2	1.5	3.4	0.8	100.0(119)	19.98(6)**
어린이집	18.3	46.6	20.7	5.7	3.2	4.7	0.8	100.0(127)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9.7	34.4	13.1	6.6	0.0	19.7	6.6	100.0(15)	65.28(24)***
사립유치원	48.7	30.4	14.3	3.9	1.7	1.0	0.0	100.0(103)	
국공립어린이집	11.9	55.1	5.3	7.9	11.9	4.0	4.0	100.0(25)	
법인어린이집	22.8	51.8	25.4	0.0	0.0	0.0	0.0	100.0(13)	
민간어린이집	19.5	43.3	24.4	5.9	1.1	5.7	0.0	100.0(88)	
지역규모									
대도시	30.5	38.1	18.5	3.2	3.0	5.2	1.5	100.0(134)	15.33(12)
중소도시	34.4	40.5	12.5	8.4	1.0	3.1	0.0	100.0(96)	
읍면지역	18.7	37.0	39.5	0.0	4.9	0.0	0.0	100.0(16)	

주: 1) 자녀를 1순위 기관에 보내지 못한 응답자(n=245)의 응답 결과임.

2) ① 추첨에서 떨어져서, ② 대기자가 많아서, ③ 접근성이 떨어져서(집 또는 회사와 떨어져), ④ 비용이 비싸서, ⑤ 형제가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⑥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⑦ 기타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 $p < .001$

학부모들에게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을 질문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42.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원장 및 교사'가 15.5%, '프로그램의 질'이 14.3%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가인증 실시 여부'가 0.9%, 'CCTV 설치 여부'가 0.2%의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비용'과

‘국공립 기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응답되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질’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접근성’, ‘국공립 기관 여부’,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접근성’과 ‘원장 및 교사’,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종류, 월 평균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의 질’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4-38〉 현재 다니는 기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chi^2(df)$
전체	15.5	42.0	5.0	14.3	1.8	7.7	1.5	5.7	5.4	0.9	0.2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15.5	40.4	5.2	17.2	1.1	6.5	1.4	5.7	6.5	0.5	0.0	100.0(502)	17.36(10)
어린이집	15.5	43.7	4.8	11.5	2.5	8.9	1.6	5.6	4.2	1.3	0.4	100.0(49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4.1	35.0	11.8	9.7	0.0	4.9	0.7	18.5	5.4	0.0	0.0	100.0(142)	
사립유치원	16.1	42.6	2.6	20.1	1.5	7.2	1.6	0.7	7.0	0.7	0.0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9.6	35.8	7.8	9.1	4.2	9.9	1.6	17.9	2.3	1.0	0.8	100.0(128)	182.15(40)**
법인어린이집	11.9	46.4	7.6	10.5	4.1	9.0	3.4	0.4	3.1	3.6	0.0	100.0(89)	
민간어린이집	19.3	46.4	2.6	12.9	1.3	8.4	1.1	1.7	5.5	0.6	0.4	100.0(281)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20.9	42.0	6.1	12.0	0.0	4.4	0.0	9.5	5.0	0.0	0.0	100.0(82)	
250만원~299만원	12.9	37.2	7.7	18.3	1.5	8.0	2.5	4.6	5.7	1.6	0.0	100.0(159)	
300만원~399만원	13.1	43.8	4.8	12.9	1.2	9.5	1.2	7.2	5.1	1.2	0.0	100.0(241)	40.43(40)
400만원~499만원	17.8	42.5	5.1	9.6	3.1	9.0	0.9	5.9	5.0	0.7	0.4	100.0(235)	
500만원 이상	15.6	42.9	3.3	17.9	1.9	5.9	2.0	3.6	5.9	0.6	0.4	100.0(283)	
자녀연령													
만 3세	17.5	47.5	2.9	11.4	1.0	7.1	0.9	5.9	4.5	0.9	0.3	100.0(323)	
만 4세	14.9	40.0	5.2	15.2	0.8	10.2	1.8	5.8	4.6	1.2	0.3	100.0(336)	31.61(20)*
만 5세 이상	14.1	38.9	6.9	16.2	3.5	5.8	1.7	5.4	7.0	0.6	0.0	100.0(341)	
지역규모													
대도시	15.8	41.4	5.7	13.9	0.9	7.0	1.2	5.6	7.1	1.3	0.2	100.0(427)	
중소도시	13.2	46.3	4.7	13.3	2.4	8.1	1.6	6.5	3.4	0.2	0.2	100.0(422)	28.66(20)
읍면지역	21.0	31.9	4.0	18.6	2.6	8.6	2.0	3.7	6.1	1.7	0.0	100.0(151)	

주: ① 원장 및 교사, ② 접근성 (집 또는 회사와의 거리), ③ 비용, ④ 프로그램의 질, ⑤ 급·간식의 질, ⑥ 기관의 시설 환경, ⑦ 운영 시간, ⑧ 국공립 기관 여부, ⑨ 주변의 평판, ⑩ 평가(인증) 실시여부, ⑪ CCTV 설치여부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01$

지금까지 누리과정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목표는 미달성으로 나왔다.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목표는 미달성한 핵심성과지표는 나오지 않아서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교사의 역량 강화 측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략목표도 총 5개의 핵심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달성한 지표가 3개, 부분 달성 지표가 2개로 평가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관종류,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소결

지금까지 BSC 모델에 입각하여 누리과정 정책 성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성과지표를 추출했으므로 성과 달성정도도 보도자료에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치를 기준으로 했고, 수치가 없는 경우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근거로 평가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연구진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는 있다. 본고에서 “달성”과 “부분 달성”을 가르는 중요 기준으로 기관종류 및 설립유형의 차이 여부였다. 누리과정 정책 비전으로 설정한 “국가책무성 강화”와 “생애출발선 평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기관을 다녀도 모든 유아는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차이가 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종류 및 설립유형에 따라 누리과정 이용이나 운영 등의 차이가 없으면 “달성”, 차이가 있으면 “부분 달성”으로 평가하였다.

총 29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측정한 결과, 달성한 지표가 9개(상: ●), 부분 달성한 지표가 12개(중: ○), 미달성 또는 미흡한 지표가 8개(하: △)로 집계되었다. 부분 달성이 가장 많고, 달성한 지표와 미달성 지표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누리과정 정책이 발전, 안착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개 관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객 관점의 총 8개 핵심성과지표 중에서 달성 2개, 부분 달성 5개, 미달 1개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 유아수 및 이용률은 증가해서 유아교

육·보육의 보편적 지원 측면에서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측면에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비(방과후 과정비 포함)의 보편적 지원은 대체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만, 다니고 있는 기관종류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통과정, 기관의 환경, 교사 등 3개 부분으로 분석한 결과, 3개 모두 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관점의 총 3개 핵심성과지표 중 달성한 지표가 1개도 없어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예산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미달성은 누리과정 정책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리과정 정책의 향후 성패는 재무관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부프로세스 관점도 총 6개 핵심성과지표들 중 2개 지표만 달성했고 1개 부분 달성, 나머지 3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의 지표가 미달성이므로 내부프로세스 관점도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미달성한 지표들은 누리과정 재정, 예산의 전달체계 합리성 등 예산 관련된 지표들이다.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는 총 12개 핵심성과지표들 중에서 5개 지표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 지표 중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과정으로써의 누리과정이 취약계층의 유아발달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결과는 고무적이며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공립유치원의 확충 등으로 기관 선택권이 확대된 점(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유아와 학부모의 고객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관종류와 설립유형에 따라 누리과정 이용이나 운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또,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산'과 '법령' 부분이 미달성으로 평가되면서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정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IV-5-1〉 BSC 모델을 적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결과

관점	국가재무성 강화, 생애출발선 평등				평가
	비전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추진결과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가구 확대 (소득하위 70% → 전계층)	연도별 누리과정 수혜 유아수 비율 확대	2011년 대비 2015년 비용 지원율 확대 (아: 75.2% → 99.7%, 유: 51.9% → 102.4%)	●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	지속적인 비용 증가로 보편적 지원 퇴색	△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	방과후 과정비 보편적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감도	학부모 만족도는 낮음(추가비용 높음).	○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학부모 만족도	가계경제 도움정도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85%가 도움이 됨. 그러나 공식립유치원 간의 차이가 큼(공: 96%, 사: 80%)	○
재무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재원의 증분상	유아 연령별 기납 이용률 확대 현황	누리과정 시행 대비 연령별 모두 증가함.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결을 감안해서 평가함.	●
		지원금 확대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동과정의 질 향상	교사의 약 80%가 개선되었다고 응답 (유: 70%, 아: 85.7% 기관차이 큼)	○
	누리과정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재원의 증분상	기납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교사 응답 결과 3.0-3.1점(4점)	○
		지원금 확대	교사의 처우 현황(제직기간, 호봉, 근무시간 등)	개선되었으나 기관종류·설립종류별 차이 큼	○
내부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 관리의 적절성	재원의 증분상	제원 확보 및 환경현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비안특별법 제정으로 향후 3년동안 예산 확보	○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미달(정정부계획: 2016년 30만원)	△
	누리과정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누리과정 지원 단위 적절성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항목에 따라 지원금 수준 달린점	△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공통과정은 계획대로 제정되었으나, 81.0%가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정, 고시 자료집 제작, 교사연수 일정은 적절치 못함	●
누리과정 운영 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조사결과 10%만 일치함.	△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일일 이용시간 평균 7.97시간	○	

평가대상					
평가항목					
비전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추진결과		
판 점	전략목표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이 상의 법률과 상충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공백이 감소 및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안정화	취약계층 유아에게 누리과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5세 1개 연령 대상의 단기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	△
학 습 및 성 장	인적자원 역량 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대부분 유치원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임.	●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개선됨. 행정업무는 미개선	○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본 조사 결과, 미이수자 1.7%로 나타남.	●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본 조사 결과, 미이수자 1.7%로 나타남.	●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내용, 방법, 대상범주)	2012, 2013년에 실시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에 대해 절반 정도가 적절하다고 봄. 대형강의식 연수 개선 필요	○
		교사의 역량강화	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2012년 대비 2016년의 공립단설유치원 기관수 및 학급수 증가 : 지역차가 크므로 개선 필요성	●
학 부 모 의 기 관 선 택 권 확 대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2012년 대비 2016년의 공립병설유치원 기관수 및 학급수 증가 : 지역차가 크므로 개선 필요성	●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2012년 대비 2016년의 공립병설유치원 기관수 및 학급수 증가 : 지역차가 크므로 개선 필요성	●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39.3%(2014년)에서 40.2%(2016년)로 증가	●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본 조사결과, 학부모 응답 27점(4점) 기관종류, 실림유형, 지역규모별 차이 있음.	○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본 조사 결과, 75%가 1순위 기관을 다니고 있음. 단, 실림유형,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	

주: 1) ● 상 - 달성 / ○ 중 - 부분 달성(면인별, 기관종류, 실림유형별, 자녀연령별, 가구소득별 등 달성 차이가 있는 경우) / △ 하 - 미달성 또는 미흡
2) 아: 어린이집, 유: 유치원, 공: 공립유치원, 사: 사립유치원

V. 누리과정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이 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한 절감액의 사용처, 유아 사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 교사,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 도입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의 달성 정도, 보편적 지원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 정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우선 추진 정책,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주체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1. 가계경제 도움 정도

학부모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으로 절감된 비용을 주로 어디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가족생활비(39.6%), 해당자녀 사교육비(25.0%), 해당자녀 추가지출(2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이 해당자녀 사교육비(31.3%), 가족생활비(31.1%), 해당자녀 추가지출(27.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누리과정 비용지원으로 절감된 비용을 해당자녀의 사교육비에 쓰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가족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 모학력별 절감액 지출 비용 패턴에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학부모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약된 돈을 가족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33.4%로 타 그룹에 비해 낮고, 해당 자녀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모 학력이 높을수록 절감액을 가족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기관종류, 설립유형, 모 취업 여부, 자녀 연령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1〉 비용지원으로 인한 절감액의 주 사용처

단위: %(명)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 자녀 사교육비	해당 자녀 추가지출	다른 자녀 기관 이용비	다른 자녀 사교육비	저축 보험 등	기타	계
전체	39.6	25.0	21.8	6.2	3.2	2.9	1.2	100.0(1,000)

(표 V-1-1 계속)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 자녀 사고 육비	해당 자녀 추가 지출	다른 자녀 기관 이용비	다른 자녀 사고 육비	저축 보험 등	기타	계
기관종류								
유치원	39.8	27.4	18.9	5.3	4.1	3.1	1.3	100.0(502)
어린이집	39.4	22.7	24.7	7.1	2.3	2.7	1.1	100.0(498)
$\chi^2(df)$				10.19(6)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48.2	23.6	16.2	4.9	4.7	1.2	1.2	100.0(82)
250~299만원	37.3	15.8	29.3	9.1	3.8	3.1	1.6	100.0(159)
300~399만원	42.3	24.6	22.4	4.1	3.7	1.7	1.2	100.0(241)
400~499만원	43.0	23.3	22.5	6.7	2.1	0.8	1.6	100.0(235)
500만원 이상	33.4	32.5	18.1	6.4	3.0	6.0	0.6	100.0(283)
$\chi^2(df)$				47.86(24)**				
모 학력								
고졸 이하	45.1	15.9	23.5	5.5	2.6	5.5	1.8	100.0(109)
전문대졸	44.5	25.0	14.7	6.4	6.1	1.3	2.1	100.0(254)
4년제 대졸	38.4	26.3	24.8	5.6	1.8	2.4	0.7	100.0(551)
대학원 이상	26.0	28.7	21.3	10.5	4.7	7.7	1.2	100.0(86)
$\chi^2(df)$				50.91(18)**				
모 취업여부								
취업모	37.8	25.6	22.9	7.1	2.2	3.4	1.0	100.0(524)
비취업모	41.6	24.4	20.6	5.3	4.3	2.4	1.5	100.0(476)
$\chi^2(df)$				8.03(6)				
자녀 연령								
만 3세	40.5	21.7	24.0	7.2	2.7	3.0	0.8	100.0(323)
만 4세	39.0	23.4	23.0	7.6	2.7	3.3	1.1	100.0(336)
만 5세 이상	39.4	29.9	18.5	3.9	4.3	2.4	1.7	100.0(341)
$\chi^2(df)$				15.30(12)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41.5	23.3	21.2	7.8	2.8	2.8	0.6	100.0(411)
2회	39.7	24.1	23.4	6.2	2.6	2.6	1.3	100.0(353)
3회	36.2	29.5	20.5	3.5	4.8	3.5	2.0	100.0(236)
$\chi^2(df)$				13.83(12)				
지역규모								
대도시	38.9	26.1	21.3	7.4	3.4	2.6	0.5	100.0(427)
중소도시	39.6	26.7	22.1	4.4	1.7	3.6	1.8	100.0(422)
읍면지역	41.7	17.6	22.4	7.8	7.0	2.0	1.5	100.0(151)
$\chi^2(df)$				23.64(12)*				

(표 V-1-1 계속)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	해당	다른	다른	저축 보험 등	기타	계(명)	
		자녀 사고 육비	자녀 추가 지출	자녀 기관 이용비	자녀 사고 육비				
2014년	전체	31.1	31.3	27.1	3.0	1.8	5.7	-	100.0(1,924)
	유치원	29.4	32.8	28.6	2.2	1.1	6.0	-	100.0(940)
	어린이집	32.7	30.0	25.6	3.7	2.5	5.5	-	100.0(984)
$\chi^2(df)$				25.42(15)*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 96.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

학부모들이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외에 유아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을 살펴 보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사교육 이용개수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자녀가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개가 35.3%, 2개가 15.7%, 3개 이상의 사교육을 하는 유아가 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종류별로는 유치원 유아가 어린이집 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개수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재원 유아가 가장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민간어린이집 재원 유아가 가장 적은 개수의 사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개수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사교육 개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 사교육 이용 개수(2016)

구분	개수				계	평균 (표준편차)	F
	0개	1개	2개	3개 이상			
전체	40.7	35.3	15.7	8.3	100.0(1,000)	1.0(1.1)	
기관종류							
유치원	35.1	37.8	16.7	10.4	100.0(502)	1.1(1.1)	13.34**
어린이집	46.4	32.9	14.7	6.1	100.0(498)	0.8(1.0)	

(표 V-2-1 계속)

구분	0개	1개	2개	3개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F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4.0	33.9	18.7	13.2	100.0(142)	1.2(1.3)	4.36**
사립유치원	35.5	39.3	15.9	9.3	100.0(360)	1.0(1.0)	
국공립어린이집	43.1	34.4	16.2	6.3	100.0(128)	0.9(0.9)	
법인어린이집	36.8	40.8	17.1	5.4	100.0(89)	0.9(0.9)	
민간어린이집	50.9	29.7	13.2	6.3	100.0(281)	0.8(1.0)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58.0	29.8	4.9	7.3	100.0(82)	0.6(0.9)	10.50***
250~299만원	53.3	30.0	13.0	3.7	100.0(159)	0.7(0.9)	
300~399만원	36.9	37.4	17.6	8.0	100.0(241)	1.0(1.0)	
400~499만원	44.1	35.7	14.7	5.4	100.0(235)	0.9(1.1)	
500만원 이상	29.0	37.8	19.5	13.6	100.0(283)	1.2(1.2)	
모 학력							
고졸 이하	61.9	20.6	15.1	2.4	100.0(109)	0.6(0.8)	6.10***
전문대졸	45.0	32.5	14.3	8.3	100.0(254)	0.9(1.2)	
4년제 대졸	35.1	39.9	16.2	8.8	100.0(551)	1.0(1.0)	
대학원 이상	37.3	33.1	17.1	12.6	100.0(86)	1.1(1.3)	
모 취업여부							
취업모	39.8	35.8	16.0	8.4	100.0(524)	1.0(1.0)	0.00
비취업모	41.7	34.8	15.4	8.2	100.0(476)	1.0(1.1)	
자녀 연령							
만 3세	54.3	30.3	11.9	3.5	100.0(323)	0.7(0.9)	22.85***
만 4세	37.8	36.8	17.5	7.9	100.0(336)	1.0(1.0)	
만 5세 이상	30.7	38.7	17.6	13.1	100.0(341)	1.2(1.2)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53.5	30.1	11.5	4.8	100.0(411)	0.7(1.0)	23.72***
2회	35.8	38.1	18.2	7.9	100.0(353)	1.0(1.1)	
3회	25.7	40.4	19.3	14.7	100.0(236)	1.3(1.1)	
지역규모							
대도시	38.1	36.6	14.8	10.5	100.0(427)	1.0(1.1)	4.61*
중소도시	39.9	35.5	16.7	7.8	100.0(422)	1.0(1.1)	
읍면지역	50.2	31.2	15.5	3.1	100.0(151)	0.7(0.8)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사교육 이용개수를 2014년 조사와 비교하여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2014년에 비해서 2016년의 유아가 이용하는 사교육 평균 이용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2-2〉 사교육 이용 개수 변화(2014·2016)

단위: 개(명)

구분	2014			2016			B-A
	평균 (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B)	(표준 편차)	사례수	
전체	1.1	(0.99)	(1,924)	1.0	(1.1)	(1,000)	-0.1
기관종류							
유치원	1.2	(1.01)	(940)	1.1	(1.1)	(502)	-0.1
어린이집	1.0	(0.97)	(984)	0.8	(1.0)	(498)	-0.2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2	(0.96)	(242)	1.2	(1.3)	(142)	0.0
사립유치원	1.2	(1.02)	(698)	1.0	(1.0)	(360)	-0.2
국공립어린이집	1.0	(0.97)	(291)	0.9	(0.9)	(128)	-0.1
법인어린이집	1.0	(0.98)	(107)	0.9	(0.9)	(89)	-0.1
민간어린이집	0.9	(0.97)	(586)	0.8	(1.0)	(281)	-0.1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0.7	(0.84)	(168)	0.6	(0.9)	(82)	-0.1
250~299만원	1.0	(0.92)	(333)	0.7	(0.9)	(159)	-0.3
300~399만원	1.0	(0.95)	(717)	1.0	(1.0)	(241)	0.0
400~499만원	1.2	(1.07)	(452)	0.9	(1.1)	(235)	-0.3
500만원 이상	1.2	(1.09)	(254)	1.2	(1.2)	(283)	0.0
자녀 연령							
만 3세	0.7	(0.84)	(651)	0.7	(0.9)	(323)	0.0
만 4세	1.2	(1.01)	(648)	1.0	(1.0)	(336)	-0.2
만 5세 이상	1.4	(1.01)	(625)	1.2	(1.2)	(341)	-0.2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0.7	(0.88)	(692)	0.7	(1.0)	(411)	0.0
2회	1.3	(1.00)	(1,232)	1.0	(1.1)	(353)	-0.3
3회	-	-	-	1.3	(1.1)	(236)	-
지역규모							
대도시	0.5	(0.80)	(854)	1.0	(1.1)	(427)	0.5
중소도시	0.6	(0.84)	(804)	1.0	(1.1)	(422)	0.4
읍면지역	0.3	(0.68)	(266)	0.7	(0.8)	(151)	0.4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p. 97-98.

2014년에 비해 2016년이 사교육 이용 개수는 다수 줄어든 반면 사교육 총 비용은 약 3천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재원 유아의 평균 사교육비가 약 7천원 정도 상승한 반면,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평균 사교육비는 약 3천원 정도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평균 사교육비는 약 8천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16년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용이 증가하였다. 모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V-2-3〉 월평균 사교육 비용 변화(2014·2016)

단위: 원(명)

구분	2014			2016			B-A
	평균 (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B)	표준 편차	사례수	
전체	63,812	67,446	(1,924)	66,082	83,560	(1,000)	2,270
기관종류							
유치원	72,159	69,291	(940)	79,143	95,751	(502)	6,984
어린이집	55,839	64,672	(984)	52,939	66,720	(498)	-2,900
<i>F</i>		-			25.16***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6,190	66,338	(242)	82,575	100,977	(142)	6,385
사립유치원	70,761	70,278	(698)	77,790	93,721	(360)	7,029
국공립어린이집	58,299	65,544	(291)	59,391	71,862	(128)	1,092
법인어린이집	53,962	62,501	(107)	61,931	74,976	(89)	7,969
민간어린이집	54,960	64,700	(586)	47,148	60,939	(281)	-7,812
<i>F</i>		-			7.19***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9,244	57,854	(168)	39,707	62,262	(82)	463
250~299만원	59,541	60,555	(333)	44,689	64,132	(159)	-14,852
300~399만원	60,421	62,175	(717)	66,529	77,801	(241)	6,108
400~499만원	70,865	70,501	(452)	60,521	85,698	(235)	-10,344
500만원 이상	82,685	82,768	(254)	89,974	94,931	(283)	7,289
<i>F</i>		-			11.14***		
모 학력							
고졸 이하	-	-	-	38,269	62,281	(109)	-
전문대졸	-	-	-	62,333	85,415	(254)	-
4년제 대졸	-	-	-	72,308	85,804	(551)	-
대학원 이상	-	-	-	72,609	80,329	(86)	-
<i>F</i>		-			5.47***		
모 취업여부							
취업모	-	-	-	65,675	78,701	(524)	-
비취업모	-	-	-	66,530	88,691	(476)	-
<i>F</i>		-			0.03		

(표 V-2-3 계속)

구분	2014			2016			B-A
	평균 (A)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B)	표준 편차	사례수	
자녀 연령							
만 3세	38,093	54,285	(651)	41,414	61,454	(323)	3,321
만 4세	66,931	63,834	(648)	67,528	79,253	(336)	597
만 5세 이상	87,368	73,948	(625)	88,023	98,423	(341)	655
<i>F</i>		-			27.24**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41,569	60,203	(692)	44,791	66,666	(411)	3,222
2회	76,306	68,098	(1,232)	73,429	91,656	(353)	-2,877
3회	-	-		92,142	88,256	(236)	-
<i>F</i>		-			27.60***		
지역규모							
대도시	63,445	69,946	(854)	70,476	85,841	(427)	7,031
중소도시	68,711	65,464	(804)	67,565	85,276	(422)	-1,146
읍면지역	50,180	63,376	(266)	49,509	69,477	(151)	-671
<i>F</i>		-			3.65*		

자료: 1)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2)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p.99.

* $p < .05$, *** $p < .001$

3. 누리과정 정책의 목적 달성 정도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을 통해 추구한 목적을 ①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③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비용부담이 감소되었다. ④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등 4개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 교사, 공무원 그룹별로 알아보았다.

가. 학부모

학부모들은 ① 기관에 상관없이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 점, ② 기관 선택권이 확대된 점, ③ 기관 이용 시 비용부담이 감소된 점의 목적 달성 정도는 2.7점으로 대체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④ 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

졌다. 이는 목적 달성에 대해서는 2.6점, 동의 정도 58.7%로 앞의 3개 목적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표 V-3-1〉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학부모

단위 :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전체	2.7	68.2	2.7	60.5	2.7	64.0	2.6	58.7	(1,000)
기관종류									
유치원	2.7	66.1	2.6	57.3	2.7	62.4	2.6	58.2	(502)
어린이집	2.8	70.2	2.7	63.8	2.8	65.5	2.6	59.3	(498)
<i>t</i>	2.62		4.87 [*]		2.30		0.07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8	73.3	2.7	65.8	2.8	67.9	2.7	63.3	(142)
사립유치원	2.7	63.3	2.6	54.0	2.6	60.3	2.6	56.2	(360)
국공립어린이집	2.8	75.7	2.7	64.8	2.9	69.6	2.7	66.9	(128)
법인어린이집	2.9	82.4	3.0	81.3	2.8	70.6	2.8	71.3	(89)
민간어린이집	2.7	63.8	2.6	57.7	2.7	62.1	2.5	52.0	(281)
<i>F</i>	2.70 [*]		6.06 ^{***}		2.43 [*]		3.79 ^{**}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2.7	59.7	2.7	64.8	2.7	62.2	2.5	55.3	(82)
250만원~299만원	2.8	70.1	2.7	65.1	2.8	66.3	2.7	63.5	(159)
300만원~399만원	2.7	67.3	2.7	62.2	2.8	70.2	2.6	55.3	(241)
400만원~499만원	2.8	72.9	2.7	59.4	2.8	62.9	2.7	64.5	(235)
500만원 이상	2.7	66.4	2.5	56.2	2.6	58.9	2.5	55.3	(283)
<i>F</i>	1.20		2.63 [†]		2.46 [†]		3.05 [*]		
모 취업여부									
취업모	2.8	70.1	2.7	60.7	2.7	64.4	2.6	60.4	(524)
비취업모	2.7	66.0	2.7	60.3	2.7	63.5	2.6	57.0	(476)
<i>F</i>	0.80		0.00		0.14		0.05		
지역규모									
대도시	2.6	63.9	2.5	56.4	2.6	59.0	2.5	56.4	(427)
중소도시	2.7	66.2	2.6	56.0	2.7	60.9	2.6	55.4	(422)
읍면지역	3.1	85.8	3.1	84.8	3.1	86.7	2.9	74.8	(151)
<i>F</i>	23.91 ^{***}		32.73 ^{***}		21.97 ^{***}		12.13 ^{***}		

주: 1) ①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③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비용부담이 감소되었다

④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2) 동의는 대체로 동의함+매우 동의함을 합침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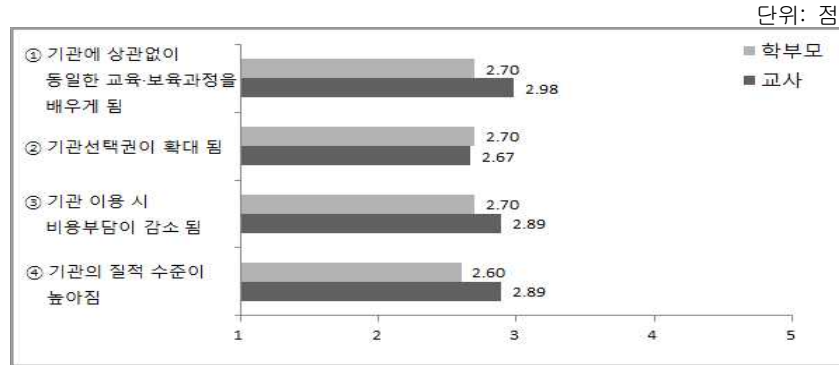
교사들은 ①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 점에 대해서는 80.0%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해서 목적 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④ 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74.3%, ③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 감소가 70.3%로 순으로 목적이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표 V-3-2〉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교사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전체	2.98	80.0	2.67	59.7	2.89	70.3	2.89	74.3	(1,000)
기관종류									
유치원	2.85	70.2	2.62	54.8	2.91	69.9	2.76	66.6	(345)
어린이집	3.04	85.2	2.70	62.3	2.88	70.5	2.96	78.4	(655)
<i>t</i>	16.4***		2.79		0.29		16.26***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2.73	57.2	2.40	41.0	3.16	73.5	2.62	57.2	(19)
공립병설유치원	2.84	67.1	2.65	55.7	2.99	73.0	2.74	65.4	(162)
사립법인유치원	2.88	76.6	2.48	52.5	2.72	67.0	2.57	59.5	(31)
사립사인유치원	2.87	74.2	2.64	56.1	2.82	66.2	2.85	71.1	(133)
국공립어린이집	3.19	88.8	2.88	72.3	3.04	80.1	3.04	80.4	(110)
법인어린이집	3.06	86.1	2.74	64.4	2.96	72.3	3.02	81.3	(220)
민간어린이집	2.98	83.3	2.62	57.4	2.77	66.0	2.90	75.6	(325)
<i>tF</i>	3.99**		2.67*		2.99**		4.27***		
누리과정 담당횟수									
1회	3.05	83.7	2.74	66.0	2.89	70.2	2.96	78.4	(177)
2회	3.00	83.3	2.66	62.5	2.83	68.9	2.90	76.6	(152)
3회	2.98	79.6	2.71	63.3	2.94	72.8	2.91	77.9	(161)
4회	2.94	79.6	2.66	55.7	2.87	68.0	2.80	67.6	(147)
5회	2.95	77.2	2.63	55.5	2.90	70.7	2.89	72.5	(363)
<i>F</i>	0.64		0.69		0.39		0.93		
지역규모									
대도시	2.95	79.9	2.65	59.1	2.83	67.0	2.90	73.9	(413)
중소도시	2.99	80.5	2.70	60.7	2.96	74.1	2.90	74.2	(411)
읍면지역	3.01	79.1	2.67	58.7	2.85	69.1	2.86	75.4	(176)
<i>F</i>	0.55		0.50		2.84		0.18		

주: 1) ①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③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비용부담이 감소되었다
 ④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2) 동의는 대체로 동의함+매우 동의함을 합침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표 V-3-1>과 <표 V-3-2>를 도식화함.

[그림 V-3-1]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학부모 vs 교사

다. 공무원

공무원 대상의 질문 내용은 누리과정 정책을 제공하는 입장이므로 학부모와 교사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했다. 첫째,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의 역사적 평가 둘째, 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도움 정도 셋째, 누리과정 지원금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도움 정도에 대해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교육·보육 역사상 처음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의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서는 77.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4점 만점에 3.08점이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해당 가구의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93.0%로 매우 높게 나왔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92.0%로 높게 나왔다. 공무원들은 누리과정 정책 그 자체보다는, 가구경제 및 기관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비용 지원정책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교육청 공무원(유아교육 담당) 보다는 지자체 공무원(보육담당)이,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이 이들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담당 공무원은 동일금액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가 3.13점으로 전체보다 높았다. 누리과정 업무 담당 기간이 길수록(2년 이상) 동일금액 지원에 대한 동의가 높고, 1년 미만은 가계 경제 도움에, 1~2년 미만은 기관운영 도움 정도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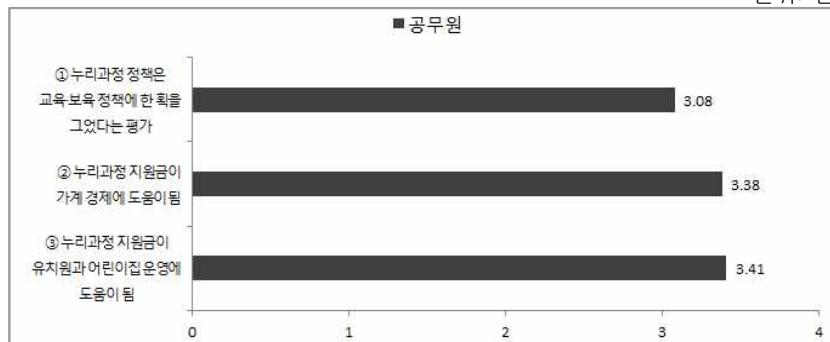
〈표 V-3-3〉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공무원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전체	3.08	77.0	3.38	93.0	3.41	92.0	(100)
소속							
교육청	3.08	74.0	3.46	92.0	3.50	92.0	(50)
지자체	3.08	80.0	3.30	94.0	3.32	92.0	(50)
<i>t</i>	0.00		1.53		2.02		
직위							
별정직	3.07	73.8	3.43	90.5	3.45	90.5	(42)
일반직	3.09	79.3	3.34	94.8	3.38	93.1	(58)
<i>t</i>	0.01		0.40		0.32		
담당업무							
누리과정예산집행	3.13	82.5	3.30	92.5	3.33	92.5	(40)
누리과정운영관리	3.05	73.3	3.43	93.3	3.47	91.7	(60)
<i>t</i>	0.16		1.02		1.19		
누리과정업무담당기간							
1년 미만	2.96	71.9	3.37	96.5	3.35	91.2	(57)
1~2년 미만	3.17	82.6	3.39	87.0	3.39	95.7	(23)
2년 이상	3.30	85.0	3.40	90.0	3.60	90.0	(20)
<i>F</i>	1.12		0.02		1.15		

주: 1) ①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은 교육·보육 정책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②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③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동의는 대체로 동의함+매우 동의함을 합침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단위: 점



자료: <표 V-3-3>을 도식화함.

[그림 V-3-2] 누리과정 정책 목적 달성에 대한 동의 정도: 공무원

4. 보편적 지원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금액 지원에 대해 학부모, 교사, 공무원 대상으로 의견을 알아보았다.

가. 학부모

학부모들은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6.5%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지금과 같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종류나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9.1%)보다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34.4%)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250만원 미만이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62.7%가 응답해서 가장 많았으나, 가구소득이 높다고 해서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을 더 희망하지는 않았다. 즉, 가구소득에 따른 견해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취업모는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3%로 나와서 비취업모 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러나 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은 동등한 지원을 대도시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4-1〉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단위: %(명)

구분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함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기타	계	$\chi^2(df)$
전체	56.5	34.4	9.1	0.1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57.2	32.9	9.7	0.2	100.0(502)	2.24(3)
어린이집	55.7	35.8	8.5	0.0	100.0(49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9.6	31.2	9.2	0.0	100.0(142)	5.44(12)
사립유치원	56.3	33.6	9.9	0.3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54.7	37.5	7.8	0.0	100.0(128)	

(표 V-41 계속)

구분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함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기타	계	$\chi^2(df)$
법인어린이집	61.1	29.5	9.5	0.0	100.0(89)	5.44(12)
민간어린이집	54.5	37.1	8.5	0.0	100.0(281)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62.7	27.6	9.8	0.0	100.0(82)	17.79(12)
250만원~299만원	57.9	35.9	5.5	0.6	100.0(159)	
300만원~399만원	60.4	32.2	7.3	0.0	100.0(241)	
400만원~499만원	50.3	40.3	9.4	0.0	100.0(235)	
500만원 이상	55.6	32.3	12.1	0.0	100.0(283)	
모 취업여부						
취업모	50.5	37.2	12.3	0.0	100.0(524)	23.69(3)***
비취업모	63.0	31.3	5.5	0.2	100.0(476)	
지역규모						
대도시	53.9	35.1	10.9	0.0	100.0(427)	10.83(6)
중소도시	58.0	34.9	7.0	0.0	100.0(422)	
읍면지역	59.1	30.7	9.5	0.7	100.0(151)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01$

다음 <표 V-42>에 의하면, 누리과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도 지금과 같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9.0%). 기관종류별로는 응답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유치원은 ③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이 16.3%로 어린이집보다 많았고, 어린이집은 ④학부모 자비 부담이 8.5%로 유치원보다 많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등한 지원보다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높게 나왔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모(19.0%)는 맞벌이 가정 위주의 차등지원에 대한 응답이 비취업모(8.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 비취업모(54.0%)는 취업모(44.5%)보다 동등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는 동일한 지원,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을 대체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4-2〉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df)$
전체	49.0	30.7	14.0	6.2	0.1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49.1	30.5	16.3	4.0	0.0	100.0(502)	12.93(4)*
어린이집	48.9	30.8	11.6	8.5	0.2	100.0(49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7.2	28.2	8.3	6.3	0.0	100.0(142)	34.82(16)**
사립유치원	46.0	31.4	19.5	3.1	0.0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46.2	35.0	12.9	6.0	0.0	100.0(128)	
법인어린이집	55.9	23.3	13.5	7.2	0.0	100.0(89)	
민간어린이집	47.9	31.3	10.4	10.0	0.4	100.0(281)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55.7	25.2	15.3	3.8	0.0	100.0(82)	21.28(16)
250만원~299만원	50.7	29.5	10.6	8.5	0.6	100.0(159)	
300만원~399만원	49.0	34.4	9.2	7.4	0.0	100.0(241)	
400만원~499만원	48.0	30.5	16.8	4.7	0.0	100.0(235)	
500만원 이상	46.9	29.9	17.2	5.9	0.0	100.0(283)	
모 취업여부							
취업모	44.5	30.6	19.0	5.7	0.2	100.0(524)	26.43(4)***
비취업모	54.0	30.7	8.4	6.9	0.0	100.0(476)	
지역규모							
대도시	47.3	30.6	15.4	6.5	0.2	100.0(427)	4.91(8)
중소도시	48.5	31.9	13.2	6.4	0.0	100.0(422)	
읍면지역	55.2	27.6	12.1	5.1	0.0	100.0(151)	

주: ① 개인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방과후 과정비는 이용하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기타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교사

누리과정 담당 교사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해 '가구 소득별로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8.1%로 가장 많았고,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44.5%로 다음으로 많았고,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맞벌이 가정 위주로 지원)'는 6.3%에 그쳤다. 앞서 고찰한 가구조사에서는 '모든 유아의 동등한 지원'이 1순위였다면, 교사는 가구소득

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룹 간의 견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동등한 지원을, 어린이집 교사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을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설립유형별로는 모든 유아의 동일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공립병설유치원이 58.5%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이 36.8%로 가장 적었다.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3.9%로 가장 많고, 공립병설유치원이 36.2%로 가장 적었다. 맞벌이 가정의 우선지원은 사립법인유치원이 14.4%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동등한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대도시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중소도시는 동등한 지원과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동일한 비율(46.4%)로 나타났다.

〈표 V-4-3〉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교사

단위: %(명)

구분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함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기타	계	$\chi^2(df)$
전체	44.5	48.1	6.3	1.2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51.1	42.7	4.3	1.8	100.0(345)	13.53(3)**
어린이집	40.9	50.9	7.4	0.8	100.0(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41.9	41.9	4.8	11.4	100.0(19)	49.80(18)***
공립병설유치원	58.5	36.2	3.4	1.9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46.0	39.6	14.4	0.0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44.6	51.6	3.0	0.8	100.0(133)	
국공립어린이집	40.5	53.9	5.6	0.0	100.0(110)	
법인어린이집	47.2	46.6	5.8	0.4	100.0(220)	
민간어린이집	36.8	52.7	9.0	1.4	100.0(325)	
누리과정 담당횟수						
1회	41.4	45.9	11.5	1.2	100.0(177)	22.50(12)*
2회	50.4	44.8	4.8	0.0	100.0(152)	
3회	47.5	47.2	4.8	0.5	100.0(161)	
4회	42.5	54.5	2.3	0.7	100.0(147)	
5회	42.9	48.3	6.7	2.1	100.0(363)	
지역규모						
대도시	41.4	51.5	5.8	1.3	100.0(413)	11.45(6)
중소도시	46.4	46.4	6.9	0.2	100.0(411)	

(표 V-43 계속)

구분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함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기타	계	$\chi^2(df)$
읍면지역	47.0	43.8	6.1	3.1	100.0(176)	11.45(6)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방과후 과정비의 동일금액 지원에 대한 교사 의견이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과정비 역시,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다. 동등한 지원도 30.3%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맞벌이, 이용자 자비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종류별로는 유치원 교사는 지금과 같은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4.1%로 가장 많았던 반면, 어린이집교사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설립유형별로도 의견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공립단설유치원은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은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많았고, 사립 및 어린이집은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읍면지역은 동등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36.1%),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가장 많았다(각각 35.4%, 32.7%).

〈표 V-4-4〉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df)$
전체	30.3	33.8	18.6	16.2	1.0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34.1	28.5	21.7	14.2	1.5	100.0(345)	12.19(4)*
어린이집	28.4	36.6	17.0	17.3	0.7	100.0(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16.0	30.7	37.1	4.8	11.4	100.0(19)	62.60(24)***
공립병설유치원	40.8	24.1	15.0	18.8	1.3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25.0	30.1	17.7	27.2	0.0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30.5	33.3	28.6	6.9	0.6	100.0(133)	
국공립어린이집	25.2	38.4	19.6	16.8	0.0	100.0(110)	
법인어린이집	31.3	35.4	17.5	15.1	0.8	100.0(220)	

(표 V-4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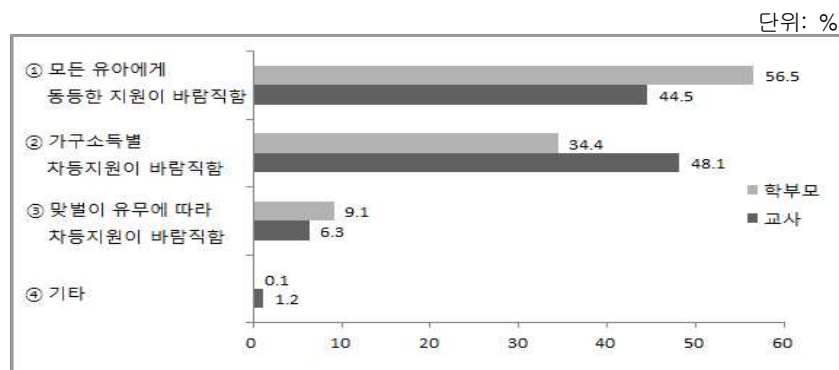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df)$
민간어린이집	27.4	36.9	15.8	19.0	0.9	100.0(325)	62.60(24) ^{***}
누리과정 담당횟수							
1회	34.4	32.5	21.2	11.4	0.6	100.0(177)	
2회	34.9	33.6	15.3	16.2	0.0	100.0(152)	
3회	25.4	35.4	22.2	16.0	1.1	100.0(161)	13.52(16)
4회	27.7	34.8	16.9	19.1	1.4	100.0(147)	
5회	29.7	33.5	17.9	17.6	1.3	100.0(363)	
지역규모							
대도시	26.8	35.4	21.9	14.7	1.3	100.0(413)	
중소도시	31.4	32.7	17.4	18.4	0.2	100.0(411)	16.02(8) [*]
읍면지역	36.1	32.8	14.0	15.0	2.0	100.0(176)	

주: ① 개인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기타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 [그림 V-4-1]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 그룹 간의 인식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학부모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교사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가구와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누리과정 지원금을 직접 받는 원장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교사의 인식 차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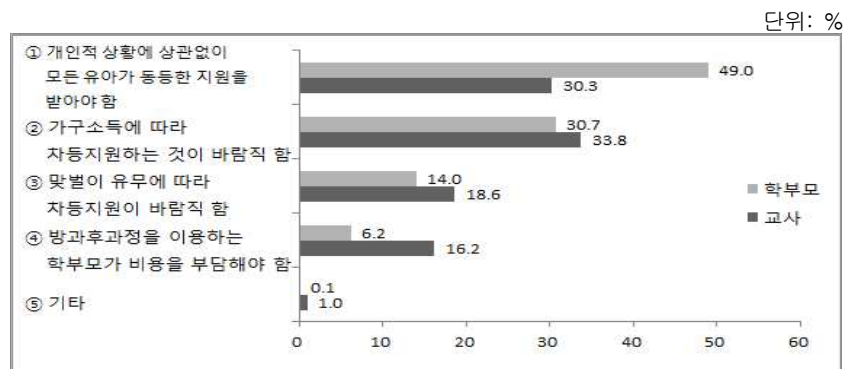


자료: <표 V-4-1>과 <표 V-4-3>을 도식화함.

[그림 V-4-1]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vs 교사

다음 [그림 V-4-2]은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의 동일 금액 지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응답 차이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누리과정 지원금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인식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는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49.0%), 교사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또는 맞벌이 유무별 차등지원(합치면 52.4%)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도 교사가 학부모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이 나왔다.



자료: <표 V-4-2>와 <표 V-4-4>를 도식화함.

[그림 V-4-2]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학부모 vs 교사

다. 공무원

공무원 100명에게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결과, 방과후 과정비 만큼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타당하다는 문항에 가장 많은 동의를 했다(67.0%). 이는 방과후 과정비를 지금과 같이 동일한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교육청, 별정직, 누리과정운영관리업무 담당,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그룹에서 방과후 과정비의 제한에 대해 동의 정도가 높게 나왔다.

현재와 같이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누리과정 지원금,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은 55.0%, 점수로 환산하

면 2.6점으로 높지 않았다. 가구소득, 맞벌이 유무, 가구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은 동일 지원보다 동의 정도가 낮았다(46.0%). 공무원은 차등지원보다는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에 좀 더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 동일하고, 교사와는 다른 견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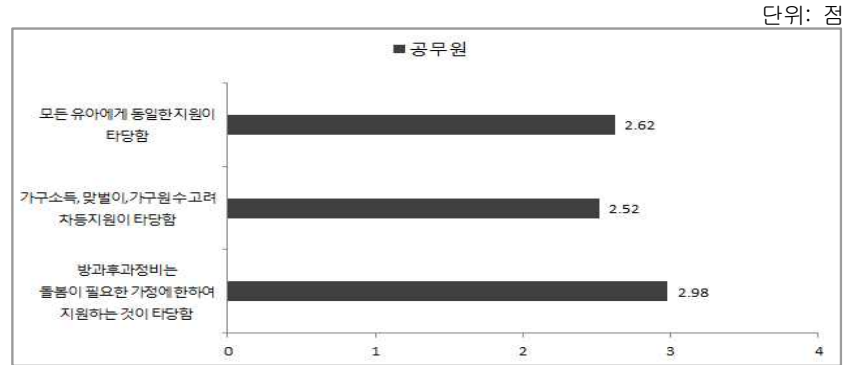
〈표 V-4-5〉 누리과정 정책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공무원

단위: 점, %(명)

구분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지원이 타당함		가구소득, 맞벌이, 가구원수 고려 차등지원이 타당함		방과후 과정비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평균	동의	
전체	2.6	55.0	2.5	46.0	3.0	67.0	(100)
소속							
교육청	2.5	56.0	2.7	48.0	3.2	72.0	(50)
지자체	2.7	54.0	2.4	44.0	2.7	62.0	(50)
<i>t</i>	0.87		1.80		5.99**		
직위							
별정직	2.4	52.4	2.7	50.0	3.3	73.8	(42)
일반직	2.8	56.9	2.4	43.1	2.8	62.1	(58)
<i>t</i>	2.34		2.52		7.12**		
담당업무							
누리과정예산집행	2.8	57.5	2.3	40.0	2.6	57.5	(40)
누리과정운영관리	2.5	53.3	2.7	50.0	3.2	73.3	(60)
<i>t</i>	0.98		2.99		10.44**		
누리과정업무담당기간							
1년 미만	2.5	49.1	2.6	49.1	3.0	66.7	(57)
1~2년 미만	2.9	65.2	2.4	43.5	2.7	56.5	(23)
2년 이상	2.8	60.0	2.5	40.0	3.4	80.0	(20)
<i>F</i>	1.70		0.21		2.35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1$



자료: <표 V-45>를 도식화함.

[그림 V-4-3] 누리과정 정책의 동일한 지원에 대한 의견: 공무원

5. 누리과정 정책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학부모, 교사, 공무원에게 누리과정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질문은 3개 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부모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부모들은 “국공립과 민간 기관 간의 비용 격차 완화”를 1순위, 1+2순위 모두 가장 많이 꼽았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두 번째로 정부에게 바라는 누리과정 정책은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24.3%), “기관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누리과정 예산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응답에서 2순위가 바뀌었는데 “기관의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40.2%로 많이 꼽았고,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기관의 선택권이 크지 않다. 이에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등 부모들에게는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관 선택권 확대와 이용비용 격차 완화는 일맥 상통한다. 현재 60% 이상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기관(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비용 부담을 낮춰서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누리과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비용 격차도 최소화해야만 무상교육·보육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정책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1순위에서는 6.4%, 1+2순위는 18.0%로 상위권에 들지는 않았다.

〈표 V-5-1〉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학부모

단위: %(명)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전체	100.0(1,000)	(1,000)
①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24.3	36.4
② 국공립과 민간기관 간 이용비용 격차 완화	30.9	53.1
③ 기관의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7.6	40.2
④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5.7	17.7
⑤ 누리과정 예산 확충	15.1	34.4
⑥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지원	6.4	18.0
⑦ 기타	0.1	0.1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다음은 교사의 응답결과이다. 1순위를 기준으로 교사는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38.8%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기관 간의 비용격차 완화(35.0%)를 지적했다. 학부모조사에서 많이 나온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는 각각 5.9%, 7.7%에 그쳤다. 1+2순위(복수응답) 결과도 1, 2순위는 동일하였다. 다만,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꼽은 비율이 각각 19.8%, 17.0%로 집계되어, 2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5-2〉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교사

단위: %(명)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전체	100.0(1,000)	(1,000)
①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5.9	13.3
② 국공립과 민간기관간 이용비용 격차 완화	35.0	54.6
③ 기관의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7.7	16.3
④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5.4	19.8
⑤ 누리과정 예산 확충	38.8	69.1
⑥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지원	6.5	17.0
⑦ 기타	0.7	10.0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공무원 그룹에서 1순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결과는, “누리과정 예산 확충”으로 교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순으로 나와서 앞선, 학부모와 교사의 결과와 차이점을 보였다.

1+2순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충, 누리과정 예산 법령 정비, 부모에게 직접 지원 순으로 나와서 순위가 다소 달라졌다. 법적 근거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문항도 각각 32.0%, 30.0%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표 V-5-3〉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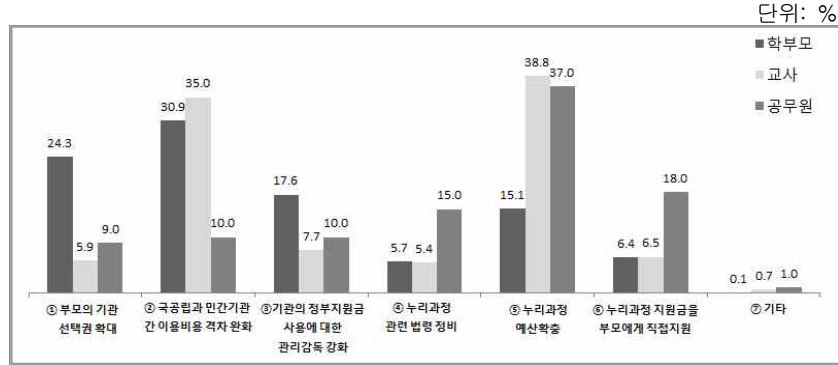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전체	100.0(100)	(100)
①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9.0	20.0
② 국공립과 민간기관간 이용비용 격차 완화	10.0	30.0
③ 기관의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0.0	22.0
④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15.0	36.0
⑤ 누리과정 예산 확충	37.0	54.0
⑥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지원	18.0	32.0
⑦ 기타	1.0	6.0

자료: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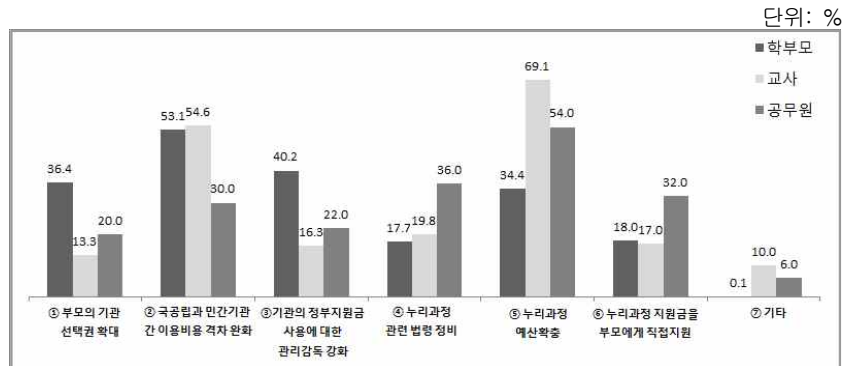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학부모, 교사, 공무원 그룹 간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를 어느 기관을 보내더라도 비용 격차가 없고, 원하는 기관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기관에서 정부 지원금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만 누리과정 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교사와 공무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누리과정 정책 안착의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4년 조사에서도 학부모는 “국공립 기관 확충”(29.3%)과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 완화”(28.1%)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이운진·이규림·조아라, 2014: 106).



자료: <표 V-5-1>, <표 V-5-2>, <표 V-5-3>을 도식화함.

[그림 V-5-1]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1순위):
학부모 vs 교사 vs 공무원



자료: <표 V-5-1>, <표 V-5-2>, <표 V-5-3>을 도식화함.

[그림 V-5-2]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1+2순위):
학부모 vs 교사 vs 공무원

6.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주체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하느냐는 올해 누리과정 정책에 있어서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할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도교육청은 정부 공약사업이자 어린이집은 교육법

체계 내의 기관이 아니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58.7%, 시도교육청 30.9%로 정부책임이란 의견이 훨씬 많았다. 기관종류, 설립유형, 가구소득, 모학력, 모 취업여부, 누리과정 수혜횟수, 지역규모 등에 상관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이 중 누리과정 수혜횟수가 많을 수록, 읍면지역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표 V-6-1〉 누리과정 예산 책임 주체: 학부모

					단위: %(명)
구분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58.7	30.9	10.4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58.8	31.0	10.2	100.0(502)	0.05(2)
어린이집	58.5	30.8	10.6	100.0(49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6.2	31.8	12.0	100.0(142)	5.67(8)
사립유치원	59.9	30.7	9.5	100.0(360)	
국공립어린이집	59.4	34.5	6.1	100.0(128)	
법인어린이집	61.9	27.6	10.5	100.0(89)	
민간 어린이집	57.1	30.2	12.8	100.0(281)	
월 평균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0.3	28.0	11.7	100.0(82)	2.29(8)
250만원~299만원	56.2	30.9	13.0	100.0(159)	
300만원~399만원	58.8	31.7	9.5	100.0(241)	
400만원~499만원	58.8	31.7	9.5	100.0(235)	
500만원 이상	59.4	30.5	10.2	100.0(283)	
모 학력					
고졸 이하	57.5	35.0	7.4	100.0(109)	2.36(6)
전문대 졸	60.2	29.5	10.3	100.0(254)	
4년제대 졸	58.1	30.6	11.3	100.0(551)	
대학원 이상	59.5	31.8	8.8	100.0(86)	
모 취업여부					
취업모	57.0	32.2	10.8	100.0(524)	1.30(2)
비취업모	60.5	29.5	10.0	100.0(476)	
누리과정 수혜횟수					
1회	53.9	34.2	11.9	100.0(411)	9.67(4)*
2회	60.7	31.0	8.2	100.0(353)	
3회	64.0	25.0	11.0	100.0(236)	

(표 V-6-1 계속)

구분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잘 모름	계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53.5	33.0	13.5	100.0(427)	15.65(4)**
중소도시	60.6	31.9	7.5	100.0(422)	
읍면지역	67.9	22.4	9.7	100.0(151)	

자료: 본 연구의 학부모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교사 역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응답이 67.7%로 학부모보다 높게 나왔다. 기관종류, 설립유형, 연령, 교사경력, 지역규모에 상관 없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보다 훨씬 많이 꼽았다.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설립유형 중에서는 공립유치원(단설, 병설)이, 30~40대, 교사경력이 많을 수록, 읍면지역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표 V-6-2〉 누리과정 예산 책임 주체: 교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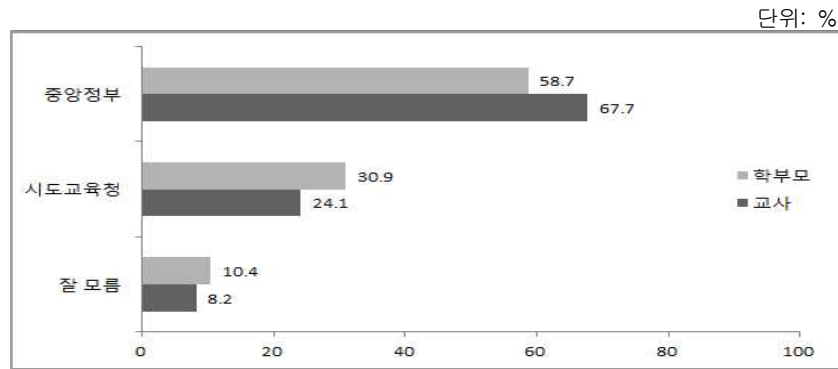
구분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67.7	24.1	8.2	100.0(1,000)	
기관종류					
유치원	71.9	21.6	6.6	100.0(345)	4.30(2)
어린이집	65.5	25.4	9.0	100.0(655)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83.1	11.2	5.7	100.0(19)	28.36(12)**
공립병설유치원	79.6	16.0	4.3	100.0(162)	
사립법인유치원	57.7	32.5	9.8	100.0(31)	
사립사인유치원	64.1	27.2	8.7	100.0(133)	
국공립어린이집	64.8	24.7	10.4	100.0(110)	
법인어린이집	70.7	18.4	10.9	100.0(220)	
민간어린이집	62.3	30.4	7.3	100.0(325)	
연령					
20대	54.5	31.5	14.0	100.0(250)	34.47(6)***
30대	73.2	19.1	7.7	100.0(377)	
40대	71.8	24.1	4.1	100.0(260)	
50대 이상	69.5	24.2	6.3	100.0(113)	
총 교사 경력					
4년 미만	58.3	30.1	11.5	100.0(146)	19.94(8)*
4-7년 미만	64.3	24.2	11.5	100.0(190)	

(표 V-6-2 계속)

구분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잘 모름	계	$\chi^2(df)$
7-10년 미만	68.0	26.0	6.0	100.0(191)	19.94(8)*
10-15년 미만	67.2	23.8	9.0	100.0(223)	
15년 이상	76.1	19.3	4.7	100.0(251)	
지역규모					19.00(4)**
대도시	62.3	26.5	11.2	100.0(413)	
중소도시	68.8	23.5	7.7	100.0(411)	
읍면지역	78.1	19.7	2.2	100.0(176)	

자료: 본 연구의 교사 대상 '누리과정 성과 분석 연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표 V-6-1>과 <표 V-6-2>를 도식화함.

[그림 V-6-1] 누리과정 예산 책임 주체: 학부모 vs 교사

7. 소결

지금까지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을 위해 학부모, 교사,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된 비용은 가족생활비(39.6%), 해당자녀 사교육비(25.0%), 해당자녀 추가지출(21.8%)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는데 순위가 바뀌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는 가족생활비에, 500만원 이상의 가구와 모 학력이 높을

수록 해당 자녀 사교육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에서는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1.1개) 어린이집 유아보다(0.8개) 사교육 개수와 사교육 월 평균 비용 모두 높았다(유치원 유아 약 7만9천원, 어린이집 유아 5만2천원).

셋째, 누리과정 정책이 추구한 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는 2.6점 이상으로 달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공무원은 3.0점 이상으로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2.60점이었던 반면, 교사는 2.89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에서도 학부모는 2.70점이었던 반면, 교사는 2.89점, 공무원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 지원에 대해, 학부모는 지금과 같은 동등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반면, 교사는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금과 같이 동일한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방과후 과정비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다섯째, 누리과정 정책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에 대한 동일한 문항을 학부모, 교사,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과, 학부모는 “국공립과 민간기관 간 이용 비용 격차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면, 교사와 공무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두 그룹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VI. 지속가능한 누리과정을 위한 정책과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누리과정 정책의 비전인 “국가책무성 강화 및 생애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분 달성했거나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가. 현황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를 누리과정 정책의 주요 고객인 학부모가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누리과정 정책의 목적은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유아는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학부모는 동일한 비용 지원을 받아서 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취학 전 교육·보육의 국가책무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유아의 생애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누리과정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누리과정 정책 비전).

본 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학부모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월 평균 6만2천원 가량을 지불했다면, 2014년 6만6천원, 2016년 7만원 가량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비용이 가장 많은 기관은 사립유치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월 평균 11만1천원을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면, 가장 이용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8만원의 격차가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도 약 3만5천원 가량 추가 비용으로 집계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은 2014년 대비 추가비용폭이 가장 컸으나, 동일한 표집조사 결과가 아니므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립유치원 다음으로 추가비용이 많은 기관은 민간어린이집이다. 사립유치원보다는 적지만, 월 평균 6만1천원 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추가 비용 부담이 국공립유치원보다 3~4배 많은 것은 학부모의 정책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유아의 다수가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을 다님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체감도는 낮다. 2014년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정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였다면, 2016년에는 87.5%로 떨어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이용률이 누리과정 이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누리과정 이후의 증가폭은 완만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취학 1년 전 누리과정 도입 시, 사실상의 의무교육 효과를 기대했던 만 5세 유아의 기관이용률은 2014년 94.5%에서 2015년 92.9%로 감소하였다. 본 조사에서 면담한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들은 유아대상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근의 사립유치원 수업료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고 대신, 유치원보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고 이용시간도 길어서 비용을 좀 더 내고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나. 정책방향

-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화를 위해 재무회계규칙 도입(추진 중)한다.
-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저소득 가구(소득하위 70% 이하 기준)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수용계획 법 조항을 제정한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민간 기관에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민간 기관은 운영의 투명성을 통해 공공 기관으로써의 책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도시에 주로 설립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 거주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란 쉽지가 않다. 기관 선택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본 조사에서 누리과정 이후 기관 선택권의 확대 정도에서 대도시 거주 학부모는 2.5점, 읍면 지역 거주 학부모는 3.1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선택권이 확대됨을 의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도시 거주 저소득 가구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비용부담이 크다. 유아수 대비 국공립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때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민간 기관의 책무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설립, 운영하기 때문에 국공립 기관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교사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기관과는 운영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관 간의 비용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객이(유아)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공립 기관을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 도입 시, 공립단설유치원 확충을 계획하였고 이를 준수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증가추이지만 전체 유아수 대비 이용하는 유아수는 11.2%에 불과하다(표 II-3-13 참조). 공공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투입에 따른 제도마련이 불가피하다.

다. 정책방안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정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벌칙과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공립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아의 60% 이상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다. 이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유치원재무회계는 국공립에만 설치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표 VI-1-1〉 유치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사례

조문제목 <유아교육법>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참여 부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유치원 구성원의 참여 확대	'12.9.1
제19조의7, 제19조의8(유치원 회계의 설치 등)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유치원회계 설치 법적 근거 부재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유치원 회계 관리 도모	'13.3.1
제28조, 제34조 (보조금의 반환 등)	무상교육비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무상교육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체납처분의 예의 따라 징수	'13.3.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3. 21).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달라진다!. p. 5.

그런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2017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누리과정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등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공개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항목으로 관리하며 인건비, 운영비 외에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했다. 유치원알리미에도 개정된 규칙에 맞춰 원비와 예·결산 관련 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대신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금 경영과 적립금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보도자료, 2016. 9. 20).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2014년 10월에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려다 사립유치원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2) 공립 기관 부족 지역의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정부 또는 교육청은 유아수 대비 공립 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여 가구 소득 70%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요컨대, 공립 기관이 부족한 지역(대도시 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때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입학 우선 순위는 맞벌이 가정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은 합산소득을 하므로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외벌이의 저소득 가구 등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여부는 주민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대상 유아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3) 도시 지역에 공립 기관 증설

누리과정 정책 도입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을 것을 대비하여 공립유치원 확충을 추진하였다. 결과, 공립 단설, 병설유치원 모두 증설되었다. 그러나 대도시 등 도시 지역에는 공립 기관이 여전히 부족하다. 취약계층, 취약 지역 우선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해 온 결과이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의 학부모들은 1순위로 희망했던 기관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현재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1순위 기관이 아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결과와 상통한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은 읍면보다는 도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17조(유아수용계획)의 3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을 맞추지 않아도 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연합뉴스, 2016. 9. 13¹⁷⁾). 지역사정에

17) 연합뉴스 2016. 9. 13. 도사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04300000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 11. 21

따라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는 “국가책무성 강화”라는 누리과정 비전을 향해 공립유치원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수용계획 법조항이 없다. 지자체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에 (영)유아수용계획 조항을 제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유아교육법」 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상응하는 법조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교사 수준 표준화

가. 현황

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동일한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으나, 교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보육과정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누리과정 활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교사용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다. 교사 면담조사에서도 누리과정 실시 이후,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잡지에 실린 교육·보육활동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침서, 지도서가 보급되면서 교사들도 이를 중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양성체계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교사연수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체계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커리큘럼은 일원화되었지만, 교사 관련 제도는 이원화되어서 자격증 체계가 다르고, 양성과정 및 교사연수도 달라서 교사의 차이는 존재한다. 57.0%의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여전히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가 ‘교사의 수준 차이가 있어서’였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교사와 어린이집의 교사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 차이로 인해 두 기관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에서 교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동일한 공통과정이라 하더라도 교사 수준에 따라 유아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천양지차일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양 기관의 교사 수준을 표준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 정책방향

교사양성체계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므로 이 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단기, 중기, 단기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근무특성 상, 유치원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추가 연수 실적이 낮으므로 어린이집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단기: 2012년, 2013년에 연수를 받은 교사는 이후 연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누리과정 영역별 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 중기: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상호 교차 연수(유치원 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연수 신청 가능,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사 연수 신청 가능)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장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을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 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연수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다. 정책방안

2012년, 2013년 전국 단위의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이후 연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추가 연수 실적이 낮다. 어린이집 교사는 종일제로 근무하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교사연수를 받기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어렵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교사 연수 기회도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겠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승급교육처럼 어린이집 교사가 누리과정 관련 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승급자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금은 누리과정 연수를 1회만 받으면 된다. 전국 단위의 교사 연수는 2012년, 2013년에 실시되었을 뿐, 이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의 전달체계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담당하려면 반드시 교사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고 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이러한 의무적인 조건은 없다. 유아교육 전달체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중기 플랜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는 누리과정 교사 연수는 상호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유치원 교사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사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는 반대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는 유보통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세부방안은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교사에 한정한다면,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은 일원화하여 유치원 교사자격증과 보육시설 교사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3.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검토

가. 현황

현재 유아 1인당 지원하고 있는 월 22만원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산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항목(예: 수업료, 급식비, 수업료, 현장학습비 등)에 사용하며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 지침을 보면, 교사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현재 정부 지침에 의하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교사인건비보다는 유아에게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수업료, 행사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추가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으며 그 비용도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크다. 정부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고찰했듯이 월 22만원은 2015년 표준유아교육비 46만 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표준유아교육비는 교사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유아에게 직접 사용되는 표준교육활동경비와 표준공동운영경비(이 중 학생복리비 해당)만을 보면, 월 19만6천원으로 누리과정 지원금보다 낮다.¹⁸⁾ 즉, 유아에게 사용하는 직접 경비만 보면,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이 더 많다.

18) 본 보고서 <표 IV-2-7> 참조바람.

누리과정 지원 단가 책정 근거가 없다보니, 입장에 따라 해석에 따라 현재 지원 단가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표준유아교육비보다 많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2012년 월 20만원에서 2013년 월 22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도 증액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증액폭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너무 높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지원 단가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증액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가 부재하다.

나. 정책방향

- 기관에 상관없이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을 정한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 항목 중심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재산정한다.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유아들은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누리과정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일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관종류, 설립유형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비용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모든 유아는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니도록 한다. 이는 앞서 고찰한 “기관 간의 비용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규칙 투명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 지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다. 정책방안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부되므로 여기서는 유아교육비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무상교육으로서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

육)를 개정하였다. 또, 교육부는 지난 9월 2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보도자료, 2016. 9. 2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항목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표준유아교육비 세부 항목(인건비, 교육활동비, 일반운영비 등)에 맞춰 재산정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아의 교육활동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맞춰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산정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의 증액내지는 동결, 감액은 표준유아교육비 변동에 따른다.

4. 누리과정 예산 확충

가. 현황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었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지원금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 시도청, 시도의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지방교육재정규모가 3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2013년부터 세수 감소로 재정 추계가 빛나갔고 2014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5년 한 해에만 약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시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메꾸면서 시도 교육청의 부채가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다수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고 보고 있었다. 교부율 인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2월 교부율을 인상하는 대신,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 일반회계 22%씩 분담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¹⁹⁾

나. 정책방향

19) 각주 12 참조

-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증액한다.
-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시, '차등적 평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관련 법률 개정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왔다(하봉운, 2016: 55). 누리과정 정책이란 새로운 무상 교육·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또한, 향후 증액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가구소득,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생애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해서는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다. 정책방안

1) 교부율 인상

교육재정 전문가 및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의 해법으로 교부율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교부율 인상폭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별교부금 축소를 전제로 반상진, 하봉운,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내국세의 25.27% 증액율을 제시한 반면, 송기창은 22.07%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행 20.27%에서 1% 인상한 22.07%를 제시하면서, 담배소비세를 교육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김용일, 2016: 43).

교부율의 인상 정도는 다르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이란 시대적 변화 속에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인 교부율의 증액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정책연구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교부율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경직성을 띠기 때문에 교부율 인상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이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이찬진 법률전문가가 제안한 방안으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교부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이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교부금율을 조정하는 것”이다(이찬진, 2016: 39).

2) 누리과정 증액 시, ‘차등적 평등’ 적용

누리과정 정책 비전이 국가책무성 강화, 생애출발선 평등이다. 유아의 생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이 합당하다. OECD 국가들도 전액 무상으로 취학 전 교육·보육을 지원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육아정책이 발달된 핀란드도 가구소득,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월 22만원 지원은 모든 유아에게 지원 하되, 향후 지원 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가구소득별,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5.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가. 현황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수준에서 개정을 계속 하다보니, 상위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했지만, 타법 또는 상위 법률과의 상충 내지는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 지 등의 법리적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정책방향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 궁극적으로 유보 통합을 의미한다.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운영의 대상 기관이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이러한 방향의 법률 개정은 어린이집을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치원과 동일한 기관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것으로 결국, 유보 통합을 뜻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일원화에 따

른 법률 개정은 곧 어린이집이 예산 지원을 위해 교육부 전달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다. 정책방안

“상위 법률에 위법한 시행령은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 두 23808 전원합의체 판결; 하봉운, 2016: 51 재인용).

정부는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 지원이라는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했지만, 성급하게 추진하면서(공통과정 제정 소요시간 및 재정일원화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옴) 개정된 시행령이 상위법 및 타법과의 논리성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교부금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은 없었다. 어떤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려면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조건이다. 누리과정 정책 수립 시,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는 나름 마련하였으나,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은 미흡했다.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이는 곧 유보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6. 갈등조정 기구 설치·운영

가. 현황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외에도 시도교육청, 시도청, 시도의회 간의 갈등을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경남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를 시도청이 직접 편성하고, 대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 처리하겠다고(연합뉴스, 2015. 11. 19)고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촉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시도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한 지역은 큰 갈등 없이 편성이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이다.

문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구가 거의 부재하며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등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조정하는 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사례 중 10%에 불과했으며, 올해 실제로 운영한 횟수는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정책방향

-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유보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갈등조정기구(예: 협의체, 비대위 운영)를 설치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운영 시, 학부모를 배석하도록 한다.

누리과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점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기구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계획, 편성할 때 학부모를 배석하게 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 정책방안

1) 정부, 교육청, 시도청, 시도의회 등 협의기구 설치, 운영

지자체 교육감, 시도지사는 선출직이다. 따라서 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누리과정 예산 및 법령 정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유보 통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복잡다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갈등조정기구는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제3의 조정자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에 지자체 단위에서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교육청과 시도청이 공동 책임으로 운영하고, 양쪽이 각각 동일 인원의 위원을 선발한다. 위원에는 학계, 학부모, 기관장, 교사를 포함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운영 시, 학부모 배석

올해 5월 24일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운영 과정에 학부모나 기관장, 교사 또는 재정 관련 NGO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조건 조정

가. 현황

본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 지침인 "유아 1인당 일일 1개 1시간 이내"를 대체로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비하지만 프로그램 이용 개수와 시간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수가 적으면 회당 시간이 길고, 개수가 많으면 회당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만약, 한 개의 프로그램을 1시간 이내로 하는 것과 두 개 프로그램을 각 30분 이내로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유아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유아의 연령, 성향, 흥미, 특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 5세 재원아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오후 돌봄) 시간에 인근 학원으로 가서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제한이 기관 밖의 사교육을 하는데 한몫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원 차량이 기관에 와서 데리러 가고 다시 데리고 오면서 안정상의 문제가 우려되며 학원의 사교육비도 특성화(특성화) 프로그램 보다 비싸다.

나. 정책방향

만 3세, 4세, 5세는 발달차이가 큰 시기이다. 이를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아 발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이용

조건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 현행 “유아 1인당 일일 1개 1시간 이내 지침”을 유아 발달을 고려하여 연령별 차등을 두고 실행하도록 한다.

다. 정책방안

현재 “유아 1인당 일일 1개 1시간 이내”는 만 4세를 기준으로 하고, 만 3세는 이보다 적게, 만 5세는 이보다 많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만 3세는 일일 1개 30분 이내(또는 주당 3개, 회당 1시간 이내), 만 5세는 일일 2개 80분 이내(또는 주당 6~7개, 회당 30~40분 이내)로 조건을 달리한다.

8.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변경

가. 현황

본 조사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502사례 중에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5%(203사례)로 절반이 채 안되었다.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율이 공립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비 증가 폭이 공립유치원보다 큰 것과 상치되는 결과이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공립보다 많아야 하는 데 본 조사에서는 다르게 나왔다.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 대상(203명)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은 평균 478.3분(약 7.97시간)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8시간이 채 안 되게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나. 정책방향

-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는 오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가정 등)에 제한하여 지원한다

대개 맞벌이 가정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은 외벌이 가정보다 길고, 일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한다. 본 조사에서도 취업모의 일일 이용시간은 466.9분이고, 비취업모는 401.8분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비를 오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면 “일일 8시간 이상”의 지침을 준수했느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 정책방안

현행과 같이 “일일 8시간 이상 기관 이용 유아”로 제한하고 등하원 시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다. 일일 8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는 오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는 맞벌이 가정이나 주양육자가 장애 등의 아픈 경우, 다자녀 가구가 해당된다.

유아 1인당 방과후 과정비는 사립유치원 월 7만원, 공립유치원 월 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과후 과정비를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는 현행 조건은 재고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제안의 전제 조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일제 기반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운영지원비로 월 7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상응책이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이기 때문이다. 즉, 방과후 과정비가 어린이집에 맞춰서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유치원만 개선하면 누리과정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9. 무상교육·보육의 점진적 실현

가. 현황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시, 정부는 “사실상의 의무교육 1년 효과”를 기대하였다. 취학 1년 전 교육·보육을 무상화하여 모든 유아를 제도권 교육·보육으

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만 5세 기관이용률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기관 이용률은 약 92%로 미이용 유아가 약 8%가량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연령대를 확대하기 보다는 만 5세 유아의 무상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취학 1년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있지만, 만 3~5세 3개 연령대를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16년부터 취학 1년 전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북한은 1976년부터 유치원 높은반(취학 1년 전)을 의무교육단계로 포함하였다. 핀란드의 취학 1년 전 교육은 일종의 학교 맛보기 교육으로 초등학교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통합형 유아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이윤진·정도상, 2015). 또, 북한은 취학 1년 전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이다. 이는 통일을 대비하여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나. 정책방향

- “완전한” 무상교육·보육 대상은 만 5세 유아로 한다

향후,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하게 된다면, 만 5세부터 적용하고 만 5세아 중심으로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다. 정책방안

교부율 인상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부금은 유아교육 외의 초, 중, 고등학교에도 투자해야 하는 재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증액하게 되면, 만 3~5세 3개 연령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 누리과정이 만 5세부터 시작했듯이 향후, 지원금 인상 시에도 5세부터 적용한다. 취학 1년 전 교육·보육은 초등학교로 이행을 앞둔 시기로서, 유아에게 취학 준비기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보육 범위를 확대하여 초등학교의 무상교육 수준으로까지 실현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2016). 2016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계획.
- 교육부 내부자료(2016a). 연도별 연령별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현황.
- 교육부 내부자료(2016b). 유치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변화.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6a). 2016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6b).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 교육통계연구센터 내부자료(2016a). 연도별 만 3세 현원수.
- 교육통계연구센터 내부자료(2016b). 연도별 공립단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
- 교육통계연구센터 내부자료(2016c). 연도별 공립병설유치원 기관 및 학급수.
- 권기성·강영욱(2006).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3(1), 57-53.
-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관복 외(2015). OECD 교육지표 201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아름(2015).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제 79호, 129-164.
- 김용일(2016).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 규명과 해법 찾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pp.23-54.
- 김용훈·오용균(2006). 정부기관 BSC 전략체계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4(3).

249-269.

-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숙·이운진·조예운(20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나정(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 분석: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幼兒教育學論集*, 18(1), 49-71.
- 나정·장명립(2001). 유아교육 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노화준(2008). 정책평가론. 법문사.
- 류지성(2010).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 박은혜·신은수(2012). 누리과정 재정 구조를 통해서 본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분석과 미래 방향, *한국교육*, 39(2), 55-78.
- 반상진(2015).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국회혁신교육포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8-47.
- 배경화·김성일(2007).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연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보건복지부(2011~2015). 2010~2014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a). 2015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b).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c).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d).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변화.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e).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원장) 연수 이수자 현황.

-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16). 2016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계획.
- 송기창(2015. 9.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13-29.
- 송기창·윤홍주·오범호·김중환·양희은·이승수·김영곤·김태환(201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성과예산 핵심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선진예산제도지원 TFT].
- 양미선·이규림·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윤수재·김길수·강은숙(2005). 정부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BSC 모델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석재·이유탉(2001).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평가를 위한 BSC 모형. 서울: 한국전산원.
-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16.
-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5).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써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 9(2). 113-136.
- 이윤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미화·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 이정림·최효미·정주영·오유정·이정아(2014).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분석 연구
- 이정만(2016a). 누리과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규명 과 해법 찾기.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이정만(2016b).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 규명과 해법』 자료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26.
- 이찬진(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회의원 도종환 김민기 유은혜 오영훈.
-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혜진·김은설·상경아·송신영(2013). 5세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 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 천무영(2010). 학교정보화사업의 BSC 평가모형 개발과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2016). 누리과정 시행 이후의 유아교육재정 변화 및 향후 과제.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55-68.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최윤경·이경진·신은경(2013).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하봉운(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쟁점과 해법. 20대 총선 교육공약 쟁점과 해법은? 제1차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Kaplan, R. S., & Norton, D. P.(1993). Putting the balnanced scorecard to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71,(5). 134 - 147.
- Kaplan, R. S., & Norton, D. P.(1996).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74(1). 75 - 85.
- Olve, N., Roy, J., & Wetter, M.(1999). A practical guide to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performance drivers. John Willey & Sons.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2. 1. 18).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Q/A.
-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13). '만5세 공통과정', 이름을 지어주세요.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5. 17).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29).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7. 14). 이제 '5세 누리과정'으로 불러주세요-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8. 13). 5세 누리과정 제정(안) 마련-만5세 누리과정 공청회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이 배우게 돼, 만5세 유아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과 바른 인성 강조.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30).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12. 14.) 5세 누리과정 만4세, 만3세 확대-이 대통령 2012년도 교과부 업무보고시 지시.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1. 18.). 만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31.).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20.).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및 교사용 지도서 및 DVD 보급,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누리과정 담당 교원연수 완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22.). 5세 누리과정 준비 차질 없이 진행-5세 누리과정 관련 자료 4종 발간·보급 및 32천명 교사연수 진행, 5세아 수용을 위해 26개 단설 유치원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27.).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유아 무상교육을 3년으로 확대하여 3~4세 누리과정 도입 근거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3. 21.).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 달라진다!-만5세 유아에 이어 만3~4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6. 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3,4세 누리과정(안) 공청회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7. 6.).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교사-5세에 이어 만 3, 4세까지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 마련,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 28.).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2013. 5. 22.). 유치원 내 유아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의무 부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교육부 보도자료(2014. 3. 28.). 유치원 2014년 2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 교육부 보도자료(2014. 8. 29.). 유치원 2014년 8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 교육부 보도자료(2015. 10. 21.).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강조.
- 교육부 보도자료(2015. 10. 27.).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 마련-지역 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
- 교육부 보도자료(2015. 11. 25.).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교육부·보건복지부의 공동노력 의지 학부모님께 전달.
-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3.).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24.).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촉구-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구.
-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27.).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4.).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 누리과정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5.).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1,095억원 지원 통보-누리과정 예산 성 시·도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5.).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차별 말고 조속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해야.
-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15.).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1,095억원 지원 통보.
-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18.).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 발표,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
- 교육부 보도자료(2016. 3. 16.).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16. 8. 18.). 누리과정 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16. 8. 18.).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 교육부 보도자료(2016. 9. 8.). 14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보도자료(2016. 9. 20).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

대한민국국회 보도자료(2016. 12. 3). 2017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16. 12. 6). 누리과정, 이제는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할 때.

[신문기사]

연합뉴스. 2015. 11. 9. 경남도-교육청 이번엔 누리과정 예산 '충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9/0200000000AKR20151109125951052.HTML?input=1195m>. 검색일: 2016. 11. 21

연합뉴스. 2016. 9. 13.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04300000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 11. 21

한국일보. 2016. 4. 21. [기고] 누리과정 재원 누가 부담해야 하나.
<http://www.hankookilbo.com/v/6e01bdbf77514e798334d49ed5503ac6>.
 검색일: 2016. 11. 21

헤럴드. 2016. 2. 2. 이게 무슨 '무상보육'....."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만큼 올랐다"
 5년간 80%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2000141>.
 검색일: 2016. 11. 21

[인터넷 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과정 이란?'. <http://www.moe.go.kr/2016nuri/sub01.jsp>. 검색일: 2016. 6. 20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과정 Q & A'. <http://www.moe.go.kr/2016nuri/sub02.jsp>. 검색일: 2016. 6. 20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0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0&menuSeq=3894&publSeq=2&menuCd=33359&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1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1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1&menuSeq=3894&publSeq=2&menuCd=33910&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2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2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2&menuSeq=3894&publSeq=2&menuCd=34616&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3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3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3&menuSeq=3894&publSeq=2&menuCd=58970&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4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4&menuSeq=3894&publSeq=2&menuCd=62352&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0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 2015년 교육통계서비스 만 4세, 만 5세 현원수.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menuCd=65932&itemCode=02&menuId=1_2_4&language=en. 검색일: 2016. 11. 21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5. 26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42109&bbs_id=&no=4311¤tPage=8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eGbn&Gontitle=N](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42109&bbs_id=&no=4311¤tPage=8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eGbn&Gontitle=N) 검색일: 2016. 12. 4.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OEDE 홈페이지.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5_eag-2015-en#page7. 검색일: 2016. 3. 15

Abstract

Performance Analysis of Nuri-policy

Lee Yunjin, Kim Jihyun, Lee Minkyung

This study is to develop performance index of Nuri-policy which was imposed in year 2012 and now turning fifth year of enforcement. The performance indicator is developed based on BSC(Balanced scorecard) model and diagnosed the current level of Nuri-policy and proposed a policy plan. The study perform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 specialist opinion interview, survey and many other methods. Especially,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performance index, cooperative research team was composed and the performance index that cooperative research team developed was reviewed three times. Total of twenty nine key performance index was developed. The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BSC model's four perspectives of key performance index areas follows. First, Customer Perspective is composed of total of eight key performance index(KIP). Among theses, seven indexes were achieved. In this study, customers were parents and children. After the Nuri-policy, the number of children receiving the fund increased, parents' satisfaction were high, teachers' labor condition and education, childcare curriculum were improved. However, the extra fee that parents pay who are using kindergarten and preschool(institution) is increasing and the gap of extra fee between the institutions were high(average of 30,199won per month in public preschool, average of 111,410won per month in private kindergarten). Kindergarten teachers thought Nuri-curriculum is far beneath the kindergarten curriculum and difference in teachers' labor condition also high among the institutions(average of kindergarten teachers receive 22.2 salary class, average of preschool teachers receive 8.4 salary class). Second, Internal Business Perspective contains total of three key performance index(KPI). Among, sufficiency of finances, expansion of Nuri-policy fund,

appropriacy of cost of Nuri-policy fund, all three indexes did not reach the goal.

Third,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contains six key performance index(KPI) in order of pla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uri-policy. Three index reached the goal and other three did not. Nuri-curriculum was established as the government planed, and following the government's guideline after the enforcement. However, time of discuss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the introduction of Nuri-policy was insufficient. Forth,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contains total of twelve key performance index(KPI)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Nuri-policy's continuous push.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index however, eleven key performance index excluding the compilation of Nuri-policy budget reached the goal. Legal system of Nuri-policy and parent's right of selecting the institution(attending the 1st choice institution 75.5%, living in metropolis 68.7%) remains as a urgent problem.

Policy propos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reduction of fee disparity between the institutions-increase of public institution in city area 2) standardization of teacher level between the institutions 3) rational calculation of Nuri-policy fund 4) expansion of Nuri-policy fund 5) modification of Nuri-policy legislation 6) constitution and operation of balancing act 7) modification use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extracurriculum activity) 8) changes in target of supporting after school program 9) fulfillment of free education, childcare starting from five year olds.

부 록

부록 1. 누리과정 관련 정부 보도자료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누리과정 이용 부모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누리과정 이용 부모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원장

부록 5. 심층면담 질문지: 교사

부록 6.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지

부록 7. 교사 대상 설문조사지

부록 8.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지

부록 9. 학부모 및 교사 표본추출 결과

부록 10.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틀 도출을 위한 단계별
진행 사항

부록 1. 누리과정 관련 정부 보도자료

〈부록 표 1〉 누리과정 관련 정부 보도자료

일시	발간부처	제목	비고(붙임)
2011. 5. 2.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질의답변
2011. 5. 13.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만5세 공통과정’, 이름을 지어주세요	
2011. 5. 17.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편해진다-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11. 6. 29.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2011. 7. 14.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이제 ‘만5세 누리과정’으로 불러주세요-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결과 발표	
2011. 8. 13.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5세 누리과정 제정(안) 마련-5세 누리과정 공청회 개최	
2011. 9. 2.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5세 누리과정 고시-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이 배우게 돼, 만5세 유아에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과 바른 인성 강조	5세 누리과정 고시문
2011. 9. 30.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 12. 14	교육과학기술부	5세 누리과정 만4세, 만3세 확대-이대통령, 2012년도 교과부 업무보고 시 지시	
2012. 1. 18.	교육과학기술부	만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2012. 1. 18.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내년 만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안)
2012. 1. 3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관련 질의·답변
2013. 2. 20.	교육과학기술부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및 교사용 지도서 및 DVD 보급,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누리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자료의 구성

일시	발간부처	제목	비고(붙임) 및 내용
		정 담당 교원연수 완료.	
2012. 2. 22.	교육과학기술부	5세 누리과정 준비 차질 없이 진행 -5세 누리과정 관련 자료 4종 발간· 보급 및 32천명 교사연수 진행, 5세 아 수용을 위해 26개 단설 유치원 신설.	
2012. 2. 27.	교육과학기술부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 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2012. 3. 21.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 달라 진다! 만5세 유아에 이어 만3~4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확대 등	
2012. 6. 12.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3,4세 누리과정(안) 공청회 개최	3-4세 누리과정 재정(안)
2012. 7. 9.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고시·5 세에 이어 만 3, 4세까지 국가 수준 의 공통과정 마련, 3-5세 유아의 발 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문
2013. 1. 28.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 전 신청하세요	
2014. 3. 28.	교육부	유치원 2014년 2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2014. 8. 29.	교육부	유치원 2014년 8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2014. 10. 9.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차질없이 시행 가능	
2014. 11. 19	교육부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카드 통합	
2015. 10. 21.	교육부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 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강조	
2015. 10. 27.	교육부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 한 법적 장치 마련·지역 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	
2015. 11. 25.	교육부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 문 발표-교육부·보건복지부의 공동 노력 의지 학부모님께 전달.	
2016. 1. 3.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2016. 1. 24.	교육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 산 편성 재촉구-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 구.	

일시	발간부처	제목	비고(붙임)
2016. 1. 27.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논란 관련 입장 밝혀	
2016. 2. 4.	교육부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 누리과정 관 련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2016. 2. 5.	교육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1,095억원 지원 통보-누리과정 예산 성 시·도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지원	
2016. 2. 5.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 이집 아이들 차별 말고 조속히 어린 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해야	
2016. 2. 18.	교육부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 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 발표, 교 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	
2016. 3. 16.	교육부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 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	

자료

- 1)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2)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13.). '만5세 공통과정', 이름을 지어주세요.
- 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5. 17.).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4)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29.).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5)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7. 14.). 이제 '5세 누리과정'으로 불러주세요-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결과 발표.
- 6)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8. 13.). 5세 누리과정 제정(안) 마련-만5세 누리과정 공청회 개최.
- 7)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이 배우게 돼, 만5세 유아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과 바른 인성 강조.
- 8)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30.).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12. 14.). 5세 누리과정 만4세, 만3세 확대-이 대통령 2012년도 교과부 업무보고시 지시.
- 10)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1. 18.). 만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 11)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12)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31.).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 1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20.).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및 교사용 지도서 및 DVD 보급,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누리과정 담당 교원연수 완료.
- 14)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22.). 5세 누리과정 준비 차질 없이 진행-5세 누리과정 관련 자료 4종 발간·보급 및 32천명 교사연수 진행, 5세아 수용을 위해 26개 단설 유치원 신설.
- 15)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27.).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유아 무상교육을 3년으로 확대하여 3~4세 누리과정 도입 근거 마련
- 16)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3. 21.).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 달라진다!-만5세 유아에 이어 만3~4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확대
- 17)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6. 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3,4세 누리과정(안) 공청회 개최.
- 18)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7. 6.).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고시-5세에 이어 만 3, 4세까지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 마련,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
- 19)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 28.).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20) 교육부 보도자료(2013. 5. 22.). 유치원 내 유아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의무 부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1) 교육부 보도자료(2014. 3. 28.). 유치원 2014년 2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 22) 교육부 보도자료(2014. 8. 29.). 유치원 2014년 8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
- 23) 교육부 보도자료(2015. 10. 21.).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강조.
- 24) 교육부 보도자료(2015. 10. 27.).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지역 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
- 25) 교육부 보도자료(2015. 11. 25.).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교육부·보건복지부의 공동노력 의지 학부모님께 전달.
- 26)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3.).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 27)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24.).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촉구-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구.
- 28)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27.).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29)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4.).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의 누리과정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30)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5.).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1,095억원 지원 통보-누리과정 예산 성 시·도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지원.
- 31)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5.).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차별 말고 조속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해야.
- 32)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18.).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4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재차 촉구-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 발표,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
- 33) 교육부 보도자료(2016. 3. 16.).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누리과정 이용 부모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 누리과정 이용 학부모용 질문지 —

※ 응답자(부모) 일반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학력은?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명)
5. 본인 및 배우자 직업 (본인: 배우자:)
6.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원)

※ 누리과정 이용 대상 자녀의 일반 특성(2명 이상일 때 큰 아이 기준)으로 작성)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출생순위 (총 _____명 중 _____째)
4. 누리과정 지원금 처음 받은 연도 ① 2013년 ② 2014년
③ 2015년 ④ 2016년
5. 현재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시기 (_____년 _____월부터)
6. 현재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일일 이용시간 (약 _____시간)
기관 도착 시간: 오전 _____시 기관출발 시간: 오후 _____시
7. 방과후 과정비(월 7만원) 지원 여부
(1) 받고 있다 (2) 받고 있지 않다

주요 면담 내용

1.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1. 누리과정이 현재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1-2. 자녀를 영어학원(또는 놀이학교)에 보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 2-1. 설명받은 누리과정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2-2. 기관에서의 설명 외의 다른 경로(예: 지인, TV·라디오·신문 등, SNS 등)를 통해 누리과정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2-2.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기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 외의 기관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있다면, 추가 비용의 항목(예: 차량비, 급간식비, 원복, 입학금 등), 금액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재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의 종류와 개수, 각각의 비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4-1. 이 비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활동프로그램 개수와 비용에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5.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 만족스러운 점,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6.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 등 정부 지원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6-1.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 지원으로 인한 절감액(월 22만원)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7.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 지원금은 누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는 모든 유아에게 차등 없이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맞벌이 가정, 주양육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누리과정 미이용 부모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 누리과정 미이용 학부모용 질문지 —

※ 응답자(부모) 일반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학력은?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명)
5. 본인 및 배우자 직업 (본인: 배우자:)
6.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원)

※ 해당 자녀의 일반 특성(2명 이상일 때 큰 아이 기준으로 작성)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출생순위 (총 _____명 중 _____째)
4. 누리과정 지원금 받은 경험 (1) 있다 ☞ _____회, 기관종류 _____ (2) 없다
5. 현재 기관 이용 시기 (_____년 _____월부터)
6. 현재 기관 일일 이용시간 (약 _____시간) 기관 도착 시간: 오전 _____시 기관출발 시간: 오후 _____시
7. 현재 기관 외의 사교육 개수, 총 비용? _____개 월 _____원

주요 면담 내용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1. 「누리과정」 시행으로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월 22만원와 방과후 과정비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2-1. 월평균 비용(수업료)
 - 2-2. 커리큘럼
 - 2-3. 기본커리큘럼 외 추가로 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종류와 비용

3. 현재 기관 이용 비용에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3-1. 만약, 비용 부담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만족하는 점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적어 주십시오.

5.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 이전에 다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영어 학원, 놀이학교 등)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 5-1. 있다면 다니게 된 이유, 다닌 기관의 종류, 이용기간, 월평균 비용 등을 적어주십시오.

6.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으며,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7.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와 월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예: 피아노 10만원, 태권도 10만원, 학습지 5만원 총 25만원)
※ 여기서 사교육이란 기관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프로그램비는 제외합니다
8. 귀하의 자녀(2015년 취학 예정인 자녀)가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어떤 유형(국공립, 민간 등)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녔는지, 그리고 만족/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9.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9-1. 거주 지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9-2. 기관에 대한 부모들의 평판은 어떠합니까?
10. 「누리과정」과 같이 정부의 비용지원정책이 저출산 극복 또는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는 이유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1. 귀하께서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원장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 원장(감) 질문지 —

1. 응답자(원장) 일반 특성

1. 기관명						2. 설립연도		_____년		
3. 설립유형		유치원		① 공립 단설 ② 공립초등학교 병설 ③ 사립 법인 ④ 사립 사인						
		어린이집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 ④ 직장 ⑤ 가정						
4. 유치원/어린이집	인가 학급수	_____ 학급	현재 학급수	_____ 학급	누리과정 재원 영유아 현황	만5세	_____ 명			
	정원	총 _____명		현원		총 _____명		만4세	_____ 명	
								만3세	_____ 명	
5. 원장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_____세					
	최종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아동학 ③ 초중등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원장 경력	총 _____년 _____개월 (원장경력만 외 기타경력 제외)								
	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6. 교직원 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교원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1) 정교사 총 _____명 (1급 _____명, 2급 _____명) 2) 보조교사 총 _____명 3) 특수교사 총 _____명 4) 방과후 과정 교사 _____명 5) 기타 _____ 총 _____명 ※ 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입력해주세요.							
	전체 교직원 (교원포함)		총 _____명 (조리사, 운전기사, 보건교사, 영양사, 도우미 등)							

주요 면담 내용

1. 현행 누리과정이 이원화 시기의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에 비해 내용면에서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누리과정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우리문화이해, 기본생활습관, 유·초연계 강화,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리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점(영역, 생활주제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1-2.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는 교육·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양질의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내용상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정부의 유아학비(공립 월 6만원, 사립 22만원)와 방과후 과정비(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2-1. 유아학비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 2-2. 유아학비 외에 학부모로부터 추가로 걷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명과 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2-3. 방과 후 과정비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3.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유치원의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3-1. 귀원의 운영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3-2.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을 일일 4~5시간 운영하고 계십니까?
 - 3-3. 방과후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독립편성반 또는 오후 재편성반 중 어느 쪽으로 운영하시는지요? 방과후 과정 운영 기준(대상 선정 우선 순위), 방과후 과정 이용 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종류, 개수, 비용 등)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3-4. 현재 방과후 과정의 보편적 지원(일일 이용 시간 8시간 이상 유아에게 동일 금액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 4-1. 귀원의 교사는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였습니까? 매년 연수를 받고 있습니까? 교사 연수를 위해 귀원은 교사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4-2. 귀원 또는 알고 계시는 유치원에서 준교사 또는 보육교사 3급 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4-3. '장애아반'에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교사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 4-4. 귀하께서는 누리과정 시행 후, 현장의 교사자격이나 전문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5.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하면서 정부는 “교사 수급 조절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양성 체제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사 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5.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누가(정부? 시도교육청?)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1.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방이 가열되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교사 월급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요?

6. 누리과정 시행 5년째, 누리과정 도입의 공(公)과 과(過)를 간단히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7.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점이나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부록 5. 심층면담 질문지: 교사용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 교사용 질문지 —

※. 응답자(교사) 일반 특성

1. 기관명				
2. 설립유형		유치원	①공립단설 ②공립병설 ③사립법인 ④사립사립	
		어린이집	①국공립 ②법인 ③민간 ④직장 ⑤가정	
3. 일반 현황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_____ 세	
	최종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이동학 ③ 초중등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교사 경력	총 _____ 년 _____ 개월 (교사경력 외 기타경력 제외)		
		현재	재직 경력: 총 _____ 년 _____ 개월	
		이전 (가장 최근 근무 기관 기준)	① 총 _____ 년 _____ 개월 ② 비해당(현재 기관이 처음 근무지임)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① 원장 ② 유치원 원감 ③ 수석교사 ④ 유치원 정교사 1급 ⑤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⑥ 원장 ⑦ 보육교사 1급 ⑧ 보육교사 2급 ⑨ 보육교사 3급		
4. 현재담당 학급(반)	① 만 3세반 ② 만 4세반 ③ 만 5세반 ④ 만 3,4세 혼합연령반 ⑤ 만 4,5세 혼합연령반 ⑥ 만 3,5세 혼합연령반 ⑦ 만 3,4,5세 혼합연령반	5. 현재 담당 학급(반) 유아수	_____ 명	
6. 누리과정 담당학급(반) 경험 횟수	① 2016년 ② 2015년 ③ 2014년 ④ 2013년 ⑤ 2012년 총 _____ 회 담당			
7.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횟수	지금까지 총 _____ 회 (주관기관: _____)			

주요 면담 내용

1. 현행 누리과정이 이원화 시기의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에 비해 내용면에서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누리과정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우리문화이해, 기본생활습관, 유·초연계 강화,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리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점(영역, 생활주제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1-2.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받게 되는 교육·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양질의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내용상의 개선점?

2. 누리과정 실시 이후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물리적 환경(영역별 환경 구성 등), 교재 및 교구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3. 귀원의 등·하원 시간(기관운영시간) 및 하루일과 중 누리과정 운영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3-1. 귀하의 평소 출·퇴근 시간도 말씀해 주십시오.

4.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와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4-1. 이수하신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유형(집합교육, 온라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 4-2. 이수하신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 4-3.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4. 원활한 누리과정수업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원내장학, 교수자료 지원 등) 누리과정 관련하여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5. 귀하께서는 누리과정 시행 후,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1.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하면서 정부는 “교사 수급 조절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양성 체제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사 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 6.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 대해 처우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누리과정 시행 이후 처우가 개선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6-1. 누리과정이 도입 된 후, 행정업무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방이 가열되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교사 월급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요?
 - 7-1.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누가(정부, 시도교육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누리과정 시행 5년째, 누리과정 도입의 공(公)과 과(過)를 간단히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9.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점이나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I.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대상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3세~5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첫째 자녀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모 ② 부 ③ 기타 **☞ 조사 중단**

문2 귀 자녀가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입니다.
 귀 자녀가 만3세가 되기 이전 받으신 지원은 '누리과정 지원이 아님'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생 중 취학 유예 아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 1인 기준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은 총 3회 년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귀 자녀의 출생년도는 몇 년도 이십니까? 년 월

문4 귀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문5 귀 자녀의 형제관계는 어떠합니까? 총 명의 자녀 번째 자녀

문6 귀 자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년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2014년 ② 2015년 ③ 2016년 ④ 기타 (_____ 년)

II. 귀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력 및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귀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단설 유치원 ② 공립병설 유치원 ③ 사립법인 유치원(종교기관부속, 학교법인, 대학부속)
 ④ 사립사인 유치원 ⑤ 국공립 어린이집 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⑦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⑧ 민간 어린이집 ⑨ 가정 어린이집
 ⑩ 직장 어린이집 ⑪ 부모협동 어린이집

문8 현재 다니는 기관이 해당 자녀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처음 받으실 당시 1순위로 원하던 기관이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0로 이동** ② 아니다 **☞ 문9로 이동**

문9 [문 8의 ② 응답자만] 원하시던 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으실 경우, 그 중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추첨에서 떨어져서
- ② 대기자가 많아서
- ③ 접근성이 떨어져서 (집 또는 회사와 멀어서)
- ④ 비용이 비싸서
- ⑤ 형제가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⑥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10 현재 다니는 기관은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년 월부터 현재까지

문11 현재 다니는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순서대로 2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원장 및 교사
- ② 접근성 (집 또는 회사와의 거리)
- ③ 비용
- ④ 프로그램의 질
- ⑤ 급간식의 질
- ⑥ 기관의 시설 환경
- ⑦ 운영 시간
- ⑧ 국공립 기관 여부
- ⑨ 주변의 평판
- ⑩ 평가(인증) 실시여부
- ⑪ CCTV 설치 여부
- ⑫ 기타 (자세히 : _____)

문12 귀 자녀의 평소 등원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 분

문13 귀 자녀의 평소 하원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 분

※ 문 12 등원시간과 문 13 하원시간 응답 기준
문 12 등원시간은 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문 13 하원시간 역시 기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4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월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귀하의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조금 도움이 된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3-5세 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맞벌이 등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유아는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③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III.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16 귀하는 현재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공립유치원인 경우 6만원)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기관에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있다면 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하지 않는 항목은 빈 칸으로 두시고, 만약 이용을 하기는 하나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이용하지만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예 이용하지 않아**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빈 칸으로 두고 넘어감
 - **이용은 하나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무상이용, 지원금으로 충당 등) : **0원으로 응답**
- ※ 2)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월납, 분기납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으셨던 경우, 최근 1년간의 총 납부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 방과후 과정 지원금(사립 7만원, 국공립 5만원) 외 별도로 내는 방과후 과정비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중이신 분들은 응답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월 평균 지불비용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누리과정 지원금 외 별도로 내는 월 수업료(교육비, 보육료 등)								원
2)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원
3) 급·간식비								원
4) 차량 운행비								원
5) 교재·교구비								원
6) 방과후 과정 지원금 외 별도로 내는 방과후 과정비 ※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원
7) 기타 1 (자세히 : _____)								원
8) 기타 2 (자세히 : _____)								원
9) 기타 3 (자세히 : _____)								원

문 17 귀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셨거나,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까? **작년(2015년)부터 올해(2016년)까지를 기준으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술', '음악', '체육', '외국어(영어 등)', '한글',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용하고 계신다면 '㉠ 2015년'과 '㉡ 2016년' 모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작년까지만 이용하시고 올해엔 하지 않으시는 경우 '㉠ 2015년'에만,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이용하지 않았으나 올해 처음 이용 중이신 경우 '㉡ 2016년'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작년과 올해 모두 이용하지 않고 계신 경우 '㉢ 미이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 2015', '㉡ 2016'은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 ① 2015년에 이용 **☞ 문 18-1로 이동하여 프로그램 종류 응답**
- ② 2016년에 이용 **☞ 문 18-2로 이동하여 프로그램 종류 응답**
- ③ 미이용 **☞ 문 23로 이동**

※ 문 18 - 문 22까지는 해당 연도에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문 18 [문1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 자녀는 어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 했거나 이용 중에 있습니까?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문 17번에서 체크하신 년도에 해당하는 응답 란에 이용 프로그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7에서 ① 2015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18-1에 응답
 - 문 17에서 ② 2016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18-2에 응답
 - 문 17에서 ① 2015년과 ② 2016년에 모두 응답하신 경우 : 문18-1과 문18-2 모두 응답

[문17의 ① 응답자] - 2015년		[문17의 ② 응답자] - 2016년	
문 18-1	이용 프로그램 종류	문 18-2	이용 프로그램 종류
①	미술	①	미술
②	음악	②	음악
③	체육	③	체육
④	외국어(영어)	④	외국어(영어)
⑤	한글	⑤	한글
⑥	수학	⑥	수학
⑦	과학	⑦	과학
⑧	기타 1 (자세히 :)	⑧	기타 1 (자세히 :)
⑨	기타 2 (자세히 :)	⑨	기타 2 (자세히 :)
⑩	기타 3 (자세히 :)	⑩	기타 3 (자세히 :)

문 19 [문1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 자녀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 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 **요일별로 이용 개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앞서 문 17번에서 체크하신 년도에 해당하는 응답 란에 이용 프로그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7에서 ① 2015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19-1에 응답
 - 문 17에서 ② 2016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19-2에 응답
 - 문 17에서 ① 2015년과 ② 2016년에 모두 응답하신 경우 : 문19-1과 문19-2 모두 응답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요일은 빈칸으로 두십시오.

문 19-1 [문17의 ① 응답자] 2015년 요일별 이용 개수	월	화	수	목	금	토	개 참여
문 19-2 [문17의 ② 응답자] 2016년 요일별 이용 개수	월	화	수	목	금	토	개 참여

문 20 [문1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 자녀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때 학부모가 부담하는 **총 추가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지불하시는 경우 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앞서 문 17번에서 체크하신 년도에 해당하는 응답 란에 이용 프로그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7에서 ① 2015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20-1에 응답
 - 문 17에서 ② 2016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20-2에 응답
 - 문 17에서 ① 2015년과 ② 2016년에 모두 응답하신 경우 : 문20-1과 문20-2 모두 응답

문 20-1 [문17의 ① 응답자] 2015년 월평균 금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문 20-2 [문17의 ② 응답자] 2016년 월평균 금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문21 [문1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 자녀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어떠합니까?

※ 앞서 문 17번에서 체크하신 년도에 해당하는 응답 란에 이용 프로그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7에서 '① 2015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21-1에 응답
 - 문 17에서 '② 2016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21-2에 응답
 - 문 17에서 '① 2015년'과 '② 2016년'에 모두 응답하신 경우 : 문21-1과 문21-2 모두 응답

[문17의 ① 응답자] - 2015년
특별활동(특성화)
문21-1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① 전혀 부담 없었음
 ② 별로 부담 없었음
 ③ 다소 부담 되었음
 ④ 매우 부담 되었음

[문17의 ② 응답자] - 2016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문21-2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① 전혀 부담 없음
 ② 별로 부담 없음
 ③ 다소 부담 되었음
 ④ 매우 부담 되었음

문22 [문1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 자녀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그 프로그램은 **하루 중 주로 언제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 앞서 문 17번에서 체크하신 년도에 해당하는 응답 란에 이용 프로그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7에서 '① 2015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22-1에 응답
 - 문 17에서 '② 2016년'에 응답하신 경우 : 문22-2에 응답
 - 문 17에서 '① 2015년'과 '② 2016년'에 모두 응답하신 경우 : 문22-1과 문22-2 모두 응답

[문17의 ① 응답자] - 2015년
특별활동(특성화)
문22-1 프로그램 주 실시 시간대
 ① 오전
 ② 오후
 ③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실시
 ④ 잘 모름

[문17의 ② 응답자] - 2016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문22-2 주 실시 시간대
 ① 오전
 ② 오후
 ③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실시
 ④ 잘 모름

문23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별 선택 가능여부는 어떠합니까?

- ① (프로그램별로) 모두 학부모에 의해 선택 가능함
- ② 부분적으로 학부모가 선택 가능(전체 중 일부 프로그램만 학부모가 선택 할 수 있음)
- ③ 학부모 선택권 없이 모두 이용해야 함
- ④ 선택이 가능한지 하나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IV. 문 24에서 문 27까지는 응답 기준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응답 합니다.
(즉, 문 7에서 ①~④에 답한 경우만 응답합니다.)
방과후 과정(종일제)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4 귀하께서는 **방과후 과정(오후 돌봄)**을 이용하면 정부가 **추가로 비용(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몰랐다

문 25 귀 자녀는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방과후 과정(오후 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이용 중) **☞ 문 26으로**
- ② 아니다(미이용) **☞ 문 27로**

문 26 [문 25의 ① 응답자만]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과정(오후 돌봄)도 이용**하는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사립유치원 월 7만원, 공립유치원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귀하의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조금 도움이 된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 27 누리과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과정(오후돌봄)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③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④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V. 귀하의 평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8 귀하께서는 평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의 교육·보육 과정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9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시행으로 두 기관 간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배우는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 문 31으로**
- ② 누리과정 **시행과 무관하게** 두 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는 **역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 문 30로**
- ③ 누리과정 **시행과 무관하게** 두 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 문 31으로**
- ④ 잘 모르겠다 **☞ 문 31으로**

문 30 [문29의 ② 응답자만] 누리과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운영시간이 달라서(어린이집은 종일제, 유치원은 반일제)
- ② 운영목적이 달라서(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 ③ 교사의 수준이 달라서
- ④ 시설·설비 등 환경이 달라서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VI. 누리과정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31 귀하께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공립유치원 6만원)을 지원받으셔서 절약된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장 비용이 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가족 생활비
- ② 해당 자녀(본 조사 응답의 기준인 자녀) 사교육비
- ③ 해당 자녀(본 조사 응답의 기준인 자녀)를 위한 추가지출(간식, 장난감, 옷, 체험활동 등)
- ④ 다른 자녀(본 조사 응답의 기준인 자녀 이외의 다른 자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비
- ⑤ 다른 자녀(본 조사 응답의 기준인 자녀 이외의 다른 자녀) 사교육비
- ⑥ 저축 및 보험 등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32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하여 해당 자녀의 사교육 종류 및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제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 문항에서의 사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규 보육/교육과정 비용,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등 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 본 문항에서 사교육이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외에, 학습지, 피아노-태권도-미술 등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의미합니다.
 ※ 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수와 비용에 모두 '0'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32-1 사교육 개수		문32-2 사교육 총 비용												
1) 2015년	사교육 총 개수	□	□	개	월 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	□	□	□	□	□	□	□	
2) 2016년	사교육 총 개수	□	□	개	월 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원
						□	□	□	□	□	□	□	□	

문33 다음의 항목은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면서 추구했던 목적입니다. 귀하가 보시기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해당 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①	②	③	④
3)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비용부담이 감소되었다	①	②	③	④
4)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문34 다음 중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순서대로 **두 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원하는 기관에 재원 가능하게 해야 함)
- ② 국공립과 민간 기관(예: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등) 간의 이용비용 격차 완화
- ③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④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 ⑤ 누리과정 예산 확충
- ⑥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으로 지원방식 변경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35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을 두고 현재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누리과정 지원금은 어느 주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 ② 시도 교육청
- ③ 잘 모르겠다

문36 누리과정 또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7 실례지만, 귀 댁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총 명

문38 실례지만, 귀하와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배우자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십시오).

부	만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세	모	만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세
---	---	---	---	---	---

문39 실례지만, 귀하와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		모	
---	--	---	--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2~3년)대졸
- ③ 4년제 대졸
- ④ 대학원 이상
- ⑤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문40 실례지만, 귀하와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		모	
----------	--	----------	--

- | | | |
|-------------|-------------|-------------------|
| ① 농/임/어업 | ② 자영업 |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
|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⑤ 사무/관리/전문직 | ⑥ 전업주부 |
| ⑦ 학생 | ⑧ 무직/퇴직/기타 | ⑨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

문41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해주세요.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150만원 미만 |
| ③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250만원 미만 |
| ⑤ 250만원~3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400만원 미만 |
| ⑦ 400만원~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700만원 미만 |
| ⑨ 700만원~1,000만원 미만 | ⑩ 1,000만원 이상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아래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응답자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 —
기관 소재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소재지 규모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면접원성명	면접원 ID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Supervisor 검증		검증결과	

부록 7. 교사 대상 설문조사지



누리과정 성과 조사분석 연구 (교사용)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 닐슨코리아
■ 담당자 : 육아지원연구팀 연구원 이 민 경 (02-398-7764)	■ 담당자 : 사회공공조사팀 연구원 손 일 란 (02-2122-7123)

※ 설문지 작성요령: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빈 칸을 채워 주십시오.

응답 방법 예시

문 - 하나만 응답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만 응답 해주세요.

① 사과 ② 배

문 - 모두 응답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과일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사과 ② 배 ③ 수박 ④ 포도

문 - 순위로 응답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3
-----	---	-----	---

← 사과를 제일 좋아하고 수박이 두 번째인 경우

① 사과 ② 배 ③ 수박 ④ 포도

문 - 빈칸 기입 귀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6	0
---	---

 세

I. 귀하의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현황에 질문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근무 기관 유형	유치원	① 국공립 단설 유치원 ② 공립병설 유치원 ③ 사립법인 유치원 (종교기관 부속, 학교법인, 대학부속) ④ 사립사인 유치원		
	어린이집	⑤ 국공립 어린이집 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⑦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⑧ 민간 어린이집 ⑨ 가정 어린이집 ⑩ 직장 어린이집 ⑪ 부모협동 어린이집		
2. 성별	① 남 ② 여	3. 연령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4. 최종학력	① 고졸 ② 2년 전문대졸 ③ 3년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5. 최종전공	① 보육·아동·아동복지 ② 유아교육 ③ 초·중등교육 ④ 사회복지 ⑤ 기타			
6. 최상위 소지 자격	유치원	① 원장 ② 유치원 원감 ③ 수석교사 ④ 유치원 정교사 1급 ⑤ 유치원 정교사 2급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경우, 두 가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⑥ 원장 ⑦ 보육교사 1급 ⑧ 보육교사 2급 ⑨ 보육교사 3급		
7. 총 교사경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 전체 교사 경력	
8. 현재 기관 경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 현 직장에서의 교사 경력 ※ 전체 경력(문6)과 같거나 적어야 함	
9. 현재 담당 반 (학급) 종류	① 만 3세반 ② 만 4세반 ③ 만 5세반 ④ 만 3,4세 혼합연령반 ⑤ 만 4,5세 혼합연령반 ⑥ 만 3,5세 혼합연령반 ⑦ 만 3,4,5세 혼합연령반			10. 현재 담당반 (학급) 유아 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11. 누리과정 담당반(학급) 경험횟수	① 2012년 ② 2013년 ③ 2014년 ④ 2015년 ⑤ 2016년			※ 해당되는 연도 모두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II. 귀하의 근무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2 귀하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평균 일 근무

문 13 귀하께서는 주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정기적으로(예: 격주/격월 등으로) 주말 근무 함 ② 비정기적으로(예: 정해진 주/월 없이) 주말 근무 함
- ③ 주말 근무 없음

문 14 귀하의 **평소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근 시간은 **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시간 역시 **기관에서 나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41 출근 시간 시 분 **문 142** 퇴근 시간 시 분

문 15 귀하께서는 원 내에서 **아침 당번**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예: 격일/격주/정해진 요일 등) 아침 당번으로 일찍 출근 ③ 아침 당번이 없음
 ② 비정기적으로(예: 정해진 주/요일 없이) 아침 당번으로 일찍 출근

문 16 귀하께서 현재 받고 계신 **호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호봉제 적용 호봉 ② 호봉 기준이 없음 ③ 잘 모름

문 17 귀하께서는 **월 급여내역**을 받으십니까?

- ① 매월 받는다 ② 받아본 적이 있다 ③ 전혀 받지 않는다

문 18 귀하께서 현재 받고 계신 **월 평균 급여**는 얼마나 되십니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천만	백만	십만	만원
----	----	----	----

 만원

III.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9 귀하께서 하루 중 **누리과정 수업**을 하는 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 수업계획안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특별활동 강사의 수업 시간 등의 특별한 이유로 일주일 중 하루 정도만 다른 시간에 시작하고 종료하시더라도 그것과 상관 없이 **일주일의 수업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의 평균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 **24시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즉, 오후 12시 이후 시간의 경우 13시(오후 1시), 14시(오후 2시), 15시(오후 3시) 등으로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 귀하의 전체 근무시간이 아닌, **하루 중 누리과정 수업을 하는 시간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시면서, 그 중 누리과정을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하실 경우, 19-1 시작 시간에 09:00으로, 19-2 종료 시간에 14:00으로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문 191 시작 시간 시 분 **문 192** 종료 시간 시 분

문 20 귀하께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셨습니까? 아래 보기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누리과정 집합연수 이수
 ② 원격연수 이수
 ③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이외의 추가연수 이수
 ④ 어떤 연수도 이수하지 않았음 **※ 다른 보기와 함께 선택할 수 없음**

문21 귀하께서는 2016년 올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 보기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신 경우 '㉔ 올해엔 연수를 이수하지 않음'에만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 ①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연수를 이수함
- ② 사·도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 주최 연수를 이수함
- ③ 유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연수를 이수함
- ④ 지자체 주최 연수를 이수함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 ⑥ 올해엔 연수를 이수하지 않음 **☞ 다른 보기와 함께 선택할 수 없음**

문22 귀하께서는 2016년 올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내에서 학습공동체 활동(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을 포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래 보기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20에서 응답하신 집합, 원격 연수를 제외한 **순수 학습공동체 활동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올해엔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없음 **☞ 다른 보기와 함께 선택할 수 없음**
- ② 원내 교사간 학습공동체 활동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 포함)
- ③ 지역 내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간 공동 수업참관 또는 누리과정지도 공동 연구
- ④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누리과정 관련 워크숍 등 모임에 참석
- ⑤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누리과정 관련 워크숍 등 모임에 참석
- ⑥ 기타 (자세히 : _____)

문23 이전의 유치원교육과정이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비교해서 교육·보육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평가한다면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 ① 이전 교육·보육과정에 비해 좋아졌다(개선되었다)
- ② 이전 교육·보육과정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 ③ 이전 교육·보육과정보다 오히려 못하다(나빠졌다)
- ④ 잘 모르겠다

문24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반(학급)에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인력(보조교사 등)이 있습니까?

- ① 지원인력 있음 **☞ 문 25로**
- ② 지원인력 없음 **☞ 문 26으로**

문25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인력(보조교사 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교·보육 활동 보조
- ② 차량 지도
- ③ 청소
- ④ 행정업무
- ⑤ 수업자료 준비
- ⑥ 급간식 지도
- ⑦ 교재교구 준비
- ⑧ 기타 (_____)

문26 귀하께서 보시기에 누리과정(공통과정)에서 다음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정혀 반영되지 않음	별로 반영되지 않음	약간 반영됨	잘 반영됨	비해당
1) 창의인성 교육	①	②	③	④	/
2) 우리 문화 이해교육	①	②	③	④	
3) 유아 연령별 발달 특성	①	②	③	④	
4)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①	②	③	④	
5)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 어린이집 교원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 33 현재 귀하께서 맡은 반의 유아 중 **가장 많은(일주일 누적 기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한 유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유아를 한 명** 떠올려주십시오.
 ※ 아래 문항은 **방금 떠올리신 유아를 기준으로, 그 유아의 요일별 프로그램 개수와 수업시간을 응답**하시면 됩니다.
 ※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요일에는 '0'을 기재**해주시고, 같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듣는 경우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주**해서 개수를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해당 아동 1인이 월요일-미술, 화요일-영어, 수요일-체육, 목요일-영어, 금요일-한글을 특별활동으로 받을 경우, 아래 '요일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개수'에는 월: '1', 화: '1', 수: '1', 목: '1', 금: '1', 토: '0'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1개당 최대 수업 시간(분)'은 전체 과목의 합산이 아닌, 해당 아동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중 1회당 수업시간이 가장 긴 한 과목**의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해주시십시오.
 예를 들어 그 아동이 월요일-미술, 화요일-영어, 수요일-체육, 목요일-영어, 금요일-한글 특별활동을 듣는데 이 중 금요일에 진행되는 한글 수업이 1회당 40분으로 가장 긴 수업이라면 아래 응답란에 '40' 분으로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문 33-1 요일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개수

월	화	수	목	금	토	개 여

문 33-2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중 1회당 최대 수업 시간 (분)

		분
--	--	---

문 34 귀 원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 여부는 어떠합니까?

- ① (프로그램별로) 모두 학부모에 의해 선택 가능함
- ② 부분적으로 학부모가 선택 가능(전체 중 일부 프로그램만 학부모가 선택 할 수 있음)
- ③ 학부모 선택권 없이 모두 이용해야 함
- ④ 선택이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V. 누리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3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도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3-5세 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맞벌이 등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유아는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③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문 36 누리과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과정(중일제반)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③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④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 37 다음의 항목은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면서 추구했던 목적**입니다. 귀하가 보시기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①	②	③	④
3)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비용부담이 감소되었다	①	②	③	④
4)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문 38 교사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되면서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지 않음	대체로 개선되었음	많이 개선되었음
1) 교사 급여 수준 개선(차우 개선비 인상)	①	②	③	④
2) 교육·보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①	②	③	④
3) 교사의 전문성 향상	①	②	③	④
4) 부모의 기관 신뢰도 제고	①	②	③	④
5) 행정 업무 경감	①	②	③	④
6) 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①	②	③	④
7) 기관의 시설 환경(교실, 실내외 놀이터 개·보수 등)	①	②	③	④
8) 낡고 오래된 교재·교구 교체	①	②	③	④
9) 기관 운영의 투명성	①	②	③	④
10) 교사의 안정적 고용	①	②	③	④

문 39 교사의 입장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 순서대로 두 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리과정 연수(교사 재교육) 내실화 ③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 ⑤ 교사의 차우 개선 ⑦ 누리과정 장학/컨설팅 실시 확대 ⑨ 행정 업무 축소 ⑪ 기타 (자세히 : _____)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누리과정 활동 내용의 질적 제고 ④ 보조인력 지원 강화 ⑥ 교사의 전문성 향상 ⑧ 유치원·어린이집 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 동일화 ⑩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
|---|--|

문40 다음 중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순서대로 두 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①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원하는 기관에 재원 가능하게 해야 함)
- ② 국공립과 민간 기관(예: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등) 간의 이용비용 격차 완화
- ③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④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 ⑤ 누리과정 예산 확충
- ⑥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으로 지원방식 변경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41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을 두고 현재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누리과정 지원금은 어느 주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 ② 시도 교육청
- ③ 잘 모르겠다

문42 끝으로,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을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래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응답자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 —
현재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거주지 규모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면접원성명	면접원 ID	③ 읍면지역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Supervisor 검증		검증결과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부모(가구)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부모(가구)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기 보다는 가구소득, 가족 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예: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응답함】 유치원이 방과후과정비의 지급 규정(일일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게)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문4의 ②만 응답	①	②	③	④
11) 누리과정 정책 실시 후, 국공립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증설되었다.	①	②	③	④
12)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3) 누리과정 정책 실시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9 다음은 누리과정 정책 수립 시 소요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칸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부 관계부처가 2011년 5월 2일에 발표한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대한 보도자료 중 공통과정 제정 및 적용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공통과정 마련 (2011. 5~7)
- 공통과정 제정·고시 (2011. 8)
- 해설서 개발·보급 및 공통과정 담당교사 연수 실시 (2011.9 ~ 2012.2)
- 공통과정 적용 (2012.3)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011년도의 만 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제정 소요 시간은 이월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하나의 공통과정으로 제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이월화된 예산(지방재정교부금 vs 국비, 지방비)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은 **누리과정 교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시도청 소속 공무원만 응답함] 누리과정 실시 이후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 문 4의 ③만 응답 ※ 누리과정 수업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응답함]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담임교사수당, 교사처우개선비(사립 유치원만 해당)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 문 4의 ②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누리과정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누리과정 실시 이후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1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올해(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은 어떠합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올 초부터 전액 편성되었다.
- ② 올 초에는 일부 편성되었으나, 지금은 전액 편성되었다.
- ③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일부만 편성되었다.

문 12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서 교육청(시도교육감)과 시도청(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 ① 갈등 상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문 13으로**
- ② 올 초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해결되었다. **☞ 문 13으로**
- ③ 갈등 양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문 14로**

문 13 [문 12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의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문 14 [문 12의 ③ 응답자만] 귀하의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부록 9. 학부모 및 교사 표본추출 결과

〈부록 표 2〉 학부모 대상 조사 세부조사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전체			남아			여아			
	총계	남아	여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1,000	515	485	166	173	176	157	163	165	
서울	남동부	38	20	18	6	7	7	6	6	6
	남서부	51	27	24	9	9	9	8	8	8
	북동부	50	26	24	8	9	9	8	8	8
	북서부	27	15	12	5	5	5	4	4	4
부산	동부	54	27	27	9	9	9	9	9	9
	읍면부	6	3	3	1	1	1	1	1	1
대구	동부	41	21	20	7	7	7	6	7	7
	읍면부	6	3	3	1	1	1	1	1	1
인천	59	30	29	10	10	10	9	10	10	
광주	31	16	15	5	5	6	5	5	5	
대전	31	15	16	5	5	5	5	6	5	
울산	동부	21	12	9	4	4	4	3	3	3
	읍면부	6	3	3	1	1	1	1	1	1
세종	6	3	3	1	1	1	1	1	1	
경기	동부	228	117	111	38	39	40	36	37	38
	읍면부	44	23	21	7	8	8	7	7	7
강원	동부	18	9	9	3	3	3	3	3	3
	읍면부	9	5	4	1	2	2	1	1	2
충북	동부	18	9	9	3	3	3	3	3	3
	읍면부	12	6	6	2	2	2	2	2	2
충남	동부	24	12	12	4	4	4	4	4	4
	읍면부	20	11	9	3	4	4	3	3	3
전북	동부	27	14	13	4	5	5	4	4	5
	읍면부	6	3	3	1	1	1	1	1	1
전남	동부	18	9	9	3	3	3	3	3	3
	읍면부	18	9	9	3	3	3	3	3	3
경북	동부	30	15	15	5	5	5	5	5	5
	읍면부	18	9	9	3	3	3	3	3	3
경남	동부	48	25	23	8	8	9	7	8	8
	읍면부	23	12	11	4	4	4	3	4	4
제주	12	6	6	2	2	2	2	2	2	

〈부록 표 3〉 교사 대상 조사 최종 비례배분 현황

단위: 개소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 공립	사립	계	국공 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1,000	345	181	164	655	110	85	67	243	60	22	68
서울												
남동부	32	10	4	6	22	6	1	1	8	2	1	3
남서부	44	12	4	8	32	8	2	3	12	2	1	4
북동부	44	13	4	9	31	8	1	3	12	3	1	3
북서부	32	9	3	6	23	5	1	2	8	2	1	4
부산	48	15	5	10	33	6	4	3	12	3	2	3
대구	45	15	6	9	30	3	5	3	12	4	1	2
인천	47	16	7	9	31	6	2	2	13	3	1	4
광주	37	14	6	8	23	3	5	2	9	1	1	2
대전	38	12	5	7	26	3	3	2	10	4	1	3
울산	32	11	5	6	21	3	2	1	9	2	1	3
세종	14	4	3	1	10	2	1	1	4	0	0	2
경기												
시	104	36	18	18	68	12	4	6	28	7	4	7
군	15	7	5	2	8	2	1	1	2	1	0	1
강원												
시	34	11	6	5	23	2	4	3	8	3	1	2
군	23	9	7	2	14	3	3	2	4	0	0	2
충북												
시	33	11	6	5	22	3	4	2	8	2	1	2
군	22	8	6	2	14	2	3	2	4	1	1	1
충남												
시	42	14	8	6	28	4	4	3	11	2	1	3
군	22	9	6	3	13	2	3	2	4	1	0	1
전북												
시	38	15	8	7	23	3	5	4	8	1	0	2
군	20	8	6	2	12	2	2	3	3	1	0	1
전남												
시	32	12	7	5	20	2	4	2	7	2	1	2
군	29	12	9	3	17	3	5	3	4	1	0	1
경북												
시	46	18	10	8	28	4	4	1	12	3	1	3
군	23	10	7	3	13	2	2	2	5	1	0	1
경남												
시	54	18	9	9	36	5	4	3	14	6	1	3
군	22	8	6	2	14	3	2	2	5	1	0	1
제주	28	8	5	3	20	3	4	3	7	1	0	2

부록 10.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틀 도출을 위한 단계별 진행 사항

1. 1단계: 연구협력진 검토 단계(중간보고 워크숍)

가. 고객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확대 (소득하위 70%→전계층)	지원 대상 유아수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학부모 만족도 누리과정 미이용 이유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방과후 과정비 보편적 지원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수 증가 학부모 만족도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이 고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	누리과정을 배우는 유아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유아 연령별 확대 현황
		기관에 상관없는 양질의 공통과정 제공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담당 교사의 누리과정 교사 연수 이수 담당 교사의 자격증 종류 다니고 있는 기관종류(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있는 기관유형(국공립, 사립/민간)
		취학 1년 전 사실상 의무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만5세 취원을 누리과정 미이용 유아수 변화

나. 재무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재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정 확보	누리과정 지원금 일원화	정부 계획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를 위한 이해당사자(시·도교육청)와의 합의절차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 하에 누리과정 지원금 일원화의 적절성

다. 내부프로세스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내부 프로 세스	교육· 보육의 질제고	누리과정 제정 및 시행	정부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 제정 이수 여부
			누리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누리과정 내용의 질 향상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내용, 방법)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의 투명한 운영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운영지원비 지침 준수 학부모로부터 추가로 걷는 비용(항목)

라. 학습 및 성장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학습 및 성장 관점	취학전 유아교육 ·보육 선진화 실현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최대 보장	국공립 기관 확충 (정부계획: 26개의 단설 유치원 신설) 공립유치원 수용 능력 확보 (정부계획: 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이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교사의 역량강화	교사 자격 기준 강화 교사 처우 개선

2. 2단계: 전문가 의견조사

가. 고객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전계층)	지원 대상 유아수 대비 누리과정 수혜 유아수 비율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누리과정 미이용 이유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차이
		방과후 과정비 보편적 지원	학부모 만족도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보편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 육 제공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유아 연령별 확대 현황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담당 교사의 자격 급수 변화 현 근무 기관의 재직기간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취학전 1년 취원을 제고	유치원·어린이집 만5세 취원을

나. 재무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재무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재원의 충분성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다. 내부프로세스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내부 프로 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 여부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누리과정 전달체계의 효율성	지원금 지불 방법의 간소화(카드 일원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절차 마련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어린이집) 사용 지침 준수

라. 학습 및 성장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학습 및 성장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누리과정 재정 일원화의 적절성
	인적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이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교사의 역량강화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공립 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어린이집 선택권 확보 강화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에 대한 인식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3. 3단계: 연구협력진 검토

가. 고객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적합	부적합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가구 확대 (소득하위 70%→전계층)	연도별 지원 대상 유아수 누리과정 수혜 유아수 비율	83%	17%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89%	11%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삭제)	44%	56%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	61%	33%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 지원비) 보편적 지원	학부모 만족도	56%	44%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 (삭제)	39%	61%	
	보편적 이고 질 높은 유아교 육·보육 제공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유아 연령별 확대 현황	61%	28%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89%	11%
			담당 교사의 자격 급수 변화 (삭제) * 학습 및 성장 관점/교사의 역량강화/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과 중복된다는 의견 수용 삭제함	56%	44%
			현 근무 기관의 재직기간	67%	33%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72%	22%	

나. 재무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적합	부적합
재무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재원의 충분성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100%	0%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78%	22%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72%	28%

다. 내부프로세스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적합	부적합
내부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대비 제정 시행 여부	67%	22%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50%	39%
		누리과정 전달체계의 합리성	지원금 지불 방법의 간소화(카드 일원화) (삭제) *부적합은 의견은 낮으나 연구협력진 회의에서 성과지표로 부적절하다고 최종 판단, 삭제함	61%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상설기구(운영위) 설치 유무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나온 지표로서 연구협력진과 협의하여 추가함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실적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89%	11%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어린이집) 사용 지침 준수	72%		22%		

라. 학습 및 성장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적합	부적합
학습및성장 학습및성장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78%	22%
			누리과정 재정 일원화의 적절성	67%	28%
	인적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이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78%	22%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78%	22%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	89%	6%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정도	89%	11%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94%	6%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내용, 방법, 대상범주)	94%	6%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공립 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72%	22%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67%	28%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에 대한 인식	72%	22%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67%	28%	

4. 최종 성과지표

가. 고객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가구 확대 (소득하위 70%→ 전계층)	연도별 누리과정 수혜 유아수(가구수) 비율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보편적 지원	학부모 만족도
	보편적이 고 질 높은 유아교육· 보육 제공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률 확대 현황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교사의 처우 현황(재직기간, 호봉, 근무시간 등)

나. 재무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재무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재원의 충분성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다. 내부프로세스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내부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 여부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누리과정 예산 전달체계의 합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상설기구(운영위) 설치 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실적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방과후 과정(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등 정부 지침 준수	

라. 학습 및 성장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학습 및 성장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의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교사의 역량강화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누리과정 교사연수 이수 여부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 (내용, 방법, 대상범주)
			공립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기관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연구협력진

김 이 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나 정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하 봉 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
황 옥 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연구보고 2016-2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 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97-4 93330